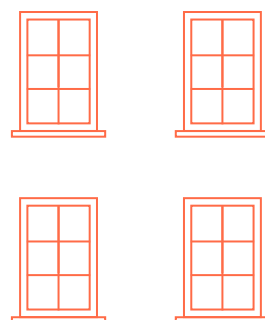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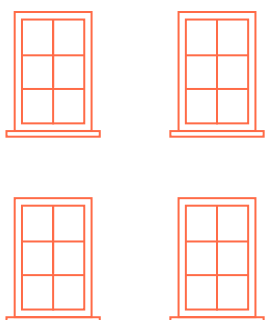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754-01



#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안전 수칙을  
지키고 즐겁게  
생활해요



교육부

## 현장의 힘을 모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국내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육 현장은 계속되는 도전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20년 3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개학을 연기하였고, 4월에는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시 기간에도 천막 학교를 운영했던 대한민국 교육 역사 70여 년을 돌아본다면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한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낯선 온라인 공간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과정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위기를 극복해나갔습니다.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의 불편함에도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켰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 나갔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학생과 교사들을 응원하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감염병 상황에서도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의료진들과 기업, IT전문가, 감염병전문가들께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원격수업을 하며 생기는 문제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스마트기기와 통신비를 긴급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등교수업을 위한 학교 방역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감염병 확산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능시험을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고 여전히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많지만, 이와 동시에 '현장의 힘을 모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확산은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숨 쉬듯 당연하게 생각했던 학교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배움과 선생님, 친구들과의 소통은 아이들의 권리이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집중할 때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과 소통하며 철저한 방역안전망으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습안전망과 정서안전망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정서 심리, 신체 건강에 대한 발달이 뒤처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것입니다.

2020년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도 배움과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교육가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고심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례없는 전 학년 온라인 개학을 이루어낸 교사들의 능력과 열정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이며, 우리 교육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진일보할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빠른 종식을 기원하며, 지난 1년간의 노력을 기록한 이번 백서가 앞으로 유사 상황에서의 대처와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육 정책 수립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발간사 02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06

사진으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12

1장 ————— 서론 28

- 1. 코로나19와 미래교육 30
- 2.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정리 36

2장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범정부 차원의 대응 40

-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확산 및 주요 대응 조치 42
- 1.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기간(1.20~8.22) 46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기간(8.23~11.18) 54
-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후 기간(11.19~12.15)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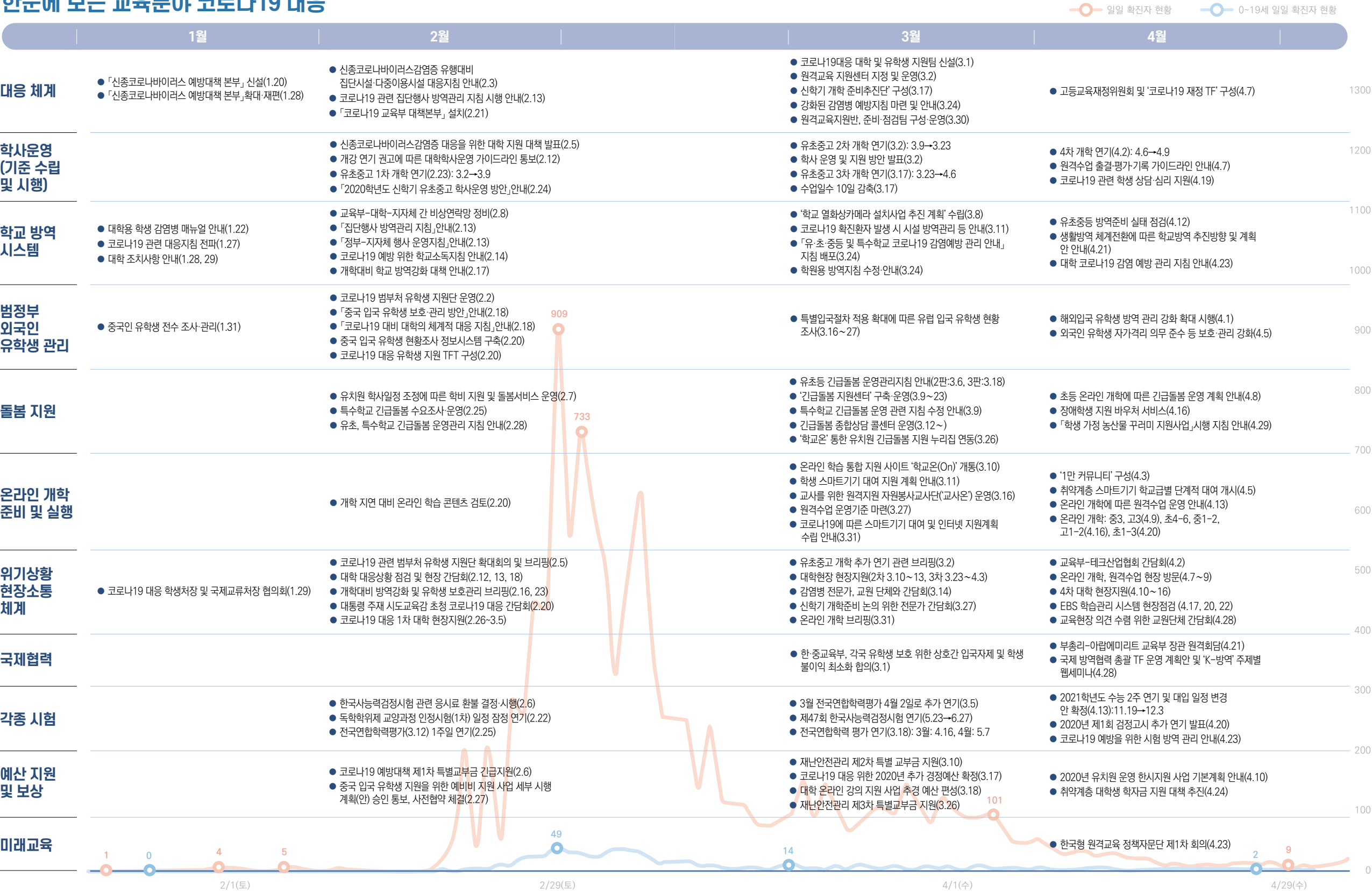
3장 —————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60

-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62
- 1. 대응 체계 74
- 2. 학사운영(기준 수립 및 시행) 92
- 3. 학교 방역 시스템 119
- 4. 범정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133
- 5. 돌봄 지원 146
- 6.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실행 162
- 7.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178
- 8. 국제협력 197
- 9. 각종 시험 219
- 10. 예산 지원 및 보상 233
- 11. 미래교육 242

4장 —————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영역별 평가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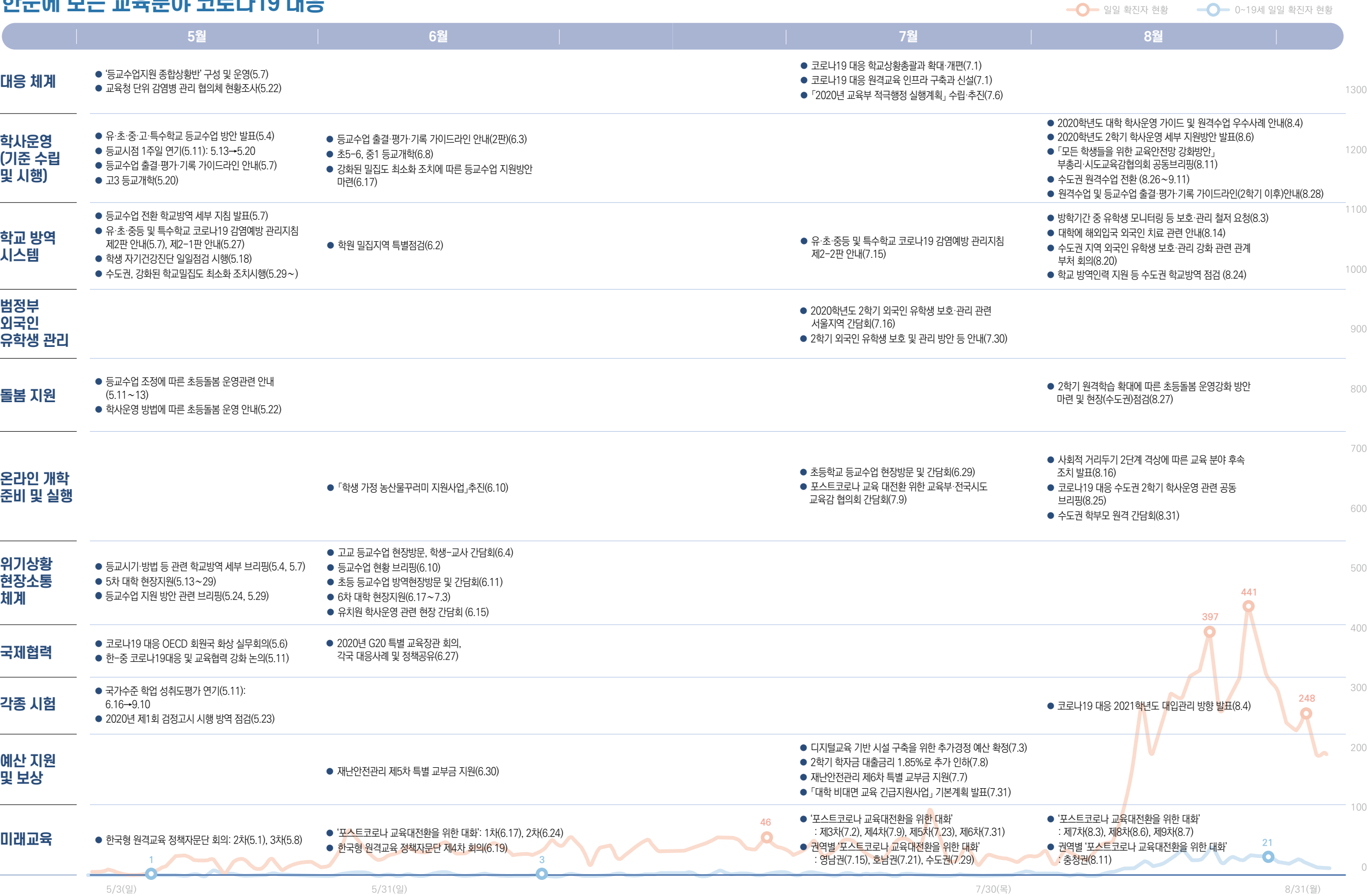
5장 ————— 맺음말 286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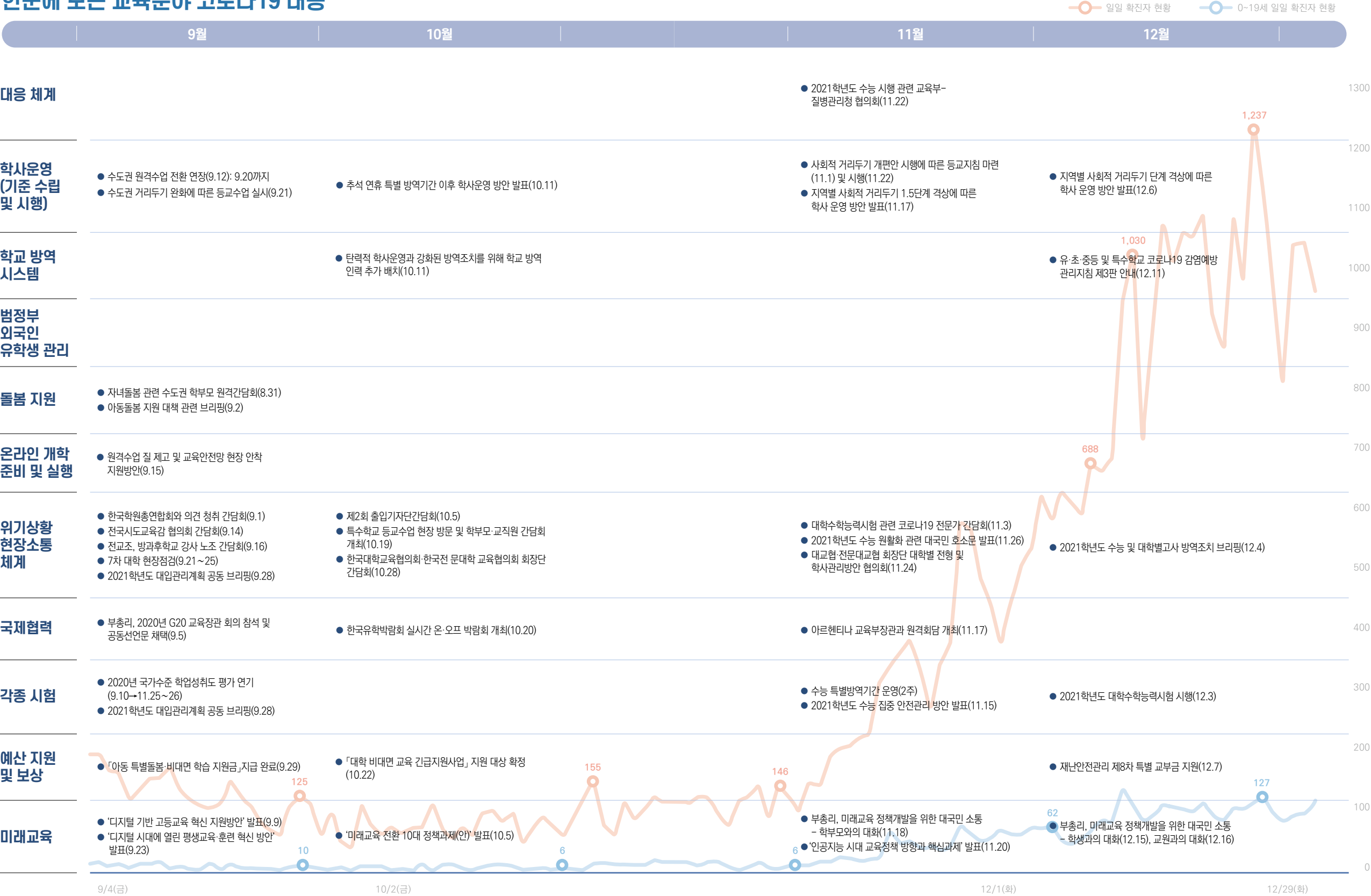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사진으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입국 유학생 관리



중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간담회



국무총리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현장 점검

2.21

유학생 입국단계 방역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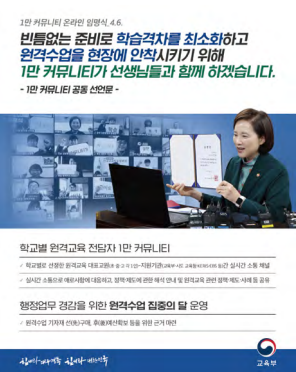
온라인 개학 준비



원격교육관련 MOU 체결  
(교육부-시도교육청-KERIS-EBS)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격교육 기반마련 협력



1만 커뮤니티 온라인 임명식

3.25 3.31

온라인 개학 브리핑

4.1 4.2

국무총리 원격교육  
준비현장 방문



4.6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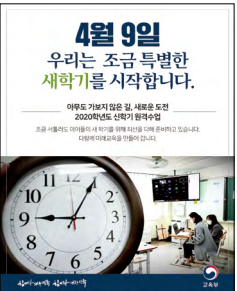
에듀테크 선도기관(EBS)  
원격수업 준비현황 점검





사진으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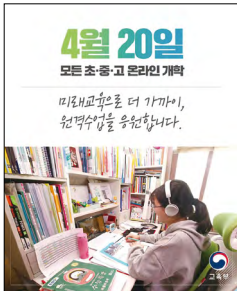
온라인 개학



순차적 온라인 개학

4.9~4.20

2단계 온라인 개학(초4~6, 중1~2, 고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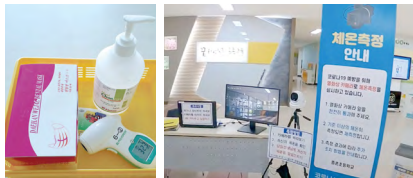
모든 초·중·고 온라인 개학

4.20

원격 수업 실시



등교수업 점검



무학여고 방역 점검

4.29

등교수업 전 학교시설 방역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5.4

문재인 대통령 등교개학 현장 점검





사진으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1학기 등교개학



고3 등교 개학

5.20

5.27

유·초1~2·중3·고2 등교 개학



2학기 등교수업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발표

8.11

8.25

수도권 2학기 학사운영  
관련 공동 브리핑



전국 교육장 회의 개최

8.26

2학기 등교수업





사진으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유치원 방역 현장 점검

5.26



국무총리 학교방역 점검

7.8

10.5

학습안전망 점검 현장 방문



등교수업 확대 관련 특수학교 현장방문

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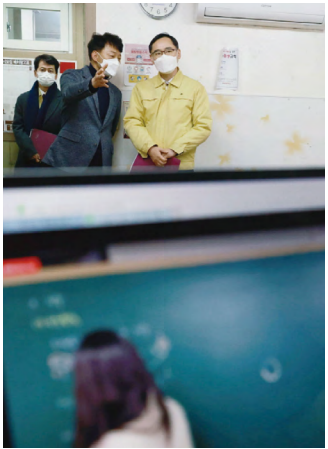
11.17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모델 현장점검



12.31

연말연시 학원 현장 특별 방역 점검





# 사진으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 대학수학능력시험



21학년도 대입전형 관리방안 관련 브리핑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  
20.09.28

- 12월 3일 수능 시행을 위한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
  - 방역기준에 따라 시험실과 관리·감독 인력 등 대폭 확충
    - 수험생 배치 기준(2명 → 최대 24명) 상향
    - 일반시험실 4,318개 확충, 우공상자 시험실 7,855개 및 격리자 시험실 759개 신설
    - 감독·방역 등 관리 인원 30,410명 증원, 시험 관리를 위한 사안교육 및 보호조치 시행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수능 응시는 집합금지 예외사유 인정
- 선제적인 수험생 보호조치로 고1·2·3 및 시험장 학교는 수능 시험일 1주 전부터 원격수업 전환(11.26.~12.2.)
- 정부 합동 상황관리로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요인을 지속 진단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방역조치 시행 추진
  - 비상대응체계(11월 초 ~ 수능 시험일) 운영

**대학발령가에서 격리 수험생 지원방안(공역별 별도시험장) 안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능대비 학교 점검



9.28  
11.19

수능시험장 재해대비 현장점검



11.19~12.3

수능특별방역기간 운영

**수능특별방역기간**  
11.19. ~ 12.3.

모든 수험생이 수능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 마음으로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철저 강화	학원, 교습소 대면 수업 자체 금지	확진자 추가 발생 확인 방위 및 방역망 조속
-----------------	---------------------	--------------------------

교육부·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동생활관 운영 교육청·지역보건소, 실시간 현장 대응

11.29  
12.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간막이 별도 회수하여 재활용 합니다.**

수능시험일에 사용된 가림막은 회수하는 학교에서 계속 사용하고 수명이 없는 경우 재활용이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환경부 협업체계 구축	재사용 수요 및 배출량 점검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재활용업체 연계 처리
-----------------	-----------------	-------------------------



12.4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별 고사 방역조치 브리핑





사진으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장 소통 및 지원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시행



고교 등교수업 현장 방문  
및 학생 간담회



등교수업 관련 초중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원격회의



수도권 학부모 대표 간담회



학원총연합회 관계자 간담회



등교수업 확대 관련 교원단체 간담회



방과후학교 강사노조 간담회



교육부-질병관리청 긴급 영상회의



소방청장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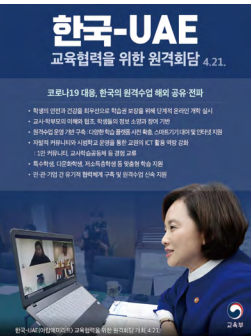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상 (농산물꾸러미)



# 사진으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 국제협력



부총리-아랍에미리트  
교육부장관 원격회담



G20 특별 교육장관 화상회의



한국유학박람회 실시간 온·오프 박람회 개최



2020 G20 교육장관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사진으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미래교육 준비



포스트코로나 교육대전환을 위한 대화



문재인 대통령 미래학교 (창덕여중) 방문



6.17~8.7  
7.15~8.11

포스트코로나 교육대전환을 위한 부총리-교육감 간담회



8.18  
11.18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학부모와의 대화



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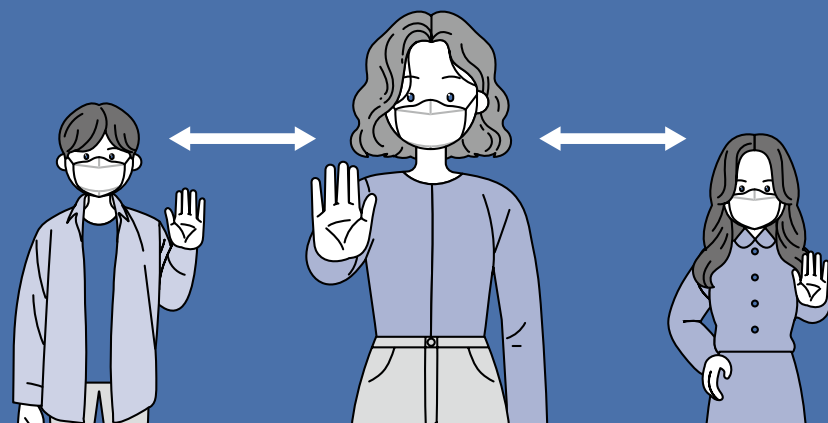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학생과의 대화



12.16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교원과의 대화





# 서론

COVID-19

PART 1 ▶▶

# 1

## 코로나19와 미래교육



코로나19는 우리의 예상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교육 분야에서도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다주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생, 교원, 학부모 및 전문가, 관계기관 등 모두가 함께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고민하여 대응하고자 노력했다. 이 덕분에 우리 교육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적인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며 위기를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래교육을 한 발 앞서 경험하며 새로운 교육의 모습을 그려보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다.

2021년,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은 지난해와는 달라졌고 향후 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지난 1년간 쌓은 소중한 경험들이 기반이 되어 앞으로의 감염병 상황에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층 넓은 시각에서 '미래교육'이라는 더 큰 도전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새싹이 더욱 강인한 것'처럼, 우리 교육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 중단 없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을 통한 평상시의 교육활동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도 학습과 배움을 이어가야 한다는 신념하에 우리 교육은 과감한 도전을 시도했다.

사상 최초로 초·중·고등학교 534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고,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탄력적인 학사 조치를 통해 학교 내 감염을 최소화하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나갔다. 또한 다각적인 방역 노력을 통해 확진자를 포함한 43만 명의 모든 수험생이 무사히 수능시험을 치르는 등 어려운 도전을 해내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갑작스런 변화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학생, 교원, 학부모 및 많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 덕분에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정착되고,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원격수업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육과 학습의 모습이 현장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으며,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다.

###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조치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기 4차례 개학 연기 및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5월 이후에는 지속되는 감염병 상황 속에서 등교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기관 등 모두가 철저한 학교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방역지침을 배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며, 방역물품 및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나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감염병 유행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연계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정규 교육과정을 이어 왔으며,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지속해나갈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등교수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향후에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시기였다.

### 국민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한 촘촘한 지원

코로나19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일상 전반에 문제를 야기하였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나 맞벌이 가정·소외계층 등의 양육·돌봄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들을 추진해나갔다. 연초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유초등 및 특수학교 대상으로 19시까지 긴급돌봄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 및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 리 인하, 대출 상환 유예 등 학자금 지원 등을 시행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학부모들의 양육·돌봄 및 원격학습 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아동 특별돌봄비(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및 비대면 학습 지원금(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교육적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나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 분야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사각지대 없이 모든 학생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포용적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 ◆ 함께 이겨내기 위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처음 겪어보는 위기 상황이었으므로, 직접 새로운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민간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있었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무상 대여 및 모바일 데이터 지원, 원격교육 시스템 개선, 콘텐츠 무료 제공 등을 위한 민관 간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었다.

또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대학 등 각 교육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축하였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은 주간 정례회의를 통해 초유의 감염병 상황 속에서 학교 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대학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생처장·국제교류처장 협의회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및 주요대학 총장이 참여하는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리, 비대면 수업 운영 등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었다.

한편, 교육분야에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장과의 소통이었다. 교육부는 현장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수시로 진행하며 교육주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제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소통 노력이 점차 축적되어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 ◆ '위기를 기회로',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도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교육 분야의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그려가야 하는지와 같은 본질적인 고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미래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논의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과정에서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촘촘한 보편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힘은 현장에 있으며, 정부는 현장을 신뢰하고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교육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넷째, 급격한 미래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향의 전제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교육은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원칙에 근거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진정한 미래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단순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실현한다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에 피어난 희망과 가능성을 토대로, 새로운 교육의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 코로나19 위기에서 찾은 희망과 가능성

### ■ 사상 최초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4.9)

- 안정적인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 ※ 일일 각 300만 명 활용 가능한 공공 LMS 플랫폼 구축, 교실 기가급 무선망 구축, 교원 노후 PC 약 20만 대 교체
- 모든 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환경 조성
  - ※ 저소득층 대상 스마트기기 무상대여 및 인터넷 통신비(8개 교육용 웹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지원, 교육용 콘텐츠 무제한 이용 지원 등
- 원격수업 질 제고 및 쌍방향 소통 강화

### ■ 계적 등교수업 및 원격-등교수업 병행(5.20~)

### ■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 확대

- ※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원격수업 개설 제한(20%) 폐지 및 이수학점 비율 상한 규제 완화

### ■ 안정적인 수능 실시

- 확진자 포함 모든 수험생에게 기회 부여
  - ※ 확진자 41명 및 격리자 456명 포함 43만 명 응시

과감한  
도전

철저한  
방역

충충한  
지원

긴밀한  
협업

### ■ 유·초등 및 특수학교 대상 긴급돌봄 운영

- 19시까지 긴급돌봄 서비스 및 중식 제공

### ■ 방역·학습·돌봄 분야 교육안전망 구축

- ※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수립(8.11)

### ■ 학부모 부담금 반환 유치원 재정 지원(3~4월)

- ※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760억 원)

### ■ 대학생 학자금 지원

-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 ※ ('19) 2.2% →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실업·폐업자 대상 국가장학금 II 유형 최우선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 저금리 전환

###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비대면 수업 지원

-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1,000억 원)

### ■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 지급

- ※ 초등 1인당 20만 원, 중등 1인당 15만 원

### ■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 ■ 학생 안전을 위한 4차례 개학 연기

(2.23, 3.2, 3.17, 3.31)

### ■ 학교·학원 방역조치 철저

- 맞춤형 방역지침 배포, 등교 전 자가진단, 학생 밀집도 최소화, 등교시간 차별화 등

### ■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운영

### ■ 마스크·체온계 등 방역물품 안정적 공급

### ■ 학교방역 지원인력 약 4.75만 명 배치

### ■ 학원 방역 현장지도·점검 강화, 휴원 권고

### ■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강화

- 입국단계별 체계적 보호·관리 실시

### ■ 학생·교사·학부모의 적극적 협력 및 지원

- 상황별 범정부 대응조직 구성
  - 관계부처, 대학, 지자체 등 협력체계 구축

### ■ 민·관 협력 강화

- 스마트기기 확보 및 모바일 데이터 지원, 시스템 개선, 콘텐츠 무료 제공 등 협업(과기부, 통신3사, 문체부, 방통위, 통계청 등)

### ■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긴밀한 협업

-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및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 운영, 시도교육감 회의 개최 등

### ■ 교육부-질병관리청 협의회 운영

- 방역 관련 주요 현안 논의 및 신속 결정
- 등교수업 방역 지원을 위해 교육부 상황실에 전문인력(역학조사관) 파견

### ■ 현장간담회, 현장점검 등 소통 강화

- '1만 커뮤니티'를 통한 현장교사 원격수업 지원
- 현장과의 대화, 원격교육 설문조사 등 실시

포용성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보편적 교육 보장

지속성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 확보

자율성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촉진하는 방향으로  
교육체제 혁신

미래교육의  
가치와 방향

적극성

미래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안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장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로”,  
미래교육을 위한 더 큰 도전을 향해!

## 2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정리



### 2020년 코로나19 대응과정 정리의 필요성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2020년의 코로나19 상황과 그에 따른 교육분야의 정부 대응을 정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의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상세히 정리함으로써 코로나19 및 향후의 유사 감염병 확산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용하고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본 백서를 기초자료로 삼아 그간의 대응 노력을 재정비하면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을 지속하고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한다. 특히, 일상적인 교육체제에 위협이 발생했을 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과 관련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정책적 지원 및 관계기관 협업의 사례를 제시한다.

셋째,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향후의 위기 대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한층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영역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대응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코로나19 사태 및 향후 이와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취해야 하는 대응 방안 및 전략 모색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 위험요소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적 지원과 적시적절한 전략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 백서는 미래지향적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 코로나19 대응 기간의 구분

국내 코로나19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2020년 1월 20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이루어졌다. 이에 감염병 확산 및 유행 경과에 따라 크게 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본 백서를 작성하였다.

####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기간(1.20~8.22)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1차 유행 종료 시까지는 유례없는 혼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첫 환자 확진 판정 이후 중국 등 해외유입과 이를 통한 전파 등으로 개별적·산발적 사례가 주로 확인되다가 2월 중순 대구 소재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집중적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면서 대응하였다. 5월 초순에는 서울 소재 클럽, 경기 소재 물류센터 등 수도권 내에서 소규모·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교육 분야에서도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학사운영 등에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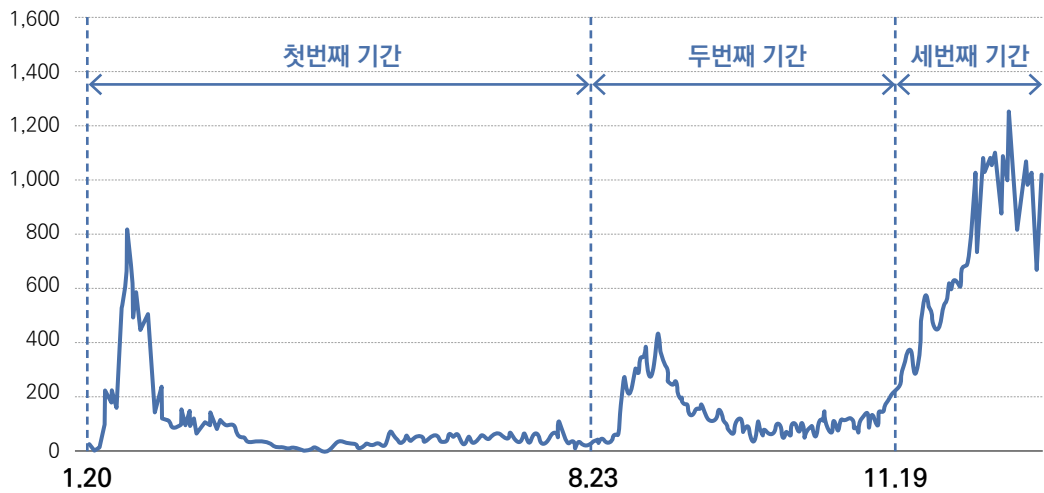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기간(8.23~11.18)

두 번째 기간은 8월 중순 서울 소재 교회와 ‘광복절 서울도심집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내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했던 시기를 포함한다. 8월 16일 서울, 경기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고, 8월 23일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8월 30일에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후 기간(11.19~12.15)

세 번째 기간은 11월 중순부터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3차 유행이 촉발된 시기를 포함한다.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지역에 2+ $\alpha$ 단계, 비수도권 지역에는 1.5단계가 시행되었는데, 12월 8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은 2.5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 일별 신규 확진자 수 ]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대한 기록 및 분석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대한 기록을 담아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두에 시간 순서에 따른 주요 조치들과 관련 사진 자료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본문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은 범정부 차원의 일반적인 대응과 교육분야의 대응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은 시기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 조치를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교육분야의 대응 과정과 활동은 코로나19 관련 주요 교육 현안들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각 영역은 ‘대응 체계’, ‘학사운영(기준 수립 및 시행)’, ‘학교 방역 시스템’, ‘범정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돌봄 지원’,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실행’,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국제협력’, ‘각종 시험’, ‘예산 지원 및 보상’, ‘미래교육’ 등 총 11개로 구분하였다. 4장에서는 교육분야 11개 영역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의 과제들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범정부 차원의 대응

COVID-19

PART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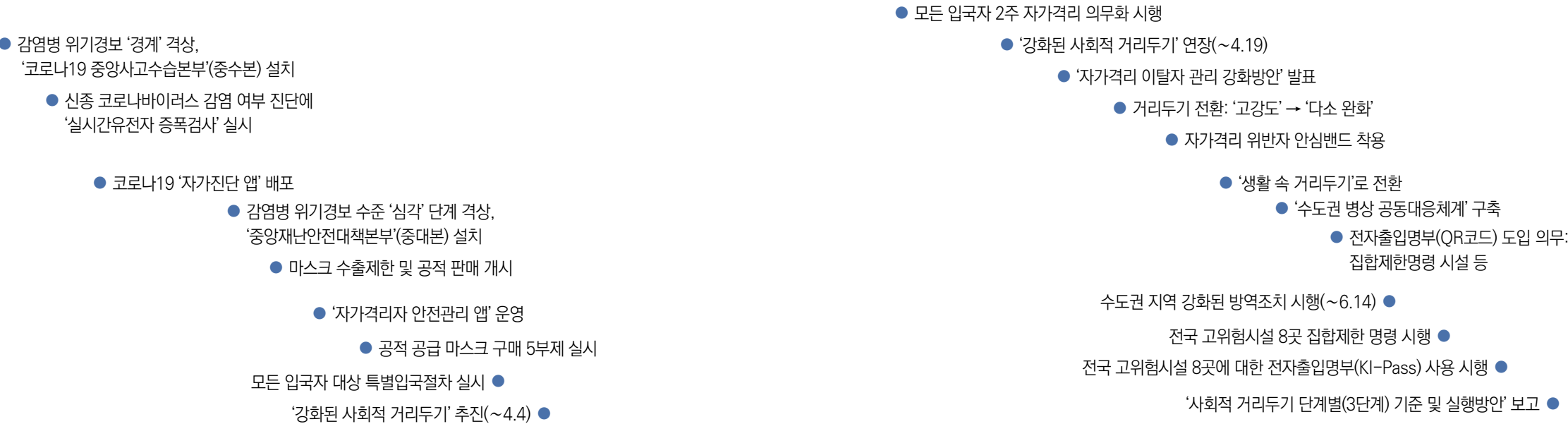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확산 및 주요 대응 조치



코로나 19  
확산 현황



범정부  
대응 조치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확산 및 주요 대응 조치



- 이라크 주재 해외건설근로자 297명 입국
- 2차 유행 시작  
(서울 소재 교회'발' 감염확산 시작)
  - 서울 소재 교회 현지 역학조사/압수수색

- 국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GV그룹) 보고
- 3차 유행 본격화

코로나19 확산 현황

코로나19 국내 유입 후 처음으로 ●  
일일 신규 확진자 1,000명(1,030명)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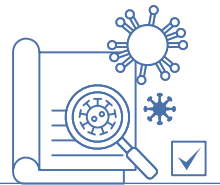
범정부 대응 조치

- 코로나19 중증환자 2명에게 '렘데시비르' 첫 공급 시작
  - 교회 정규모예배 외 소규모 대면모임 금지
  -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마련
-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역수칙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10만원, 운영자에 최대 300만원 부과
  -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9.6)
  -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9.6)
-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1주간 연장(~9.20)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9.27)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1주 연장
- 전국 추석 특별방역기간 시행(2주간)

- 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수도권 일부 2단계 조치 유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제 개편 방안 확정
-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시행(~12.2)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및 호남권 1.5단계 시행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및 비수도권 1.5단계 시행
- 백신 4,400백만 명분 확보 발표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무료 검사(3주간), 유행 우려지역(150개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 1

## 감염병 확산 및 범정부 차원의 대응



### 1.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기간(1.20~8.22)

#### ◆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

2020년 1월 9일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중앙방역 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 우한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국내 코로나19 1번째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중국 우한에서 1월 1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검역과정에서 의심 증상을 보여 별도로 격리되어 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음 날 20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후속조치로 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에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방대본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였다. 이후 1월 24일에 국내 첫 한국인 환자(중국 우한 거주 중 1월 22일 입국한 55세 남성)이자 2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감염 확산 대응조치로써 1월 26일에 응급실 외부나 의료기관과 별도로 분리된 진료 시설인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증상자의 의료기관 출입 전 선별진료 의무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288개소) 공개, 의료기관 추가 설치 상황 등 관련된 정보의 지속적인 갱신 등을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1월 27일에 국내에서 4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에 코로나19를 감시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 발령한 지 7일 만에, 정부는 '신종플루' 이후 10년 만에 '경계'로 격상하였다. 1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인력을 코로나19 검역 현장에 배치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오송까지 이송하여 감염증 여부를 확진할 필요 없이 1회 검사로 6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여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 검사(Real Time RT-PCR)' 방법으로 1월 31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인천공항검역소 포함) 및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월 12일부터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였고,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 운영도 시작하였다.

#### ◆ '대구 소재 종교시설'발 코로나19 1차 유행 시작 및 확산

##### '대구 소재 종교시설'발 집단감염 시작

국내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약 한 달 동안 30명에 불과했던 확진자는 2월 18일 대구 소재 종교시설 환자가 나온 이후 급증했고, 국내에서 10명 이상의 집단감염이 처음 발생하였다. 5월 5일까지 대구 소재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1차 유행이 발생하였다. 확진자가 2월 20일에 누적 100명을 돌파한 후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 2월 29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909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대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만 총 5,21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 요양원 등에서 집단 발생하면서 한 달 만에 대구·경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약 8,000명으로 증가하였다. 2월 20일 경북 소재 요양병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확산세는 코로나19 감염전파가 밀접접촉을 통해 이뤄진다는 학계와 정부의 설명을 방증한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2월 23일에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였고, 당일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에 돌입하는 한편 2월 25일 대구 소재 종교시설 본부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21만여 명)을 확보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 관리를 강화하였다. 한편 3월 15일에는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처음으로 선포하였다.

##### '서울 소재 콜센터' 등 집단감염 사례 증가

국내에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된 후 국내 누적확진자 수는 중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였으며,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는 '위험국가'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는 급속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3월 12일(한국시간)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즉 세계적 대유행을 공식 선언하였다. 팬데믹 선언은 전염병 위험 단계가 최고 높은 수준이며, 대다수가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진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WHO의 팬데믹 선

언 당시 114개국에서 12만 건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4천여 명에 이른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코로나19 1차 유행은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으로 이어졌다. 서울 소재 콜센터에서 3월 8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3일까지 보름 만에 ‘엔(N)차 감염’, 즉 감염자와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 및 확산되어 연쇄적으로 감염된 확진자가 124명까지 이르렀다. 콜센터 직원이 출석한 교회 관련 확진자가 수십 명 나오면서 경기지역 확진자 수도 동시에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3월 25일까지 1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콜센터가 입주한 빌딩 옆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거주자, 근로자, 인근 주민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시행하였고, 시 전체의 콜센터 527 곳을 긴급 전수조사하여 코로나19의 수도권 검역을 강화하였다. 이는 수도권 내 집단감염의 시발점이었다.

### 국내 누적 확진자 1만명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국내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와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감염전파 속도와 파급력은 엄청난 수준이었다. 2월 18일까지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새로운 확진자 미발생 기간도 있어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대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수도권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경북 소재 요양병원(120명 확진자), 부산 소재 교회(32명), 경남 소재 동전노래방(7명) 등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지역사회 집단 감염 사례들도 나타났다. 결국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이후 74일 만에(4월 3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 ‘서울 시내 클럽’, ‘물류센터’ 발 전국 집단감염 확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등으로 인해 4월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강도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한 4월 19일 전후로 비교해보면 신규 확진자 수가 35.5명(이전)에서 9.1명(이후)으로 감소하였다. 5월 6일에는 신규 확진자는 2명으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78일 만에 최소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더 낮추어 일상생활과 방역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다. 기본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하에 회식, 사적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이 허용되었고, 공공부문에서는 국립공원, 수목원, 박물관 등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도 시설별로 철저한 방역수칙 마련 및 준수를 전제로 운영이 재개되었다. ‘운영중단’이 권고되었던 유흥시설과 일부 생활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가급적 운영자제’로 권고 수준이 낮춰졌다. 스포츠 관람 장소, 공연장 등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도 무관중의 방식으로 접촉을 막고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집단감염은 또 다시 발생했다. 5월 초 서울 시내 클럽과 경기 소재 물류센터에서 다수의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수도권 내에서만 하루 평균 39.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소규모·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

였다. 5월 7일 서울 소재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확산되었다. 서울 소재 클럽과 관련된 환자와 그의 직장동료, 기타 관련 사례 21명과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로의 ‘n차 감염’이 발생하였는데, n차 감염자는 수도권을 넘어 대구 등 전국으로 확산되어 산발적 사례가 이어지면 총 277건의 확진사례가 확인되었다. 경기 소재 물류센터에서도 노동자 84명과 가족 및 지인 등 총 152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코로나19 대응조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은 국경 문을 폐쇄하고, 자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조치(Shutdown)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동 제한, 지역 봉쇄 등의 조치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러한 대응은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특히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차량이동식(Drive Thru)’ 선별진료소(3월 4일 ‘차량이동식 선별진료소 운영지침 시행방안’ 마련) 운영, 감염 초기 환자도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진단키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증상, 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3월 2일 개시) 등은 주목을 받았다.

###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 판매 개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개인방역물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 급증에 따른 품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1차 유행 차단 및 예방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에 의한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를 제외한 마스크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여 매일 약 500만 개의 공적마스크를 공급하였고, 3월 9일부터는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작하였다.

### 자가격리자 관리 위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운영

3월 7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자가격리자 관리 차원에서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소재지와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면 매일 2회 자동으로 전담공무원에게 통보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운영을 시작하였다.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격리자와 관리자에게 모두 알림을 송출하는 등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자가격리자 추적 관리 업무를 지원하였다.

###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 및 2주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월 첫째 주(4명) 대비 셋째 주(74명)가 약 18배 높게 나타났고, 확진자가 입국 전에 방문한 국가들도 다양하였다. 셋째 주 기준으로 유럽(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54명, 아시아(태국과 필리핀, 이란 등) 6명, 이집트 2명, 미주(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등) 지역에서 12명이 각각 입국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는 '특별입국절차'(체온 측정, 특별검역신고서 및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등) 이행을,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3월 26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를 위한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검역도 강화하였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서울 소재 콜센터 관련 감염 사례를 포함하여 '대구 소재 요양병원', '경기 소재 교회', '서울 소재 교회'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파급력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집중적인 진단 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15일간 종교시설, 실내체육과 유흥시설 운영 중단 권고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며,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규모를 줄여나가는데 주력하였다. 그럼에도 감소하지 않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를 잡기 위해 4월 6일 정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비중 5% 이하로 감소', '치료 중 환자 수 절반 감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발표 및 시행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추가 연장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대본은 4월 11일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4월 22일 중대본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대상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 추가,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을 골자로 하는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4월 27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현장점검 등 감시 방안은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한다면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격리 장소를 '시설'로 변경하고, 시설 이용 비용도 자부담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중대본은 5월 9일부터 수도권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1~4단계, 즉 1단계(일일 하루 확진자가 50명 미만), 2단계(50~99명), 3단계(100~999명), 4단계(1,000명 이상)로 구분하고, 수도권 내 지자체, 즉 서울, 경기, 인천이 코로나19 병상을 발생 단계별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대응체계를 구축 및 가동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는 한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 행정적 경계 문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의료공백 문제를 차단하면서, 신속한 병상배정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계별 계획에 따르면 1·2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수요와 감염 정도에 따라 거점전담병원(중증 및 중등증 환자를 이송하여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를 격리하여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기관)를 지역별로 각 지자체가 1~3개소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확진자는 지자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 배정된다. 3·4단계에서는 병상 공동활용의 시급성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지자체 공무원, 의료인, 방역당국으로 구성된 통합 환자분류반을 설치하고, 통합 환자분류와 수도권 협력병원 및 공동 생활치료센터 지정과 운영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수준을 상향토록 하였다.

###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의무화

코로나19 감염경로 확인 및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해 도입한 '출입자 명부 작성'이 시행된 이래, 출입자 명부 미비치, 유흥시설 출입 수기(手記)명부 작성에서 허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중대본은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망을 구축하고, 클럽, 노래방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집합제한명령' 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5월 24일에 발표하였다. 또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만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수집된 정보는 4주 뒤 철저히 폐기 처분한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하에서 시설 이용자가 시설 출입 이전에 개인별로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를 별도 앱으로 스캔(scan)한 이후에 출입할 수 있다. 스캔된 출입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는데, 사회보장정보원은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각각 관리한다. 이러한 출입기록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시에 방역당국에 제공한다.

### 전국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명령 및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 시행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대본은 6월 2일부터 전국 8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의



무를 부과하였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설의 사업주 또는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중대본은 6가지 위험지표, 즉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토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시설별로 평가하였는데,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였다. 위험도 하향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중위험시설’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소재 총 19개 시설(클럽, 노래방 등 일부 고위험시설과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 및 분산하는 QR 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KI-Pass)’시스템을 6월 10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도입 및 적용함으로써 출입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전에 감염 차단을 하는 데 주력하였다.

### 거리두기 단계별(3단계) 기준 수립 및 실행

정부가 코로나19 감염확산 정도에 따라 조정했던 ‘생활 속(1단계)’ → ‘사회적(2단계)’ → ‘강화된(3단계)’ 거리두기 체제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단계별 시행 기준에 대한 명확성과 단계별 행동 양식의 구체성 부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혼재되어 시행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는 한계점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결정이었다. 정부는 다음의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확진환자 수나 집단감염의 수 및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수칙 단계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확진환자 수용 여력 또는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 및 인구분포 등 유행하는 지역의 특성,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전문가의 의견 등도 함께 거리두기 전환 결정에 고려되었다. 한편 해외유입은 모든 입국자가 입국 시 ‘특별입국절차’ 또는 14일 격리과정에서 발견되어 지역사회로의 2차 전파를 야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하에 위험도 평가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방역수칙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주요 참고 지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명)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6.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내용을 재구성함. 더블링은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을 의미함.

구체적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일반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과 완화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1주일에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수의 2배 이상 증가’가 발생하는 등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대규모로 유행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내용〕

구분	감염 상황	목표	방역조치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하</li> <li>소규모 산발적 유행 확산과 완화 반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 영위</li> <li>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역수칙 준수 전제로 집합·모임·행사 실시, 스포츠 행사 제한적 관중 입장</li> <li>다중이용시설 이용 원칙적으로 허용. 단 고위험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li> <li>일부 공공시설 운영 제한 및 중단 조치</li> <li>공공기관 적정인원의 유연·재택근무, 분산된 점심시간 운영 등으로 밀집도 최소화(※ 민간기업은 권고)</li> </ul>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초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유행 지속적 확산</li> <li>일평균 확진자 수 50~100명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체계의 감당 수준을 뛰어넘은 유행 완화를 위해 1단계 수준으로 환자 수 감소</li> <li>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사람간 접촉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든 공적·사적 목적 대면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으로 전환</li> <li>지역축제·전시회 등 행사 연기 또는 취소 권고. 결혼식 등 사적 모임에도 적용</li> <li>고위험시설 운영 중단</li> <li>모든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li> <li>공공시설 비대면 서비스 불가능 시 운영 중단</li> </ul>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감염의 대규모 유행(지역사회 내 일 평균 확진자 수 2배 이상 증가가 1주일에 2번 이상 발생)</li> <li>일 평균 확진자 수 100~200명</li> <li>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나 집단발생 급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격한 유행 확산 차단 및 방역망 통제력 회복</li> <li>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인 이상 모든 대면 집합·모임·행사 금지, 모든 스포츠 행사 중단. 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필요시 예외로 허용. 장례식은 가족 참석만 허용</li> <li>필수 시설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또는 중단</li> <li>모든 공공시설 운영 중단. 민간시설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 제외 모든 고위험·중위험시설 운영 중단</li> <li>운영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li> </ul>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6.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내용을 재구성함.

### 교회 정규예배 외 소규모 대면모임 금지

부산 소재 교회(2월), 경기 소재 교회(3월) 등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을 통한, 특별히 대체로 방역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어 이루어지는 정규예배가 아닌 교회 각종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7월 10일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규모 모임, 행사(수련회,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등 각종 대면 모임과 활동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고,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규모 대면모임 제한 조치는 점진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접촉과 비말 전파 등 역학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교회에서도 유증상자 출입 제한을 위해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하도록 조치하였다.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기간(8.23~11.18)

### ◆ 코로나19 2차 유행 시작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방역을 유지해 오던 중 '8·15 광복절 서울 광화문 도심 집회'와 서울 소재 교회를 두 축으로 하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다시 일일 평균 확진자가 세자리 수까지 급증하였고, 2차 유행이 촉발되었다. 8월 27일에 일일 최대 441명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고령층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였다. 이에 중수본은 8월 16일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련 목사에게 고발조치하였고, 8월 21일에는 방역당국이 서울 소재 교회의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해 현지 역학조사와 압수수색을 하였다.

### ◆ 코로나19 대응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8월 4일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지침을 명시하였는데, 방역수칙 미준수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

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다 실효성이 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환자 급증 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병실 및 격리시설 확보 방안, 해외에서 감염된 뒤 이후에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감염병환자에게 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었다.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서울 소재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 수 상승세는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이어졌다. 8월 9일 25명이던 일일 평균 확진자가 8월 15일 기준으로 139명으로 급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중에서 감염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10%이상을 상회하면서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는 판단하에 8월 16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였다. 특히 2단계 해제시점까지 유흥시설, 영화관, 학원, 다중시설 등의 이용 및 운영에 대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였다. 8월 19일에는 인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학생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의 고위험시설 12종에 pc방도 추가 지정하고 핵심 방역지침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3단계 세분화(6월 28일)와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설정(7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8월 23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인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50~100명을 초과함으로써 추가 감염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2단계로 선제적으로 격상하여 전국으로 확대하여 2주간 시행하였다.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 8월 16일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감염위험도가 높은 집단 대상으로 더 강한 방역조치를 적용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였다. 젊은 층 중심으로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관에 대한 방역 강화, 아동과 학생이 다수 밀집하여 활동하는 공간(학원, 독서실 등)에서 집합금지·제한 조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 최소화 등이 주요 방역조치 사항으로 포함되었다.

### 추석 특별방역기간(2주간) 시행

추석 연휴를 포함해 2주간(9.28~10.11)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핵심 방역 조치들을 지속해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등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하' 지침에 따라 참여 인원이 제한되었고, 명절 스포츠인 씨름을 포함한 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원칙'이 적용되어 이루어졌다. 수도권 소재 11개 고위험 시설 및 업종에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되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방문객 대상으로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휴게소별 출입기록 정보를 추적 및 관리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휴게소별로 할당된 가상 전화번호로 방문객이 전화를 걸면서 남는 발신 기록이 휴게소 출입명부를 대체함으로써 자동으로 출입 기록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휴게소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대기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

추석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적극적인 방역 조치에 국민들이 충실하게 동참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서히 잡히자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의 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5단계로 세분화하는 운영안을 11월 1일에 발표하였다. 이는 6월 28일에 발표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약 4개월 만에 제시한 개편안이었다.

1단계는 ‘생활방역 단계’,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지표로 삼고 각각 구분하였다. 보조지표로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현황,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포함되었다. 특별히 2.5~3단계로 격상조치를 할 때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방역수칙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주요 참고 지표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 권역) 30명 미만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 (강원, 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0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월 1일 브리핑’.

주: 더블링은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을 의미함.

[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별 준수사항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내용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 유지 및 코로나19 예방 위한 방역수칙 준수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 시설 이용 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 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자료: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 및 방역조치’(20.11.02)에서 발췌.

아울러 보다 구체적으로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 사항을 단계별로 명시하였다.

[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험 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험 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경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경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실내의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원화·서방화,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및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50명 이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명 이하 금지	100명 이상 금지	50명 이상 금지	10명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학교	일일도 2/3 원칙, 조정 가능	일일도 2/3 준수	일일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일일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최저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참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참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일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 근무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3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료: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 및 방역조치’(20.11.2).

###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후 기간(11.19~12.15)

#### ◆ 코로나19 3차 유행 시작

11월 중순까지는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내외로 유지되었는데, 코로나19 여파의 장기화로 피로도가 높아지고,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적합한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1월 중순 이후 다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2020년에 보고된 확진자 절반 이상이 11월 13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12월 13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30명으로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 선을 넘었다. 이와 같이 3차 유행은 규모나 범위 측면에서 1차, 2차 대유행을 뛰어넘는 형태로 확산되었다. 한편 1차, 2차 유행 때는 특정 집단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지만, 11월 이후로는 가족·지인 간 모임, 학교, 직장 등 일상 공간을 연결고리로 하여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감염이 확산되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점점 어려워졌으며 철저한 개인 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을 의미하였다.

#### ◆ 코로나19 대응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던 대학수학능력(수능)시험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중대본은 11월 19일부터 2주간을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방역관리에 들어갔다. 11월 19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였고, 이를 12월 1일에는 2단계로 격상하였다. 특별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체육시설, 사우나 등의 시설은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노래 교습 시설 등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강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외 비수도권 지역도 1.5단계로 상황 조정하였다.

##### 백신 4,400백만 명분 확보 발표

12월 8일에 정부는 당초 목표였던 국민 60%(약 3,000만 명)가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물량보다 더 많은 4,400만 명분까지 확보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다국가 백신 확보 연합체인 '코박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약 1,000만 명분(2,000만 회분), 글로벌 백신 기업(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안센, 모더나)으로부터 3,400만 명분(6,400백만 회분)을 포함한 최대 4,400만 명분을 선구매 물량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늦어도 2021년 1분기(2·3월)부터 국내로 단계적으로 백신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며, 접종 시기는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국민 수요, 외국 접종 동향 및 부작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부는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취약계층(노인, 집단시설 거주자 등)이나 보건의료진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 무료 선별검사 실시 및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방대본은 12월 14일부터 1월 3일까지 3주간 '집중검사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희망자는 누구나 무료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150곳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에 따라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대략 3분의 1이 무증상자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선별검사 장벽을 낮춤으로써 자발적 검사를 유도하여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감염의 고리'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낙인효과 때문에 검사를 기피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미 5월 서울 소재 클럽과 8월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 관련 검사대상자의 자발적 검사 참여 유도에 효과적이었다는 점에서 집중검사기간에 이루어진 선별검사에서도 휴대전화번호 이외에 다른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는 익명검사로 시행하였다.





#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COVID-19

PART 3 ▶▶

1. 대응 체계
2. 학사운영(기준 수립 및 시행)
3. 학교 방역 시스템
4.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5. 돌봄 지원
6.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실행
7.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8. 국제협력
9. 각종 시험
10. 예산 지원 및 보상
11. 미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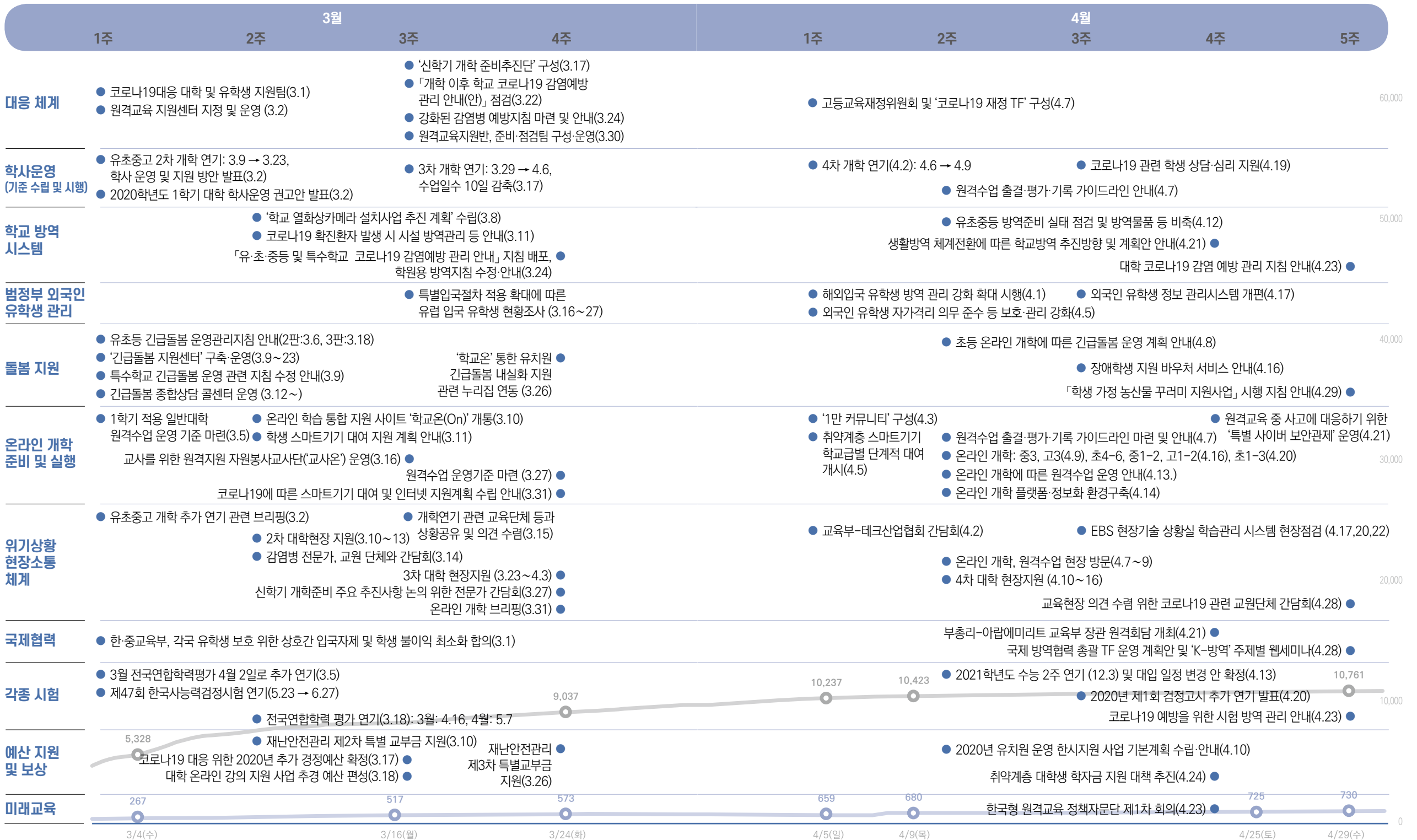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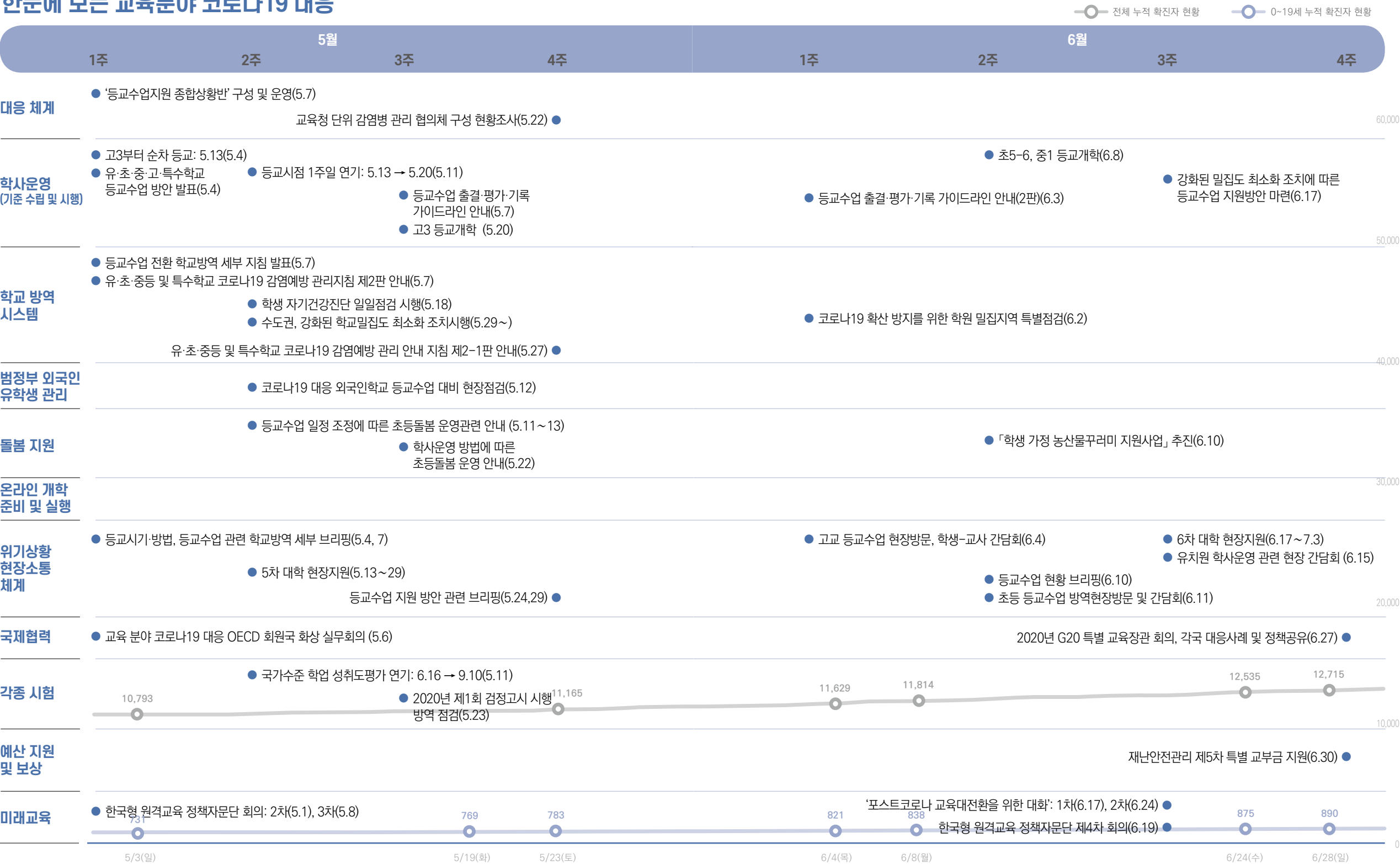


#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 전체 누적 확진자 현황    ● 0~19세 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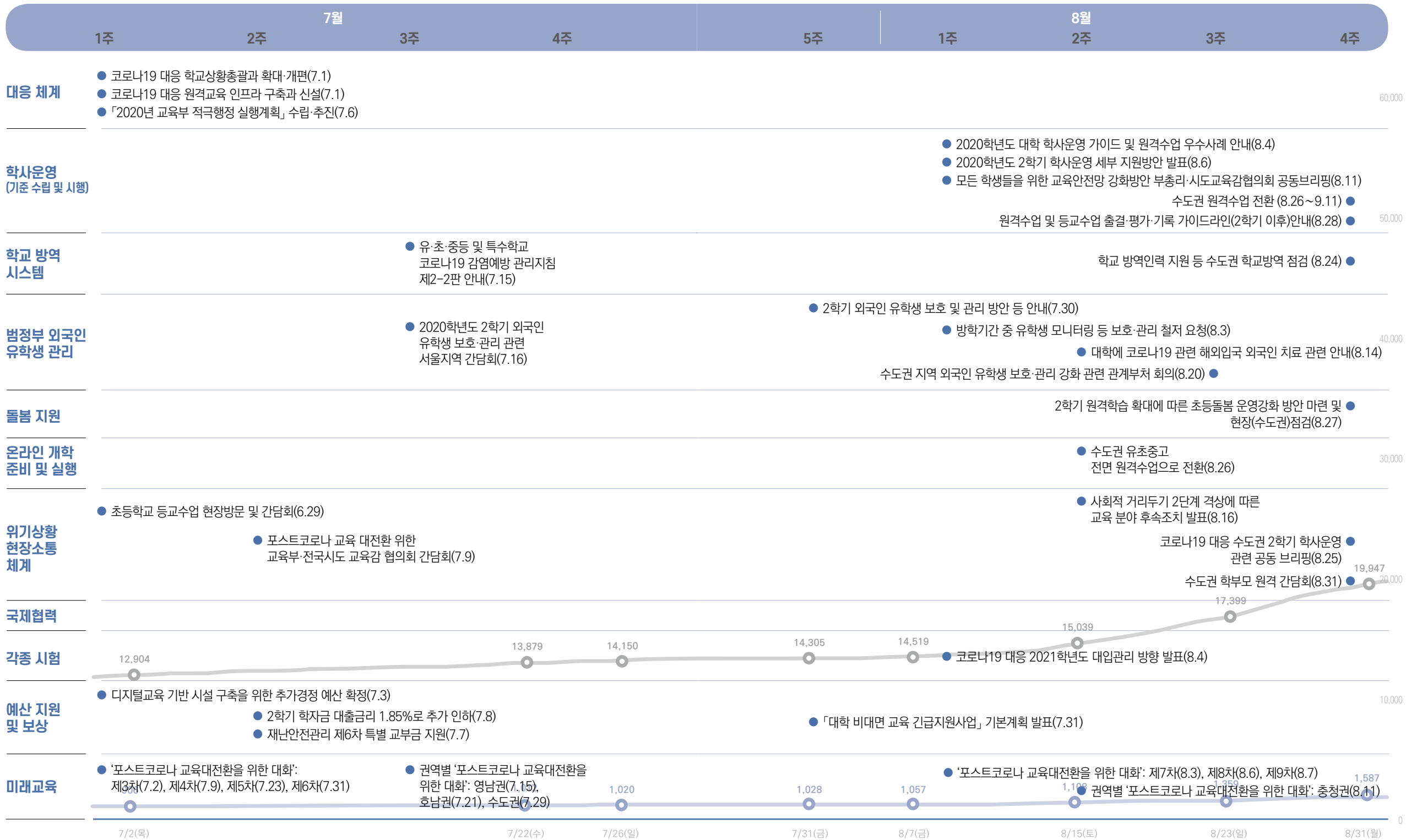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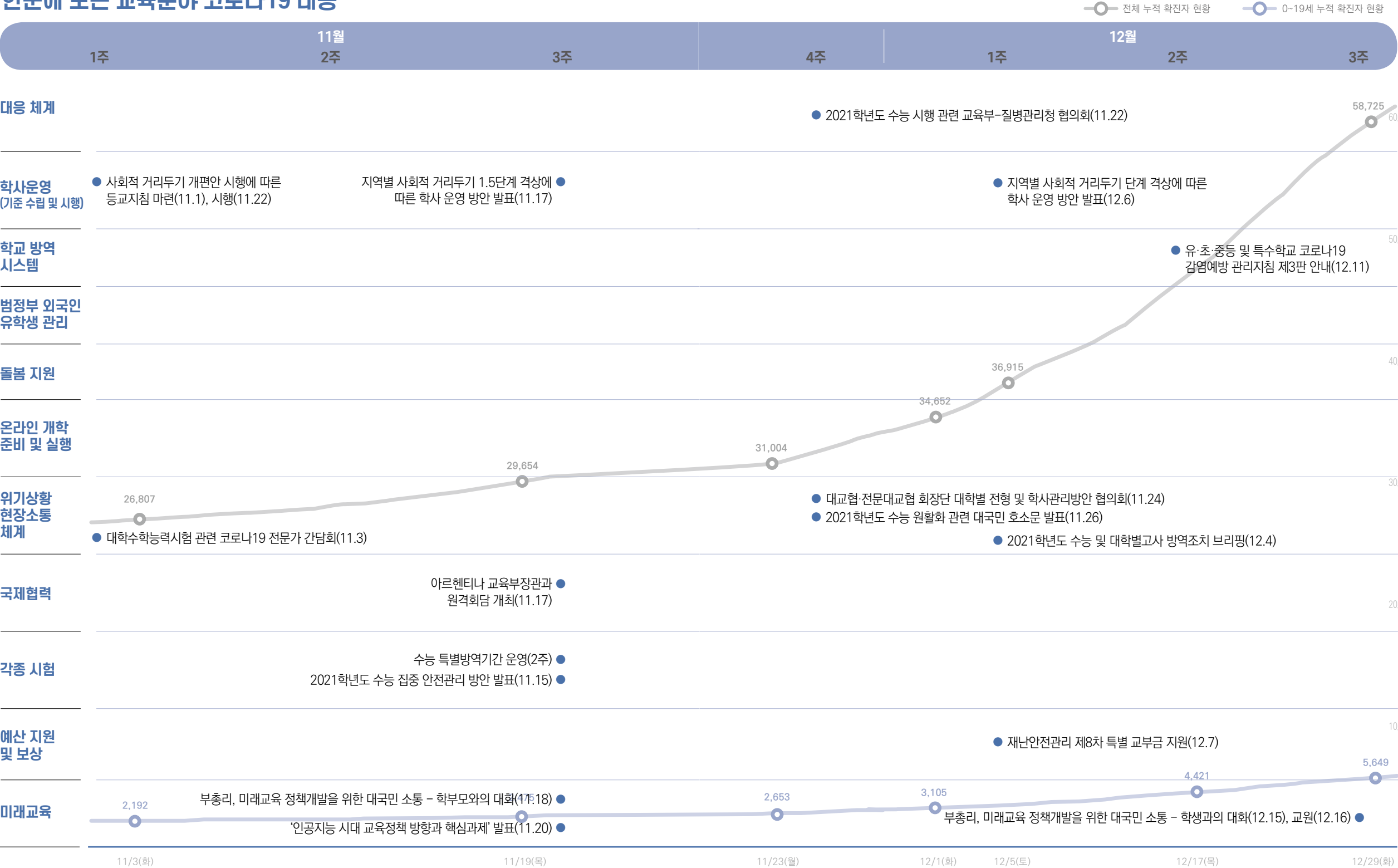
##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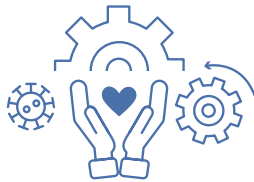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 1 대응 체계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교육부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상황실)」 신설을 시작으로, 사안 및 필요성과 긴급성 등에 따라서 교육부, 관계부처, 대학,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범부처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대응조직을 확대·재편하거나 필요시 신설하였다.

[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 조직 일람표 ]

일자	이름	구성원	비고
1.20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	9개 부서	
1.28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확대·재편)	4개반 20개부서	
2.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감염병 대응 관련 중앙부처 및 외국인 유학생 민간 전문가	
2.20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 TFT	고등교육정책실 소속 TF 팀장 포함	
2.21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재편
2.27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확대·운영)	기능별 4개단·11개반 (32개 부서)	
3.1	코로나19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팀		
3.17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2개반 6개팀, 시도교육청 개학준비지원단, 교원단체	
3.30	원격교육지원반 및 준비점검팀		
4.7	고등교육재정위원회 및 코로나19 재정 TF		
5.26	등교수업준비추진단		
7.1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총괄과 코로나19 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		'코로나19 대학긴급 대응팀'을 확대·재편

## 대응 시기별 주요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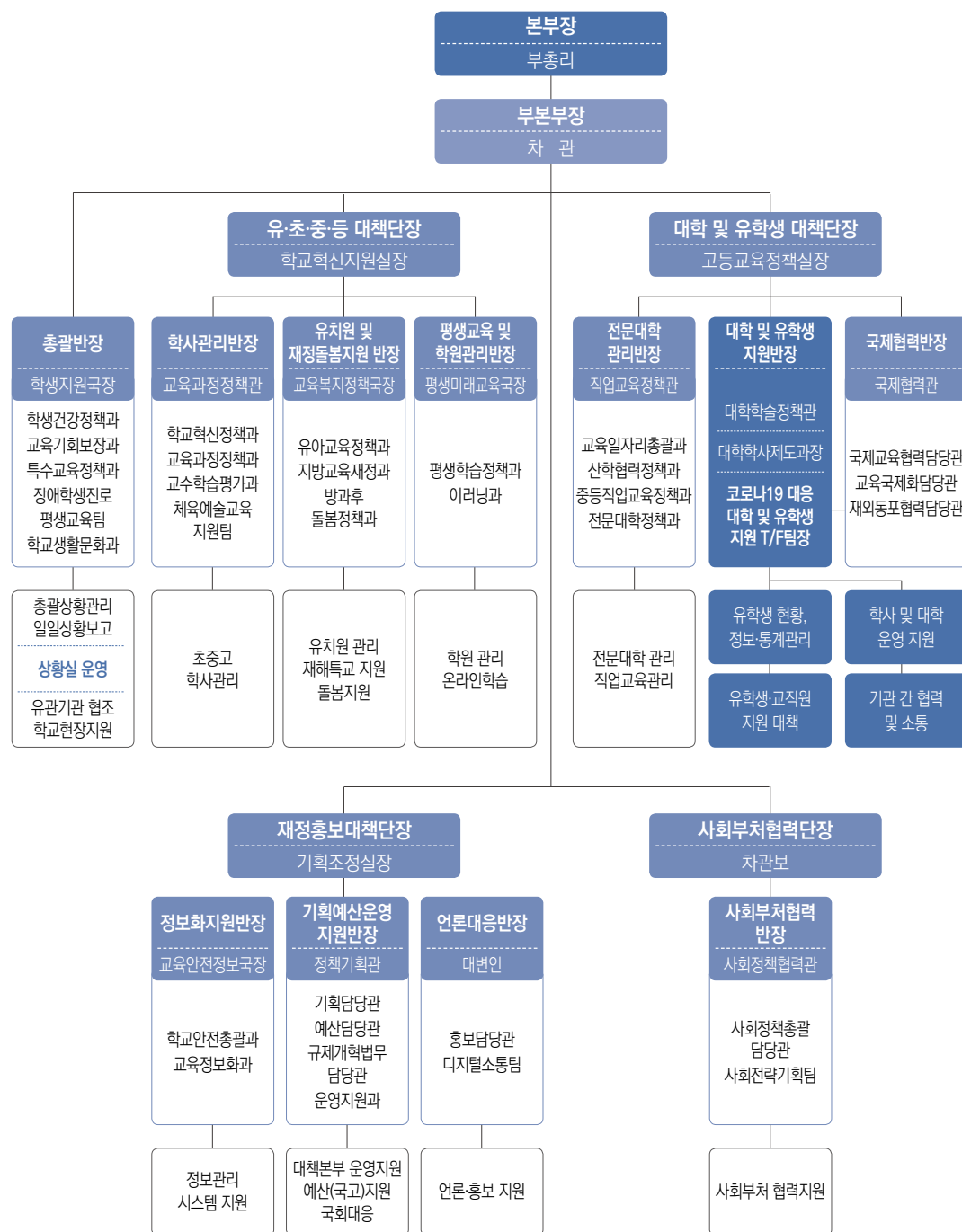
### 1.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기간(1.20~8.22)

####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조직 구성

초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1월 20일 교육부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9개 부서가 참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신설하였고, 1월 28일에 4개 반 20개 부서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월 21일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로 확대 및 재편하였다. 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른 2월 27일부터는 4개 본부 11개 반 32개 부서로 구성된 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는 신학기 개학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소독,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시도교육청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하는 '유초중등대책단'과 대학의 방역 및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 입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 관리, 학사 관리 등을 종합 관리 및 지원하는 '대학 및 유학생대책단'으로 구성되었다.

정부 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이 교육부에서도 3월 1일자로 설치되었고, 이는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해서 운영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교육부는 유·초·중·고·대학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상황에 총괄 대응하고, 원격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학습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 부처 최초로 2개의 긴급대응반(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 코로나19대응 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을 설치 ('20.3.1~현재)하는 등 공백없는 방역·배움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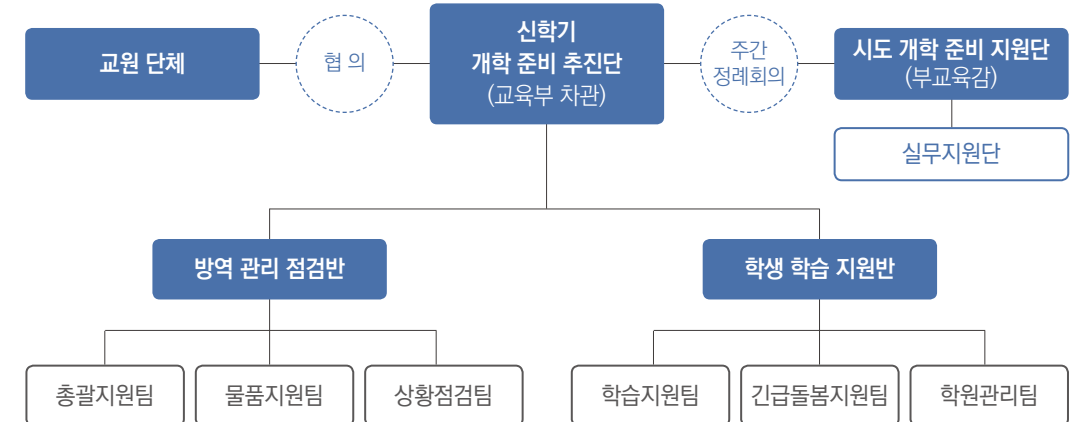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대응 및 지원체계 강화 -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 확대 재편 운영'(20.2.21).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연계된 대응조직

코로나19 확산세로 세 차례 개학 연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후속조치로 3월 17일에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의체 성격의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구성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3월 20일 1차 회의를 통해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이 최종적으로 결성되었다.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은 '방역관리점검반'과 '학생학습지원반' 등 2개 지원반으로 구성되었는데,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습지원 대책 등 다양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논의 및 점검하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취하였다.

[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



자료: 교육부(20.3.17). 보도자료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는 3월 2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7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갔다.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신학기 개학 대비 및 등교수업 대비 후속조치 사항 등 공동의 논의를 토대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정책 시행에 있어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별로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상황, 스마트기기 대여제도 준비 상황 및 추진계획 등도 공유 및 논의됨으로써 시도교육청별 현황 파악과 필요시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제12회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4.28)



제13회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5.7)

[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 ]

회차	일자	주요 논의 내용
1	3.20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구성·운영, 학교 마스크 비축 및 사용 지원 방안, 개학 이후 유초중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교육 지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완화 지원 방안, 긴급 돌봄 운영 내실화
2	3.22	학교용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시행,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마스크 확보현황 및 사용계획,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방안, 원격교육 지원 기반 구축, 공공도서관(전자책) 이용 개선, 특수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예산 확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교육시설사업비 집행, 재정집행
3	3.27	학교 코로나19 방역 준비 지원 및 점검, 코로나19 대응 초중고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 원격교육 지원 기반 구축,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 학원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 2020년 교원 자격연수 탄력적 운영(안),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 교원단체 의견 공유
4	3.31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방안 검토, 학교 「코로나19」 방역 준비,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교육 준비
5	4.3	온라인 개학 인프라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학원 조치 사항,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한 교원업무 경감방안, 원격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 방안, 유치원 긴급돌봄 운영 연장
6	4.7	온라인 개학 인프라 구축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초등 1,2학년 EBS를 통한 원격수업 지원방안(안), 온라인 개학 대비 장애학생 지원계획, 원격수업을 위한 컴퓨터실 이용, '1만 커뮤니티' 참여교사 지원, 시도교육청 원격수업 관련 학생 지원 콜센터 운영, 원격 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보호 방안, 학교 방역물품 확보 및 관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방안, 초등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 돌봄 운영 계획(안),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변경
7	4.9	스마트기기 대여 추진현황,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신속 정보공유,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대응훈련,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방안, 학원 등 행정명령 강화에 따른 학원 등 방역 관리 방안, 수업목적(고등학교 이하) 저작물 이용 가이드
8	4.14	스마트 기기 대여 추진현황, 교육플랫폼 안정화 조치 계획, 2단계 온라인 개학 관련 시도교육청 및 학교 안내 사항, 학교 방역실태 점검결과 미흡사항
9	4.16	플랫폼 안정화 기간 원격수업 탄력적 운영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방안
10	4.21	e학습터 콘텐츠 신규 확보,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학교방역 관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보건인력 확충, 긴급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교습소(학원 등) 추진 계획

회차	일자	주요 논의 내용
11	4.23	원격수업 부적정수강 의심 정보 제공, 원격수업 우수사례 발굴, 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긴급 돌봄 제공 방안, 코로나19 대비 모의훈련 철저 및 추가방역 조치
12	4.28	등교 수업의 시기 및 방법, 학교 방역 준비 상황
13	5.7	학교 방역 조치사항 실행, 등교 수업 시기·방법 및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안),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안), 소규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원개학 시기, 등교 개학 후 학교 교육활동 지원 인력 운영 방안
14	5.12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등교 수업 연기 일정, 유치원 개학연기 후속조치(안),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사업 계획(안), 등교수업 연기에 따른 긴급돌봄 대응방안(안), 등교수업 일정조정에 따른 학원 등의 지도점검
15	5.14	고3 등교수업에 따른 분산 배치 등 추가조치 사항(안), 학교방역 분야 조치사항 및 시행, 등교수업 초기 안전한 학교 급식 제공 방안, 서울 소재 클럽 감염 관련 학원 등 방역 강화 방안(안)
16	5.19	고3 등교수업 개시 관련 시도교육청 사전 준비 사항, 학교 방역 분야 추진사항, 유치원 개학 대비 준비사항,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극복 심리 지원, 등교수업 대비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 학사운영 형태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안)
17	5.21	학교 방역분야 조치사항 시행 철저 협조,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극복 심리지원 계획

자료: 교육부 교육감 및 부감 회의 정리 자료

5월 20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개학이 결정됨에 따라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은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 회의 ]

회차	일자	주요 논의 내용
1(18)	5.26	코로나19 고등학교 등교수업 관련 현황, 학교방역 분야 조치사항 실행, 초등돌봄 공백 최소화 위한 대응, 6월 이후 공공플랫폼 인프라 등 지원 방안
2(19)	5.29	학교방역 대응지침 주요내용 변경사항, 학교방역 분야 조치사항 실행,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강화사업 인력 운용,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 교원 노후 기자재 교체
3(20)	6.2	의심증상 학생 관리강화 등 방역조치,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발급 검토(안), 코로나19 관련, 시도별 교외체험학습 기준일수 현황, 6월 이후 공공플랫폼 인프라 등 지원 방안(수정)
4(21)	6.4	등교중지(미등교) 학생 학습결손 관련 지원 방안, 학원 방역점검 체계정비 및 방역지원, 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계획,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성능점검, 초등 저학년 등교수업 내실화, 6월 모의평가 학원시험장 방역 관리 계획,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방역
5(22)	6.11	교육청별 공적마스크 수요 및 조치결과 공유
6(23)	6.16	코로나19 학교방역물품 점검 및 유행대비,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안)



회차	일자	주요 논의 내용
7(24)	6.23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2학기 대비 학교 방역물품 현황 조사, 수도권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한 연장 및 대전 등 지역감염 발생 지역 요청 사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원 복무
8(25)	7.2	하절기 교직원 방역물품 지원계획, 코로나19 학교방역 등 대응, 초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9(26)	7.7	학교 방역물품 지원 관련 추경예산 집행방안, 학원 방역 대응 현황 및 인력보강
10(27)	7.14	코로나19 방역분야 추진상황, 초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2학기 외국인 유학생(대학) 임시거주시설 확보
11(28)	7.23	코로나19 방역분야 주요 추진상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강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수업일 조정 매뉴얼, 2학기 외국인 유학생(대학) 임시거주시설 사용,
12(29)	7.30	‘1학기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조사 설문’ 조사
13(30)	8.6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개학 전·후 유증상자 모니터링 등 방역,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Web/App) 개발에 따른 운영,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
14(31)	8.13	2학기 시도별 학교밀집도 조치 현황 및 협조 사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코로나19 방역, 2020년 제2회 검정고시 시행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

자료: 교육부 교육감 및 부감 회의 정리 자료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과 ‘등교 수업 추진단’ 회의를 모두 합한 수치임.

의사결정 및 대응지침 전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학교방역, 학사운영 등과 관련된 다양한 대응지침들을 전달하고 시행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지침들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부는 1월 27일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응지침’을, 1월 28일에는 대학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긴급조치사항’을 안내하였다. 또한 중국지역 방문자 관리 강화와 의심환자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5.)’을 안내하였다. 이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지침들을 마련하여 안내하였다.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 건강 및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미래교육에 대비한다는 목표 하에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한다는 계획을 7월 6일에 발표하였다.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기 위한 여섯 가지 중점과제, 즉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도 선정하였다. 다음의 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안내하고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지침들을 보여준다.

[ 교육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관련 지침 ]

구분	일자	이름
1	3.24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2	5.7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제2판 안내
3	5.27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2-1판 안내
4	7.15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2-2판 안내
5	12.11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3판 안내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기간(8.23~11.18)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응조직 및 운영체계

2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로는 기존에 마련된 대응지침을 토대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조정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코로나19 대응조직과 운영체계를 관리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2단계로 유지되면서 이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취해졌는데,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많은 수도권에서 더욱 강한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8월 26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유초중고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9월 12일에는 연장되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조치 내용 ]

시행 일	거리두기	지역	기간	조치 내용
8.15	2단계	수도권	8.18~9.11	• 밀집도: 유초중 1/3, 고 2/3, 특수학교 2/3(지역·학교 고려)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위한 방역관련 모니터링(개학 후 1~2주) •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 중소규모 학원 운영제한 명령 • 다중이용시설 자제 및 방역 수칙 준수 철저 등 생활지도 강화
	2단계	비수도권		• 학교 밀집도: 유초중고, 특수학교 2/3
8.23	2단계	전국	8.23~9.6	•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모임·행사 등 취소 강력 권고
8.26	2단계	전국	8.26~9.11	• 수도권 유초중고, 특수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단, 특수학교, 소규모(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는 자율 결정 • 원격수업 전환 관련 지원: 돌봄지원 및 급식강화, 원격교육 인프라 및 학습콘텐츠 지원, 온라인 기초학력 지도 및 학습 지원, 학생 및 교직원 상담·심리 지원,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9.4	2단계	수도권	9.12~9.20	• 수도권 유초중고, 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 연장 • 고 밀집도 1/3내에서 등교 • 원격수업 전환 관련 지원: 8.26 조치내용과 동일
	2단계	비수도권		• 지역 밀집도 조정 연장: 유초중 1/3, 고 2/3, 특수학교 2/3
9.15	2단계	전국	9.21~10.11	• 지역 밀집도 조정 연장: 유초중 1/3, 고 2/3, 특수학교 2/3
10.12	1단계	전국	10.12~	• 밀집도: 2/3 원칙(지역·학교 고려)
11.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3단계→ 5단계 세분화 등)			
11.24	2단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1.24~12.7	• 밀집도 1/3원칙(고교 2/3), 최대 2/3 이내에서 운영 가능
	1.5단계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 밀집도 2/3 준수
12.1	2단계	수도권 및 일부 기초지자체	12.1~12.14	• 밀집도 1/3원칙(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1.5단계	비수도권 (대전, 충청, 대구, 경북, 제주 등)		• 밀집도 2/3 준수
12.8	2.5단계	수도권	12.8~12.28	• 밀집도 1/3 준수
	2단계	비수도권		• 밀집도 1/3원칙(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연계된 대응조치

코로나19 2차 유행기간에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을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공동 대응하며 안전한 등교수업 준비를 지원하였다. 총 14번의 회의를 통한 협조를 토대로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안정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였다.

[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 회의 ]

회차	일자	주요 논의 내용
1	8.2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2	8.27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원방역, 2학기 기초학력 지원, 2학기 국정교과서 온라인 학습지원, 2학기 원격수업 지원 방안, 교육용 모바일데이터 무상지원
3	9.3	학생·교직원 방역 생활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학원 방역 현황 및 계획, 2학기 초등돌봄 운영 관리,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4	9.10	2학기 학교방역 관련 간담회 결과 및 소통강화 현황, 2학기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학원 방역 현황 및 계획,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20.8.11) 후속 점검,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
5	9.17	2학기 학교방역 및 추석연휴 예방수칙, 2학기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 및 학교 방역활동 지원인력,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육안전망 현장 안착 지원방안, 아동특별돌봄 지원(초등연령) 추진
6	9.24	학교방역분야 상황 공유 및 대응, 원격수업 운영 길잡이 안내 및 우수사례 공유,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 지방교육재정 집행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7	10.6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
8	10.8	코로나19 학교방역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
9	10.16	교직원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교직원 자가진단 참여율, 학부모용 원격·등교 수업 도움 자료 개발·보급
10	10.22	2학기 코로나19 대응 학교방역 실태 현장점검,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코로나19 대응 2학기 원격수업 관련 설문조사 협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조기 실집행
11	10.29	학교 방역분야 주요 대응 강조 사항, 수능 전 원격전환기관 학원 운영 조치 및 강사 진단앱 활용,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모바일데이터 지원사업 차년도 연장여부
12	11.5	학교방역분야 주요 추진상황, 2021년 코로나19 학교방역 활동 강화 사업비
13	11.12	동절기 학교 방역관리 강화 및 유의사항
14	11.25	동절기 및 수능시험 대비 학교방역 관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및 교육안전망 관리, 공공 LMS 화상수업시스템 개통

자료: 교육부 교육감 및 부감 회의 정리 자료

## 5단계로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등교 방침 조정

11월 1일에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부도 단계별 등교 원칙, 즉 밀집도 정도에 따른 등교 수업 정도의 기준을 수립하였다.

##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후 기간(11.19~12.15)

11월 15일에 진단검사를 받은 수험생에 대한 시험장 배치 등을 위해 진료 및 검사 기관과 협조 체제를 마련하였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정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공간도 마련하였다. 또한 11월 22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안정적으로 수능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응 체계를 점검하였다.

### 주요 성과

교육 분야의 코로나19 대응조직 체계의 성과를 위기 상황에 따른 시기별, 참여 주체별 의사결정 체계 구성의 적절성과 유연성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단계별 교육부 대응 조직 구성·확대·재편을 통한 연계 조직 방향 제시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격상된 1월과 2월에 신속하게 대응 조직을 구성, 확대, 재편해 나갔으며, 이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의 대응 조직을 구성하는 지침과 방향이 되었다. 또한 방대한 교육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구체적인 대응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다.

### 경보 수준 격상에 따른 교육부 내 대응 조직 확대·재편

초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교육부는 1월 20일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대책반」을 신설하였으며,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1월 28일에 이를 확대 개편하여 9개 부서가 참여하던 조직을 차관

을 단장으로 하는 4개반 20개 부서로 구성하였다. 이후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2월 21일부터는 대응 조직을 차관에서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로 확대·재편하여 가동하였으며, 심각 단계에 이른 2월 27일에는 기능별로 4개 본부, 32개 부서로 구성된 11개 반으로 확대·운영하였다. 감염병 위기 단계별 교육부 대응 조직 운영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초기 교육부의 대응 조직 구성은 시도교육청의 위기 대응 조직 체계를 구성하는 방향이 되었다. 다음의 그림은 시도교육청 조직 구성 중 경남교육청의 위기대응 조직 구성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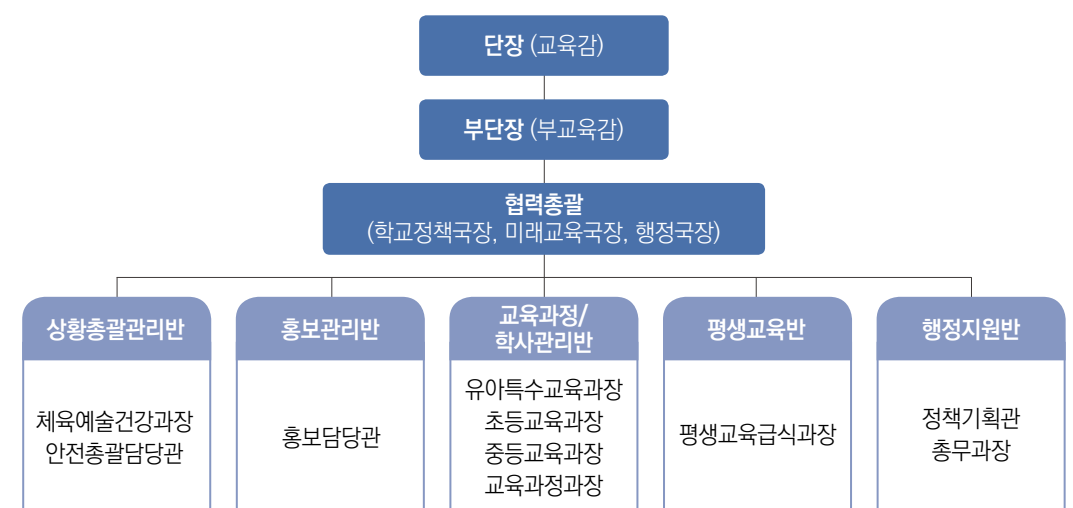
[ 감염병 위기 단계별 교육부 대응 조직 운영 현황 ]

경보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조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대책본부 설치(1.20) → 확대(1.28)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 (2.21)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 확대(2.27)
구성	9개 부서 → 4개반, 20개 부서 차관 단장	4개반, 20개 부서 부총리 본부장 격상	4개 본부, 11개 반, 32개 부서 부총리 본부장 지속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대응 및 지원체계 강화 -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 확대 재편 운영'(20.2.21).

[ 시도교육청 코로나19 대책 본부 구성\_경남교육청 사례 ]

심각단계의 코로나19 비상대책반 조직도-2



자료: 경상남도교육청(2020). 경남교육 코로나19 백서



### 현안별 TFT 구성 및 대응

교육 분야는 유·초·중등부터 대학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내부에 사안별로 TF를 구성하여 대응하였다. 대표적으로 감염병 초기 중국을 비롯한 해외 유학생 입국 관련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입국 조치,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재정 현황 분석을 위한 TF나 사회분과 TF 구성 등을 통해 교육을 둘러싼 논의 사항을 확대해 나갔다.

[ 교육부 내 현안별 TFT 구성 및 대응 현황 ]

종 류	구성 규모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 TFT 구성(2.20~)	- 고등교육정책실 소속 팀장 포함 총 16명 규모,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 - 시도 협업 총괄, 학교·교원 원격교육 역량 강화 지원
코로나19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팀 신설(3.1)	-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운영
원격교육지원반 및 준비·점검팀 구성·운영(3.30)	- 시도 협업 총괄, 학교·교원 원격교육 역량 강화 지원
고등교육재정위원회 및 코로나19 재정 TF 구성(4.7~)	- 고등교육 분야 재정 현황 분석 및 재정 지원 방향 수립
코로나 범정부 TF 사회분과 회의(4.16~)	- 국가 경제, 사회 분야의 코로나19 영향력 및 미래 대응 전략 과제 발굴
전문대학 코로나19 TF 회의(5.13, 5.15)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문대 재정 현황 분석 및 향후방향 논의

자료: 교육부 (2020).

### 영역별 외부 전문가 자문 그룹 구성 및 대응

초기 감염병 위기 수준이 긴박하게 격상됨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은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자문 그룹 운영은 물론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발전 방안을 위해 민·관·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갔다.

### 시도교육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긴밀한 대응 체계 구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등 교육 정책이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 및 이후 등교·원격수업 병행 등 혁신적인 도전과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추진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업무 조직화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한 대응 체계가 신속히 마련되었다. 시도교육청과의 유기적인 조직 구성은 초기 정책 전달을 넘어 지역별, 상황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으며,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는 국가적인 정책들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되었다.

### 시기별 교육부 ↔ 시도교육청과의 유기적 조직 구성

1차적인 유·초·중등 개학 연기(~4.8) 및 온라인 개학(4.9~)과 2차적인 단계별 등교수업(5.20~)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응 조직은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및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구성·변경되어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주기적인 소통 및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주로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시도교육청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은 시도 실정에 맞는 학교 안전, 교육과정 운영 등의 정책을 실행하였다.

[ 유·초·중등학교 시기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응 조직 연계 현황 ]

구 분	1차(20.3.20)~17차(20.5.21)	18차(20.5.26)~37차(20.9.24)
내 용	교육부: 개학준비추진단, 교육청: 개학준비지원단	교육청/시도교육청: 등교수업준비추진단

###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대응 조직 구성

이외에도 교육부는 유·초·중등 영역에서 공공플랫폼 운영이나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의 비상 대응 조직과 연계·협력하며 현안을 해결해 나갔다. 온라인 개학 과정에서는 주요 공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교육방송이 주축이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연구와 실행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도 대응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유관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비상 대응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유관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비상 대응 역할 ]

기관	주요 역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 학습터 서비스 확대 구성 및 운영 -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pdf 서비스 운영 - 에듀넷, 위두랑 등 지원 서비스 운영 - 학교온, 1만커뮤니티 등 현장 지원 서비스 운영 등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 온라인클래스 서비스 확대 구성 및 운영 - 초등 저학년 수업 꾸러미 제작 및 배포 - 유·초등 대상 교육방송 편성 및 운영 등
한국교육개발원	- 코로나19 대응 국제 동향 분석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콘텐츠 지원 - 코로나19 백서 발간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코로나19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 - 수능 등 각종 시험 관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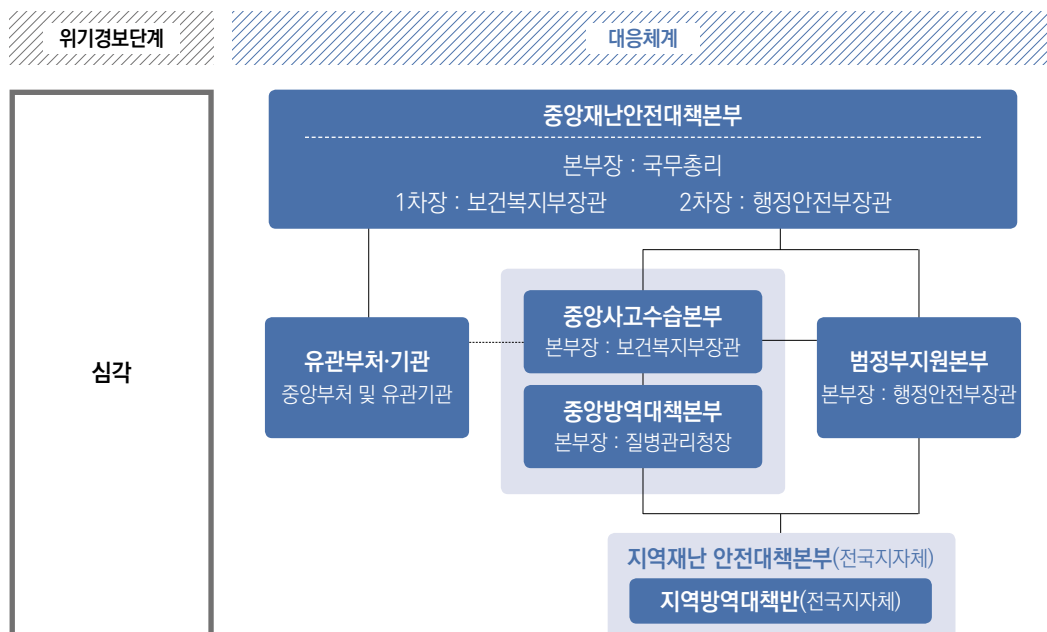
## ◆ 국가 대응 체계와의 유기적 연계·협력 추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에 부총리가 초기 대응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는 국가의 감염병 예방 대책과 교육 현장의 방향을 일원화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공조

초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확대 개편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부총리는 2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84회(평균 주 2회 이상) 참여하여 시기별, 현안별 대응 논의를 지속하였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중앙과 지방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및 국민 불안 경감을 위한 소통과 홍보 방안 등이 논의(2.9)되었다. 이러한 공조 체제는 구체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협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교육 분야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서울 소재 클럽 집단 감염 우려와 관련한 등교수업 연기 여부 논의(5.10), 나아가 2단계 격상 이후 9월에 총 학점의 20% 이내 원격수업 제한 폐지, 대학 자율 온라인 학과과정 운영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 논의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도와 주요 시기별 논의 사항은 다음의 그림과 표와 같다.

[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교육 분야 주요 논의 사항 ]

단계*	주요 논의 사항
1단계(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과 지방의 대응 체계 강화, 감염병 확산 대비 선제적 대응 및 국민 불안 경감을 위한 소통·홍보 방안 등(2.9)</li> <li>- 관계부처 협조 연락불가 중국 입국 유학생 소재 파악 요청(2.26~3.3)</li> <li>- 중국 입국 유학생 안내бус 운영(2.26.~4.3)</li> </ul>
2단계(3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본에 중국 유학생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검토 요청(3.5~3.6)</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마스크 수급안정 TF회의 등을 통해 수거한 학교 마스크 환원 조치 협조 공문 발송(3.11)</li> <li>-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안내 및 해외방문 학생 및 교직원 자율보호 조치 철저 강조(3.30)</li> <li>- 지자체별 소재 대학 중국 외 유학생 현황(입국 완료, 입국 예정, 입국 의사 없음) 안내로 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철저 요청(4.1)</li> <li>- 대면 수업 개시일 조정으로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시기 분산·지연, 각 대학에 자가격리 의무 준수 철저 지도 요청</li> <li>- 학생용 마스크 공적물량 약 450만매 공급 요청(4.6)</li> <li>-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교육부 합동 학원 점검(4.6~5.3)</li> <li>- 시도교육청·평가원에 검정고시 시행 일정 및 방역대책(안) 중앙방역대책본부 검토의견 안내(4.17)</li> <li>- 대학 학사 운영, 시설 출입 관리 등 대학 방역 관리 현황 중대본 공유(5.10)</li> <li>- 서울 소재 클럽 집단감염 우려 관련 등교수업 연기 여부 논의(5.10)</li> </ul>
3단계(8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인정 일수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돌봄교실 운영, 가족 돌봄휴가 연장 관련 법 개정 추진 등 아동돌봄 지원방안 논의(9.5)</li> <li>-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확정. 총 학점의 20% 이내 원격수업 제한 폐지, 대학 자율 온라인 석사과정 운영 추진,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논의(9.9)</li> </ul>

\* 단계별 구분은 1단계 초기 감염병 경보 단계가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이루어진 시기, 2단계 학교에 온라인개학이 시행되고, 이후 온라인과 등교개학이 병행된 1학기, 3단계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사회적 거리 단계 기준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시기 등으로 나눔

### 코로나19 대응 국회, 청와대, 관련 부처 등과의 회의 정례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조직적인 대응 이외에 교육부는 국회, 청와대를 비롯해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정례화하여 현안별 논의를 지속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별 주요 논의 사항 ]

회의명	주요 논의 사항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6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과 지방의 대응 체계 강화, 감염병 확산 대비 선제적 대응 및 국민 소통·홍보 방안 등(2.10)</li> <li>- 온라인 학습지원, 방역 등 개학 준비상황 점검 등(3.29)</li> <li>- 교육기관 방역조치 현황 점검 및 등교수업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등(6.17)</li> <li>- 2학기 대학 학사관리 방안 및 코로나19 대비 수능 관리 방향 등(7.15)</li> <li>- 유치종고 2학기 학사 운영 및 방역·학습·돌봄 안전망 구축 방안 등(8.18)</li> <li>- 코로나19 대비 2021학년도 수능 준비 대책(11.3)</li> </ul>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 회의 (20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돌봄교실 연장 운영, 아동 수당 40만원 추가 지급 등 논의(3.16)</li> <li>- 첨단 분야 인재양성 추진 상황 및 계획안, 사회 부처별 단기 대응 현안 과제, 정부부처 협업교과서 개발 논의(4.24)</li> <li>-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등하교길 안전 등 '등교 개학 대비 학부모 안심 지원 대책' 논의 등(5.11)</li> <li>-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논의(5.22)</li> </ul>

### 주거적 언론 대응 및 실시간 현장 소통 채널 운영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은 매일 국가,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교육부 역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공유와 함께 현장, 학부모 등 국민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사항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채널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언론 대응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알권리 충족

교육부의 교육 현안 정례 브리핑은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29회에 걸쳐 12월까지 지속되었다. 초기 조직 구성부터 교육부는 대변인과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을 중심으로 언론에 대응해 왔다. 또한 교육부 홈페이지 및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교육부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 질의에 대한 신속한 응답 체계를 갖추었다.

[ 교육부 홈페이지 등교·원격수업 관련 의견 청취 게시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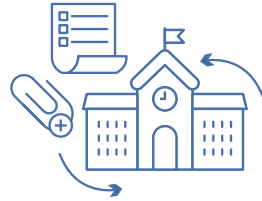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 학교 현장과의 실시간 소통을 위한 '1만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고 각 지역별, 학교별 대응 현황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1만커뮤니티」를 구성, 운영하였다. 1만커뮤니티는 시도교육청의 현장 대응반, 각 학교별 대표 교사 1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현장대응 지원 조직 등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학교 현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개학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2 학사운영 (기준 수립 및 시행)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학교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학교 내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맞게 적용해나갔다. 1차 유행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면서 등교수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갔으며, 이후 2차, 3차 유행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등교-원격수업을 적절히 병행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한 학사 운영을 시행해나갔다.

### 대응 시기별 주요 조치사항

#### 1.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기간(1.20~8.22)

#####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 개학 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 관리 및 대응

신학기 개학이 시행되기 전부터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개학연기 및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2월 23일에 전국 유초중고, 특수학교 개학일자가 처음으로 연기된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2월 24일에 시도교육감 협의 등을 통해 개학이 연기된 기간 동안의 교원의 역할과 복무 처리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학사운영 방안」이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되었다. 3월 2일 교육부는 개학 추가 연기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과 초등학생 대상 긴급돌봄 제공, 학원 지원 대책 등의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3월 17일에 신학기 개학일을 2주간 추가 연기하면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개학 전까지 학교 방역과 학습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여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더불어 3월 20일에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가정과 연계한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한 '특수학교(급)-가정 연계 지원 방안'을 안내하였다.

##### 등교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화

교육부는 등교연기 및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유초중고 신학기 등교개학을 총 4차례 연기하였다. 연이은 등교개학 연기에 따라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4월 6일 기준)의 휴업이 실시되면서 학사 일정에도 변화가 뒤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 축소를 허용하였다.

#### 등교연기, 온라인 개학, 단계적 등교 국민 여론조사 결과

##### ① 등교 개학

- 리얼미터(3.29): 적절(26%) vs. 부적절(72%), 갤럽(3.30): 적절(23%) vs. 부적절(74%)

##### ② 단계적 등교

※ 설문대상, 방법 및 시기: 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4.27~4.29), 학부모 대상 전화 설문(4.29~4.30)

- 등교 시기: 생활 방역 전환 후 1주 이내부터 2주 후까지(교원 57.1%, 학부모 67.7%) 전환 후 한 달 이상 경과 후(교원 28.8%, 학부모 23.4%)

- 등교 방법: 학교·학년별 단계적 등교 찬성(교원 83.6%, 학부모 48.6%)

- 등교 순서: 고3, 중3 우선 등교 찬성(교원 76.9%, 학부모 85.0%)

[ 등교수업 일시 ]

구 분		내 용
월	일	조 치
2	3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 484개 학교 개학연기·휴업 결정 •1차 개학연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개학 일주일 연기 (개학일: 3.2 → 3.9) 발표. 전국 단위 첫 학교 휴업령.
	23	
3	2	•2차 개학 연기: 전국 유·초·중·고 개학 2주 추가 연기(개학일: 3.23)
	17	•3차 개학 연기: 개학일 2주 추가 연기(개학일: 4.6)
	31	•4차 개학 연기: 초유의 온라인 개학 발표(4.9부터 중3, 고3 순차)
4	9	•1차 온라인 개학: 중3, 고3 사상 첫 온라인 개학
	16	•2차 온라인 개학: 초4-6, 중1-2, 고1-2
	20	•3차 온라인 개학: 초1-3, 초중고 개학 연기 49일 만에 공식 종료
5	4	•고3부터 순차적 등교 개학 결정 및 발표
	11	•등교 개학 일주일씩 연기 결정
	20	•1차 등교: 고3 (※ 개학 연기 80일 만에 첫 등교)
	27	•2차 등교: 유치원, 초1-2, 중3, 고2
6	3	•3차 등교: 3-4, 중2, 고1
	8	•4차 등교: 초5-6, 중1 ※ 99일 만에 모든 학생 등교 마무리

온라인 교육 개시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

3월 27일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3월 31일에는 현 시점에서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생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2021학년도 수능 시행일을 12월 3일로 2주 연기하는 등 대입 일정도 조정하여 함께 발표하였다. 이어서 4월 7일에 교육부는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원격수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은 원격수업 시행에 따른 학생 출결관리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수업 유형에 따른 세부 평가 방법과 학생부 기재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4월 16일에 개시된 2차 온라인 개학에 앞서 교육부는 원격수업 플랫폼 접속 장애 발생 시 시행할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담은 출결 및 대체학습 관련 추가 지침을 안내하였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장애유형·정도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특수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대면교육이 필요한 경우 철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전제



‘1만 커뮤니티’ 온라인 임명식

로 가정, 시설 등 1:1 방문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만 커뮤니티’, ‘학교온’, ‘지식샘터’ 등을 통해 교사들의 원격수업을 온라인으로 지원하였다. 교사들은 이를 통해 원격수업 사례와 노하우(know-how)를 공유할 수 있었다.

[ 교사 원격수업 지원 커뮤니티 ]

구 분	내 용
1만 커뮤니티	학교현장의 원격교육 안착을 위해 17개 시·도 학교별 대표 교사, 교육부,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관계기관에서 모인 공동체
학교온	교사가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하고 학습 및 생활 지도 등의 가정학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
교사온	지원을 요청한 교사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학급방 개설 및 온라인 학습 과정 설계와 운영 등을 돕는 원격지원 자원봉사단
지식샘터	원격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교사가 직접 동료 교사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 온라인 지식 공유 사이트

등교개학에 따른 학사운영 지침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등교개학 개시가 결정되면서 이에 맞는 학사운영 지침이 안내되었다. 가장 먼저 5월 7일 교육부는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과 ‘유치원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유치원 개학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은 개학 이후 출결관리 및 교수학습 원칙을 내용으로 5월 11일에 추가 발표가 이루어졌다. 한편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5월 29일에 교육부는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 인원 제한 방안도 발표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학 학사운영

유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불가해짐에 따라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졌다. 2월 5일 교육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4주 이내 개강연기 권고(단, 1학기 원격수업, 집중이수제 활용 등으로 2학기 학사일정 차질 예방은 필요),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필요시 2주 이내 학사일정 감축, 자가격리자와 입국 지연자에 대한 출석인정 권고, 중국 유학생 온라인 수업 기준 개정 등), 집단행사 자제, 연기 또는 철회 권고를 담은 '대학 학사운영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월 7일에 개강 연기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 회의를 통해서 탄력적 학사운영 지침에 원격 수업 활용, 수업결손 대체방안 모색, 외국인 유학생 입국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2월 12일에 개강 연기 권고에 따른 '대학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시행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첫째, 학사운영에 있어서 학칙을 따르되 자율적으로 개강연기 및 수업일수 감축, 코로나19 감염증 등으로 인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 마련, 둘째, 필요시 등록금 납부기한 연장 및 등록금 반환 일정 안내, 셋째,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변경된 학사운영 내용 안내, 재적생 전체 대상 질병정보 및 행동 요령 교육 등 적절한 학생 지도 방안 등을 담았다.

2월 29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명확해지면서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추진하였다. 3월 2일에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면수업 지양, 비대면 수업 권장 등을 골자로 하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각 대학의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되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하고, 둘째,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교육 콘텐츠 구성 방식도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셋째, 학사운영에 필요한 행정조치는 우선 실시하며 추후 학칙 개정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3월 5일에는 1학기 전면 원격수업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도 자국에 체류하면서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비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4월 25일에 교육부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에 따라 각 대학에 코로나19 안정화 단계까지 대면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였다.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기간(8.23~11.18)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 학사운영 지침

코로나19 확산 초기(1학기)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2학기에는 개학 연기 없이 학사운영을 시작하였고,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등교수업 또는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진행하였다.

#### [ 등교수업 일시 ]

구 분		내 용
월	일	조 치
8	26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특수학교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9.11 까지)
9	12 21	•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특수학교 원격수업 연장(9.20 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전국 유초중(1/3이내) 고(2/3 이내 밀집도) 등교수업



특히 2학기 학사운영의 기본 지침으로 「2020학년도 2학기 학교 밀집도 시행방안」과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안내하였다. 시행방안에서는 2학기 학사운영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등교·원격수업 방식 및 학교 내 밀집도 수준 등을 포함한 학사운영 원칙을 제시하였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020학년도 2학기 특수학교(급)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원격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의 콘텐츠 확충 및 기능개선, 학습꾸러미 병행 지원, 1:1 또는 1:2 학교·가정 대면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하

계방학 기간 중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과 생활 수칙을 함께 안내하였다. 이어서, 발표한 세부 지원 방안에서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 운영 방안과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사운영 지원 방안 등을 각각 포함하였으며,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출결·평가·기록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

구 분	내 용
교육과정·평가·기록	등교·원격수업 병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2학기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개선을 통해 학사운영의 유연성 확보
교육과정·수업방식 혁신	학습내용 재구조화·블렌디드 수업 모형 제공 등 온·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한 체제로 수업방식 혁신 지원
맞춤형 피드백 활성화	교사-학생간 정서적 유대 강화 및 학습동기 독려를 위해,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 활성화 유도
출결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하고, 출결 확인 시스템 개선 및 학교 자율성 강화
평가·기록	단위학교의 수행평가·지필평가 선택권 부여 등 평가 부담 완화 및 학생부 기재 가능 범위 확대 등 평가·기록 자율성 확대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화

코로나19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등교수업 개시일과 원격수업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다음의 표에서처럼 10월 11일에는 교육부는 빈번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연장에 따른 학교 학사 운영 수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대본 지침(1단계: 등교·원격 수업, 2단계: 등교·원격 수업(등교인원 축소), 3단계: 원격수업 또는 휴업)을 조정한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11월 1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에 맞춰, 새롭게 추가된 1.5단계와 2.5단계의 학교 밀집도를 포함한 학사운영 기준을 발표하였고,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두어 11월 7일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별 등교원칙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조치 사항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밀집도 2/3 원칙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최대 2/3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 수업 전환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 분야 관련 사항'(20.11.1)에서 발췌.

특수학교(급)은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20.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였다. 아울러 학력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 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추가로 대면지도가 가능하게 하였다. 9월 21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라 학교 밀집도 지침을 준수하며 등교수업을 개시하였다.

한편 9월 9일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총리는 대학도 여건에 따라 원격·대면 수업을 자유롭게 병행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개설 제한 폐지, 이수학점 비율 상한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함으로써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후 기간(11.19~12.15)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도 11월 1일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단계별 등교원칙을 기반으로 학사운영을 유지하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학교급별로 학교 밀집도를 고려하여 등교 학생 수와 학년별 등교일자를 결정하여 등교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별 유행 위험도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 등의 선제적인 학사운영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원격수업 질 관리, 학생평가 내실화를 위해 방역당국을 비롯하여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 3차 유행 시기 시·도별 학사조치 현황 ]

구분	시·도
원격수업 전환	서울(중·고 ~별도 안내 시/유·초·특 12.15~12.31) 경기(12.15~12.31) 인천(12.15~별도 안내 시) 울산(12.14~12.24) 제주(12.21~12.24)
2.5단계	세종(12.21~별도 안내 시) 광주(12.3~12.28) 부산(12.14~별도 안내 시)
2단계	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대구·경북·경남·강원

**대면수업·활동 관련 시·도 학교 자율성 강화**

**유치원** 유아·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를 위해 유치원의 등원 자율성 강화

**초·중·저학년**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대면수업 확대 관련 학교 자율성 강화

**밀집도 기준 완화** 밀집도 기준을 '동일 시간대로'로 적용하여, 필요시 오전·오후반, 분반 등을 통한 대면 등교수업 확대 가능(단, 휴식시간 확보)

**밀집도 대상 완화** 기초학력지원 대상학생,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 등이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 미포함

3 / 3

## 주요 성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전 신속한 학사 조정 실시

#### 초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대학의 개강 연기 권고

교육부는 2월 5일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 직후 부총리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대학에 4주 이내의 개강 연기를 권고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월 12일에는 '대학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

구 분	내 용
개강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도 및 학기 개시일은 현행 학칙을 따름</li> <li>•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자율적으로 결정</li> </ul>
수업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년도 2주 이내에서 감축 운영 가능</li> <li>•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유지</li> <li>•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활용하여 수업시간을 편성하여 수업일수를 보충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 적극 활용</li> <li>• 학기에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 중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현행 100분의 20이내)적용을 제외함</li> </ul>
출석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입국 지연 및 등교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 인정 가능</li> <li>• 감염증 의심 증상 학생도 증빙 서류 제출하면 출석 인정 가능</li> <li>•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li> <li>• 중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감염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li> </ul>
등록금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장이 결정하며,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함</li> <li>•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li> <li>• 강사료는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지급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 권고</li> </ul>

자료: 교육부(20.2.12). 보도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이는 다수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학 내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내린 조치였으며 대학들은 소속 학생들에게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을 사전 공지하였다.

교육부는 2월 17일 부총리 주재로 총청권 13개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지자체간 협조체계 강화 방안과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직업계고 학생들의 의료기관 현장실습에 대한 어려움 해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병원 환경 속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3월에 있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80시간의 현장실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보호를 위해 선별진료소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3월 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우 시험 응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실습을 수료하면 되도록 조치하였다. 2월 19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직업계고 간호보건계열 현장실습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 직업계고 간호보건계열 교장 및 담당부장, 교육부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학교 내 실습의 일부를 의료기관 현장실습으로 인정하고, 9월 국가자격시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야 하는 현장 실습을 자격시험 응시 이후에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의료기관 실습기준을 10% 감축하는 것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졌다.

2월 22일 교육부는 직업계고 간호보건 계열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전면 중단하라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필요한 병원 현장실습은 합격 후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습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

#### 학생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교육부는 2월 22일 부총리 주재 부내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감염학회 이사,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대학의 감염내과 교수가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전망, 학교 개학 연기의 필요성 등 신학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2월 23일 '코로나19범정부대책회의' 후 신학기 전국 유초중고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한다고 밝히고 시도교육청에 공문시행을 통해 이를 안내하였다. 이 조치는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게 적용되었으며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초·중·고·특수학교 개학연기 및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현황을 관리하였다.

#### 졸업식 전면 취소 혹은 축소 권고

교육부는 2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조치로 졸업식, OT 등 집단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연기 또는 철회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전국의 대학들은 대학 졸업식, 신입생 OT를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하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월 12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는 집단행사 개최 시 필요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을 취하라고 하면서 '현재는 신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집중하는 시기로서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음'이라고 명시하여 대학가에 다소 혼란을 초래하였다(이효석, 2020c). 그러나 이미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대학들이 다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였으며, 2월 26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2판)'에는 '코로나19의 감염전파 가능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시도교육청들은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졸업식 축소 혹은 취소 지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학급별 교실 졸업식을 진행하거나 졸업식 날 학부모 및 외부인 건물 내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 유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수립

2월 25일 교육부는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대학과 마찬가지로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연기하였다. 또한 통일된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학사일정 조정, 출결처리, 학습지원, 행사 운영 등에 대한 원칙을 정하게 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별 확진자 상황,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휴업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위해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한 학교와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 학생, 교직원 및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학생, 교직원 및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으로 교내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 ◎ 학생, 교직원 및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가족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 된 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에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 ◎ 인근 지역 및 학교 내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 조치된 자가 다수 발생하여 방역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해당 학교에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중국 학생이 다수 재학(예: 전체 학생의 30%이상)하는 경우
- ◎ 일정수준 이상의 학생이 등교 중지되어 정상적 수업이 어려운 경우
- ◎ 보건당국이 감염 확산을 우려하여 휴업을 권고하는 경우
- ◎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학교는 연간학사일정을 순연하고 방학 일수를 조정하여 법정 수업일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단, 감염증 등으로 인한 휴업일이 일정기간(15일)을 초과할 경우 학생의 휴식권 및 학기 개시 전 교육과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정 수업일의 10%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수업일 감축이 15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휴업 기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 및 콘텐츠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3월 2일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초·중·고 추가 개학 연기 및 후속 지원 방안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학사 운영 권고안을 담은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로 유·초·중·고의 신학기 개학일은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간 추가 연기되었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면서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개학을 추가 연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개학연기를 추가로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9만 명을 넘어섰다(이효석, 2020a). 3월 17일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3차 휴업 명령을 발표하였다. 학교는 3월 3주간의 휴업에 대해서는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 수업일을 10%(유치원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 원격수업 중심의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 제시

교육부는 3월 2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을 통하여 재택수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하고, 콘텐츠 구성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권고안에 따른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 전자투표 방식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교육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하였다. 법제처의 협조를 받아 기존의 입법 예고 기간인 40일 이상 대신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4월 7일에 개정되었다.



### 체계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안 마련

교육부는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3월 27일 이를 공표하였다. 기준안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정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하였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가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와 같이 원격수업의 운영방식을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형태로 운영하되,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 형태 ]

구 분	내 용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토대로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는 학습 진행도 확인 및 피드백 •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기타	• 교육청,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자료: 교육부(20.3.27). 보도자료

출결 처리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사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다만,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서는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에서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습내용, 학습방법, 과제, 수업 이수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원격수업계획을 안내하였다.

###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에 대응한 다각적인 학사 운영 지원

####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상 전면 온라인 개학 실시

교육부는 3월 31일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앞선 세 차례의 휴업 명령을 통해 4월 3일까지 신학기 개학을 연기하였으며, 3일간의 추가 휴업(4.6~4.8)을 거쳐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과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4월 6일 등교개학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국민 다수(리얼미터, 3,29조사 72% / 갤럽, 3.30조사 74%)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온라인 개학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고3, 중3을 시작으로 학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학 시기를 다르게 정하여 현장에서 준비 및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2020학년도 단계적 온라인 개학 ]

학 년	4.6~8	4.9~10	4.13~15	4.16~17	4.20~
고	3	휴업(3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9~)	
	1, 2	휴업(7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중	3	휴업(3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9~)	
	1, 2	휴업(7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초	4~6	휴업(7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1~3	휴업(9일)			온라인 개학(4.20~)

자료: 교육부(20.3.31). 보도자료

#### 현장의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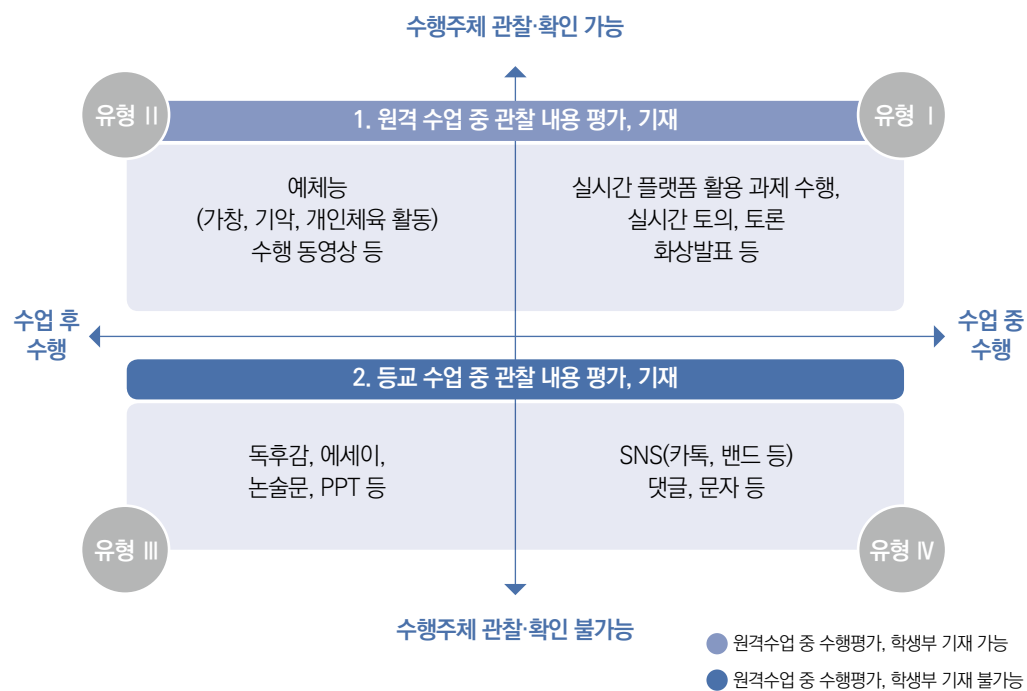
교육부는 4월 7일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원격수업 시 단위학교별 출결 및 평가 원칙과 방법,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담은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지역·학교 여건, 교사

의 전문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운영지침과 원격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학생 출결 관리는 수업 당일을 기준으로 교과담당교사가 차시 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결과)'만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임교사가 이를 종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원격수업의 경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출석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에서의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의 원칙도 마련했는데,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가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교사가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관찰·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실제 평가 상황을 수업 중 수행인지, 수업 후의 수행인지 구분하고 다시 수행의 주체를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여 다음의 그림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원격수업 중 수행 평가 가능여부와 학생부 기재 가능 여부를 명시했다.

[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



자료: 교육부('20.4.7). 보도자료

### 원격수업 실천 수칙 마련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용을 위해 사이트에 동시에 몰릴 경우, 통신망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끊길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이 원격수업에 대비하여 지켜야 할 실천 수칙을 4월 9일 온라인 개학에 맞추어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 원격수업 실천수칙 ]

목 적	내 용
원활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격수업 들을 때, 되도록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이용하기</li> <li>e학습터와 EBS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하기 (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발생 방지)</li> <li>학교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li> <li>교육 자료는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li> <li>교육 자료는 긴급적 수업 전달(17시 이후 권장)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하기</li> </ul>
안전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li> <li>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li> <li>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등에 보안(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li> <li>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는 열어보지 않기</li> <li>수업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 배포하지 않기</li> </ul>

자료: 교육부('20.4.9). 보도자료

실제로 원격수업이 시작되고 많은 학생들이 몰리자 곳곳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4월 16일 초등 1~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 총 400만명의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하자 공공 원격수업 플랫폼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접속 오류를 일으킨다는 반응이 쏟아졌다(김창영, 2020). 반면 1~3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에 참여하여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본격적인 원격수업을 시작한 4월 20일에는 우려했던 접속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이효석, 2020b). 그 사이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덕분이었다.

### 등교수업·원격수업 병행에 따른 신속한 현장 지원

####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교수업 시작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다. 이에 맞추어 교육부는 5월 4일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5월 연휴 기간 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인 5월 20일부터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등교수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다음의 표와 같이 고3 학생의 경우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먼저 시작하기로 계획하였다. 교원·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6.9%와 학부모의 85.0%가 고3, 중3 우선 등교에 찬성하였다. 한편, 특수학교는 유·초·중·고 단계별 등교수업 일정을 기본적으로 준용하되 시·도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교수업 일정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확진자로부터 감염확산이 일어났고, 교육부는 당초 5월 13일에 고3학생부터 등교시키기로 한 계획을 1주일간 연기하고 그 외 학년의 등교수업도 1주일 순연하기로 계획하였다.

[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시기 ]

단 계	당초 계획된 일정	수정된 일정	등교 대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선단계	5.13(수)	5.20(수)	고3		
1단계	5.20(수)	5.27(수)	고2	중3	초1-2 + 유치원
2단계	5.27(수)	6.3(수)	고1	중2	초3-4
3단계	6.1(월)	6.8(월)		중1	초5-6

자료: 교육부('20.5.4). 보도자료

그 가운데 인천 휘트니스센터 수강생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 확산 및 대구 ○○마이스터고 학생 감염 등이 일어나 일부 지역에서는 등교첫날부터 등교 중지로 전원 귀가 조치되었으며 역학조사와 진단 검사를 거쳐 학생과 교직원 전원에 대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등교재개가 이루어졌다.

[ 지역별 등교 중지 학교 및 등교재개 시점 ]

지 역	등교중지 학교	등교재개시기
인 천	66개교	5월 25일
경기 안성	9개교	5월 21일
대 구	1개교	5월 27일

자료: 교육부('20.5.24). 보도자료

이후 지역별로 감염 확산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 지역 학교의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원격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는 2020년 6월 1일 10:00를 기준으로 한 등교수업 조정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 지역별 등교 중지 학교 및 등교재개 시점 ]

(단위: 개교)

광역시도	자치구역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비고
		특수	유	초	중	고	계	
서울	서울		37	45	15	5	97	
부산	금정					2	0	
인천	부평	4	67	42	21	19	134	
	계양	1	36	26	15	11	78	
	서구			1			1	
경기	부천	2	125	64	32	28	223	
	구리		1	2	1	1	4	
	안양			1			1	
	수원			1			1	
경북	구미		1				1	
	경산					1	0	
합계		7	267	182	84	67	540	

\*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자료: 교육부('20.6.1). 보도자료

교육부는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법은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지역상황을 고려한 등교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위학교는 시도 계획에 근거하여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운영계획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계획하였다.

[ 등교수업 운영 계획 예시 ]

구 분	〈시도 등교수업 운영계획〉	〈단위학교 방안〉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례1) 학급별 시험대형(4x7)으로 책상 배치</li><li>• (사례2) 과밀학급 수업은 과학실, 시청각실 등 특별실 활용</li><li>• (사례3) 학급별 시험대형(4x7)으로 책상 배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 30명 초과 학급은 특별실 (음악실, 진로체험실, 과학실) 이동</li><li>• (◇◇고) 개인별 급식지정좌석제 및 학년별 급식시간 분리</li><li>• (□□고) 학생책상 가림판 설치, 학급별 배식 출발시시간 시차운영</li></ul>

자료: 교육부('20.5.17). 보도자료

등교수업 전환 지원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는 5월 7일 안정적인 등교수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등교수업 이후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평가는 등교수업 뿐만 아니라 원격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등교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평가가 어려울 경우 시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도의 지침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유치원의 출결관리에서도 등원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 및 기저질환을 가지거나 특수교육대상인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에는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와 같이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신설하였다.

등교수업 시 적용 가능한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 공유

교육부는 5월 14일 등교 수업 이후 학생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방식과 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학년별 격주제, 격일제 등교 방안, 분반을 통한 미러링 동시수업 방안, 급식시간 시차운영, 간편식 제공, 한 개 층 내 복수학년 배치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단축수업 운영 등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등교 수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등교수업 지원의 달’ 지정·운영

교육부는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지정해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지역 감염 우려가 확산되는 지역 소재 학교는 교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2/3를 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강력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지역감염 확산 우려 지역,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역감염 확산 우려지역 밀집도 최소화 방안 예시 ]

학년 단위 격주제 등교											비고
	5월	6월				7월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중·고3		등		교		수		업			월 10일 등교
중·고2											
중·고1											

학년 단위 격일제 등교														
	5월 4주			6월 1주					6월 2주					비고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중·고3			등		교		수		업					월 10일 등교
중·고2														
중·고1														

자료: 교육부(20.5.24), 보도자료

또한, 실습이 많은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은 등교를 통해 부족한 실습을 집중이수하고, 1·2학년은 실습수업을 중심으로 특정요일에 등교하여 밀집도를 분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등교수업에 앞서 학교와 교원이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행정 업무 경감, 인력 및 행정 지원, 애로사항 해결 및 소통 활성화 등 방안도 수립하였다. 먼저 ‘등교수업 지원의 달’ 기간 동안 수업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 연수, 회의, 행사, 출장 등을 지양하고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교육부 추진 사업을 과감히 축소·조정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의 경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 연기, 간소화 또는 취소 결정을 하였다.

수도권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교육부는 등교수업의 순차적 개시 이후,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지역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차원의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5.28)와 연계하여, 수도권 지역 고교 학생을 2/3이하로 등교시키고 유·초·중·특 학생을 1/3이하로 등교하게 하는 내용의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6월 9일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수도권 지역 93.5%의 학교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현황(2020년 6월 9일 기준) ]

시도	학교급 (초·중·고)	학교수	학급당 평균 학생수(명)	등교 인원 현황					
				1/3 이하 등교		1/3~2/3 내외 등교(원)		전체 등교	
				개(원)	비율	개(원)	비율	개(원)	비율
서울	초	602	21.9	598	99.3	3	0.5	1	0.2
	중	386	24.2	386	100	0	0	0	0
	고	320	24.3	0	0	319	99.7	1	0.3
인천	초	262	21.6	232	88.5	5	1.9	25	9.5
	중	136	25.2	128	94.1	1	0.7	7	5.1
	고	125	32.6	10	8	107	85.6	8	6.4
경기	초	1313	22.8	1143	87.1	38	2.9	132	10.1
	중	638	28.6	598	93.7	8	1.3	32	5
	고	480	25.3	2	0.4	460	95.8	18	3.8

자료: 교육부('20.6.17). 보도자료

또한, 단위학교에서는 격주/격일 등교, 학년/학급 분산 등교 등 지역·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 학사 운영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았다.

[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현황(2020년 6월 9일 기준) ]

시도	학교급 (초·중·고)	학교수	등교·원격수업 병행 방법		등교·원격수업 병행 시 세부 운영 방법		
			격일 운영	격주 운영	학년별 등교	학급별 등교	학급 내 분반 등교
서울	초	602	581 96.5%	21 3.5%	554 92%	116 19.3%	237 39.4%
	중	386	5 1.3%	381 98.7%	386 100%	7 1.8%	1 0.3%
	고	320	0 0%	319 99.7%	320 100%	1 0.3%	0 0%
인천	초	262	197 75.2%	15 5.7%	227 86.6%	25 9.5%	112 42.7%
	중	136	13 9.6%	114 83.8%	109 80.1%	42 30.9%	13 9.6%
	고	125	4 3.2%	103 82.4%	107 85.6%	3 2.4%	0 0%
경기	초	1,313	1,062 80.9%	153 11.7%	975 74.3%	235 17.9%	701 53.4%
	중	638	43 6.7%	560 87.8%	594 93.1%	21 3.3%	40 6.3%
	고	480	16 3.3%	457 95.2%	458 95.4%	5 1%	2 0.4%

자료: 교육부('20.6.17). 보도자료

등교수업에서의 평가 부담 완화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행평가 실시 영역(횟수)과 성적반영 비율을 축소·조정하여 학생의 평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지침과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수행평가의 성적반영 비중을 평균 39%에서 22%로 낮추었으며, 수행평가의 횟수도 2영역 이상(7개칭)에서 → 1영역 이상(8개칭), 2영역 이내(1개칭)로 줄였다.

자율적·탄력적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교육부는 7월 31일 학교 내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2학기 학사운영의 기본 방안을 발표하였다. 아래의 표와 같이 정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용하여 단계별 등교·원격수업의 방식, 학교 내 밀집도 수준을 결정하고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가 여름 방학 중 2학기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격 수업 기준 ]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유치원, 초·중·고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고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자료: 교육부('20.7.31). 보도자료

또한, 유치원의 유아·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대면 등교·등원수업 확대와 관련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였고, 오전·오후반, 분반 등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이고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대면 등교수업을 운영하도록 밀집도 적용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기초학력지원 대상학생,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등이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교육부는 8월 6일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세부지원 방안은 교육과정(수업), 평가, 기록 방안과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사운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먼저, 오프라인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혼합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년·교과·교과별 수업 모형을 제공하였다. 또한, 여러 교원이 공동으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개별적인 환류가 가능한 협력수업(co-teaching)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혼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교사와 학생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1학기에 예체능 과목만 가능하도록 했던 원격수업 기간 중 수행평가를 아래의 표와 같이 다른 교과목으로 확대하였다.

[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 ]

구 분	1학기	2학기
내 용	• 예체능 과목만 가능(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모든 교과 가능(인정)</li> <li>• (중학교) 국·영·수·사·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 가능(인정)</li> <li>• (고등학교) 기초·탐구 교과(군)를 제외한 모든 과목 가능(인정)</li> </ul>

자료: 교육부(20.8.6). 보도자료

또한 전국단위로 원격수업 또는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성적 미산출, PASS제 도입 가능)하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는 현실적 필요를 고려하여 제한적 등교일에 지필고사를 치르는 등 최소한의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 ]

구 분	초	중	자유학기	고
평가	1·2 단계 - 성적 미산출 - 수행평가 선택 (평가 미실시 가능) 3단계	- 성적 산출 - 수행·지필평가 선택 가능 - (1·2학년) 평가 미실시 가능(P) - 선택 기재 (특기할 만한 사항)	- 성적 미산출 - 평가 실시	- 성적 산출 - 수행·지필평가 선택 가능
교과 세특	1·2·3 단계 - 모든 학생 기재 ※ (3단계 시) 학생 활동 내용 또는 원격 수업 내용만 기재 가능	- 선택 기재 (특기할 만한 사항)	- 모든 학생 기재 ※ 자유학기 활동 포함	- 모든 학생의 기초, 탐구교과 기재
창·체	1·2 단계 - 모든 학생 기재 (정량자료 및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역) ※ 관찰 가능 수업시간 확보 3단계 - (기본원칙) 모든 학생 필수 기재 - (동아리활동) 정량기록 + 원격수업 또는 학생 활동 내용 ※ (가능할 경우) 관찰 및 학생 상호평가 내용 - (진로활동) 정량기록 + 원격수업 내용 + 대면/비대면(유선 포함) 진로상담 결과 - (자율활동) 정량기록 + 원격수업 내용			
행·특	1·2 단계 - 모든 학생 기재 (교사의 관찰·평가 내용, 상담내용) ※ 실시간 온라인(유선 포함)으로 진행한 진로상담 결과 포함 가능 3단계 - 모든 학생 대면·비대면(유선 포함) 관찰·평가 내용 기재 (필요 시 정량기록 포함 가능)			
	• 예체능 과목만 가능(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모든 교과 가능(인정)</li> <li>• (중학교) 국·영·수·사·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 가능(인정)</li> <li>• (고등학교) 기초·탐구 교과(군)를 제외한 모든 과목 가능(인정)</li> </ul>		

자료: 교육부(20.8.6). 보도자료

## ◆ 단계별 상황에 맞춘 신속하고 유연한 학사 운영 관리

### 수도권 지역 상황을 고려한 유·초·중·고·특수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5)이후 일부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는 8월 25일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금)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등교수업 재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월 14일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2.5→2단계)됨에 따라, 9월 21일(월)부터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로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9.28~10.11)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은 10월 11일(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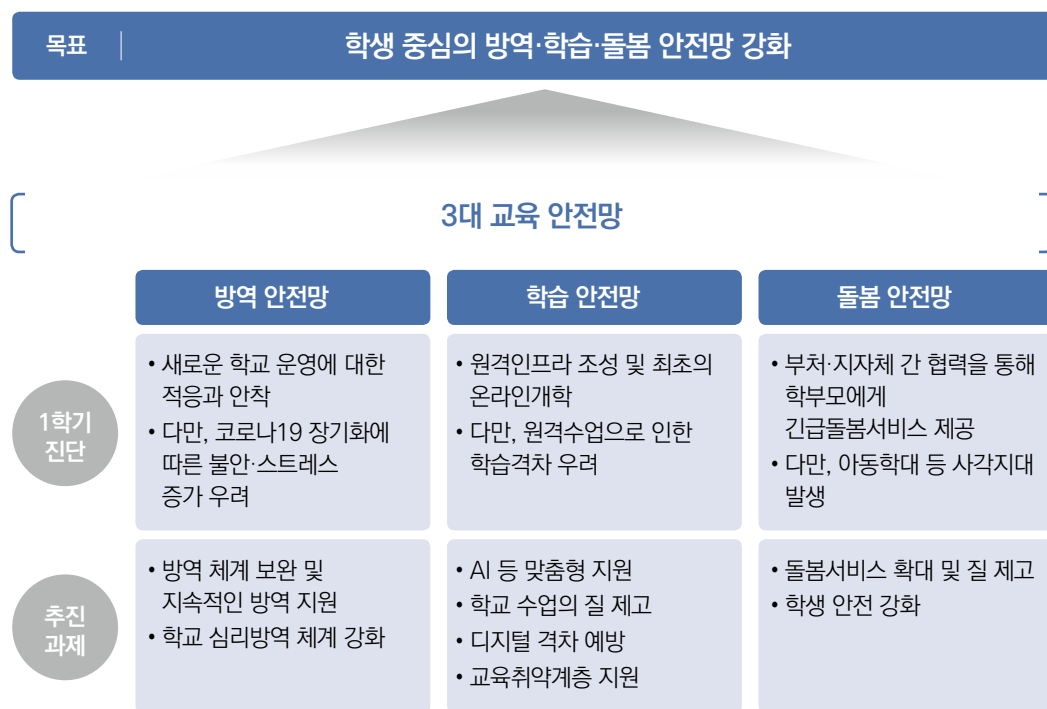
교육부 10월 11일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9.28~10.11)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이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10월 11일 중대본에서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의 밀집도를 2/3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함으로써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감염병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방역·학습·돌봄 3대 교육안전망 마련

### 1학기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선제 대응 노력

8월 11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1학기 학교교육 운영 성과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2학기의 학사운영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1학기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의 지속은 이루어졌으나,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격차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여 더욱 세밀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



###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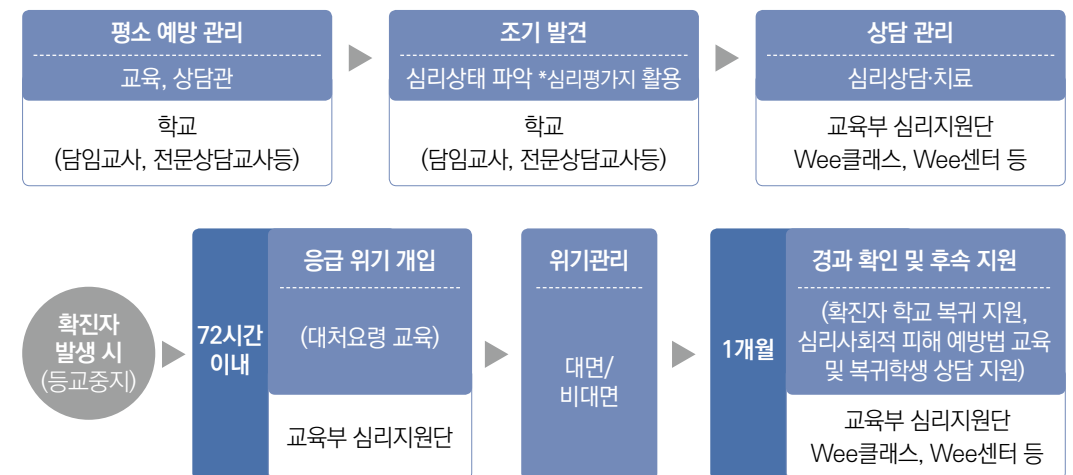
- ①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1학기 경험과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안전 및 학습과 돌봄에 대한 안전망 마련
- ② 학생·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방역·학습·돌봄의 교육자치·협력 실현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대책 수립

## 방역 안전망: 방역체계를 촘촘히 보완하고 심리방역 강화

1학기 방역물품 소진 실태 등을 감안해 방역물품 283억원 분량을 충분히 비축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현장의 피로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역물품을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일괄 구매하도록 하고 교원의 수업 전념을 위한 방역 인력 지원을 추진하는 등 학교의 방역 역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다.

아울러, 자가격리자·확진자는 물론 일반 학생이나 교직원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심리방역'에 노력을 기울였다. 정신과 전문의 60여명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 비대면 24시간 모바일 상담시스템 등 맞춤형 심리 지원을 강화하였다.

[ 학교 심리 방역체계 ]



## 학습 안전망: 학습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1학기 중 교육용 사이트 접속을 위한 모바일 데이터 무상 지원 등 디지털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바탕으로 초·중·고 학생 534만 명 중 98.9%가 원격수업에 참여하였고, 교사가 업로드한 콘텐츠 수도 2,890만개(7.31 기준)에 이르는 등 원격수업이 점차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므로, 기초학력 부족 학생 대상 1:1(소그룹) 맞춤형 대면지도도를 확대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협력수업을 활성화하는 등 학교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위기학생 등 원격수업 환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시각장애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원격수업 콘텐츠에 점자·자막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달장애 학생은 필요시 철저한 방역 하에 1:1 또는 1:2로 대면교육을 실시하였다.

돌봄 안전망: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학생 안전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한편으로는 돌봄 공백과 아동학대 등 보호·안전의 사각지대가 발견되었다. 이는 학교 안팎에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였으므로, 돌봄서비스 확대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교실 리모델링 등 돌봄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24(정부종합민원포털)와 연계해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교육지원청,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이 참여하는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위기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보호·지원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에 선제적·통합적인 대응을 추진하였다.

### 3 학교 방역 시스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새로운 학교방역 모델을 도출하였다. 코로나19 유행 단계에 따라 방역 지침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관별 방역 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였다.

[ 코로나19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학교방역 모델 ]

구분	밀집도 완화된 수업모델 개발	학교내 촘촘한 방역환경 조성	유증상자 밀착관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역별 등교규모 기준 조정</li><li>등교 및 쉬는시간 차등화</li><li>교실분반 수업 및 온·오프라인 블렌디드러닝</li><li>원격수업 인프라 확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책상 이격배치, 창문 수시 개방, 열화상카메라 설치</li><li>마스크, 냉방장치 사용기준 마련</li><li>책상·출입문 손잡이 소독</li><li>식탁 칸막이 설치, 단방향 식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등교 전 자가진단 및 유증상시 등교 중지</li><li>임상증상 발생시 전원 선별진료소 방문 진단검사</li><li>해외 입국자 등교 중지</li><li>기숙사 입소전 진단검사</li></ul>



## 대응 시기별 주요 조치사항

### 1.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기간(1.20~8.22)

#### 기관별 방역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학교방역 지침을 2월 둘째 주부터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배포하여 방역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가장 먼저 2월 13일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및 행정안전부의 '정부-지방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을, 2월 14일에 시설의 이용 빈도, 행사 개최와 같이 특이사항 발생 등을 고려한 소독 실시주기 및 범위 등을 포함한 '학교 소독지침 안내'를, 3월 11일에는 기관 내 확진자 발생 시 초동 조치, 시설폐쇄, 소독요령, 복무관리 등과 같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취해야 할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내서)'을 각각 배포하였다.

한편 3월 21일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학교가 준수해야 할 방역의 기본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세부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확진자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포함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지침을 배포하여 개학 준비를 위한 방역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였다. 해당 지침은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지침(안)을 관계부처와 관련 학회로부터 2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모의훈련 및 학교방역 점검(5.6, 경북 김천여고)

유초중등학교 등교개학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되면서 개학을 대비한 방역 강화가 더욱 시급해졌다. 이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교내에서는 학교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학 전 준비 실태 파악을 하였다. 특히 방역 운영계획 수립, 방역물품 비축, 소독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4월 20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4.20~5.5)에 따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안)'에 대한 개정 필요사항 등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4월 21일 생활방역 체계 전환부터 등교까지 자가진단 실시, 유증상자 발생 시 즉각 조치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등교 개학 이전에도 의심증상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하였다. 4월 30일 등교수업 대비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발열 및 호흡기 질환 학생에 대한 신속 검사, 등교 전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 확인을 위한 구체적 진단항목 등을 중수본에 요청하였고, 5월 4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일시적 관찰실 운영 관련 기준 등 학교 감염예방관리 안내 지침 개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5월 6일자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등교개학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당국은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학교현장 방역준비 상황을 점검하였고, 5월 7일에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2판)」을 배포하여 방역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다듬었다. 개정 지침은 제1판의 전체적인 기초를 유지하면서 자기건강 관리상태 조사(자가진단 설문),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 보건교육, 교내에서 마스크 사용 기준, 학교 에어컨 사용 등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였다. 학교에서 등교수업 시작 1주 전부터 학생들의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등교수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다. 아울러 소방청과 협조하여 학교 내에서 등교 후에 의심증상 학생이 발생할 경우 구급차에 탑승시켜 선별진료소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등교수업에 대비해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초기에는 감염 확산 가능성이 낮은 간편식이나 대체식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일정 기간 제공하다가 단계적으로 일반식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5월 29일에는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하였고, 서울·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8.15)된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부산지역 교육감과의 긴급 영상 회의를 거쳐 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 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24, 교육부)

#### 〈개학 전 학교의 준비사항〉

(소독 강화) 개학 전 전문업체에 위탁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소독 완료

(관리 체계)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의심증상자 사전 파악 및 등교 중지 안내

※ 교직원의 내용 숙지를 위하여 학교단위로 교직원 대상 사전교육(비대면) 실시

(위생 환경) 의심 증상자 격리 장소(일시적 관찰실) 준비,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분산) 방안 마련·안내, 위생·방역물품(비누·손소독제·체온계·휴지 등) 비치 등

※ 발열검사를 위한 학교 출입문 조정 등 동선 확정 안내, 열화상카메라 조기 설치 등

(마스크 비축)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 비축·지원을 통하여 확산 차단

#### 〈개학 이후 학교의 주요 조치사항〉

(발열 검사)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후 의심증상 시 등교중지 및 학교연락, 등교 시 및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유증상자 귀가

※ 1주일 전부터 학생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가동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교육,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및 보호 조치

(등교·출근중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해외 여행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 시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

(교육 및 실천지도) 다수 공간에 개인위생 수칙 게시, 교내 방송을 통한 수시 안내,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착용 실천 지도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역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14일간 등교 중지(학교시설은 소독 후 이용 가능)

####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학교장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 해당 교실 또는 교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교실, 교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이동 경로 불명확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이동 경로 불명확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 대학 방역

교육부는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회의(2.5), 주요 대학 학사팀장 회의(2.7), 주요 대학 교무처장 회의(2.8)를 거쳐 2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에 안내하였다. 3월 2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건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 지양 및 재택수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대학 인근 지역에 대한 방역도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교육부-대학-지방자치단체 간에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강화하는 한편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 4월 중 순경 대학에서 국내감염과 해외유입 2차 감염이 모두 발생하기 시작하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동아리활동, 학생 자치활동, 운동부 훈련 등 대학 내 집단 활동을 자제할 것과 대학 내 도서관, 학생회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관리와 대학 시설물 등에 외부인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 학원 방역

2월 18일부터 시도교육청의 협조 하에 학원, 교습소 대상 코로나19 예방 관리 강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을 다녀온 학생 및 직원에 대해서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으로 학원 등원 중지 및 업무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감염예방 물품을 비치하고 예방수칙을 게시하였는지, 시설 내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였다. 3월 둘째 주(3.10~3.18)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원은 휴원을 권고하면서 자체적인 방역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추적 관리하였다.

3월 21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발맞춰 학교 방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학원용 방역 지침('방역 체크리스트')을 수정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수정안에서는 확진자 발생 시 이용시설 사용을 기존의 '폐쇄'에서 '일시적 이용 제한'으로 변경하였다. 3월 25일에는 '방역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학원에 안내하였다. 이로써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학교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학원 필수 방역 지침(중수본 발표, 3.21)

##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 ② 기준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5월말에는 ‘서울 소재 클럽’발 감염 확산 이후 총 7곳의 학원에서 강사, 직원의 감염이 발생하고, 20여명의 학원 수강 학생이 추가 감염되는 등(5.28기준) 학원을 통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학원과 PC방 및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시행(5.29~6.14)하였다.

##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중수본 발표, 5.28)

구 분	사업주·종사자	이용자 (신설)
학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li> <li>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li> <li>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 작성)</li> <li>방역관리자 지정</li> <li>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li> <li>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li> <li>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마스크 착용</li> <li>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li> </ul>

-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 기타 방역 관련 사안

## 방역 물품 확보

교육기관에 필요한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긴급돌봄(1순위), 중국유학생(2순위), 신학기 유초중등 학생(3순위) 등 우선순위에 따라 확보하였다. 마스크 수급안정화 조치로 학교 마스크의 일부를 수거하여 국민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였는데, 수급이 안정된 이후인 3월 9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협하나로마트)에 마스크 판매 후 잔여분 회수 협조를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에는 학교 마스크 재확보를 위해 전량 보충을 요청하였다. 수차례에 걸쳐 보건용 마스크 공적물량 특별공급을 요청하여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각급 학교에서도 비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화상 카메라는 등교시 체온 측정 과정에서 학생 몰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밀접접촉 방지를 위해서 도입 추진되었고, 이를 위해 3월 8일에 ‘학교 열화상 카메라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3월 30일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5만 장(학생 1인 2매 기준) 비축을 완료하였고,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소형 보건용 마스크(56만 장)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또한 각급학교의 방역준비 상황을 매주 점검하여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인 방역 준비를 완료하고 5월 20일 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 각급 학교 방역 준비 상황('20.4.22기준) ]

일시적 관찰실 설치	전문업체 특별소독	등교1주전 가정 내 건강상태 확인 등 학부모 안내	교실 책상 일정 거리 유지	체온계 (학급당 1개 이상)	열화상카메라 설치	
					학교 수	설치대수
99.6%	99.8%	99.9%	99.8%	97.3%	6,964교	7,362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는 마스크, 손 소독제 등 283억 원에 달하는 방역물품 구입을 추가로 지원하여 학교의 방역을 지원하였다.

[ 2020년 2학기 방역물품 지원 현황 ]

(단위 : 매/개, 백만원)

구 분	마스크	손소독제	알코올티슈	손세정제	계
하반기 지원예산 (계획량 대비 지원수준)	13,644 (100%)	1,051 (25%)	12,480 (25%)	1,078 (25%)	28,253*
2학기 방역물품 비축 모습 (상반기비축+하반기지원)	37,569,568 (1인당 6.1개)	1,782,042 (교실당 6.4개)	4,180,216 (교실당15.1개)	742,913 (교실당2.6개)	-

주: 자원(국고3 : 지방비7) : 국고(제3회 추경예산) 85억 원 + 지방비 198억 원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기간(8.23~11.18)

수도권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응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면서 교육분야에도 수도권지역 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조치가 시행되었다. 8월 24일에는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수도권 학교방역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학교 방역과 안전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10월 11일에는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여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할 때 탄력적 학사운영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광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 방역인력을 기존에 확보된 3만 7천여 명에 더해 1만여 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 탄력적 학사운영 시 방역 강화 예시(10.11)

- (예시 1) 과밀학급의 경우, 학급을 분반하여 오전·오후반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등교수업일 확대 유도, 충분한 유휴교실공간 확보·활용
- (예시 2) 학년별 수업 시간표를 분리하여, 쉬는 시간 이동 동선 중복을 최소화하고, 동일 밀집도 내에서도 화장실 사용 등 학생 간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
- (예시 3) 등교시간 차등화(학교별 여건고려), 각종 출입문 손잡이·책걸상 표면 등 접촉시설 소독 및 환기, 유증상자 모니터링 철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이 중단(원격수업만 허용)되고 중·소형학원은 운영이 제한되었다. 교육부는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를 전수 점검하면서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학원 점검은 시도별로 구성된 교육청-지자체 '학원 합동 대응반'에 경찰청 등이 참여했으며, 교육부도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참여하였다. 수능 시행 2주 전부터는 '수능 특별 방역기간(11.19~12.3)'을 운영하여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는 이용 자제를 권고하였다. 또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해 학원 명칭, 감염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 기간 동안(11.19~12.2) 공개하고, 학원·교습소의 강사·직원도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사용(11.19~)하도록 하였다.

## 주요 성과

### 학교 방역 비축물품 신속 확보 및 배부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직후부터 빠르게 학교 방역 비축 물품 및 추가 필요 물품 현황 등을 파악하였고, 예산집행을 통해 방역물품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지역 내 확산 정도 및 원격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비축 중이던 마스크를 다른 분야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코로나19의 임상적, 역학적 특성에 맞게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하였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그 후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교 개학으로 이어지는 동안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마스크 분량은 부족함 없이 공급되었다.

2020년 1월 20일 감염단계에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확인되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고, 1월 27일 국내에서 4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직후인 1월 29일부터 각급 학교별 방역마스크, 발열감시용 체온계, 소독제 등 구비에 필요한 비용을 파악하도록 하였고, 2월 7일 시도교육청이 마스크, 소독제, 시설소독약품 등 학교 방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 사업(재난안전관리) 제1차 특별교부금 249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다. 이후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감염병 예방물품 비축 현황을 파악하면서 방역물품 구비 현황 및 추가 총당계획 등에 대한 학교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2월 18일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감염예방 물품 비치 여부 현장지도와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유행 초기 학교 방역에 필요한 물품 확보 및 보급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교육부는 교육기관과 유학생에 필요한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교육부는 마스크 수급 및 지원방안 관련 식약처 실무협의, 1차 개학 연기에 따른 추가적인 마스크 확보 계획 수립, 식약처에 유학생 마스크 제공 협조 요청 및 교육기관 마스크 필요량 제출 등 마스크 필요량 파악 및 확보에 주력하였기에 이후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에도 협조할 수 있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시 돌봄 지원 학교의 경우 10일 분량 필수 비축 후 제외분만 수거하고, 특수학교는 수거에서 제외하는 등 방역 취약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밖에도 마스크 수급 안정 TF 협의회 참여, 학교 방역물품 실태 확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공적물량을 확보하고 방역비축물품을 확인하는 작업을 지속함으로써 2020년 코로나19 유행시기 전반에 걸쳐 학교 내 방역물품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아울러 개학 이후 코로나19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으로 마스크 및 체온계 284억, 열화상카메라 174억 등 총 458억 원의 코로나19 예방대책 사업 관련 재난안전관리 제2차 특별교부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인 발열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충하고 마스크를 통해 주요 전파 경로인 비말을 통한 직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방역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다.

## 교육기관 맞춤형 방역 지침 마련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단계부터 집단행사·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응지침과 다수가 응시하는 국가시험 방역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 집단 감염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본격적인 등교 개학에 대비한 학교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제시하였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방역지침과 현장 적용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및 확진자 발생 등의 상황이 담긴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도 원활하게 실시하여 전체 학교 구성원이 학교 방역지침을 숙지하고 실제 상황 발생시 본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2월 13일 중수본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및 행안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고, 2월 16일에는 시설의 이용 빈도, 행사 개최 등 특이사항 발생 등을 고려한 소독 실시주기 및 범위 등을 포함한 학교 소독지침을 안내하였다.

3월 2일 중수본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제2판)」을 보건당국과 협의 하에 교육기관에 맞도록 개정 후 코로나19 유행 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3판) 및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으로 개정하여 안내하였고, 개학 연기 결정으로 휴업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개학 이후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지침(안)에 대해 관계부처,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면밀하게 내용을 보완하였다.

3월 23일에는 개학 연기 후속조치 및 개학 준비 관련 회의에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안(마스크 사용기준,

확진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개학이후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안)」를 점검하고 소독 일반원칙 중 소독제 유해성 정보 확인 명시 및 환기 필요성 등이 추가된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지침(제3판)을 안내하였다. 3월 24일 '신학기 개학준비단' 2차 회의에서 학교용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안내 지침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코로나19 유행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중앙 방역당국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도록 학교 내 방역 지침을 수립할 수 있었다.

4월 1일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개선, 방역 준비상황 전수 조사 주기 변경, 면 마스크 납품업체 선정관련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코로나19 학교 방역분야 개선사항이 안내되었다. 그 후, 여름철 냉·난방기 사용, 일시적 관찰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포함한 방역 지침의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일선 학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교실 환기, 냉·난방기, 공기정화장치 가동 여부, 일시적 관찰실 운영 관련 기준 등 학교 감염예방관리 안내 지침 개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개정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또한, 용어 및 의심증상자 관리원칙 변경, 목적 및 기본원칙,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신설 등을 반영해 개정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제2판을 안내하였다.

## 종합적인 학원 방역체제 마련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학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방역 점검과 함께 방역물품 지원이 이루어졌고, 가급적 휴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유행 단계에 따라 실제 휴원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계속해서 학원·교습소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었고 외국인 강사, 위험지역 방문자 등에 대한 무료 진단검사가 제공되었다. 학원의 협조를 유도하고 휴원에 따른 경영난 등을 돕기 위해 다각도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

2020년 2월 18일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으로 학원 등원을 중지하고 학원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요청하였고, 감염예방 물품 비치 여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였다. 2월 20일 확진환자 발생 인근 학원·교습소에 휴원을 권고하고, 학원·교습소 관련 확진자 발생지역 시도교육청(서울, 대구, 경북)과 수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였다.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전국 유초중고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원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였고, 2월 24일 학원 휴원 관련 한국학원총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3월 4일 학원 대상으로 방역물품(손세척제, 마스크, 체온계 등) 비치여부, 예방수칙 게시, 예방수칙 교육실시 여부, 시설 내 소독여부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원·교습소 등에 코로나19 관련 휴원 권고 등 협조 요청을 지속하면서 코로나19 피해 학원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지

속함으로써 점검과 지원책 마련을 병행해서 진행하였다.

3월 7일 초중고 개학에 앞서 시·도/시·군·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학원 및 교습소 방역을 요청하였고, 3월 9일 지자체의 학원 방역비 지원협조를 위한 시도지사 협의회 및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를 실시하여 학원방역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월 10일 교육부·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학원 소독, 위생관리 등 방역철저를 위한 현장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3월 13일 시도교육청에 코로나19 관련 학원명, 학원주소, 확진자 번호, 확진자 확인 날짜 등 학원 관련자 자료 통보를 요청하였다.

3월 18일 개학 추가연기에 따라 학원 휴원 권고 및 지도점검 강화 협조를 요청하였고, 3월 19일 학원 휴원을 집중 관리 및 방역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등교개학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학원을 매개로 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월 21일 학원·교습소 방역지침을 마련하였고, 3월 24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 지속 권고 및 학원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안내하였다. 3월 25일 확진자가 많거나,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방역물품(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비치 여부, 안전수칙 게시여부, 소독 여부 등 학원 방역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안내함으로써 학원관련 방역 지침을 보완하여 전파하였다.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는 학원 점검을 위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위험시설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3월 31일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개강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을 논의하였고, 감염병 감염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마련, 독서실 교습비 등 반환기준을 정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학원방역에 대한 법적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4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을 통한 감염병 예방 관리 철저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고, 4월 19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교육부 합동 학원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4월 9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한 학원·교습소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등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내하였다. 5월 6일에는 중앙(교육부)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정부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하여 4개 권역별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1개 분야)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후에도 유행의 양상에 따라 집단 유행과 관련된 학원 강사, 직원은 2주간 학원 출근 및 수업을 금지하고 감염 발생 시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 학생 및 교직원 감염 예방·진단체계 구축

코로나19 유행 초기 처음 유행이 시작된 중국 지역 방문자 및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자율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등교개학이 연기된 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긴급 돌봄 현황에 대해 일일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한편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귀국하는 유학생들의 자가격리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였다. 이후 국내 대학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진자들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였다.

등교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학교 유입 차단을 위해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학교 내 의심 증상자 발생 시 일시적 관찰실의 운영, 능동적 모니터링 실시, 선별검사 후 등교금지 조치 등을 통해 확진자 접촉을 통한 교내 추가 전파 사례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의 협조 하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 요령 등이 포함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배포하면서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개선, 방역준비상황 전수 조사 주기 변경 등 코로나19 학교 방역분야 개선사항을 안내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의심증상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침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및 고도화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일시적 관찰실 운영 관련 기준 등 학교 감염예방관리 안내 지침 개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5월 8일에는 등교수업 시작 전 가까운 선별진료소 및 진료의뢰 방법 파악, 발열증상 시 체온 재측정 기준, 가족(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발생 시 등교 또는 출근 중단 등이 추가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제2판이 안내되었다. 또한 학생 건강상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응답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학생 및 학부모 홍보 등 시행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5월 18일에는 등교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령기 아동, 학생 및 교직원 등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의심증상자의 학교 내 추가접촉을 차단하면서 교내 코로나19 전파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 ❖ 학교 심리방역 실시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한 불안·스트레스 등에 대비해 교육부는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운영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심리적 충격 완화를 위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 및 보급하였고,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응급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의 학교 구성원을 위한 심리 방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어 '코로나19 대처

## [ 코로나 우울 극복 관련 실시간 영상교육 등 ]



소아정신과전문의 유한익 원장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강윤형 센터장

교사 마음가짐' 등 코로나19 상황 관련 심리 치유 뉴스레터가 현장에 배포되었고, 4월에는 담임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위(Wee) 클래스 등을 통해 학생의 심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등교 개학 연기 상황,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상황 등 코로나19 유행 단계에 맞게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더욱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코로나19 관련 심리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확진자(접촉자) 발생 학교에는 정신과전문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제적인 심리 지원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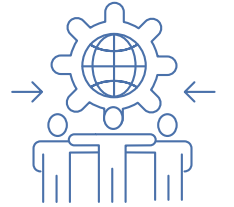
## 방역당국 및 방역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

2월 22일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대한감염학회 이사, 코로나19 대책위원장 등 방역 전문가와 함께 교육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 검토사항은 앞으로의 감염병 유행 전망과 개학 연기 등이었으며, 이후에도 학교 방역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 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4월에는 실제 학교현장에 방역 전문가와 공동으로 방문하여 등교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 기준 등 세부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고3 등교 및 안전한 수능 시행 방안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빠짐 없이 방역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방역당국인 질병관리본부와는 5월부터 8월까지 16차례에 걸친 수시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 쟁점들을 긴밀히 협의하였다. 대표적으로 5월에는 확진자 완치 후 등교 시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7월에는 지역사회 감염경로 및 하계 방학 일정 정보 공유 등을 주제로 협의를 실시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했던 11~12월에는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한 대응체계를 공동으로 점검하였고, 수능 전후 진료·검사기관과의 협조체제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4

## 법정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코로나19 첫 확진환자 발생 직후, 정부는 중국 유학생 및 중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시작으로 입국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였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중국 교육부와 자국 유학생 출국 제한 권고 합의서를 도출하는 등 국내외에 걸쳐 선제적인 대응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대학-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입국 단계별로 유학생을 철저히 관리하였다.

## 대응 시기별 주요 조치사항

### 1.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기간(1.20~8.22)

#### 해외 입국 유학생 체계적 보호 및 관리

##### 코로나19 감염 확산 초기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교육부는 해외 입국 유학생으로 인한 국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국 단계부터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였다. 이를 위해 유학생 출입국 관련 범부처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유학생의 출입국 정보를 해당 대학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이 입국 유학생을 모니터링 하여 코로나19 증상 발현 등 특이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9.4.1 정보공시 기준) ]

구분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일본	미국	기타	합계
학생수(명)	71,067	37,426	7,492	7,381	4,392	2,915	29,492	160,165
비율(%)	44.4	23.4	4.7	4.6	2.7	1.8	18.4	100

코로나19 국내 확산을 방지하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이 구성·운영되었다. 2월 5일에는 교육부 장관 주재로 주요 대학 총장(20명)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회의를 실시하여,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부처-대학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방안 브리핑(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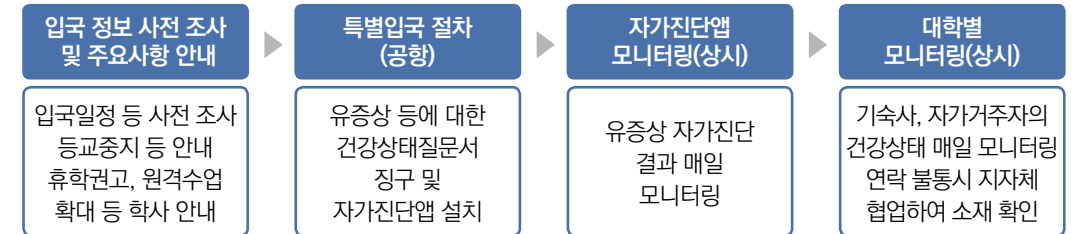
중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간담회(2.21)

특히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은 입국 단계에서부터 특별입국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하고, 입국 이후 2주 동안은 수시 추적관리를 실시하되 유증상자는 보건당국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다음의 표 참고).

[ 외국인 유학생 입국 단계별 관리방안 ]

입국 전	입국 시	입국 후(14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사운영계획 안내를 통한 입국 시기 조정</li> <li>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조치 등 사전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항검역,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li> <li>공항-대학, 이동수단 제공 (자방자치단체 협조)</li> <li>14일간 자가격리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 1회 이상 건강 상태 등 모니터링</li> <li>자가격리 의무 준수 철저 지도</li> </ul>

[ 유학생 특별입국절차 ]



주: 국가별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 지정 일자: 중국(2.4), 홍콩·마카오(2.12), 일본(3.9), 이란·이탈리아(3.12), 네덜란드·독일·스페인·영국·프랑스(3.15), 전 유럽(3.16), 전 세계국가(3.19)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유학생은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유학생 전용 안내창구>를 통해 입국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였다. 중국 입국 유학생은 입국 후 14일간 등교하지 않고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기숙사 또는 자가에서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등교 중지 기간 중 대학은 해당 대학 소속 유학생의 코로나19 증상 발현 등 감염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유학생 스스로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체크하도록 하였고, 학생(그룹)별 전담자를 지정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학생 소재 파악 및 거주지 방문 등을 시행하였다. 대학 내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격리 후 관찰 보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철저히 소독하는 등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등교중지기간 14일 경과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 유학생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였다.

교육부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예비비 42억원을 긴급히 편성하여 대학의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중국유학생 집중입국기간(2.23~2.29)'을 운영하면서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였다.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한·중 양국 교육부는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2.28)를 도출하였다. 합의 도출 이전인 2월에는 중국에서 매주 5,000여명 내외로 유학생이 입국하였으나, 합의 이후인 3월에는 입국 유학생이 주당 평균 2,0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 사항

한국 교육부와 중국 교육부는 다음사항에 합의한다.

1.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2. 지금부터 한국(중국)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한국) 대학 소속 한국(중국) 유학생이 중국(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이를 위해, 한국(중국) 대학이 소속 중국(한국) 유학생에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중국)으로의 입국 자제를 권고하도록 한다.
3. 이번 조치로 학생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입국 유학생 관리를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교육부는 대학 전체에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단계별 조치사항 및 관련 지침 등을 담은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입국단계별 주요 사항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월 17일에 배포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중국 입국 유학생 현황조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증상여부, 모니터링 여부, 거주지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대학에 안내하였다. 대학 전체에 외국인 유학생 등 출입국 현황자료를 송부하였고,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할 때 설치한 '자가진단 앱'에 건강상태를 1일 1회 이상 등록하도록 하여 보건당국이 추적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 입국 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지 않은 중국 유학생은 미설치 사유와 함께 해당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철저한 추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국 이외 국가로도 특별입국절차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 및 관리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출입국 현황과 자가진단 앱 입력 정보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별입국절차 적용 및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 시행 이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37,375명(7.25 기준)이었으며, 중국 25,777명, 베트남 8,344명, 미국 59명, 유럽 93명, 그 외 국가에서 3,102명이 입국하였다. 이 중 23명이 확진되었다. 7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16명은 지자체의 선제적 검사를 통해 확진되었으나, 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전용 교통수단 제공, 선제적 검사, 대학 현장지원 등을 실시하여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었다.

[ 특별입국절차 적용에 따라 확인된 감염자 수(7.25 기준), 국가별 ]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 네시아	키르기즈 공화국	카자흐 스탄	우즈 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 데시
1	1	1	1	1	2	3	5	8

[ 특별입국절차 적용에 따라 확인된 감염자 수(7.25 기준), 지역별 ]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6	4	4	1	1	1	1	1	1	3

###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입국 후 유학생 관리

해외 유입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4.1.부터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전원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는 입원 치료, 음성인 경우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입국절차가 강화되었다. 따라서 후속조치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해졌고, 그에 맞추어 해외 입국 유학생 방역관리도 더욱 강화되어 시행되었다. 외국인 유학생 철저한 자가격리 의무 준수 지도, 대면 수업 개시일 조정으로 유학생 입국 시기 분산 및 지연, 비대면 수업 연장에 맞추어 임시격리시설로 기숙사 공실을 적극적으로 활용,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 등 모니터링 철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 등 다섯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보호 및 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시기 조정과 관련하여 등교수업일이 확정되기 전까지 입국을 자제하고,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국하지 않도록 외국인 유학생들에 안내할 것을 각 대학에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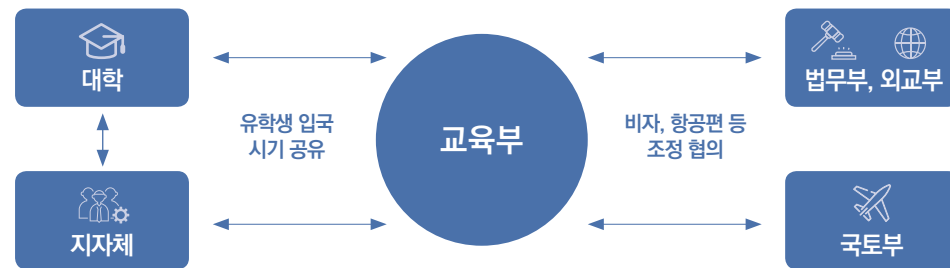
입국 후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지자체,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자가격리 위반 학생에 대해 자진출국 조치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대처하였다. 아울러 4월 중순에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여 기존에 대학별 공문조사를 통해 실시하던 중국 유학생 모니터링을 중국 이외 국가 유학생과 동일하게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2020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 및 관리

#### 학기 중 외국인 유학생 보호 및 관리

교육부는 입국 단계별로 외국인 유학생을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코로나19가 대학 및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7월 30일에 「2020학년도 2학기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을 각 대학에 안내하였고,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시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해외입국자 방역체계와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시기 분산을 유도하여 방역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였다. 아울러 2학기 입국 예정 외국인 유학생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공항에서 거주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 지원, 자가격리가 가능한 거소 관련된 지원, 모니터링 인력확보 및 예산 등 지원, 대학 등 방역지원, 대학 내 선별진료소 설치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에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 체계 ]



### 방학기간 중 외국인 유학생 보호 및 관리

2학기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에 준하여 방학기간 중에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 대학에 요청하였다. 특히 방학기간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단계별 관리방안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자 하였다. 입국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유학생은 ‘유학생 관리 시스템’을 통해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자가격리 장소 이탈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요청하였다. 한편, 유증상자, 확진자 등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학별 입국 유학생 현황 ]

중국 외 유학생 정보관리									
※ 검색조건									
이공번호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출신국가(지역)	<input type="text"/>	학번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학번	<input type="text"/>	이공번호	<input type="text"/>	출신국가(지역)	<input type="text"/>	학번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외국인 등록번호	<input type="text"/>	수상 여부	<input type="text"/>	선택	<input type="text"/>				
※ 유학생 현황									
유학생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학교명	출신국가(지역)	소속	학년	학번	성명	대관번호	학생 입학시	거주지 유형
<input type="checkbox"/>	국민대학교	프랑스	교원학생					자가	4월
<input type="checkbox"/>	국민대학교	중국	대학(학부생)					자가	4월
<input type="checkbox"/>	국민대학교	러시아(구방)	대학(학부생)					자가	4월
<input type="checkbox"/>	국민대학교	베트남	대학(학부생)					자가	4월
<input type="checkbox"/>	국민대학교	태국	국제교육원					자가	4월
<input type="checkbox"/>	국민대학교	인도네시아	국제교육원					자가	4월
<input type="checkbox"/>	국민대학교	독일	교원학생					가족	4월
<input type="checkbox"/>	국민대학교	일본	교원학생					가족	4월
<input type="checkbox"/>	국민대학교	일본	교원학생					가족	4월

[ 학생 세부 정보 관리 ]

중국 외 유학생 정보상세									
※ 상세정보									
학교명(필수)	<input type="text"/>	출신국가(지역)	<input type="text"/>	학번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이공번호	<input type="text"/>
소속	<input type="text"/>	학번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이공번호	<input type="text"/>	학번	<input type="text"/>
학번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이공번호	<input type="text"/>	학번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이공번호	<input type="text"/>	학번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이공번호	<input type="text"/>	학번	<input type="text"/>
국내 거주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국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학번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이공번호	<input type="text"/>
최근 출석일	<input type="text"/>	재학생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번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이공번호	<input type="text"/>
학생 연락처	<input type="text"/>	거주지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번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이공번호	<input type="text"/>
비고	<input type="text"/>	최종 수정일	2020-09-25 11:11:18	학번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이공번호	<input type="text"/>
※ 입국 관리정보									
※ 14일간 관리정보는 오늘 및 전 일(2개 날짜) 한 수월 가능합니다. 입학기간이 아닐 경우 비문이 비활성화 됩니다.									
1 일차_2020-09-16	모니터링 여부	<input type="radio"/>	유증상 여부	<input type="radio"/>	연락가능 여부	<input type="radio"/>	연락가능 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일차_2020-09-17	모니터링 여부	<input type="radio"/>	유증상 여부	<input type="radio"/>	연락가능 여부	<input type="radio"/>	연락가능 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일차_2020-09-18	모니터링 여부	<input type="radio"/>	유증상 여부	<input type="radio"/>	연락가능 여부	<input type="radio"/>	연락가능 여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일차_2020-09-19	모니터링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유증상 여부	<input type="radio"/>	연락가능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연락가능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기간(8.23~11.18)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학 및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유학생 자국 내 온라인 수강 활성화, 둘째, 입국 시기 관리 계획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셋째, 유학생 입국 시기 분산, 넷째, 유학생의 불필요한 입국 자제 권고, 다섯째, 입국 후 14일 간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 종료 이후 생활지도 철저를 요구하였다.

수도권 지역 외국인 유학생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 관계부처(법무부, 외교부, 국토부, 중수본, 방대본),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유학생 입국 시기 분산 추진, 지방자치단체와 입국시기 관리계획 공유를 포함한 방역 공동 대응, 지속적인 전담 공무원의 불시점검 추진 등을 논의하였다. 추가로 교육부는 자가격리 거소 확보를 위해 호텔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시격리시설을 지정하고 원룸 등 자가격리 장소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교육부, 서울시, 9개 자치구 및 소재 대학 12개교 담당자 등이 외국인 유학생 공동 대응단 구성 방안, 입국 단계별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임시격리시설 지정 및 운영, 자가격리 모니터링 및 진단검사 등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여러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같은 맥락의 논의가 경기도 및 인천의 지자체와 대학 간에도 이루어졌다.

## 주요 성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유학생 5.6만 명 중 총 165명(공항 검역 41명, 입국 후 자가격리 중 124명)이 확진되었지만, 이들로 인한 국내 추가 전파 사례는 없었다. 이는 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전용 교통수단 제공, 선제검사, 대학 현장지원 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보호 및 방역 조치를 치밀하게 실시한 결과이다.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을 살펴보면 유학생은 0.30%(5.6만 명 중 165명)로, 그 외 외국인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인 0.73%(31.2만 명 중 2,283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및 리더십 발휘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된 유학생 지원 체제는 개별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는 데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함으로써 초기 감염병 확산 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앙 행정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2월 4일에 범부처 차원 유학생 지원단이 구성되어 부처간 협력을 통해 중국 입국 유학생 대한 지원·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2월 5일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5개 관계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와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주요 대학 총장 20명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리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조치는 ‘대학 학사운영 관리 방안’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개강 연기 등 2주 이내의 학사일정 감축, 자가격리자·입국 지연자 출석 인정 권고,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수업 기준 개정 등이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법무부 협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 등의 중국 출입국 현황자료를 대학에 송부하는 등 관계부처 및 대학과 긴밀하게 현황을 공유하였다.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회의」 이후 관계 부처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외국인 유학생 정보 공유 및 부처 간 협조 사항을 지원하였다. 관계부처의 주요 유학생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협업사항 ]

구 분	역 할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수본, 유학생 관리 지침 및 대응 관련 제공</li><li>중국 및 외국 입국 유학생 의심 증상자 신고 관리</li><li>모바일 자가진단 앱 입력 정보 제공</li><li>연락 불가 중국 입국 유학생 소재 파악 요청 협조</li><li>해외 유학생 입국 관련 부처별 대응 상황 정보 제공</li></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외국 입국 유학생 비자(D-2, D-4) 소지자 정보 전달, 출입국 현황 정보 제공</li><li>유학생 정보시스템 필요 정보 제공</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정보 미확인 모니터링 지원</li><li>해외 입국 유학생 검역관리 강화 관련 사항 협의</li><li>외국인 유학생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 상황 정보 제공</li><li>유학생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지원</li></ul>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교육부 제공</li><li>지자체 대응현황 점검 및 건의사항 답변</li><li>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정보 미확인 모니터링 지원</li><li>행안부 코로나19 자가격리 TF와 자가격리 유학생 관리앱(안전보호 앱) 정보 공유 방안 협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자가격리자 안전진단 앱 정보(유학생 개인정보) 제공 요청</li><li>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무단이탈자 3단계 중첩 관리 지원(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철저)</li></ul>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 수송 계획 발표</li><li>해외 입국 유학생 증가에 따른 대책 논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해외 입국자 동선 제한 및 일반시민 접촉 최소화 안내</li></ul>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국 소재 한국 학교 교직원 및 학생 현황 제출 요청</li><li>중국 유학(예정) 중인 한국유학생 휴학 요건 완화 등 불이익 없도록 협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해외 체류 취학아동 및 학생의 현지 소재 파악 협조 및 학사관리 지원 등 소통 확대</li></ul>
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마스크 공적 물량 배정·공급 요청</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유학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제공 협조</li></ul>

자료: 김창환(2020). 2020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현황 분석.

3월부터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입국 유학생 검역 관리 강화가 긴급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행안부, 질병관리본부, 국토부 등이 4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 입국 유학생 검역 관리 강화 확대 조치’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현황을 점검하였다. 2020학년도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해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 입국 전후로 단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유학생 지원 체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방역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협업을 신속·적절하게 진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각 중앙부처가 개별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유학생의 출·입국, 체류, 자가격리 및 건강상태 확인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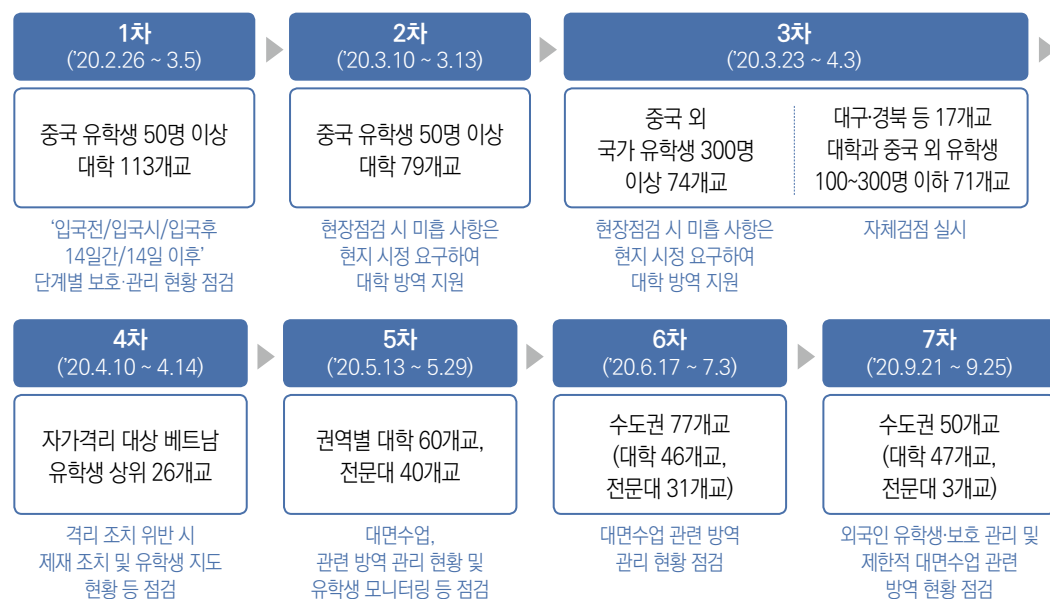
## 대학과의 긴밀한 현장 소통

2020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해외 유입 비율이 56.7%로 주로 해외 유입에 의해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긴밀하게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먼저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송달(1.23)하여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코로나19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자 대학관계자와의 긴급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중국 방문 학생·교직원 현황 파악을 요청하고 대학별 위기대응 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 전수 조사·관리에 대한 사항과,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회의」 결과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과의 신속하고 다각적인 협의는 대학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역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관계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대학 개강이 시작되면서 외국인 유학생 입국이 급증하였고 본격적인 입국 유학생에 대한 지원·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학생이 많은 대학에 대한 현장지원 점검을 총 7차에 걸쳐 시행하였다. 1차 현장지원은 외국인 유학생 입국이 많은 2월부터 시작되었고, 2학기 시작 전후 외국인 유학생 입국이 증가한 9월까지 지속해서 시행되었다. 정부는 시기별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면서 대학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을 추진하였다.

[ 외국인 유학생 대응 대학 현장지원 점검 추진현황 ]



자료: 김창환(2020). 2020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현황 분석.

교육부 주도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조치, 문제점, 개선사항 등은 관계부처로 전달되고 조치되었다. 이러한 현장점검은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점 등을 수정·보완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이자, 유학생 관리 여건이 부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취할 수 있을지 직접 소통하면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7월 이후에도 2020년 2학기를 대비해 지역별 대학과의 협력이 지속되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는 2021~2022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 대학 입학전형 운영 관련 협조를 요청하여 입학전형 측면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13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 현장과의 긴밀한 협의, 대학에 대한 지원 노력은 지속해서 추진되어 대학이 정부의 각종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하여 개별 대학의 특성에 맞는 자체적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및 방역에 수반되는 대학별 애로사항을 교육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가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 입국 및 개강에 따른 위기 발생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다.

## 빈틈없는 방역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고도화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상 범부처 협조 및 지원 사항을 즉각 최신화하고 관계부처, 대학, 지자체와의 간담회 및 실무자 협의를 통해 보완 조치를 계속 추가하여 대학에 안내했다. 전례없는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화되고 빈틈없는 대응 방안이 필요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개별 사례와 지역 분포는 매우 다양한 데다 대학의 관리 행정인력은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공통 매뉴얼과 세부 조치사항이 필요했다. 이에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하여 대학에 수시로 배포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및 각종 행정조치는 개별 대학 차원의 유학생 관리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하는데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2월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되었다. 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예정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국 전 사전 관리 철저, 입국 시 검역 강화 및 입국 사실 보고, 입국 후 2주간 등교중지 등 단계별로 보호·관리방안이 마련되었다. 2월 23일에는 입국예정 중국 유학생 증가에 대비하여 보완 조치를 발표하였다.

3월 중순부터는 전 세계 국가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가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입국단계별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입국 정보 사전 조사 및 주요사항 안내, 특별입국 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 중



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해당 국가들로 확대 적용하였다.

아울러 4월 1일에는 전 세계 국가 대상으로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가 실시되면서 자가격리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안내하는 등 개별 대학에 유학생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추진 경과 ]

중국 유학생 보호, 관리 (2.16~)	전세계 유학생 보호, 관리 (3.19~)	전세계 유학생 보호, 관리, 자가격리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입국 유학생 보고, 관리 방안</li> <li>한중 상호 유학생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li> <li>인천공항 내 안내창구 운영</li> <li>공항-자가 이동수단 제공</li> <li>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li> <li>1일 1회 이상 건강상태 등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유학생 보호,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 강화</li> <li>무증상자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li> <li>1일 1회 이상 건강상태 등 모니터링</li> <li>유학생 관리 시스템 개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실시</li> <li>자가격리 위반 시 제재 조치 전파 등 유학생 지도 철저 요청</li> <li>유학생 입국 시기 분산, 지연</li> <li>유학생과 1일 1회 이상 연락 등 건강상태 확인 지속 실시</li> </ul>

자료: 교육부(20.7.29).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2학기에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7월 3일에는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교육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입국단계별 방안에 더해 자국 내 원격 수업을 유도하고, 해외입국자 방역체계와 연계한 입국 시기 관리를 통해 입국 외국인 유학생을 더욱 철저히 보호·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8월 중에는 개별 대학에 방학 기간에 유학생 보호 및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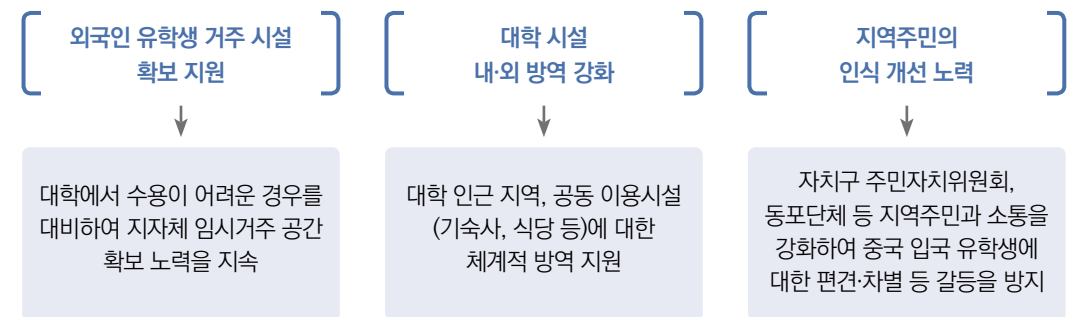
## 지자체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노력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에 대한 방역과 동시에, 관내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법무처 차원에서 마련된 입국 유학생 관리 체계는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한 방역 노력은 K-방역의 성과를 도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지자체가 범정부적인 방역대책을 준수하고 독려함으로써 각 지역의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보호와 관리 조치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사 관리로 이미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한 것이다. 지역 대학에 대한 방역 지원은 지역사회 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었고,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보호는 대학이 속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2월 초부터 대학 인근 지역의 방역을 강화하는 등 교육부-대학-지자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준비를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지자체 중심의 감염병 전파 방지 및 자가격리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교육부는 2월 13일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지사와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의 어려움을 겪을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7월 29일에 발표한 2020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 관리방안에 법무처-지자체 협력 강화 사항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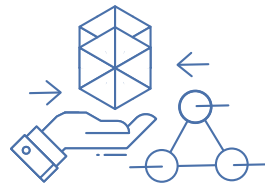
[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에 대한 지자체 협력 강화 ]



자료: 교육부(20.2.23).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2.16) 보완 조치. 보도참고자료.

첫째,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지자체 임시거주공간을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는 인재개발원과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을 지원하였고, 경기도는 도내 5개 시군에 거주지 7개소를 확보하였다. 제주도는 호텔 194실을 임대하여 제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대학 인근 지역, 공동 이용시설(기숙사, 식당 등) 등 대학 내외의 시설에 방역을 지원하였다. 셋째는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노력으로,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동포단체 등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편견·차별 등 갈등을 방지하는 역할이었다.

## 5 돌봄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등교개학 연기와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 필요에 따라 긴급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긴급돌봄은 행·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돌봄 현장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지원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아울러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토대로 적절한 긴급돌봄 제공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었다.

### 대응 시기별 주요 조치사항

#### 1.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기간(1.20~8.22)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상 긴급돌봄

##### 「긴급돌봄 운영 관련 지침」 마련 및 배포

교육부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긴급돌봄 운영 관련 지침」을 총 3차례(1판, 2월 28일; 2판, 3월 6일; 3판, 3월 18일)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제1판에서는 학교장 책임으로 비상대응체계 운영, 위생점검 및 교직원 교육, 학생 건강상태 및 긴급돌봄 운영 현황점검, 학교 별 긴급돌봄을 위한 최소인원(10명 내외) 배치 권장 등을 포함하였다. 제2판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방역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특별히 손 씻기, 기침예절 등을 포함한 안전 및 위생수칙교육 실시, 일상 소독 및 방역 철저, 돌봄공간에 방역물품(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 우선적 비치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긴급돌봄에 참여

하는 교직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는 방역물품 등 우선 지원, 교직원 건강상태 일일 점검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유증상자 출근 중단 또는 업무 배제 지침을 명시하였다. 제3판에서는 돌봄교실 활용 프로그램 소개, 인력운영 및 안전관련 사항 등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 긴급돌봄 수요조사 및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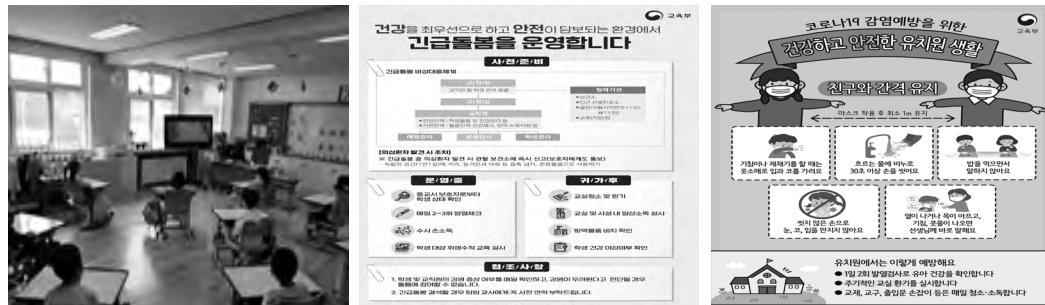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하자 수요조사를 3차례(2.24~26, 3.3~3.5, 3.6~3.9)에 걸쳐 실시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긴급돌봄을 제공하였다. 특히 3차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참석인원, 시간 운영, 중식제공,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을 중심으로 긴급돌봄 운영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였다.

##### 긴급돌봄 등 행·재정 지원

계속된 학교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급돌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현장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고 시행하였다. 첫째, 학부모와 교직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교육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원 요청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긴급돌봄 지원센터(소통창구)'를 3월 11일자로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둘째, 개학연기에 따라 개통된 온라인 통합 지원 누리집(플랫폼) '학교온(On)'에 긴급돌봄 학생을 위한 '돌봄아이디어' 코너를 신설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 목록(EBS, 주제별 누리집 등) 및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다. 또한 학교온을 통해 유치원 긴급돌봄 내실화 지원과 관련하여 누리집(집콕놀이, 안전나라 여행, 유아놀이 및 상담 등)과 연동을 추진하였다. 둘째,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쉼' 중심의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셋째, 시도교육청과 함께 돌봄 참여 학생의 중식 등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여건에 맞추어 시설관리, 청소·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중 조리원 등 방학중 비근무자에게 대체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

4월 16일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안내하였다. 해당 계획은 학년별로 운영 형태를 반영한 원격수업 운영, 돌봄 인력 운영,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안전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따라서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후에도 초등 긴급돌봄을 계속 운영하여 원격수업과 돌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후속조치로써 EBS 시청 가능 여부, 컴퓨터실 확보 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과 학습여건, 방역용품 구비 현황 등을 중심으로 긴급돌봄 운영



긴급돌봄 교실 현장

긴급돌봄 안내 포스터

생활방역수칙 포스터

현장을 점검하였다. 유치원은 5월 27일 이후 등원·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으며, 개학 이후 긴급돌봄을 방과후 과정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였다.

특수학교는 전면 등교수업 전까지 유치종교·전공과 모든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유치원·초등학교 특수학급은 장애학생이 긴급돌봄 참여에 배제 또는 차별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보조인력 배치를 통해 돌봄 활동 및 원격수업 참여를 지원하였다.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장애학생은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참여를 지원하였다.

## ❖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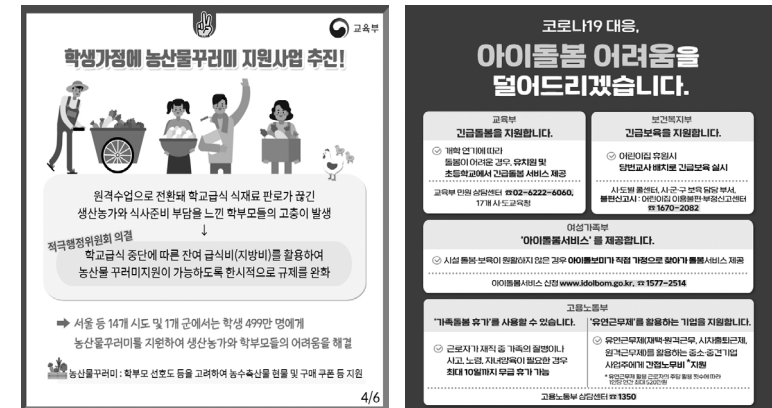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 가정 내 식사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역별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전국 초·중·고생 대상 가정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무상으로 공급(1회 기준으로 1인당 농산물 3~5만원 상당)한다는 시행 지침을 4월 29일 수립하였다. 이에 공급 예정 농산물의 품질 및 위생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점검을 통해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6월 10일에 추진하였다.

학생 499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역 상황에 따라서 실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또는 개별 품목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였다.

## ❖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지원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 강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한 긴급돌봄 대책을 마련(2.28)하여 추진하였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개학 연기로 인한 긴급돌봄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을 하더라도



학생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범부처 협력 긴급돌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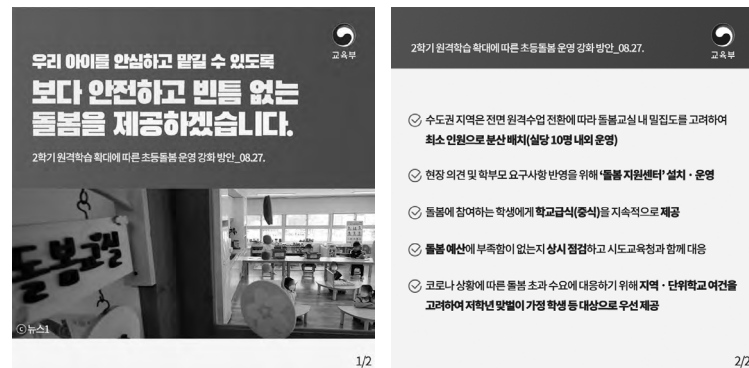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통상의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긴급보육과 긴급돌봄을 제공하였다.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였고, 근로자가 가정돌봄을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간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개인 위생용품을 아이돌보미에게 지원하여, 가정 내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기간(8.23~11.18)

### ❖ '2학기 초·중·고돌봄 운영 방안' 마련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학기에 들어서서 원격학습이 더욱 확대되었고, 맞벌이 가정에서의 돌봄 공백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돌봄서비스가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기인한 초·중·고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학기 때의 정부 주도로 실시했던 긴급돌봄 운영 경험을 발판삼아 '2학기 초·중·고돌봄 운영 방안'(8.27 발표)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돌봄 지원 대책'(9.2 발표)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8월 11일에 학교,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돌봄, 방역, 학습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돌봄안전망이 구축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1차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교육청 주도로 단위학교에서의 돌봄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돌봄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와 부족분 존재 여부를 점검하였다. 또한, 17개 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부 및 각 교육청 누리집에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였다. 2차적으로 돌봄 초과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단위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돌봄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면서 전담인력과 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과 같은 돌봄교실 운영 유경험자 등을 교육청별로 자체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가 인력을 확보하였다.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돌봄 지원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급식을 제공하였다. 특별히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대상 돌봄 서비스를 강화(9~19시 운영, 10명 내외 유지 권장)하였다. 유치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였으며, 정원 제한 조치로 인해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에 대한 방과후 과정비 정상지원도 함께 안내하였다.

특수학교는 장애학생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등교수업과 대면수업을 확대하였다. 2학기 초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를 권장하였으며, 추석 연휴 이후에는 거리두기 2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3단계에도 1:1 또는 1:2 학교·가정 방문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돌봄 지원 방안 수립 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치하였다.

###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범부처 아동 돌봄 지원 대책 마련

8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강화된 방역조치가 발표되었다. 이에 원격수업 등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가족돌봄휴가와 연차 휴가를 소진한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부담 가중이 우려되었다. 이에, 활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돌봄시설에서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 등이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정 내 돌봄 지원을 위한 보완된 '아동 돌봄 지원 대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였다.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산으로 2학기 아이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긴급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 예산 확보, 돌봄 시설 밀집도 완화, 가족돌봄휴가 연장 지원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휴원 중에도 긴급보육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제공하였으며, 휴원 기간 중 미등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이 휴원하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8시간 이상 제공하였으며, 방역물품과 위생용품도 지원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최대 연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연장하였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가족돌봄휴가 등의 이용실적을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에 반영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다.

또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를 통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긴급돌봄을 위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우선 지원하였고, 가족돌봄 등을 위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가족친화 고용지원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대응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연간 정부지원 이용시간에서 제외하였고, 연말까지 아이돌봄 이용료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을 50~90%까지 확대하는 특례 지원을 적용하였다.

###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후 기간(11.19~12.15)

11월 27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돌봄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 및 운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돌봄 서비스는 대면·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있어 취약계층의 고립과 사회적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설별, 지역별, 상황별로 돌봄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선제적으로 돌봄 취약계층을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부터 방어하고자 하였다.



## 주요 성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청, 학교 등은 상호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을 제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장밀착형 긴급돌봄 대응과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학사운영과 연계한 긴급 돌봄 제공, 긴급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의 돌봄 강화, 수요조사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제공, 긴급돌봄을 위한 지침 마련과 프로그램 내실화, 긴급돌봄을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운영 등의 성과가 있었다.

### 현장밀착형 긴급돌봄 대응과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학연기로 이어졌으며, 2020년 2월 28일 관계부처는 개학연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긴급돌봄 제공 추진을 발표하였다. 기본 원칙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감염증 특성(비말감염)을 고려하여 최소인원으로 분산 배치하고 모든 교직원이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4차례의 휴업명령과 온라인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 계획은 물론 등교수업 이전에 실시하였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에 대비하여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철저한 방역 하에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중식 제공 및 돌봄시간 연장하는 등 학부모 요구에 대응한 점이다. 또한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안내」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긴급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밀착형 대응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온라인개학 시 긴급돌봄에서는 맞벌이 가정과 조손가정 자녀 등을 위해 원격학습도우미(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등)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하였으며 마을돌봄과 가정 내 원격 학습 지원 등 정부부처와 교육청,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긴급돌봄은 온라인개학 전, 온라인개학 후 그리고 등교수업 후 학기중 돌봄의 단계적 대응에 따라 운영되었다. 즉, 상황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탄력적으로 긴급돌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인 초등돌봄교실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준용하여 운영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을 준용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를 준수하면서 운영하도록 하였다. 특히 초등돌봄은 대면관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급당 10명 내외로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인 초등돌봄교실이 오후 1시

### [ 정부의 긴급돌봄 지원 현황 ]

#### ■ 개학연기 후속조치 일환으로 긴급돌봄 제공

- 기간: 3/2~6(1주일간)
- 대상: 초등학생 48,650명(4,150개교)(1.8%)
- 운영시간: 9시~17시(지역여건 및 학부모 수요 고려)
- 학급구성: 10명 내외 권장
- 담당인력: 모든 교직원이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 구성·협력

#### ■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안정한 긴급돌봄 제공

- 기간: 3/9~20(10일간)
- 대상: 초등학생 60,490명(4,634개교)(2.2%)
- 운영시간: 9시~19시(지역여건 및 수요 등 고려)

#### ■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마련 배포(3.6)

#### ■ 「긴급돌봄지원센터(소통창구)」 설치·운영(3.11~)

#### ■ 긴급돌봄 등 행·재정 지원

- 긴급돌봄 리플릿 제작·배포
- 학교온 누리집에 긴급돌봄탭 신설 및 콘텐츠 공유·활용

####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안내」지침 마련·배포

- 개학 전 학교 준비사항: 소독강화, 관리체계, 위생환경, 마스크 비축 등
- 개학 이후 학교의 주요 조치사항: 발열검사, 등교중지, 교육 및 실천 지도, 위생환경, 소독강화, 의심환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 ■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 방안 안내

- 원격수업 지원 및 돌봄 운영
- 긴급돌봄 인력 운영: 원격학습도우미,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강사, 보조인력 등 업무 구분

#### ■ 생활 속 거리두기 내에서 학습과 방역 조화

#### ■ 원격·등교수업 병행 대비 돌봄 공백 최소화

#### ■ 수도권 지역은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돌봄교실 내 밀집도 고려 최소 인원(실당 10명 내외 운영)

#### ■ 현장여건 및 학부모 요구사항 반영 위해 「돌봄 지원센터」 설치·운영

#### ■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중식) 지속 제공

#### ■ 돌봄예산 상시 점검 및 대응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28)

“긴급돌봄 3차 수요조사 결과”  
(교육부 보도자료, '20.3.12)

“유·초·중·고·특 개학  
2주간 추가 연기”  
(교육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3.17)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교육부 보도자료, '20.3.24)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 계획” 안내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20.4.8)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앞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 '20.5.24)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 '20.8.27)

출처: 이희현(2020)을 수정·보완함

부터 5시까지 운영되었으나 긴급돌봄 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하여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온라인 개학 시에는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원격학습도우미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초등돌봄은 돌봄전담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되 방과후학교 강사 및 보조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다. 원격학습도우미는 등교 개학 전까지 한시적으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학생관리, 학습과제 도움, 사이트 접속 등 직접적인 원격학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각 학교에서 원격학습도우미를 대상으로 역할에 대한 사전 연수 등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과 돌봄의 명확한 업무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계적 돌봄 대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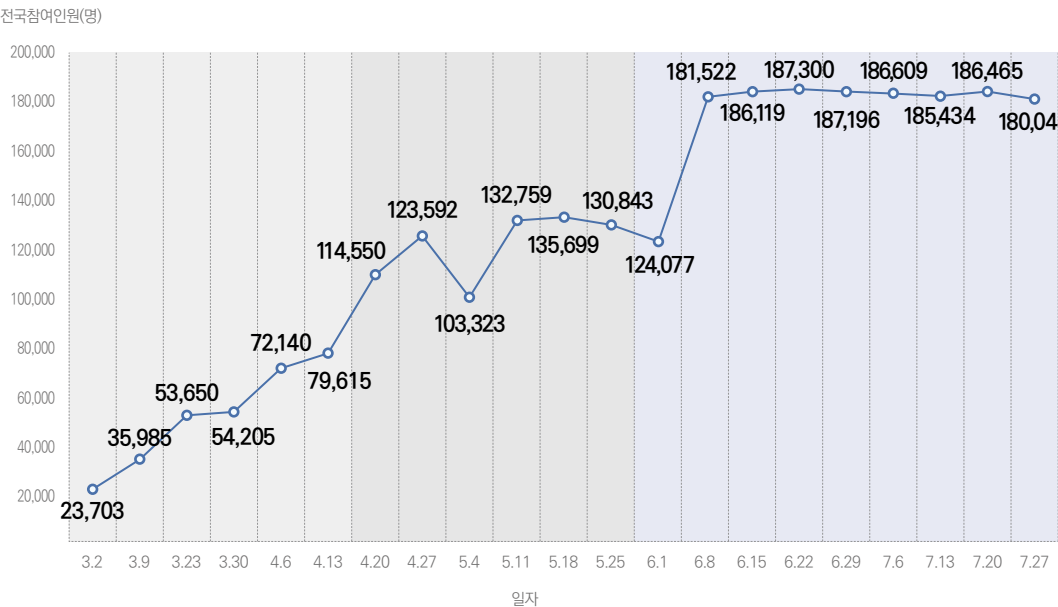
구 분	긴급돌봄	긴급돌봄 (온라인 개학 시)	등교수업 후
적용시기	개학연기(휴업)로 인한 돌봄운영(3.2~4.15)	초등 온라인개학 시 돌봄운영(4.16~5.26)	등교개학 시 돌봄운영 (5.27~현재)
대상	1~6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	1~6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 ※ 저학년 맞벌이 우선	입급 대상 학생 ※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운영 시간	오전 9시~오후 7시	오전 9시~오후 7시	오전 9시~오후 7시
학급 규모	급당 10명 내외	급당 10명 내외	밀집도 고려하여 운영
중식	도시락 지참 및 중식제공	중식제공 (도시락 매식 등)	학교급식 제공
프로그램 및 수업	EBS, 학교온 등 온라인콘텐츠 활용	원격수업, EBS, 학교온 등 온라인콘텐츠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인력활용	모든 교직원 참여	원격수업 지원은 원격학습도우 미 활용(방과후학교강사 등), 돌봄은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담당	원격학습도우미 활용 (원격수업 지원, 방역활동 등), 돌봄은 전담인력이 담당, 필요시 보조인력 활용
코로나19 안전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준용 매뉴얼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및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출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8.11)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학사운영과 연계한 긴급돌봄 제공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토록 하고 이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020년 2월 10일에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 우려, 학부모의 상황 인지 및 대응, 돌봄교실 운영 등 학교 및 학부모의 충분한 준비시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학교 사안의 신속한 대처 지원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교육청의 유선협의를 통해 우선 학사일정 조정 후 전자문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따른 부총리 주재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유·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하고, 2020년 2월 24일에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 격상발령과 유치종등학교 휴업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였다. 그 중 하나가 신학기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었다.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고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휴업시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긴급돌봄 실시와 가족돌봄휴가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에 긴급돌봄과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하여 수요자들에게 안내하여 실제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상반기 초등돌봄 참여 추이 그래프(3월~8월) ]



출처: 교육부(20.8.27).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보도자료.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수요 조사 및 운영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긴급돌봄의 기본원칙과 내용, 가족돌봄휴가제 적극 활용 및 유치원 유아학비 등에 대해 안내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개학 연기에 따른 교육공무직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육공무직 중 조리원 등 방학중 비근무자는 3월 23일부터 정상 출근하되, 돌봄 참여 학생의 중식 등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여건에 맞춰 대체 직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학사일정 조정은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의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졌다.

## ◆ 긴급돌봄에 대한 적극 홍보

2020년 2월 24일 개학연기 등 교육분야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회의결과,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안내문' 배너를 제작하였고, 이러한 시도교육청별 대응상황 및 주요 수칙 등의 발표 자료를 이미지 콘텐츠로 제작, 실시간 SNS 게재 등을 통해 홍보하였고 초등 긴급돌봄 프로그램 관련 리플렛을 제작·배부하였다. 3월 18일에는 학교온 사이트 활용 방법, 학교별 운영 사례 및 이러닝 콘텐츠 목록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초등 긴급돌봄 프로그램 관련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3월 24일에는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우편으로 배부하였다.

긴급돌봄 관련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도 배포하였다. 2월 28일에는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가 합동으로 긴급돌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생 약 12만 명 대상(유치원 71,353명, 초등학교 48,656명, 특수학교 395명)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모토를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상반기 돌봄 참여 추이 그래프에서 본 돌봄참여학생의 증가는 이러한 홍보의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계속해서 교육부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가 합동으로 돌봄정책을 수립·발표함으로써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맞벌이부부와 아동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의 돌봄

긴급돌봄 등이 시행되면서 돌봄인력의 업무부담이 커졌다. 이에, 돌봄인력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과 건강체크를 실시했다. 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2020년 2월 25일에는 부총리 주재, 일일점검회의 및 감염병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다각적 차원에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 중에 '돌봄전담사 부담완화를 위한 인력지원'과 '돌봄전담사 및 교직원 등

건강체크' 등이 포함되었다. 2월 28일에는 학교 내 돌봄교실 운영 시 교원이 필요할 경우, 학교장의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라 교원배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또한 돌봄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23일부터 총 9개 기수로 나누어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였다. 3월 2일에는 교육공무근로지원팀과 방과후돌봄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가 함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기타 교육공무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3월 16일에는 교육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 관련 교육공무직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긴급상황일수록 최전선에서 힘들게 일하는 인력들에 대해 최대한 배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은 돌봄인력이 돌보고, 그 돌봄인력은 국가가 돌보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부는 돌봄인력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처우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긴급돌봄에 참여한 교원 등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질병에 대해 보상(학교안전공제회 등)이 가능하다. 보상의 범위는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말한다. 아울러,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원의 법률적 배상 보상도 가능하다.

### 교원배상책임보험

**(현황)** '19년 17개 시도교육청 전면 실시

**(보상 예시)**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등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

**(보상 사례)** 초등학교생이 체육시간에 민첩성 교육 시 다리가 꼬여 에어컨보호대에 걸려 넘어져 다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19세 이후 성형비용 665백만원을 보험사에서 지급

### 돌봄전담사 등 사고 및 질병 보장방안

-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및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 지급 가능
- 시도교육청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복무(병가 등) 조치 가능

위와 같이 이미 교원이나 돌봄전담사 등의 돌봄인력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돌봄인력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요조사에 기반을 둔 돌봄서비스 제공

긴급돌봄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요가 확정적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2월 25일에는 개학 연기에 따른 특수학교 긴급돌봄 수요조사 및 운영에 대하여 공문으로 안내하였다. 학교장 책임하에 학생·교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내 긴급돌봄 운영 대응체계(전담, 지원, 책임인력)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긴급돌봄 수요조사, 학생(보호자)과 교직원 감염 관련 모니터링,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 위생용품 구비 및 방역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때 교직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 및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2월 27일에는 부총리 주재 일일점검회의 및 감염병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전담사 외 교직원 등 인력, 교실 확보방안 및 특수학교 상황을 확인하였다. 3월 5일에 보고된 특수학교 긴급돌봄 신청자는 182교 중 74교에서 395명이 신청하였다. 실제 참여 학생수는 352명이었다.

[ 특수학교 긴급돌봄 수요조사 결과('20.3.5 기준) ]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학교수
27	205	86	68	9	386	74

4월 16일에는 온라인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 및 장애학생 지원 바우처 서비스도 안내하였다. 특수학교 긴급돌봄 관련 예산 편성 후 운영 협조 요청 및 온라인개학 관련 장애학생 지원 바우처 서비스 내용(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안내하였다. 특수학교 긴급돌봄은 이러한 수요조사와 학교의 협력에 힘입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그리고 3월 6일부터 9일까지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교급별 긴급돌봄 수요조사 결과('20.3.12 기준) ]

구분	유		초		특수		계	
	학교	신청자	학교	신청자	학교	신청자	학교	신청자
숫자	6,516교	82,701명	4,634교	60,490명	139교	1,315명	11,289교	144,506명

수요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초등 긴급돌봄 운영 사항을 파악하였다. 시도교육청별 참여인원, 시간운영, 중식제공,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수요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학교별 수요 파악 및 대응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특히 저학년 맞벌이 가정을 우선적으로 돌봄이 이루어졌다. 즉 수요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 긴급돌봄을 위한 지침 마련과 프로그램 내실화

긴급돌봄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매뉴얼과 지침을 신속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2020년 2월 26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민간의 가족돌봄휴가제 사용을 실효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월 28일에는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관리 지침을 안내하였다. 이 지침에는 학교장 책임으로 비상대응체계 운영, 위생점검(소독, 방역 및 위생용품 구비 등) 및 교직원 교육, 학생 건강상태 및 긴급돌봄 운영 현황 점검, 학교 당 긴급돌봄 위한 최소인원(10명 내외) 배치 권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특수학교 긴급돌봄 운영시간(오전9시 ~ 오후5시) 등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을 안내하였다. 이어서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관리지침'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였다. 3월 6일에 2판, 3월 18일에 3판을 만들어 안내하였다. 3월 9일에는 특수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련 지침을 수정(시간 연장 및 중식 제공 등)하여 안내하였다.

긴급돌봄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긴급돌봄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온라인을 이용한 프로그램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2020년 3월 18일에는 학교온 사이트 활용 및 이러닝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한 긴급돌봄 프로그램 내실화 및 교육공무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학교온(onschool.edunet.net)'을 통해 유치원 긴급돌봄 내실화 지원 관련 누리집 연동을 추진하였다. 즉 학교온 접속 → 콘텐츠 찾기 → 사이트에서 찾기 → 학교급 '유치원' 선택 → 누리집 선택(집콕놀이, 안전나라 여행, 유아놀이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이트 내 '돌봄 아이디어'란을 운영하여 초등 긴급돌봄 관련 활동 아이디어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놀이와 쉼 중심의 유치원 긴급돌봄이 운영되었다. 유치원 휴업 종료시까지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쉼' 중심의 유치원 긴급돌봄이 운영되었다. 시도 유아교육진흥(체협/교육)원에서는 온라인 가정놀이 콘텐츠 및 교육자료 대여서비스 등을 통해 긴급돌봄 운영을 지원하였다.

정부가 신속하게 매뉴얼과 지침을 만들어 긴급돌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고, 온라인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 활용도를 제고한 성과가 있었다.



## ◆ 긴급돌봄을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운영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계획을 세우는 등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 2020년 3월 6일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개학 연기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조사항을 다루면서 긴급돌봄 제공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루었고 실무진 차원에서도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2월 26일에는 여가부·복지부·고용부 관계자가 모여 긴급돌봄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가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복지부는 '지역 보건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활용',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제,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월 3일에는 개학 연기 관련 긴급돌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유치원, 돌봄교실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교실당 이용인원 축소방안, 신고센터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관련, 고용부는 가족 돌봄 휴가 관련, 여가부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 관련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긴급돌봄과 관련된 부처들이 장관부터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끌어갔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담당자 회의가 수시 개최되었다. 2월 27일에는 개학연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2월 28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학사운영 관련 교육과정정책관 주재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긴급돌봄 등 개학연기 관련 추진과제 및 교육청 협조사항과 시도교육청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3월 4일에는 교육복지정책국장(주재),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등이 참석하여 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련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긴급돌봄 관련 사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빈틈없이 긴급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온라인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도 협력적으로 이루어졌다. 온라인개학 관련 긴급돌봄 수요 대응 및 재량휴업일 등 긴급돌봄 운영에 협력하였다. 온라인개학 관련하여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우선 수용하였고 공간과 인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지역사회와 마을돌봄기관을 연계하는 등 긴급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협력도 잘 이루어졌다.

사회부총리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긴급돌봄 상황을 점검하였다. 2020년 3월 1일에는 사회부총리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를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 시설·환경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등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긴급돌봄 관련 운영시간, 인력운영, 안전 확보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하였다. 3월 2일에는 긴급돌봄 운영현황, 보호조치대상자에 대한 이행사항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특수학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3월 5일에는 청주혜원학교, 청주성신학교, 세종누리학교, 전주

은화학교, 한울학교, 나주이화학교, 광주선광학교 등을 점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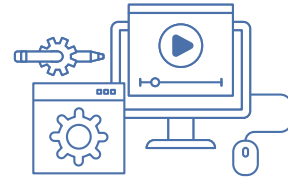
3월 5일에 긴급돌봄 추진현황 및 내용을 점검하고 돌봄시간을 19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고, 참여인력 인센티브 지원, 특수학교 돌봄상황 점검 및 관계부처 긴급돌봄 서비스 정보 제공 수단 다양화 등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현장성 있는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였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돌봄 시간 연장 등 상황에 맞게 신속한 정책결정을 내렸다.

긴급돌봄 관련 학부모·교직원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시도교육청에서도 3월 1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교육부는 긴급돌봄 종합상담 콜센터(02-6022-6060)를 3월 12일부터 운영하였다. 콜센터 상담접수 누적건수를 보면 3월 18일 당시 4건으로 시작해서 5월 26일에는 9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내용은 주로 긴급돌봄 복무와 수당 지급, 학사일정 관련 내용이었다.

대학생 근로장학생의 학습 멘토링을 통해 마을돌봄기관에서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학생들이 마을돌봄기관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돌봄기관(보건복지부 소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여가부 소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근로기관 일괄 등록 및 대학생 대상 근로 참여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하였다.

이처럼 중앙정부부터 교육청, 단위학교, 긴급돌봄지원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으로 긴급돌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수시로 회의와 현장점검을 거침으로써 일상불란하게 긴급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 6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실행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해지고 등교개학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개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온라인 개학이 불가피해지면서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실행을 위한 주요 정책의 흐름은 크게 ‘온라인 개학 실행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및 ‘원격 수업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정규 수업에 준하는 원격교육을 위해서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원격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여 내실있는 원격수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대응 시기별 주요 조치사항

#### 1.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기간(1.20~8.22)

##### 온라인 개학 시행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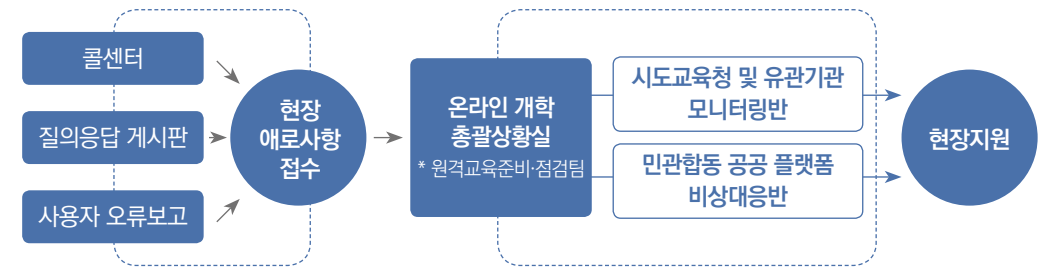
##### 온라인 교육 시행 관련 지침 마련

교육부는 3월 25일에 원격수업 지원체제 구축 및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마련을 위한 학교현장 의견수렴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이 마련되었고(03.27 발표),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를 신설(3.31)하고 학교·교사용 원격교육 실무가이드를 작성하여 안내(3.31) 하였다.

개학 이후 원격 수업의 성공적인 안착 지원을 목적으로 ‘원격교육지원반’ 산하에 ‘원격교육준비·점검팀’이 구

성되어 운영되었다. 또한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이후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총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공공플랫폼 운영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온라인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 원격수업 지원체제 ]



아울러 등교수업과 달리 원격수업은 출결·평가·기록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마련(4.7 발표)되었고, 이는 원격수업에 따른 학생 출결관리, 수업 유형별 세부 평가 및 학생부 기재에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 관련 주요 추진 경과('20.3~4) ]

구 분	일 자	내 용
1	'20.3.27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발표
2	'20.3.31	학교·교사용 원격교육 실무가이드 안내
3	'20.3.31	저소득층 등 대상 스마트기기 대여제도
4	'20.4.6~4.8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추가휴업
5	'20.4.7	각 시도교육청에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6	'20.4.8	일일 300만 명 동시이용 가능한 공공 LMS 플랫폼 2개 구축 완료
7	'20.4.8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공공플랫폼(KERIS, EBS) 콜센터 설치 완료
8	'20.4.9	최초 온라인 개학(04.09) ※ 온라인 개학 발표(03.31)
9	'20.4.13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요건 한시적으로 완화
10	'20.4.14	공공플랫폼 장비 증설, 접속 분산조치, 시스템 개선 등 실시
11	'20.4.23	원격수업 우수사례 발굴 관련 시도교육청 협조 요청
12	'20.4.24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발표
13	'20.4.29	각 시도교육청에 「실시간 쌍방향 원격교육 활용 보안 가이드」 안내



특수학교 온라인 개학식·원격수업(4.20, 서울농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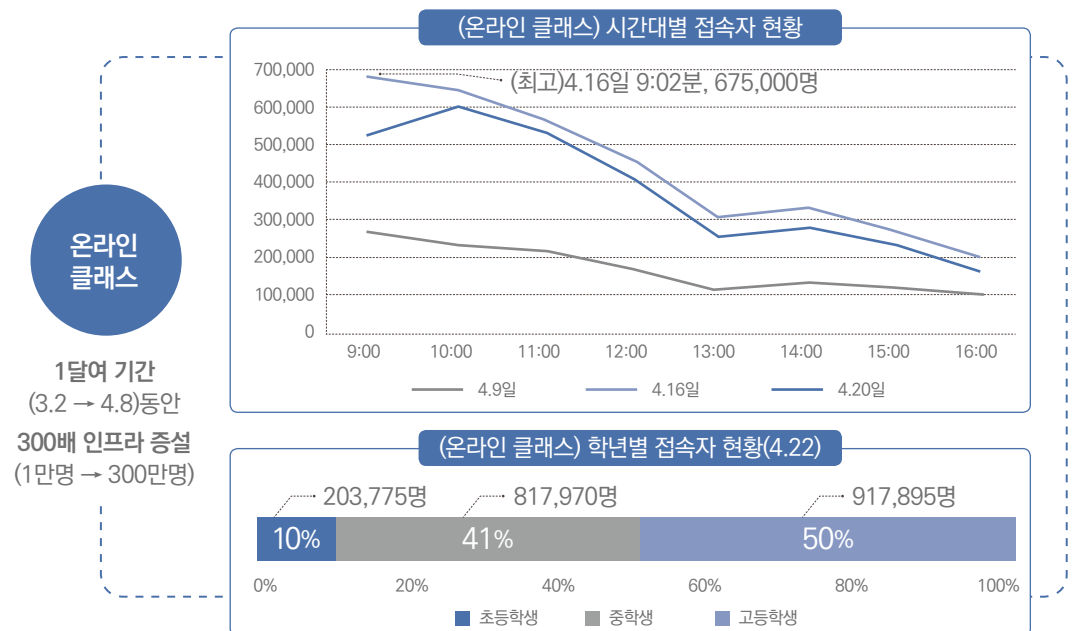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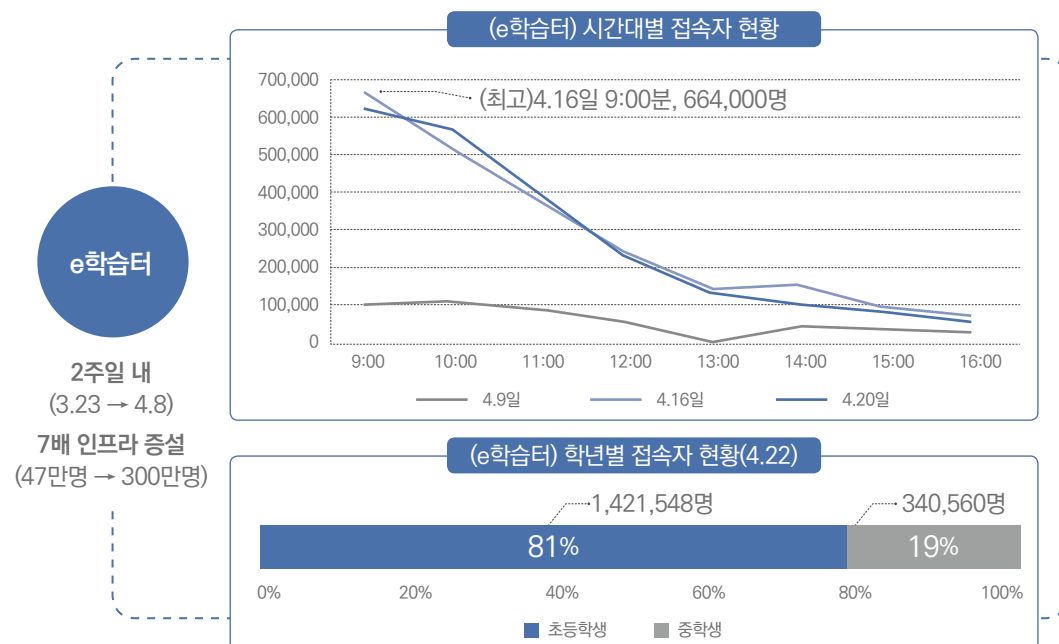
원격교육 관련 KERIS 상황실 방문(4.27)

##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 마련

### 초·중등 공공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온라인 개학 실시 이전, 전국 초중고등학교 약 534만 명이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전,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 시스템 증설 및 점검을 거쳐(4.6~4.8) 일일 각 300만 명 동시 이용 가능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KERIS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구축(4.8)을 완료하여 원격수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 온라인 개학 공공 플랫폼 안정화 대응 현황 ]



단기에 구축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민간 합동 원격 수업 점검 TF를 구성·운영하고 각 기간 내 실시간 현장 기술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 민간합동 원격수업 점검 TF 및 실시간 현장기술상황실 ]

민관합동 원격수업 점검 TF	기관별 실시간 현장기술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교육부, 과기정통부, EBS, KERIS,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민간 클라우드 업체(MS, NBP(Naver Business Platform)), SK브로드밴드, LMS 업체 등</li> <li>• (역할) ① 공공플랫폼 접속 및 네트워크 운영 점검, ② 디도스 공격 대처·학교·가정 네트워크 점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RIS) 기술전문가(클라우드 및 응용소프트웨어 사업단 등) 현장배치 및 엔지니어 콜센터 투입</li> <li>• (EBS) 교육부, 개발사, 협력사, LG CNS등이 참여한 현장 기술상황실 운영</li> </ul>

### 교원 상호 간 협력 환경 조성

원격수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교수학습 방법 지원을 위해 교원 상호가 서로 지원·협력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학교별 원격수업 대표교원 1만명이 참여하는 교원 선도 그룹 '1만 커뮤니티'를 구축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온라인학습 교사지원단」 운영계획(3.5 발표)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온라인학습 교사

지원단을 운영하여 초·중고, 특수교육 일선학교의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온라인 학습 통합 지원 웹사이트인 '학교온(On)'을 3월 10일에 개통하여 일일 학습 안내, 온라인 콘텐츠 및 개설·활용법 등을 제공하였다. 학급방 개설, 온라인 학습과정 설계 등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학습 원격지원 자원봉사단 '교사온(溫)'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하였다.

###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 지원

2월 20일 개학 지연에 대비해서 교육부 각 부서, 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유관기관이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취합하여 목록을 정리하고, 이를 학년별·교과목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절차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온라인 교육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유치·초·중,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서도 K-MOOC 교육콘텐츠의 상시학습을 강조하면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단기과정(한국어 과정, 한국문화)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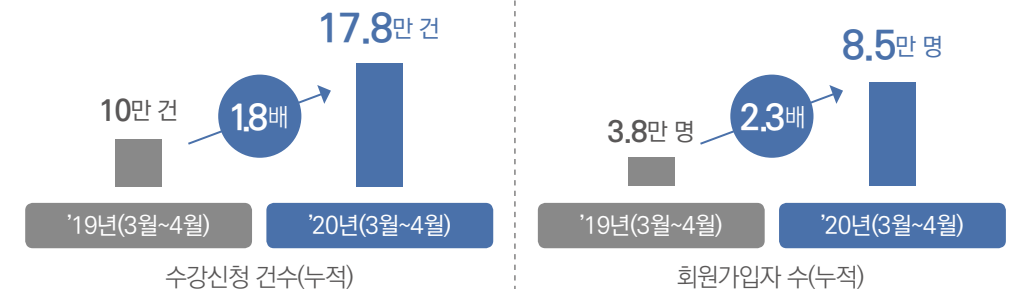
### 초·중등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구축

교육부는 소속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공공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확충 제공하였다. EBS(‘라이브 특강’ 및 ‘초등 만점왕’(~5.15, 350차시))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 중학교용으로 개발된 교육용콘텐츠(방송중·고등학교 콘텐츠 62과목)등 교과학습 콘텐츠를 확보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인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제공하여 교사가 편리하게 원격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교과서(134종)를 보급하였으며, 검정교과서협회와 협력하여 국·검정 교과서 E-BOOK(497종)도 제공하였다. 또한 디지털기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 및 초·중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였다. 그 외에도 현장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 저작권 침해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관련단체가 함께 협의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업목적(고등학교 이하) 저작물 이용 FAQ(21.4.10)」를 현장에 안내하였다.

### 고등교육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

2월 21일 대학 수업 내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활용 강화 안내를 시작으로 대학에서의 온라인 교육 준비에 들어갔다. 2월 25일에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 및 학점교류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수립하여 배포하였다. 이어 K-MOOC 강좌 개강 시기도 3월 말에서 3월 초로 조정하였다. K-MOOC 이용자는 2019년 동 기간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는 학생 수와 교육콘텐츠 수가 증가하였다.

[ K-MOOC 이용자 현황 비교 ]



[ 방송통신대학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 추이 ]

(단위 : 개수)

날짜(기준)	대학	학생			교육콘텐츠
		합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20.3.12	12	1,861			5,350
'20.3.13	16	3,068	2,482	586	6,837
'20.3.18	25	7,903	6,886	1,107	16,682
'20.3.23	27	8,149	7,030	1,119	17,328
'20.3.31	30	10,686	9,335	1,351	21,396
'20.4.6~5.21	30	10,872	9,508	1,364	21,624

자료: 김창환(2020) pp. 119~124 자료 종합

### 유아의 특성과 발달을 고려한 유치원 원격교육 지원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는 「2020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방안」에 원격수업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5.11 발표)하여 추진하였다. 이는 개학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등원·원격수업을 병행하기 위한 출결 관리 및 교수학습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유치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EBS 1TV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을 제작·송출하고, 각시도와 협력하여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교육부의 누리과정 포털(i-누리)을 통해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구축·탑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원에서는 EBS 1TV





놀이꾸러미



EBS 1TV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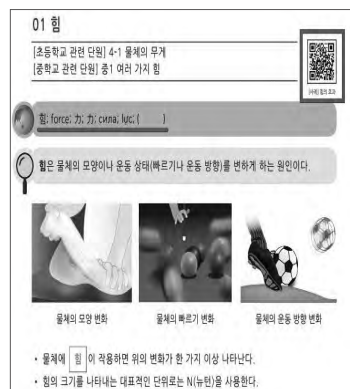
누리과정포털(i-누리)의 원격수업자료

〈우리집 유치원〉 방송 시청, 실물자료 중심의 놀이꾸러미, 다양한 콘텐츠 활용 등을 통해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유아의 특성 및 발달을 고려하여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놀이꾸러미 중심의 유치원 원격교육을 근간으로 실시하였다.

## 다양한 교육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지원

### 맞춤형 온라인 교육 지원

첫째, 교육부는 직업계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수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 17천여 개의 전공 및 취업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29개 기관을 통해서 확보하고 3월 27일에 안내하였다. 또한 4월 2일에 ‘기간집중이수’를 활용한 교육과정, 즉 온라인 학습 기간에는 이론 중심 교과 운영과 대면등교 학습 기간에는 실습 교과 운영 방안을 안내하여 온라인 개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둘째, 상기한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지침 마련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교재도 제작하였다. EBS의 초중등 라이브 특강 교안 파일을 점자정보단말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텍스트 또는 점역 파일 제작이 대표적이다. 셋째, 한



교과보조교재(전자책)



한국어교육 원격수업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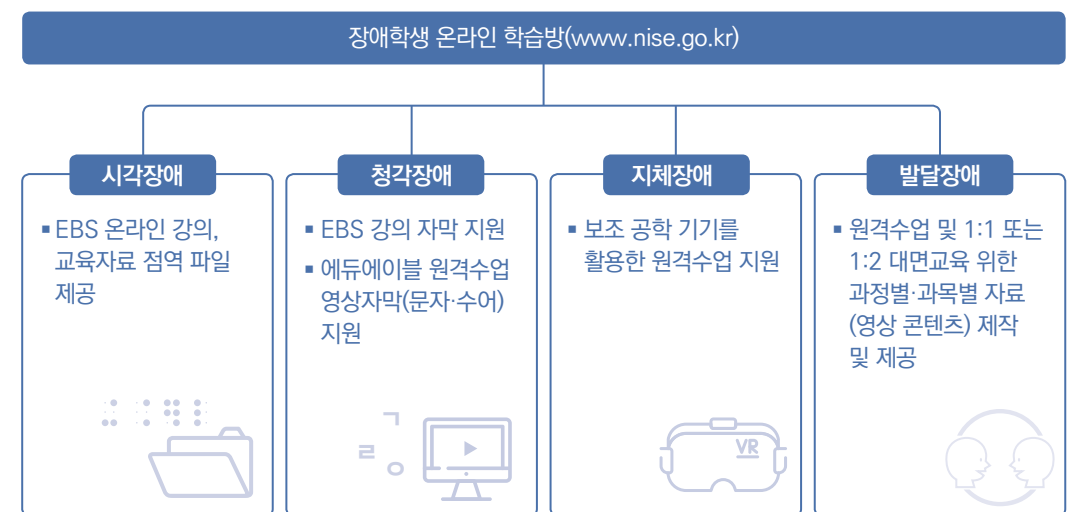
학교생활 가이드(다국어)

국어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 및 14세미만 다문화학생의 원격수업을 지원하였는데, 특히 한국어, 한국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EBS 두리안 웹사이트에 대한 임시 아이디 발급으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졌다. 교육자료와 관련하여, 교과보조교재, 한국문화교재, 이중언어교재 등 다문화 교육자료의 전자책을 27종 개발하여 3월에서 5월에 걸쳐 배포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통·번역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안내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탈북학생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심리 상담을 위한 멘토링, 진로·직업 교육 등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장애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 준비

장애학생 학습결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는 ‘특수학교(급)와 가정 연계 1:2:3 지원’(3.20), ‘2020학년도 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03.27), ‘특수학교(급) 학사 운영 및 지원계획’(4.2)을 발표하고 추진하였다. 특히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https://www.nise.go.kr/jsp/onlineedu/index.jsp)을 구축하여 각 시도별 ‘온라인 현장지원단’과 협력을 통해 4월 초부터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탑재하였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더불어 원격수업이 어려운 장애학생들을 위해 학습꾸러미 제공, 1:1 방문(순회)교육 등을 병행하고 개인(장애 유형 및 정도)과 학교 여건에 따른 생활지도 및 상담 지원, 학생 학습활동 점검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 [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을 통한 장애유형별 교육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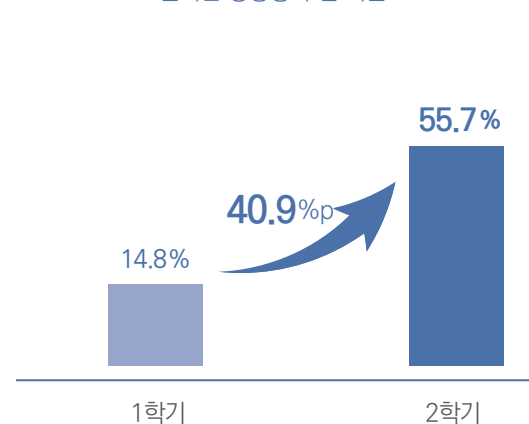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기간(8.23~11.18)

온라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 콘텐츠 제공, 기술적 기반 구축 등이 안정화되고, 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원격수업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적절하게 실행되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어 진행되는 가운데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8.11) 및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육안전망 안착 지원 방안」(9.15)을 발표하여 원격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첫째,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으로 조-종례가 운영되었다. 둘째,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이외에도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중에 실시간 대화창 등을 활용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환류(피드백)하는 수업도 실시간 원격수업 범주로 포함하였다.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고 쌍방향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셋째, 원격수업이 1주일 내내 지속될 경우, 교사는 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개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했다. 원격수업 질 제고에 대한 성과로 초·중등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시 활용하는 원격수업 형태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이 1학기 대비 2학기에 대폭 증가(1학기 14.8%→2학기 55.7%)하였으며,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의 활용 비율 역시 증가(1학기 20.3%→2학기 25.3%)하였다.

[ 2020학년도 2학기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을 위한 원격수업 질 제고 성과 ]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



실시간 쌍방향 수업사례(세종 다정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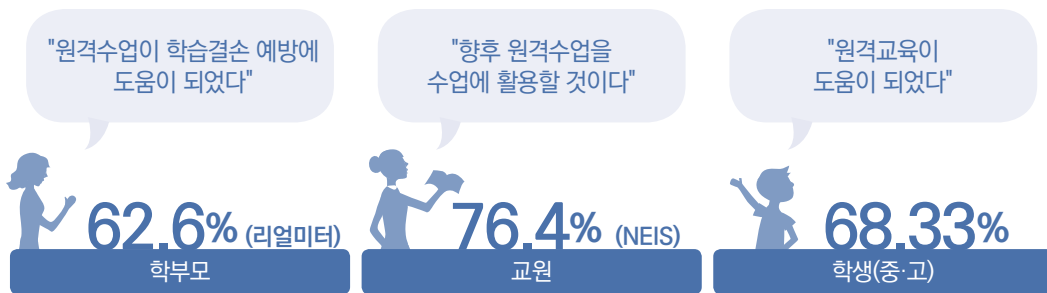
- 실시간 쌍방향 수업 공개
- 실시간 쌍방향 창의적 체험활동 등 운영

## 주요 성과

###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 마련

온라인 개학의 가장 큰 성과는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대면을 전제로 한 수업이 운영되었고 원격수업은 특정한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개학은 이를 위한 관련 기반 조성과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 코로나19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속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도입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외 주요국들의 원격교육 활용과는 다소 다른 접근으로 의미를 지닌다. 독일은 '집에서 배우기', 미국은 'Learn at Home', 싱가포르의 'Home-based Learning', 호주는 'Learning from Home'(강성국 외, 2020: 31)으로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을 주요하게 내세웠다. 이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개학'의 개념을 적용한 '온라인 개학'을 시도하였다는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 즉, 원격수업 제공을 넘어서서 감염병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시수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부 내 '원격교육준비·점검팀'을 신설하고(교육부, 2020.3.31), '온라인 개학 총괄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개학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한 점 역시 의의가 있다.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이에 따른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수업 운영, 출결, 평가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 교육부에서는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을 마련(교육부, 2020.3.27)하여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였다. 특히, 원격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 교사·학생 간 화상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녹화 강의 또는 학습 콘텐츠로 학습하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교육부, 2020.4.7). 이는 법령상 학교장 운영은 가능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원격수업의 출결·평가·기록에 대해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공통 지침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 특히, 온라인 개학 운영을 바탕으로 2020년 하반기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2020.10.20)을 통해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제24조(수업 등) 제3항의 신설을 통해 특수한 학생만이 아니라 국가 재난 상황 등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내용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원격수업의 활용은 특정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즉, 코로나



19 이전에는 모든 학생들이 교실에 출석하는 대면수업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원격수업이 주요한 교육 방법으로서 학교 현장에 자리 잡게 되었다. 온라인 개학의 경험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원격수업에 대한 역량과 친숙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감염병 확산에 등교개학이 불가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원격수업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며 그에 대한 반감도 불식되었다.

원격수업의 경험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 조사 결과들에서도 위기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학사일정 수행 및 학습권 보장, 반복학습 가능,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을 원격수업의 장점과 효과로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점례 외, 2020; 계보경 외, 2020).

[ 원격수업의 장점과 효과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

(단위 : 명, %)

구 분	원격수업 기간 자녀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학부모) (계보경 외, 2020)**		원격수업이 효과적인 이유(교사) (권점례 외, 2020)*	
	학습 공간 및 시간 제약 없는 수업 참여	위기상황에도 지속적인 학사일정 수행 및 학습권 보장	반복 학습이 가능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학습 가능
초등학교	36.86	32.37	24(15.1)	72(45.3)
중학교			60(29.9)	67(33.3)
고등학교	39.71	29.48	68(35.2)	62(32.1)

자료: '계보경 외(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p.20'와 '권점례 외(2020).

COVID-19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원격 수업 실태 및 개선 방향 탐색. p.82'의 내용을 일부 발췌함.

\* 원격수업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교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임.

\*\* 조사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로 전체 응답자 수는 초등학교 학부모 213,012명, 중·고등학교 학부모 167,910명임.

##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 확보 및 제작 지원

온라인 개학으로 전면 원격수업 시행에 따라 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확보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온라인 수업자료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해 나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 콘텐츠로는 e학습터의 5.5천종, EBS의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약 15,000편을 포함한 4.3만종, 국·검정 교과서 E-Book 497종과 디지털 교과서 134종을 제공하였다(교육부, 2020: 4).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방송중·고 콘텐츠 역시 한국교육개발원의 협조를 통해 방송중 28종, 방송고 41종을 공유하였다(교육부, 2020.6.17). 특히 기존의 온라인 수업자료들이 정규 수업에 대한 보충학습의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정규 교육과정 기반의 수업 콘텐츠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송중·고 콘텐츠의 공유는 의미가 있다. EBS와 e학습터에 공유된 교과들이 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심인 데 반해 방송중·고 콘텐츠는 교과군별 다양한 과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보다 다양한 콘텐츠 지원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듣는 교과서' 약 3,000편과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306편 등 민간 콘텐츠 역시 무료로 탑재하였다(교육부, 2020: 4).

[ 원격수업을 위한 교과 콘텐츠 제공 현황 ]

구 분	교 과	채 널
초 1-2	국어, 수학	EBS Plus2, EBS2TV
초 1-6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e학습터 + EBS 온라인 클래스
중 1-3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e학습터 + EBS 온라인 클래스(EBS 중학, EBS 프리미엄)
	교과군별 디지털 학습 콘텐츠 28종	방송통신중학교 교과 콘텐츠(e학습터&EBS 온라인 클래스)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EBSi 고교강의(고1시리즈, 고2시리즈), EBS 수능 특강, EBS 온라인클래스
	교과군별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 41종	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 콘텐츠(e학습터&EBS 온라인 클래스)

자료: '교육부'(20.6.17).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마련. p.12.'의 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원격수업 경험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지원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47.9%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7.4%, 중학교 49.1%, 고등학교 47.1%로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 제공 등의 지원 노력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교재 제작,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원격수업 지원 콘텐츠 제작·보급, 직업계고 전문교과 수업 등에 활용할 온라인 콘텐츠 확보 등(김창환 외, 2020) 다각도에서 콘텐츠 제작 및 확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개별 학습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지원을 통해 원격수업 상황에서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원활하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상기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는 원격수업 콘텐츠 외에도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요건 완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교사들이 저작권 문제로 원격수업을 위한 자료 활용에 가지는 제약을 해소해주고 보다 안전하게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일차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권 이해하기’ 관련 자료를 학교, 교사 학생, 대상으로 제공하였다(교육부, 2020.4.13). 해당자료는 주요 정보와 주의사항 중심으로 수록한 것이라면, 이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의 공식 종료 선언 시까지 한시적으로 저작물 이용 요건을 완화하였다(교육부, 2020: 4). 구체적으로 ‘교과용 도서의 사진, 동영상, 지문 등은 일부 또는 전부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중 판매중인 음악·영상 등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온라인 개학에 따라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원격수업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들이 제작한 자료에 대한 권리 보호 문제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

전례 없는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KERIS의 e학습터와 EBS의 온라인클래스를 원격수업 플랫폼으로 삼으면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e학습터와 온라인클래스를 각각 일일 3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였다(교육부, 2020.4.1). 이를 위해 e학습터는 2주(3.23~4.8)동안 7배, 온라인클래스는 한 달(3.2~4.8) 동안 300배의 인프라를 증설하였다(교육부, 2020: 3). 이처럼 단기간 동안 인프라 증설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원격수업 실태에 대한 약 1,800명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초·중고 전체로는 EBS의 온라인클래스(896명, 47.7%), KERIS의 e학습터, 위두랑(590명, 31.4%) 순으로 원격수업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점례 외, 2020: 66). 두 가지 플랫폼과 함께 EBS TV를 통한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의 노력도 이루어졌다. TV 채널을 기존의 7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의 EBS 방송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라이브 특강 등 학년별 TV 채널을 신설하였다(교육부,

2020: 3). 특히, 이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원격수업 활용이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과 일반 학생들의 수업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 시청각 교육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노력으로서 의의가 있다.

온라인 개학 실시 과정에서 교육부는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한국의 우수한 IT 환경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기기 대여 제도’를 시행하여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다자녀·조손가정·한부모·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였다(교육부, 2020.3.26). 이 과정에서 스마트기기 및 스마트폰 지원을 위한 삼성, LG, 국민은행과 같은 민간기업과 통계청, 한국남부발전 등의 공기업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신청자 28.3만 명 전원에 대해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6.12). 이 뿐만 아니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의 협력을 통해 원격수업을 위한 통신비 및 데이터 지원도 이루어졌다. 온라인 개학 과정에서 주요하게 활용되는 교육 사이트(EBS,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사이언스올, 엔트리, 커리어넷 등)에 대해서는 4~6월간 모든 학생들이 모바일 데이터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지원 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였다. 실제로 해당 교육용 사이트 등의 데이터 사용량은 3월 약 500TB에서 4월 약 2,700TB, 5월 약 6,000TB 까지 급증하는 등 온라인 개학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였다(교육부, 2020.6.2). 이와 함께 저소득층 약 17.4만 명 대상으로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육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처럼 민관의 적극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이 가진 자원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 원격수업 관련 교사 전문성 향상

온라인 개학이 실시됨에 따라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하던 교과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교사들의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원격수업 실태에 대한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원격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수·학습자료로 ‘교사 자체 제작 자료’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교사들 대다수가 시도교육청, 민간 제공 또는 사설 교사 지원 사이트 자료보다 자체적으로 원격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 전환은 기존 면대면 수업에 맞추어 설계된 수업 목표, 수업내용, 교수설계전략, 학습활동, 수업평가 등의 요소를 온라인 학습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도재우, 2020: 158)으로 상당한 역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 자체적으로 원격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은 관련 수업 설계, 운영 역량의 향상과 연결된다. 이는 원격수업을 설계하는 것에서부터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 및 기술 활용, 원격수업 운영 전반, 온라인에서의 학생 평가 및 학습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온라인



[ 원격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 ]

(단위: 명, % / 복수응답 가능)

구 분	교육부(2020.5.4)*	권점례 외(2020)
자체 제작	58.4	1,414(75.3)
EBS 강의	42.1	734(39.1)
KERIS, 위두랑 등 제공 강의	14.4	272(14.5)
시도교육청 제공 자료	-	124(6.6)
유튜브 등 민간 제공 자료	43.3	-
사설 교사 지원 사이트 자료	-	237(12.6)
디지털교과서	17.2	
기타	-	209(11.1)
무응답	-	4(0.2)

자료: '교육부'(20.5.4).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p.10'과 '권점례 외(2020). COVID-19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원격 수업 실태 및 개선 방향 탐색. p.67'의 내용을 일부 발췌함.

\* 교원 224,894명에 대한 NEIS 기반 교육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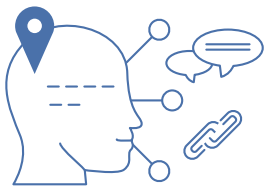
개학 경험을 통해 교사들은 이전과는 다른 수업 역량 개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원격수업 관련 교사 전문성 향상은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수업 개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약 5만 명 교사 대상의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조사에서도 교사들은 원격수업이 향후 교육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수업혁신에 기여'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었다(계보경 외, 2020: 21). 이처럼 온라인 개학은 기존 대면수업과 유사한 학습경험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원격수업의 개발을 이끌어 내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교실에 머물러 있던 수업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더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20년 하반기에는 교원의 원격수업·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수업 도구 사용, 수업 디자인 실습과 함께 수업·평가 기법 체험, 수업 디자인 사례 공유 및 피드백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차원의 연수도 실시되었다(교육부, 2020.8.21). 교육부는 교원들이 자발적 커뮤니티를 통해 양질의 원격수업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교육부, 2020: 5). 구체적인 예로 '1만 커뮤니티' 구성이 대표적으로, 이는 학교 현장의 원격교육 정착을 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에서 학교별 대표 교사,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에서 모인 공동체이다(교육부, 2020.4.6). 이 안에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소통을 진행함으로써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나누면서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책, 사례,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앞서 III장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온(On)', '교사온(溫)', '지식샘터'를 운영함으로써 교사들의 플랫폼 및 도구 활용법, 수업 아이디어 등 원격수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사자원봉사를 통해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을 지원하였다. 수업 경험 및 사례를 나누는 것은 교사들의 수업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또는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동료교사들과 수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원격수업 역량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처럼 교사들이 학교를 넘어 다양한 교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개학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격수업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면서 수업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데 기여하였다.

# 7

##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전염병 통제는 하나의 부처로는 불가능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모든 조직들이 참여해야 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응 인력, 조직, 체계 간 공유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 분야 주요 조치사항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 현장 방문, 간담회, 온라인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대응 시기별 주요 조치사항

#### 1.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기간(1.20~8.22)

##### 코로나19 대응계획 및 방안에 대한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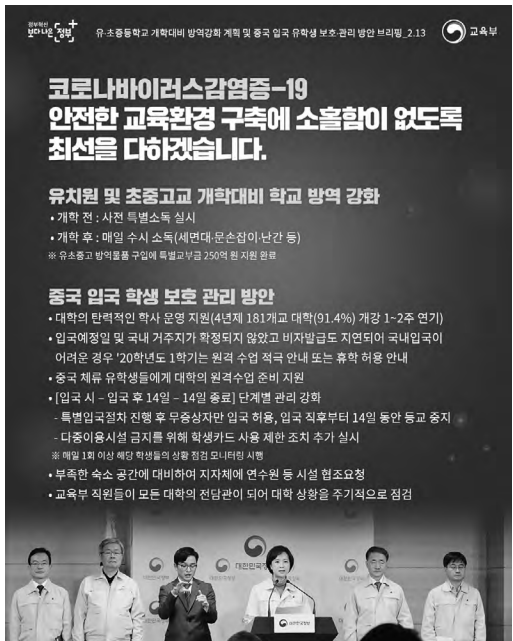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은 등교 방법 및 시기, 돌봄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전 국민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며 교육분야 현안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 변화에 따른 조치사항과 관련된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부총리 또는 차관이 총 29회에 걸쳐 직접 브리핑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례브리핑뿐만 아니라 긴급 사안에 따라 브리핑을 통하여 위기 속 소통이 이루어졌다.

[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내용에 따른 현황 브리핑 구분 ]

번호	일 자	제 목	주요 내용
1	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학사관리 방안 브리핑	중국 유학생 '입국-입국 후 14일-종료 후' 3단계 관리 강화, 대학 '비상관리체계' 가 동·교육부 '현장 지원점검반' 운영
2	2.13	유·초·중·고등학교 개학대비 방역강화계획 및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브리핑	입국 전 중국인 유학생 휴학 권고,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자율격리 관리 강화, 방역물품 특별교부금 250억 원 지원, 온라인 수업 등 대학 원격수업 준비 지원
3	2.23	유·초·중·고 개학연기 및 유학생보호 관리 보완사항 후속조치계획 브리핑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 온라인 학습콘텐츠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중국인 유학생 입국대비 집중관리주간 지정 및 특별관리체계 가동
4	3.2	유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관련 브리핑	유초중고교 개학일 2주일 추가 연기, 돌봄교실 운영, 자녀돌봄휴가 신청
5	3.17	유초중고 개학 2주 추가연기 브리핑	유초중고 개학 2주 추가 연기, 고교개학 연기 감안 대입일정 변경안 검토
6	3.24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브리핑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점검 강화 및 위반 시 행정명령,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 배포
7	3.31	신학기 온라인 개학 관련 브리핑	신학기 온라인 개학 관련 브리핑
8	4.3	제5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	온라인 개학 인프라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교개학 시점 논의, 학원 휴원 권고 및 현장점검 강화 등 설명
9	4.7	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	고3·중3 학습기기 대여 현황 점검, 온라인 개학 후 돌봄 지원 계획, 교육 취약계층 지원 방안
10	4.9	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	온라인 개학 대비 스마트기기 대여 완료, 고3·중3 지역별 학생 출석률,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지연 문제 처리 상황 설명, 학원 방역지침 강화 관련 당부
11	4.10	온라인 개학 결과 온라인 백브리핑	고3·중3 온라인 수업 출석현황,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안정화
12	4.14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2단계 온라인 개학 관련 교육 플랫폼 안정화 계획 및 조치, 스마트기기 대여 현황
13	4.16		교육 플랫폼 안정화 점검 현황, 교육플랫폼 간헐적 접속지연 해소 조치상황, 접속 마비 시 출결 및 수강 처리 방안
14	4.21		등교 시기 결정 원칙 및 의견수렴 방안, 긴급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학원의 학교 원격수업 관리반 운영에 대응한 현장점검 조치
15	4.23		원격수업 부정 수강 조치 방안, 학원의 학력평가 관리·감독 행위 적발시 조치, 대학 오프라인 개강 관련

번호	일자	제 목	주요 내용
16	5.4	등교시기 방법 관련 브리핑	5월 13일, 고3 우선 등교 실시, 5월 20일부터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교수업
17	5.7	등교수업 관련 학교 방역 세부지침 브리핑	고위험군 학생, 결석 기간 출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확진자 발생 시 현장 지원 위해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 운영
18	5.11	등교수업 연기여부 브리핑	고3 학생, 5월 20일로 등교수업 연기
19	5.15	제15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	등교 대비 학사 운영방안 및 교실 내 최소 인원 배치 방안, 학교급식 운영방안, 등교 연기에 따른 수능 일정 및 난이도 조정 관련
20	5.21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 결과 브리핑	고3 등교수업 시작, 고2, 중3, 초1-2, 유치원 등교(05.27.)
21	5.22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	고3 등교수업 현황 및 미등교 사유별 현황, 고3 및 지역 신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 사례,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및 이용자제 당부
22	5.24	등교수업 지원 방안 브리핑	유치원 원격수업 EBS프로그램 계속 지원, 초등 저학년 기초·기본교육 우선 편성
23	5.29	등교수업 지침 강화 관련 브리핑	경기 소재 물류센터 관련 직원·가족 학교 출근·등교 지양, 수도권 학교 밀집도 최소화
24	6.5	등교수업 관련 회의 결과 브리핑	등교수업일 조정, 자가격리자 영재학교 입학전형 응시 지원
25	6.8	등교수업 준비지원단 회의 관련 브리핑	등교수업 준비지원단 회의
26	6.10	등교수업 현황 관련 브리핑	방역생활지도 분반운영 등 교육활동 인력 배치,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논의
27	6.16	수도권 지역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 안정화 관련 브리핑	수도권 지역 등교인원 1/3제한, 수행평가 등 평가부담 완화 조치 이행 요청, 체험학습 인정일수 38일로 확대
28	6.23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	수도권 지역 학교 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29	8.11	포스트코로나 교육 안전망대책 부총리·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브리핑	2학기에 필요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에 283억 원 지원, 9월부터 '학교방역지원 소통채널' 개설·운영, 저소득층 학생 대상 스마트기기·모바일 데이터 지원

자료: 김창환(2020), 2020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현황 분석, pp.224~247. 참고.



유초중등학교 개학대비 방역강화계획 및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브리핑(2.13)



개학 연기 관련 브리핑(3.17)



신학기 온라인 개학 관련 브리핑(3.31)

언론 브리핑 외에도 미디어에 출연하여 교육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언론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부총리는 2020년 3월 6일 YTN 뉴스특보 코로나19에 출연하여 긴급돌봄 지원방안 및 방역대책, 3주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방향 및 학습공백 대책, 학원 휴원 독려 방안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1차 개학 연기(2.23일 발표) 이후 개학이 2주씩 추가 연기(3.2일, 3.17일, 3.31일 발표)되자, 교육당국은 언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언론 프로그램에 부총리 및 차관이 직접 출연하여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방침, 학원 휴원 권고 및 학원 지원 방안·방역지원책, 방학중 비근로 교육공무직 대책, 교육비 환불요구 관련 입장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였다. 그 이후 1차 유행이 감소한 5월 교육부는 순차적인 등교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 사항 역시 브리핑 및 언론 출연을 통해 설명하였다. 등교시기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학교내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면서 등교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방송출연 외에도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대상 「원격수업 온라인 팜투어(수업시연)」을 통해 현장 추진 상황을 점검·홍보하였으며,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을 수차례 실시하여 온라인 개학 인프라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교개학 시점 논의, 학원 휴원 권고 및 현장점검 강화 등 주요 조치사항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언론에서 제기된 오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교육부가 판단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2020.2.7) 등 오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교육관계자와의 소통 및 현장 점검

코로나19 위기상황 현장 소통 체계

코로나19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 수렴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소통을 추진하였다. 특히 방역 분야 전문가와 시도교육감, 대학 총장을 포함한 여러 교육관계자 및 교육단체, 학부모 및 학생 등 다양한 교육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가 총 27회 이루어졌다.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부 간의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서울시와 교육부는 2월 21일 개최된 ‘중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대학 간 자가진단 앱 정보 공유 방안, 임시거주공간 지원, 일대일 건강관리 모니터링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 및 교육 관련 간담회 ]

번호	일자	대상(참석자)	주요 내용
1	2.12	대학(홍익대, 중앙대)	개강연기에 따른 학사관리 포함 대학 자체계획 및 유학생 관리현황, 중국 방문자에 대한 기숙사 수용 계획 등 대응상황
2	2.13	대학(성균관대, 경희대)	유학생 관리현황 및 중국 방문자에 대한 기숙사 수용 계획 등 대응상황
3	2.17	총청권 13개 대학 총장	중국입국 유학생 단계별 보호 관리방안, 대학-지자체 간 협조체계 강화 방안,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애로사항 등 논의
4	2.18	대학(한국외대)	대학 자체 코로나19 대응 계획, 유학생관리 현황 및 중국 방문자에 대한 기숙사 수용 계획, 비상대응 체계 현황 등 대응 상황
5	2.20	시도교육감	코로나19 대응 학교 휴업·휴무 기준 지침 마련 방안, 지역 사회 감염대응체계 강화 논의
6	2.21	서울시	중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자가진단 앱 정보 시·대학과 공유, 임시거주공간 지원 및 일대일 건강관리 모니터링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논의
7	3.9	학원총연합회 회장단	학원 휴원 동참 및 방역 실시 등 협의
8	3.14	감염병 예방 전문가, 교원단체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심각성, 유초중등학교 휴업 연장 필요성, 교육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방안 등 전문가 및 교육현장 의견 수렴
9	3.16	현장 전문가	보건교사, 학교관리자 등과 학교 준비사항 점검 및 논의
10	3.19	교원단체 대표	4월 6일 개학 연기 등에 대한 협력 당부, 교육현안 의견 청취
11	3.27	현장 전문가	코로나19 지역별 발생상황에 따른 신학기 개학준비 주요 추진사항 등 논의
12	3.28	시도교육감 영상	코로나19 대응 및 신학기 개학 준비 위한 점검사항, 시도교육청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13	4.2	테크산업협회	원격수업 현장 안착을 위한 에듀테크 기업 간담회, 교육 콘텐츠 및 온라인 기반 플랫폼 소개 및 현장의견 청취
14	4.6	교사	‘1만 커뮤니티’ 참여교사 대상으로 학교현장의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 건의사항 등 논의
15	4.6	특수학교 학부모, 교사	특수학교 온라인 개학준비 및 긴급돌봄 점검, 학부모 및 교원 의견 수렴

번호	일자	대상(참석자)	주요 내용
16	4.9	학교장, 교사	온라인 개학을 경험한 학교장 및 교사의 현장 이야기 및 온라인 개학 준비 중인 학교 교사의 준비 상황, 어려움, 건의사항 등 논의
17	4.28	코로나19 관련 교원단체	교육현장 의견 수렴
18	5.7	코로나19 방역 전문가	코로나19 방역관련 학교 준비상황 점검 및 전문가 자문
19	5.15	교원단체	원격수업, 등교 준비 상황 공유 및 현장 의견, 애로사항 청취
20		유치원 교사, 학부모	유치원 개학 연기 이후 학부모, 교사의 현장 의견 수렴
21	6.4	학교장, 학생, 교사 대표	단계적 등교가 완료된 고등학교의 등교수업 진행 상황 확인 및 등교수업 진행과 관련한 학생, 교사 의견 청취
22	6.5	초중 학부모모니터단	등교수업 관련 원격간담회
23	6.10	보건교사	학교방역 현장 대표교원 원격 간담회, 보건교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24	6.11	학부모, 교사	초등학교의 코로나19 예방 학교방역과 관련한 학부모, 교사 의견 청취
25	6.15	유치원	유치원 학사운영 관련 현장 간담회
26	6.16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등교수업 이후 학교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방안 논의
27	6.29	학생, 학부모, 교사	초등학교 현장 방역상황 점검 및 의견 청취
28	7.9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2학기 준비사항 논의,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자료: 김창환(2020), 2020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현황 분석, pp.224~247. 참고.



교고 등교수업 현장방문 및 학생·교사 간담회(6.4, 충북 오송고등학교)



교육부-에듀테크 벤처기업 간담회(4.2)



코로나19 방역전문가 간담회(4.19)



코로나19 대응 대학 현장지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가장 시급한 사안 중의 하나는 중국 유학생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에 중국 유학생 입국부터 추적 및 관리하면서 대학의 대응상황점검 및 현장 간담회(홍익대 및 중앙대(02.12), 성균관대 및 경희대(02.13), 한국외대(02.18))를 통해 협조를 구하는 등 대학과의 현장소통을 개시하였다. 더 나아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우선적으로 교육부는 2월 19일에 1,000명 이상의 중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17개교 대학을 대상으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및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이후 2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추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1차부터 4차까지의 현장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 현황에 중점을 두어 점검하였고, 5차부터는 대면 수업이 재개됨에 따라 방역 관리까지 확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대학 현장지원 ]

차 수	일 자	대 상
1	2.26~3.5	• 유학생 50명 이상 대학 113개교('19.4.1 기준)
2	3.10~3.13	• 유학생 50명 이상 대학 79개교('19.4.1 기준)
3	3.24~4.3	• 중국 외 유학생 300명 이상 대학 74개교('19.4.1 기준)
4	4.10~4.16	• 자가격리 대상 베트남 유학생 상위 26개교('20.4.7 기준)
5	5.13~5.29	• 실험·실습 등 대면수업 운영 대학 중 100개교('20.5.7 기준)
6	6.17~7.3	• 수도권 소재 대학 77개교

자료: 김창환(2020), 2020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현황 분석, pp.224~247. 참고.

유초중고, 특수학교 현장점검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긴급돌봄,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학사 등의 운영 실태와 방역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KERIS 등 교육관련 협력기관을 방문하여 단위학교의 온라인 개학 및 원격 교육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 및 교육 관련 현장점검·방문 ]

구 분	횟 수	일 시	내 용
유초중고, 특수학교	22	3.1	• 유초 긴급돌봄 준비상황 점검 현장방문(서울 충무초)
		3.12	• 코로나19 관련(긴급돌봄 현황, 방역실시 현황 등) 학교 현장방문(수원 매탄초)
		3.20	• 코로나19 관련 학교 현장점검(서울 동교초, 병설유치원)
		4.2	• 원격수업 시범학교 현장추진 상황 점검(인천 초은고)
		4.6	• 장애학생 원격수업 시범운영 현장방문(인천 청인학교)
		4.7	• 온라인 개학 준비 관련 학교 현장방문(대전 괴정고, 충북 원평중)
		4.8	• 직업계고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준비 현장점검(서울 용산공고, 서울맹학교)
		4.9	• 고3 온라인 개학식 및 교육청 상황실 현장방문(수원 고색고)
		4.13	• 다문화학생 원격수업 준비 현장점검(아산 신창초), 원격수업 시범학교 방문(인천 초은고)
		4.14	• 초등학교 긴급돌봄 현장방문(안양 덕천초)
		4.16	• 농어촌 학교 온라인 입학식 현장점검(인천 강서중)
		4.17	• 초등학교 원격수업 현장점검(세종 한결초)
		4.20	• 특수학교 온라인 개학식 및 원격수업 현장점검(서울농학교)
		4.27	• 학생 농산물 꾸러미 지원 현장방문(충북 청주)
		5.8	• 코로나19 대응 학교 현장방문(서울 중경고)
		5.18	• 코로나19 관련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 준비상황 현장점검(전남 담양고)
		5.22	• 고3 등교 현장 방문(서울 덕성여고)
		5.25	• 1단계 등교수업에 따른 학교방역 현장점검(서울 한강중)
		5.26	• 유치원 등원 개학 현장점검(충남 아산 배방유치원)
		6.4	• 고교 등교수업 현장방문(청주 오송고)
		6.11	•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방역현장방문(서울 경인초)
		6.29	• 초등 등교수업 및 학교방역 관련 현장방문(대전 대덕초)
시도교육청	1	2.25	• 대구광역시 교육청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현장 상황점검
협력기관	4	4.7	• 온라인 개학 준비 관련 협력기관 점검(EBS)
		4.8	• 원격수업 협력 상황 및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EBS 본사)
		4.22	• EBS 상황실 현장점검
		4.27	• 온라인 개학 지원 관련 현장방문(KERIS 원격교육상황실)

자료: 김창환(2020), 2020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현황 분석, pp.224~247. 참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집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자료를 살펴보면(표 참조), 교육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우려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주로 등교, 대면수업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들이 민원을 통해 제기되었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언론 브리핑이나 부총리 및 차관이 직접 언론에 출연하여 학사 일정에 대한 설명, 대면 수업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교에 대한 찬반 의견, 대면 수업에 대한 찬반의견 등 이해관계가 다른 민원들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 및 온라인 교육 진행

과 관련한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기관, 교사 및 학부모, 학생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소통 노력들은 상황에 따라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이었던 측면도 없지 않았다.

【 교육부의 코로나19 관련 민원발생 현황 】

민원	민원 내용	출처
초중고등학교 등교개학 시기 연기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코로나19로 연기된 초중고등학교 등교개학 시기가 5.4 발표되자, 감염 확산을 우려하여 등교개학 시기를 더 연기해야 한다는 민원 발생</li><li>* 5.13부터 고3 등교를 시작으로 학교·학년별 등교개학 시기 발표(5.4)</li><li>서울 소재 클럽 관련 감염확산으로 등교개학 시기 1주 순연 발표(5.11)</li><li>▶ ‘코로나19 관련 개학’ 민원은 1.27 처음 발생, 5월까지 총 5,188건</li></ul>	국민의 소리 제567호
대면강의 전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천 ○○대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진행된 온라인 강의를 대면 강의로 전환하자,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대면 강의를 하는 것에 반대</li><li>▶ 대면강의로 전환하자는 민원은 5.5 처음 발생하여 5월까지 총 300건(일 평균 17.6건)</li></ul>	국민의 소리 제568호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코로나19로 인해 대학 개강이 늦춰지고 강의 일수가 축소되자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개강과 강의일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등록금의 환불을 요구</li><li>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하는 등 정상적인 강의를 진행되지 않아 6.15. 처음으로 ○○대학이 2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의 등록금 환불에 나서자, 다른 대학 학생들도 등록금의 환불 요구</li><li>▶ 3월부터 현재까지 ‘등록금 환불’ 민원은 총 1,423건 접수(일 평균 10.7건)</li></ul>	국민의소리 제569호
맞벌이 학부모 입장 반영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일부 학부모의 민원으로 초등학교 등교일수가 감소되었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맞벌이를 포함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더 많은 등교일수를 원하지 않을까요?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재설문조사를 해주세요. (6.17 ○○교육청)</li></ul>	국민의 소리 제573호
긴급돌봄 운영 불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6월부터 초등학교 긴급돌봄을 이용합니다. 9시부터 13시까지 긴급돌봄을 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안내와 다르게 오전 11시 30분에 식사하고 개별 하교를 하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6.18 ○○교육청)</li></ul>	국민의소리 제573호
대면시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최근 대전·충남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중인데, 대학교에서는 전공을 대면 시험으로 본다고 합니다. 교양과목 시험은 비대면인데 전공과목만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6.23 교육부)</li></ul>	국민의소리 제574호
교육행정공무원 시험 사전점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교육행정 공무원시험을 본 수험생입니다. 코로나로 시험일정도 연기되었는데, 수험생을 배려해서 필기시험 사전 점수라도 좀 일찍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6.24, 경기교육청)</li></ul>	국민의소리 제574호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제567호~제608호 참조하여 재구성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기간(8.23~11.18)

브리핑 및 교육관계자 간담회

코로나19 1차 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유행이 시작한 이후에도 교육부는 브리핑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급한 교육현안에 대한 진단 및 대응책을 발표하는 등 위기소통 체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총 13차례에 걸쳐서 정례 브리핑과 사안별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내용에 따른 현황 브리핑 구분 】

번호	일자	제 목	주요 내용
1	8.25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2학기 학사운영 관련 공동브리핑	수도권 유초중고·특수학교 9월11일까지 원격수업 전환
2	8.27	등교수업 준비지원단 회의 결과 온라인 백브리핑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돌봄 필요 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교실 학생 대상 급식 제공, 고3 대상 매일등교 지침은 학생부 기재 마감 및 수시 원서접수 이후 1/3 이하 규모 유지하며 학교 자율결정 방침 예정
3	9.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돌봄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	가족돌봄휴가 연장·현장체험학습 인정 일수 확대 추진(입법 지원), 휴원·휴교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추가 지원
4	9.3	출입기자단 백브리핑	9월 3일 등교수업 현황, 2학기 대학 개강 및 수업운영 현황 등
5	9.4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교·학원 조치현황 브리핑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으로 비수도권 학교 밀집도 최소화, 대형학원 집합금지,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단 고등학교는 1/3 내 등교 가능, 수도권 학원, 독서실 집합금지 및 교습소 집합 제한
6	9.4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백브리핑	유초중등 등교수업 조정 현황,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대학 비대면 수업 및 대학 확진자 발생 현황, 2학기 유초중고생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계획
7	9.17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백브리핑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상황 및 중대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 방침, 등교수업 현황 및 학생 확진자 현황, 초중고 인플루엔자 집중예방접종 기간 지정
8	9.24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백브리핑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및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추석 이후 방역당국과 협의해 학사운영 방식, 대학 수업 운영 현황 (전면 비대면 수업 대학 감소)

번호	일자	제 목	주요 내용
9	9.28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 공동 브리핑	수능 관리계획 및 대학별평가 지원계획, 수능 시험실 관리·감독 인력 확충, 수능 1주 전 고교 원격수업 전면 전환, 대학별평가 격리수험생 정보 상황관리체계 운영
10	10.8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백브리핑	등교수업 관련 현황 및 대학 관련 현황,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 운영방안
11	10.22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백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등교 현황 및 학생 확진자 현황 발표
12	10.29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백브리핑	코로나19 관련 등교수업 및 대학 현황, 학원 및 교습소의 코로나19 예방활동 강화(학원 강사의 자가진단 앱 적극 활용, 수능 1주일 전 학원·교습소 원격수업 전환)
13	11.5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브리핑	초등돌봄 관련 파업 선언에 대한 교육부 파업 자제 요청, 등교수업 및 대학 관련 현황

자료: 김창환(2020), 2020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현황 분석, pp.248~256. 참고.

또한 교육부는 총 11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러 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학생이 주요 이용자인 학원(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교로의 코로나19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학원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는 2차례에 걸쳐서 학원총연합회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 및 교육 관련 간담회 ]

번호	일자	대상(참석자)	주요 내용
1	8.31	돌봄수요 학부모	자녀 돌봄에 대한 애로사항과 바람 청취를 위한 수도권 학부모 원격 간담회
2	9.1	학원총연합회 회장 및 지회장	학원의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방역조치 방안에 적극적인 동참 요청
3	9.1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유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 및 원격 수업 질 제고,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 협의
4		학원총연합회 회장 및 지회장	학원의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방역조치 방안에 적극적인 동참 요청
5	9.16	방과후학교 강사 노조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협력사항 논의, 방과후학교 강사 생계 지원방안 협의
6	10.4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 기숙사	기숙사 코로나 방역상황 점검 및 추석 명절에 코로나19, 학업으로 고향 방문하지 못한 대학생 격려 및 의견 청취

번호	일자	대상(참석자)	주요 내용
7	10.5	교육부 출입기자단	최근 2년간 주요 정책 추진현황,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중장기 정책과제 설명
8	10.15	교원단체	‘학습과 방역 안전 현장 지원’ 관련 상황 공유 및 현장 의견, 애로사항 청취
9	10.19	특수학교 학부모, 교직원	전면등교로 전환한 특수학교 학사운영 및 방역 지원 위한 학부모, 교직원 의견 청취
10	10.23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	대학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비대면·대면 수업 운영 시 애로사항 등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11	10.2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2021학년도 대학별 평가 운영 간 수험생 보호 및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한 대학, 전문대학과 정부 간 협력방안 논의

자료: 김창환(2020), 2020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현황 분석, pp.247~256. 참고.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현장과의 소통 지속 노력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등교 여부 등 학사 일정과 관련한 이슈 외에도 대면 수업 진행 여부, 원격 수업 진행 등 교육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슈들도 상당수 제기되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 온라인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교사, 학부모가 경험하는 원격 수업에 대한 애로사항 및 향후 학사 일정 및 교육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교육부의 코로나19 관련 민원발생 현황 ]

민원	민원 내용	출처
대면수업 반대	• ○○대는 한 강의실에서 50명 이상이 모여 시험을 보게 했고 이후에도 대면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건의해도 학교 교무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할 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건물에 출입하는 많은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이 큼니다.(10.8 교육부)	국민의 소리 제587호
등교 요청	• 언제까지 일주일에만 한 번만 등교하니까? 온라인 수업은 학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여차피 학원을 다닙니다. 지역 내 확진자가 없거나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적었던 곳은 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10.8 경상남도교육청)	
보습학원 새희망자금 제외 관련	• 보습 학원을 운영합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더니 최근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했는데, 5월 30일 이전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고 제외되는 것은 부당합니다.(10.16 보건복지부)	국민의소리 제588호

민원	민원 내용	출처
스쿨버스 이용관련	• 학교로부터 스쿨버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탑승 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아이들을 2개 조로 자체 편성하였으나, 격주로만 스쿨버스를 이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스쿨버스 거리두기를 위해 감염 위험성이 더 높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10.15 교육부)	국민의소리 제588호
운동장 개방 요청	• 평소 집 근처 중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운동장을 이용하기 힘들어졌는데, 1단계가 되어도 다시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10.19 서울시교육청)	국민의소리 제590호
등교 요청	• 아이들이 코로나로 지금까지 많이 쉬었는데, 투표로 수업일이 주 2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는 최소 주 3일 등교인데, ○○초만 주 2일을 다닌다면 다른 학교 아이들에 비해 수업 진도가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10.22 경기도교육청)	국민의소리 제591호
수행평가 방법 관련	• 고등학교 수업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행평가로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태도나 다른 시험으로 평가해도 될 것을 굳이 연극으로 하고, 이것을 허가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11.2 경기도교육청)	국민의소리 제592호
음악시간 노래 관련	• 요즘 수도권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여러모로 불안한 가운데 학교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반강제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굳이 부를 필요가 없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음악 선생님의 지시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11.3 서울시교육청)	국민의소리 제593호
대학교 실습수업 대면 관련 지침서 여부 문의	• 코로나19 시기 대학교 실습수업의 대면 진행 여부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습과목을 대면으로 하는 대학교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습과목만 대면이고 이론과목은 비대면이 원칙인지, 실습과목은 반씩 대면·비대면으로 하라는 권장이 있었던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1.9 교육부)	
등교방법 변경 요청 (등교 요청)	• 주위의 다른 학교는 대부분 주 2일은 온라인, 주 3일은 등교수업을 하는데,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격주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비중도 높고, 5일 내내 온라인 수업을 하려니 지칩니다. 등교하는 주에 코로나 확산 문제가 발생하면 온라인 수업일수는 더 늘어납니다. 온라인 수업은 질도 떨어지고 집중도 안 되며, 과제나 수업 중 질문 등은 학부모의 몫입니다. 타 학교처럼 2일 온라인, 3일 등교하게 해 주세요.(11.10 서울시교육청)	
학원 제한 조치 요청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했는데, 학원에서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1.2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학생들 사이 간격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11.16 서울시교육청)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제567호~제608호 참조하여 재구성

주요 간담회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현장점검(8.27),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만나기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현장방문(9.11), 대안학교 현장방문 및 방역점검(10.27) 등 총 3차례 실시되었다.

###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후 기간(11.19~12.15)

#### 수능 대비 위기관리 및 현장소통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대학입학시험 관리 중심으로 현장소통이 이루어졌다. 11월 3일에는 코로나19 대응 수험생 보호 및 방역조치를 포함한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11월 26일에 부총리는 2021 수능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수능시험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2회(경주 경주여고(11.19), 춘천 소양고(12.1)) 실시하였고, 수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설, 한파 등 기상악화에 대비한 코로나19 방역 및 병원시험장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교육부 차관은 수능 전(12.1) 서울의 학원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입시학원의 원격수업 전환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였다. 11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고사장(오산고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와 긴장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수능 종료 이후인 12월 4일에 수능 시험장과 대학별고사 방역을 위한 조치사항 관련 브리핑을 통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내용을 공유하였다.

## 주요 성과

#### 위기단계 변화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 관련 메시지 일관성 유지 노력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를 주축으로 범부처 유학생지원단, 시도교육청 공동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원격교육지원단, 고등교육재정위원회,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 학교상황총괄과, 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한 위기소통 담당관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교육 분야에서의 코로나19 위기상황 현장소통을 위한 조직인 재정홍보대책단장 내 언론대응반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돌봄지원, 학원관리 등 다방면에 걸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부 내 소관 대책반·팀 간 소통도 이루어졌다. 실제로 교육부의 언론소통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교육부의 조치사항을 국민에게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팀들 간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며, 브리핑 및 홍보자



로 작성을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이후 대책반을 확대 개편하여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매일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유행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중대본 및 중수본 차원의 대응 지침을 공유하고, 보건당국의 지침에 맞게 교육기관에서의 감염병 예방 교육, 교내 방역 강화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등교 결정, 등교 중지 등 학교 운영 상황을 결정할 때에도 중수본 및 중대본의 조치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부처 간 일관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함으로서, 일례로 2020년 2월말 학교 휴업(휴교)을 결정할 당시에는 복지부 중수본에 인력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며, 중국유학생 및 중국 근로자 입국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범정부적 코로나19 유행 대응 조치들이 교육부 관할 교육 기관에서도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기관과 공유하였다. 마스크 사용법,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을 교육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국유학생 보호관리 방안도 현장에 안내하였다. 그리고 '학생 감염병 예방 매뉴얼'에 따라 학교에서도 각 시군구 관할 보건소와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휴업, 개학 연기 결정을 할 때 협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중앙부처 차원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도 일관성 있는 위기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 현장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의견 수렴

교육부는 교육부 대책반 상황점검회의, 교육기관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 시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 대응 조치에 대한 조치 사항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특히 대응 초기에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현장 상황점검 실시하여 대구 지역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도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치 사항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꾸준히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 기관 뿐 아니라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수능시험 등 시험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해왔다.

현장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뿐 아니라 민간 교육기관과도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던 3월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현장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학원휴원 적극 동참, 학원 휴원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장 방문, 간담회, 온라인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 수렴 기회를 자주 가진 점은 현

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 조치들을 개선하고 주요한 교육 관련 조치 사항들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근거를 제시해 준 것으로 보인다.

###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분야 주요 조치 사항 대국민 소통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과정에서 주요한 조치들이 진행될 때마다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국민들과 공유하였다. 대응초기에는 중국인 유학생 보호 및 관리, 유·초·중등학교 대상 방역 강화 계획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2020년 3월 개학이 다가오는 시점에 코로나19 유행이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2월 말 학기 유·초·중·고 개학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보완사항 후속 조치 계획을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 브리핑에는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 온라인 학습콘텐츠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중국인 유학생 입국대비 집중관리주간 지정 및 특별관리체계 가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음의 표는 교육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의 표에 제시된 것처럼 학사 일정과 관련한 사항 및 유학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 등교 연기와 시기, 등교 수업 지침과 지원 관련 사항, 아동 돌봄에 관한 사항, 수능 관련 조치 등에 대한 브리핑이 이루어졌으며, 범정부적인 방역조치에 따른 교육 영역의 주요 조치 사항에 대한 브리핑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현황('20.1.1~12.31) ]

번호	날짜	주체	제목
1	'20.2.5	부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학사관리 방안 브리핑(15:00)
2	'20.2.16	부총리	유·초·중등학교 개학대비 방역강화계획 및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브리핑(17:00)
3	'20.2.23	부총리	1학기 유초중고 개학연기 및 유학생보호관리 추가 보완사항 후속조치계획 브리핑(17:30)
4	'20.3.2		유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관련 브리핑(16:00)
5	'20.3.17	부총리	유초중고 개학 2주 추가연기 관련 브리핑(14:00)
6	'20.3.24	차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브리핑(10:00)
7	'20.3.31	부총리	신학기 온라인 개학 관련 브리핑(14:00)
8	'20.4.3	차관	제5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15:00)
9	'20.4.7	차관	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15:00)
10	'20.4.9	차관	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15:00)
11	'20.4.10	차관	온라인 개학 결과 온라인 백브리핑(15:00)
12	'20.4.14	차관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15:00)

번호	날짜	주체	제목
13	'20.4.16	차관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15:00)
14	'20.4.21	차관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15:00)
15	'20.4.23	차관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15:00)
16	'20.5.4	부총리	등교 시기 방법 관련 브리핑
17	'20.5.7	차관	등교수업 관련 학교 방역 세부지침 브리핑
18	'20.5.11	차관	등교수업 연기여부 브리핑
19	'20.5.15	차관	제15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15:00)
20	'20.5.21	차관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 결과 브리핑
21	'20.5.22	차관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15:00)
22	'20.5.24	부총리	등교수업 지원 방안 브리핑
23	'20.5.29	차관	등교수업 지침 강화 관련 브리핑
24	'20.6.5	차관	등교수업 관련 회의 결과 브리핑(15:30)
25	'20.6.8	차관	등교수업 준비지원단 회의 관련 브리핑
26	'20.6.10	차관	등교수업 현황 관련 브리핑(15:30)
27	'20.6.16	차관	수도권 지역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 안정화 관련 브리핑(14:40)
28	'20.6.23	차관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15:30)
29	'20.8.11	부총리	포스트코로나 교육 안전망대책 부총리·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브리핑
30	'20.8.25	부총리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2학기 학사운영 관련 공동브리핑(09:00)
31	'20.8.27	차관	등교수업 준비지원단 회의 결과 온라인 백브리핑(14:30, 경향신문)
32	'20.9.2	부총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돌봄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
33	'20.9.3	차관	출입기자단 백브리핑(15:30)
34	'20.9.4	차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교·학원 조치현황 브리핑(15:20)
35	'20.9.4	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백브리핑(15:30)
36	'20.9.17	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백브리핑(15:30)
37	'20.9.24	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백브리핑(15:30)
38	'20.9.28	부총리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 공동 브리핑(14:00)
39	'20.10.8	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백브리핑(15:30, 연합뉴스)
40	'20.10.22	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백브리핑(15:30, 이데일리)
41	'20.10.29	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백브리핑(15:30, 한국일보)
42	'20.11.5	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브리핑(15:30)
43	'20.12.4	부총리	21학년도 수능 종합평가 및 대학별고사 방역조치 브리핑(11:00)

자료: 김창환(2020). 2020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현황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pp.224~259. 참고하여 재구성

언론 브리핑 외에도 언론에 출연하여 교육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언론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코로나19 1차 유행이 확산되고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교육부에서는 2월 23일 전국 유,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연기하는 결정을 하였고, 유행이 지속 확산되자 3월 개학 연기 장기화에 대한 조치가 결정하였다. 이러한 주요 조치 사항은 2월말부터 언론을 활용하여 교육부의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부총리는 2020년 3월 6일 YTN 뉴스특보 코로나19에 출연하여 긴급돌봄 지원방안 및 방역대책, 3주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방향 및 학습공백 대책, 학원 휴원 독려 방안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1차 개학 연기 이후 개학이 2주 추가 연기되자, 교육당국은 언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언론 프로그램에 부총리 및 차관이 직접 출연하여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방침 설명, 학원 휴원 권고 및 학원 지원 방안·방역지원책, 방학중 비근로 교육공무직 대책, 교육비 환불요구 관련 입장 등을 설명하였다. 그 이후 1차 유행이 감소한 5월 교육부는 순차적인 등교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 사항 역시 브리핑 및 언론 출연을 통해 설명하였다. 등교 시기에 대한 설명 외에도 학교내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면서 등교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이후 코로나19 유행 및 확산 현황에 따라 지역별로 등교를 조정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조치들은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언론사별 방송출연, 언론기고 및 브리핑 현황('20.1.1~12.31) ]

구 분	부총리	차 관	계
방송출연	41	21	62
언론기고	4	-	4
계	45	21	66

자료: 김창환(2020). 2020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현황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pp.224~259. 참고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언론 브리핑 및 미디어 출연, 언론 오보 대응뿐 아니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주요 조치사항들을 공유하고 홍보하였다. 또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마련하는 활동을 유관기관과의 협업하여 진행한 점 역시 성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1차 유행이 진행되었던 2월 말부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대응 상황 및 주요 수칙 등 발표자료를 이미지 콘텐츠로 제작하여 실시간 SNS에 게재하는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활동들도 다수 수행하였다. 그리고 개학이 지연되자 온라인 학습 콘텐츠 목록을 정리하고 이용절차를 검토하는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였다. 특히 EBS, KERIS 등 유관기관에서는 학년 별, 교과별 이용방식 및 콘텐츠를 취합하였으며, 방송대 및 사이버 대학의 단기과정(한국어 과정, 한국문화) 중심 콘텐츠 목록을 정리하고 이용절차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 유학생에 대한 대응을 위한 현장과의 소통

코로나19 유행이 팬데믹으로 진행되자 교육부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한 활동들을 강화하였다. 방대본이 코로나19 유행 초기 중국에서의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해온 것과 맞추어 교육부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 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관리 포함 대학 자체계획 및 유학생 관리 현황, 중국 방문자에 대한 기숙사 수용 계획 등을 점검하였으며, 중국입국 초·중등학생·교직원 보호조치 실태, 방역물품 구비현황 및 추가 충당계획 등에 대한 학교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이 1천 명 이상인 주요 대학 17개교에 직접 교육부 직원을 파견하는 등 교육부와 유학생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대학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과 더불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유학생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다.

## 민간자원 활용 도모

교육부의 코로나19 유행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민간 자원 역시 활발하게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감염학회 등의 자문을 얻어 학교 방역을 강화하였으며, 학교 개학연기 필요성 등 학사 일정 관련 주요 조치 사항을 결정할 때에도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민간 전문가들 외에도 원격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에듀테크산업협회 등 민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 콘텐츠 및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 8

## 국제협력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유학생 관리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로 다루어졌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면서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에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정책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과 교육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는 맥락에서 국제협력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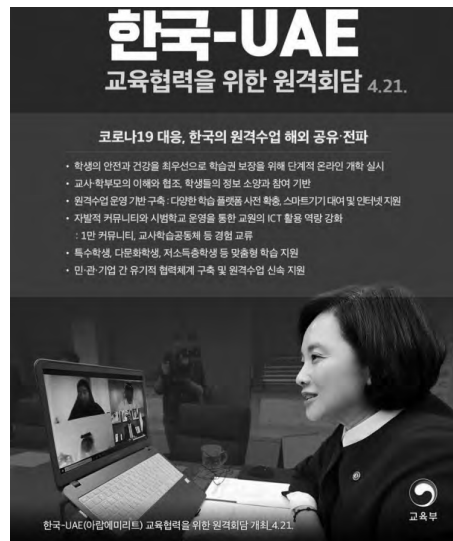
## 대응 시기별 주요 조치사항

### 1.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기간(1.20~8.22)

#### 양자간 협력을 통한 상호간의 코로나19 대응능력 향상 모색

코로나19 사태 직후 가장 먼저 교육부는 중국 교육부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각국의 유학생 보호를 위해 상호간의 입국을 자제하고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사항 참조). 대략 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대학에서 유학중인 한국 학생 대부분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중국 대학의 학사일정(개학)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해야 하고, 반대로 중국 유학생이 국내 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라 국내로 입국하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중 양국 교육부는 긴급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각국 학생 출국 자제 권고라는 합의사항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교육부 장관과의 원격회담(04.21),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면담(04.27), 주한중국대사 면담(05.11)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원격수업 경험, 온라인 개학 조치 및 준비현황, 등교개학을 위한 준비상황 및 전략 등을 공유하고 향후 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UAE 교육협력력을 위한 원격회담

바일 데이터) 지원을 통한 원격수업 운영 기반 구축, 수업 유형별 출석인정 및 평가관리 지침 제시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 공유 등 양국 간 교육협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동 회의를 통해 UAE 측에서 한국과 UAE 교사들이 직접 화상으로 만나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여 실무협의를 통한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등교수업 재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참고하기 위하여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4월 27일 대사와의 전화면담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 교육부의 온라인 수업 조치현황 및 향후 등교개학을 위한 전략 등을 공유하였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심각해지던 7월 3일에는 양국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양국 교육장관 간의 원격회담이 이루어졌다.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루어진 부총리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와의 면담은 지난 2월 28일 양국 교육부 간의 원격회담에 이어 양국의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는 자리였다. 싱하이밍 대사는 온라인 개학을 포함한 한국 측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한편, 지난 2월 28일 양국이 합의한

UAE의 '후세인 이브라임 알 하마디'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우수한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에서 원격교육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있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부총리는 4월 21일 원격회담을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 상황, 원격수업 정상화를 가져온 요인, 원격수업을 위한 출결 및 평가방법에 대한 후세인 장관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특히 부총리는 학교 현장과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장 교사·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학생들의 높은 정보기기 활용 능력과 적극적인 참여, 다양한 학습기반(플랫폼) 사전 확충,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통신비(모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와 관련해 “한국 교육부가 중국 유학생에 대해 입국 전부터 단계별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 마련

유네스코는 유엔의 교육 전문기구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의 학교교육 중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교육권을 수호하고 교육 취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 및 재정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해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 플랫폼'에 참여하여 한국 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고 각국의 교육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현황을 확인하였다.

유네스코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학교 폐쇄'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3월 10일 '코로나19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유네스코 교육장관 화상회의'(COVID-19 and Education Virtual Ministerial Meeting)는 전 세계적으로 학습의 중단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의 교육 수장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였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SDG4-교육2030 운영위원회'<sup>1)</sup> 아태지역 대표 위원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여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공유하고, 한국 정부가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3주간 전국적인 휴교 조치를 내리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함께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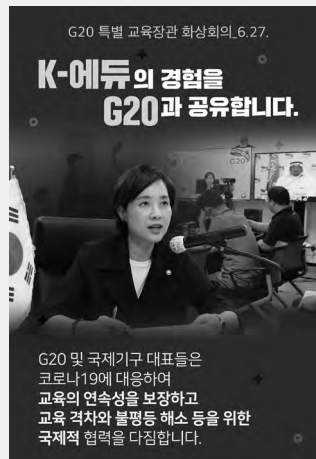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학교교육 중단과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점검해온 유네스코는 '코로나19 대응 웨비나'(Webinars on COVID-19 education response)(3월 20일부터 매주 1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등교 재개 준비와 관련한 절차 및 국가별 사례를 공유하는 제6차 웨비나에서 교육부는 등교 개학의 연기에 따라 한국 정부가 온라인 학습 플랫폼 및 콘텐츠 확충과 교사의 ICT 역량 증진 등 온라인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침을 효과적으로 설명했다.

7월 10일에는 유네스코 방콕사무소가 주최한 아태지역 온라인 국제컨퍼런스('공평한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를 통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준비 과정, 원격수업 운영 및 지원현황, 단계별 등교개학 준비 과정을 발표하고, 아태지역 내의 국제협력 요청에도 적극 대응하였다.

<sup>1</sup> SDG4-교육2030 운영위원회는 교육2030에 관한 전략, 조정,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고위급 글로벌 메커니즘이다. 운영위원회는 회원국, 국제기구, NGOs 등 총 44개 대표로 구성되며 6개 지역별 4개국을 선출하고 SDG4의 이행, 모니터링, 검토 등에 기여한다. 아태지역 위원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운영위원이며, 연임하여 현재 임기는 2021년 12월까지이다. 교육부는 SDG4-교육2030 국가조정관으로서 교육2030의 국내이행 체계 수립 및 이행 과정을 총괄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사무총괄기관(focal point)으로 지정(2017)하고 교육2030 운영위원의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OECD와 G20 등을 통해서도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국제협력이 이루어졌다. 5월 6일 개최된 'OECD 코로나19 대응 회원국 화상회의'에서 참여국은 한국, 뉴질랜드, 영국 3개국 대표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각국의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한국의 온라인 개학 현황 및 등교 수업 준비'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6월 10일~11일 개최된 'OECD 교육정책실행 프로젝트 원격회의'에서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장단기 교육정책 실행 경험 및 도전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OECD 회원국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및 정책을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회의 중 우리나라에서 공유한 코로나19 대응,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 활용, 자발적 교사 공동체 구축 등의 사례는 이후 OECD 보고서<sup>2)</sup>에 담겨 전 세계에 소개되었다.



교육부장관 G20 특별 교육장관회의 참석

6월 27일 부총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G20 특별 교육장관 회의에 참여하였다. G20 및 초청국은 각국의 교육 분야에서 나타난 코로나19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사례 및 정책을 공유하였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중단, 교육 불평등 문제 대응 및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중단 없는 교육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온라인 개학 및 등교수업 경험을 공유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미래교육에 대비하고 있는 준비 상황도 설명하였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교육 정책 홍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해외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돌봄 서비스, 온라인 개학, 학교방역 조치, 등교 준비 등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교육정책과 경험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이에 교육부는 해

<sup>2)</sup> OECD 보고서(Education responses to COVID-19 : Implementing a way forward / [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responses-to-covid-19-implementing-a-way-forward\\_8e95f977-en](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responses-to-covid-19-implementing-a-way-forward_8e95f977-en)

당 정부 및 지자체에 관련 정책 자료를 전달하였다. 또한, 6월 초 한국의 온라인 개학 관련 영문 자료집 (Responding to COVID-19-ONLINE CLASSES IN KOREA)을 제작하여 해외에 배포하는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교육정책에 대한 각종 자료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였다.

4월 22일에 진행된 'K방역 국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방역('K방역') 경험 공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2개 관계부처와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 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신설되었다.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에서는 3개월간 정례적으로 'K-방역 주제별 웹세미나(webinar)'를 개최하였고, 제8차 회의(7.1)<sup>3)</sup>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교육' 주제를 다루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개학 과정에 대해 발표하였다.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기간(8.23~11.18)

###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 마련

6월 27일에 열렸던 '2020년 G20 특별 교육장관회의'의 연장선상으로 9월 5일 '2020년 G20 교육장관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는 '미래 위기 대응 및 교육의 지속성 보장', '유아교육의 접근성 향상', '교육국제화 증진'의 3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 국제협력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포용적 교육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교육안전망 강화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외국인 유학생 입국단계별 지원 정책 등을 설명하였고,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 등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도 공유하였다.



교육부장관 G20 교육장관회의 참석

<sup>3)</sup>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http://ww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복지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파스티르연구소, 씨젠이 참여하고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연구재단이 행사 개최 지원

유네스코와 영국, 가나, 노르웨이 정부는 ‘2020 세계교육회의<sup>4)</sup> 특별회의 전문가회의<sup>5)</sup>(Education Post-COVID-19: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Global Education Meeting)(10.20)와 ‘2020 세계교육회의 특별회의 고위급회의<sup>6)</sup>(High level segment of the Global Education Meeting)(10.22)를 개최했다. 고위급회의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60여 개국 교육부 장·차관을 비롯하여 고든 브라운(전 영국 총리), 제프리 삭스(컬럼비아대 석좌교수), 안젤리나 졸리(배우) 등 각계 인사를 비롯해 WHO, OECD, UNICEF, World Bank 등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 투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다짐’(Reimagine and re-commit to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교육 회복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우선 조치에 다 함께 동의한다는 취지의 「GEM 2020 선언문」(2020 GEM Declaration)을 채택했다. 교육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GEM 2020 선언문」 보완 및 최종 선언문 채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2020 세계교육회의 특별회의 고위급회의(10.22)

“디스인포데믹에 저항하다”라는 주제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에서 5일간 개최된 G-MIL<sup>7)</sup> 주간 대표회의에서는 평등, 민주주의, 인공지능, 코로나19 등 국제적인 이슈 관련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부총리는 주간 대표회의 환영사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 증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 시키고 있기에 미디어

어와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은 선택 사항이 아닌 모든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은 유네스코와 함께 한 70년 동안의 동반관계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4 유엔은 SDGs 점진 이행을 위해 매년 고위급회의(HLPF)를 개최하고, 4년 주기로 SDG4(교육)를 점검한다. 세계교육회의(GEM: Global Education Meeting)는 SDG4 점검회의 직전 연도(4년 주기)에 열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2020 GEM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GEM 1차 회의는 2018년 12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바 있다.

5 UNESCO: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Global Education Meeting (2020 GEM)

6 UNESCO: Global Education Meeting (2020 G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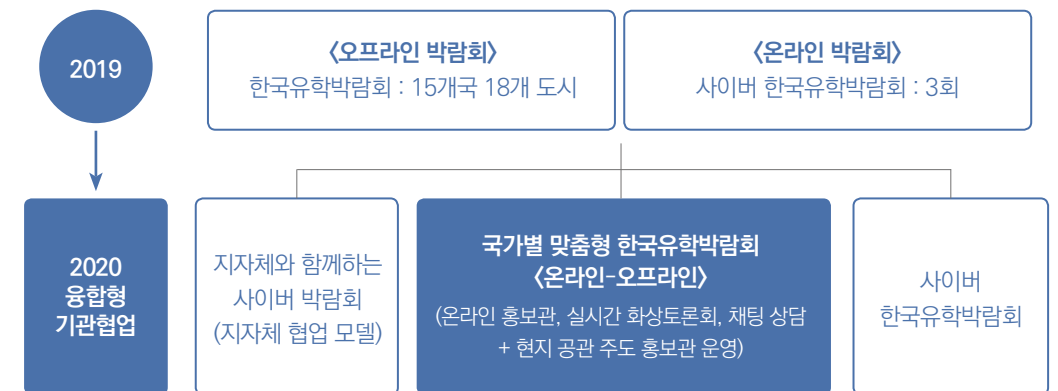
7 매년 10월 마지막 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Global Media & Information Literacy, G-MIL) 주간이다. G-MIL 주간에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주관국가에서 대표회의 및 청년포럼을 개최하여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련 연구와 모범사례, 교육 프로그램, 정책 등을 발표하게 되는데, 2020년에는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MIL 주간 주최국을 맡아 더욱 의미가 있었다.

10월 26일 개최된 ‘OECD 교육정책개혁대화 온라인 회의’에서 교육부는 ‘한국의 교사와 학교 지도자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 발표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선도하는 초·중·고 교사 공동체인 1만 커뮤니티와 지식센터 등 자발적 교사 공동체를 통한 원격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사 간 동료학습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 한국의 교육 정책을 소개하였다.

###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가적 노력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세계 곳곳을 찾아가 한국유학을 홍보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는 ‘한국유학 박람회(STUDY IN KOREA FAIR)<sup>8)</sup>’가 2020년에는 국내와 해외를 잇는 실시간 온·오프 박람회로 10월 20일(화)부터 11월 7일(토)까지 국가별 맞춤형 형태로 약 3주간 열렸다. 개최 대상 국가는 한국유학 수요가 높고, 코로나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몽골·베트남·대만’ 3개국이었다. 박람회에서는 64개 참가 대학별 특성을 담은 가상 홍보관을 마련하고 현지 시간에 맞춘 실시간 설명회 및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비대면·온라인 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공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지 교육기관 내에 한국유학 홍보관을 설치·운영하는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했다.

[ 2020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운영 방식 변화 ]



자료: e-대학저널 ‘코로나로 막힌 ‘유학생 유치’ 온라인으로...아시아 3개국 유학박람회 개최’(20.10.20) 재인용

8 ‘한국유학박람회’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2001년부터 해외 현지를 직접 방문(연 17회 내외)하는 방식으로 개최

아래의 표는 몽골, 베트남, 대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한국유학박람회 일정과 내용을 각각 보여준다.

[ 한국유학박람회 오프라인 현지 운영 일정 ]

개최지 (참가대학)	운영 기간 및 방법		주요 내용
	온라인 박람회 (채팅상담 진행)	현지 오프라인 홍보 (대학별 설명회, 실시간 화상상담)	
몽골 (50개교)	10.20 ~ 10.24	10.23 ~ 10.24 울란바타르 홍보관 4곳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li> <li>• 몽골국립대 도서관 전관 유학박람회 운영 허브</li> </ul>
베트남 (55개교)	10.27 ~ 10.31	10.20 ~ 10.24 호치민 홍보관 1곳 부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치민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베트남 전역 홍보</li> <li>• 호치민 재정경제대학교 오프라인 홍보 거점 센터</li> </ul>
대만 (54개교)	11.03 ~ 11.07	10.20 ~ 10.24 타이베이 현지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타이베이대표부 협조</li> <li>• 대만현지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현지 홍보</li> </ul>

주: 교육부 보도자료 '코로나 시대, 한국유학 홍보의 새로운 길을 찾는다'(20.10.19)

###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후 기간(11.19~12.15)

#### ☞ 양자 간 국내 정책 정보 공유 지속

4월 27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와의 전화면담, 7월 3일 양국 정상간 통화에 이어 11월 17일에는 아르헨티나 니콜라스 트로타(Nicolas trotta)교육부 장관의 요청으로 부총리와 트로타 장관과의 원격회담이 이루어졌다.



한·아르헨티나 교육부장관 원격회담(11.17)

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실시한 우리의 경험 및 관련 정보(학교급·학년별 순차적 등교, 자율적·탄력적 학사운영 기반 등교수업 등), 학교방역과 관련된 정책 정보(교육 현장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방역 지원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역체계 구축 등)를 공유하였다. 이어 부총리와 트로타 장관은 양 국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자 협력 지속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상황을 우려하며, 4차례 추경을 통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지속한 한국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한 유네스코의 사례공유 요청에 따라 12월 2일에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교육재정 관련 웨비나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교육 재정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유네스코 코로나19 대응 톨킷, OECD COVID-19 보고서, G20 교육 국제화 보고서 등 각종 국제 보고서에 한국의 사례가 긍정적으로 언급되었다.

#### ☞ 한국 교육 홍보

12월 10일 열린 '2020 글로벌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의 "교육세션"<sup>9)</sup>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교육방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 참여하여 고등교육·ICT·방송·교육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및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유하였다.

## 주요 성과

#### ☞ 양자 협력을 통한 선제적 유학생 관리 및 보호조치

코로나19 위기관리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예방 대책반」을 확대 재편하여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1월 29일 부총리 주재 대학관계자 긴급회의에서 중국

9 [참조] 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20.12.9)



방문 학생 및 교직원 현황 파악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별 위기 대응 계획을 즉각적으로 수립하였다. 이어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운영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2월 28일 교육부는 중국 교육부와 원격회담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 보호’, ‘양국 유학생 보호를 위한 상호 간 출입국 자제 권고’, ‘학생들의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 3가지 사항을 골자로 하는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2월 28일 18시 이후 즉시 적용)에 합의하였다. 이는 전체 유학생<sup>10)</sup>의 4%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제도적 조치 및 양자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양자간 제도적 지원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낸,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이는 양국이 자국의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국가와 코로나19 상호 공동 대응을 한 국제협력의 사례로서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유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침이 될 것이다. 둘째, 감염병이 심각해지는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선제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하여 지속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합의 이후 양국 정부가 국장급 유선회담을 통해 일반적으로 한두 달이 걸릴 사안을 일주일 만에 온라인을 통해 즉각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는 ‘온라인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 ◆ 한국 온라인 교육성과 공유

교육부는 4월 27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와의 전화면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육부의 온라인 수업 조치 현황 및 향후 등교개학을 위한 전략 등을 공유했다.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심각해지던 7월 3일에는 양국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11월 17일 양국 교육장관의 원격회담을 진행하는 등 2020년 한 해 동안 양국 간에 지속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 대(對)아르헨티나 외교에 기여한 사례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는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루어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2월 28일 양국 교육부간 회담에 이어 이루어진 면담은 교육부의 유학생 지원과 관리의 지속성을 확인하고 상호간 협력과 공조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의 교육부 장관인 ‘후세인 이브라힘 알 하마디’(Hussain Ibrahim Al Hammadi)의 요청으로 4월 21일 개최된 양국간 원격회담은 상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동

<sup>10</sup> 유학생 현황: 전체 유학생은 160,165명으로, 이 중 중국 유학생은 71,067명(44.4%, '19. 4. 1 정보공시 기준)이며, '19년 12월 1일~'20년 2월 14일 사이 중국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은 총 19,742명\*으로 확인(법무부)

<sup>11</sup>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생 전략, 교육부 국제협력관(최은희) ('20. 6. 17)

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류의 가능성을 확장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회담에서 후세인 장관은 “한국의 원격교육 현황을 이해하게 되고 향후 자국의 원격교육 운영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관회의를 통해 제안된 ‘한-UAE 교사 화상회의’를 통해, 실제 양국의 교사가 교육 현장 경험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등 정부차원의 협력이 교육현장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한국 교육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해외로 전파되면서 원격회담 요청도 이어졌다. 유은혜 부총리는 아르헨티나 니콜라스 트로타(Nicolas trotta) 교육부 장관의 요청으로 11월 17일 원격회담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등교수업 및 방역 관련 정책 정보를 공유했다. 또 부총리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다 강화된 한국의 심리방역 체계도 소개했다. 이번 원격회담에서 트로타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 특히 민간기업과의 협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양국의 교육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에듀테크 기업 등과 협업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한 사례와 하나의 플랫폼에서 출석·수업·평가가 가능한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 유네스코를 통한 교육위기 공동대응 및 글로벌 연대 동참

‘유네스코 교육장관 화상회의(COVID-19 and Education Virtual Ministerial Meeting-3.10)’, ‘코로나19 대응 웨비나(3.20부터 주 1회)’, ‘아태지역 온라인 국제컨퍼런스(7.10)’, ‘2020 세계교육회의 특별회의 전문가회의(10.20)’, ‘2020 세계교육회의 특별회의 고위급회의(10.22)’ 등 전 세계 회원국들이 유네스코를 통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대응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육부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 교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2020 세계교육회의 특별회의 전문가회의(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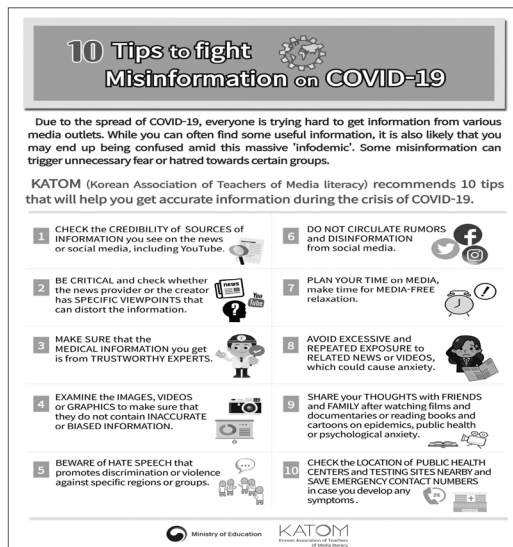




유네스코 코로나19 대응 툴킷(전체 표지)



유네스코 코로나19 대응 툴킷(우리나라 언급 부분)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백신 10가지

유네스코는 지속적인 회의와 아울러 맥킨지 컨설팅과 함께 국제교육연합(Global Education Coalition) 체제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가별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각 회원국에 요청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동 연구는 코로나19 교육 대응 프레임워크, 국가별 사례,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 전술적 조치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여 '유네스코 코로나19 대응 툴킷'으로 제공되었으며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해당 '툴킷'의 국가별 우수사례 및 안전한 학교 개학 방식과 교육재개 방안에 한국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한국 교육의 코로나19 대처 방식 특징이 함께 언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K-방역이 여러 나라의 호평을 얻었는데,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모의훈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등교 재개를 결정한 사례는 여러 나라들의 등교재개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교육부가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회(KATOM)와 공동으로 제작한 코로나19 관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코로나19를 이겨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백신 10가지') 영문판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3월 24일 유네스코 본부에 전달했다. 동 콘텐츠는 유네스코 본부와 지역사무소의 SNS 및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온라인 플랫폼<sup>12)</sup>을 통해 배포되어 유네스코와 각국 교육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수한 교육 콘텐츠의 공유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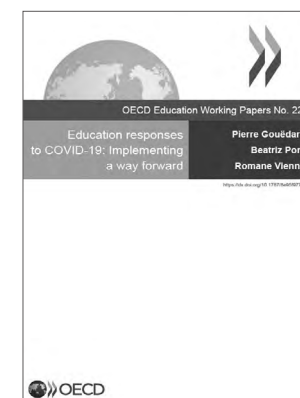
원격교육을 포함하여 비대면 방식이 주된 소통 방식이 된 사회에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우리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주최국으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개최된 글로벌 미

디어정보 리터러시(Global Media & Information Literacy, G-MIL) 주간 대표회의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이고 수평적인 협업을 장려하는 '서울선언문'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주간 대표회의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총 85개국 623명이 참가하여 18년 및 19년 대비 2배 이상의 인원이 참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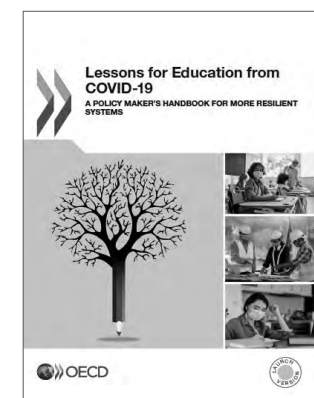
## OECD 관련 네트워크 및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실무논의 활성화

5월 6일 개최된 'OECD 코로나19 대응 회원국 화상회의'를 통해 교육부는 '한국의 온라인 개학 현황 및 등교수업 준비' 등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OECD 회원국들은 한국의 대응 사례에 대해 "범정부적 접근과 노력, 성숙한 시민의식, 민간 협력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했다"며 체계적인 온라인 수업 및 등교수업 준비 등 한국의 대응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

OECD 교육스킬국 교육정책실행 프로젝트 운영위원회가 개최한 'OECD 교육정책실행 프로젝트 원격회의(6.10~11)'에서는 한국의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비전에 근거한 코로나19 대응, 민간협력을 통한 자원 활용, 자발적 교사 커뮤니티 조직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OECD 교육정책개혁신대화 온라인 회의(10.26)'에서 소개된 '한국의 교사와 학교 지도자 역량 강화 방안'과 함께 OECD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아 OECD 보고서<sup>13)</sup>에 해당 내용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 회의에서 교육부는 온라인 교육을 선도하는 1만 명



OECD 보고서  
(Education responses to COVID-19 : Implementing a way forward)



OECD 보고서  
(Lessons for Education from COVID-19, A Policy Maker's Handbook for more Resilient Systems)

<sup>13</sup> OECD 보고서(Lessons for Education from COVID-19, A Policy Maker's Handbook for more Resilient Systems) / [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lessons-for-education-from-covid-19\\_0a530888-en](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lessons-for-education-from-covid-19_0a530888-en)

<sup>12</sup> <https://unesco.sharepoint.com/sites/natcom/en-US/Pages/default.aspx>

의 초·중·고 교사 공동체 구축과 지식센터를 통해 이루어진 원격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사 간 동료학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실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토의에 참여했다.

이처럼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관련 네트워크와 프로젝트를 통해 OECD 회원국 간 다자 협력을 확대하고, 원격 시스템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차원에서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지속한 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외협력방식으로 평가된다.

## ◆ G20 교육장관회의를 통한 협력과제 제시 및 공동선언문 채택에 기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월 27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 G20 특별 교육장관회의’<sup>14)</sup>(G20 Extraordinary Education Ministers’ Meeting)에 참석해 중단 없는 교육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과 온라인 개학 및 등교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각국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의 코로나19 영향과 각국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사례 및 국제적

교육협력 방안 논의와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강조한 ‘공동선언문’(G20 Education Ministers’ Statement on COVID-19)을 함께 채택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고 G20 국가와 국제기구가 함께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특별 장관 회의에 초청된 OECD 교육국장은 한국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한국 원격교육의 강점과 교사의 역량이 주효했음을 대외적으로 평가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G20 교육장관회의 제2차 실무 화상회의(7.7~7.8) 등 계속된 논의를 바탕으로, 각국의 교육국제화 정책·전략·프로그램을 소개한 ‘G20 교육국제화 보고서’<sup>15)</sup>에 한국의 정책 및 사업이 15건 수록되어 국제사회에 한국의 국제화 정책을 공유할 수 있었다.



G20 교육국제화보고서  
(G20 Report on Internationalization in Education)

<sup>14</sup> G20 교육장관회의: 2018년 G20 정상회의(의장국 아르헨티나)를 계기로 시작되었고, 2019년 회의(의장국 일본)는 열리지 않아 2020년 회의가 2회째이며 공식 회의는 9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개최되었다.

<sup>15</sup> G20 교육국제화보고서(G20 Report on Internationalization in Education)

9월 5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 G20 교육장관회의’의 경우 ‘미래 위기 대응 및 교육의 지속성 보장’, ‘유아 교육의 접근성 향상’, ‘교육국제화 증진’이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공동 선언문도 채택되는 등, G20 국가가 함께 위기 상황에서 교육중단,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 회의에서 부총리는 G20 국가들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해 교육의 지속성 보장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디지털 기반 친환경 학습 환경 구축, 고등교육 국제협력 및 유학생 지원을 위한 공조라는 ‘3대 과제’를 제안하는 등 이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기까지 주도적으로 논의에 참여했다.

이처럼 G20 국가와의 협력에 있어서 정부 본회의인 교육장관회의는 물론, 단계적으로 진행된 실무 화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응해왔다. 특히 제2차 실무회의에서의 디지털 기기의 유아교육 활용 방안 등 미래지향적인 연구 논의 및 G20 교육장관 화상회의에서 3대 협력 과제 제안 등 코로나19 대응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은 우리정부의 국제사회로의 선제적 기여와 동시에 교육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 ◆ K-교육과 K-방역 해외 활동 공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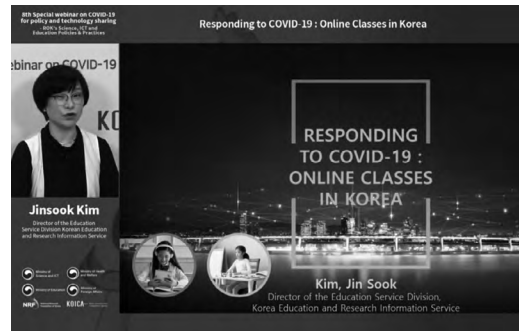
K-교육과 국제 방역협력은 어느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범부처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활동을 통해 교육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가 차원에서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정부의 통합 위기대응에 동참했다. 온라인 개학 관련 자료집(영문) 등 방역 초기 K-교육 사례의 해외 공유는 국제사회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국의 원격교육 모델과 미래교육 혁신에 대해 전 세계와 공유한 ‘K-방역 주제별 웹세미나(webinar)’ 제8차 회의(7.1)<sup>16)</sup>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교육의 차별적 강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웹세미나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웹사이트([www.medicalkoreawebinar.or.kr](http://www.medicalkoreawebinar.or.kr))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 ‘국제방역협력 총괄 TF’라는 하나의 채널을 통해 한국 교육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K-방역에 관한 정책과 기술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정보를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향후 이러한 웹세미나에 참여한 국가들과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적극적인 대외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sup>16</sup>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http://ww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복지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씨젠이 참여하고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연구재단이 행사 개최를 지원하였다.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TF 1차 회의(4.27)



K-방역 제8차 웹세미나(7.1)

둘째로, '한국유학박람회'는 2001년부터 오프라인으로 해외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 왔으나 2020년은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불가한 상황에서 국내외 해외를 잇는 실시간 온오프라인을 결합하는 혼합형(하이브리드) 방식을 시도하여 현지 방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향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64개 참가 대학별 특성을 담은 가상 홍보관을 마련하고 현지 시간에 맞추어 실시간 설명회 및 화상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비대면·온라인 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공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지 교육기관 내에 한국유학 홍보관을 설치·운영하는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졌다.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2020 한국유학박람회'와 관련하여, 김현민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KAFSA) 회장은 "비록 학생들과 직접 현지에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국내외 해외를 온오프라인으로 결합하는 혼합형(하이브리드) 박람회는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교육부 10.19).

셋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개최하는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의 일환으로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한 콘퍼런스(12.10)에서는 고등교육/ICT/방송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우수한 사례와 성

과를 소개하고 향후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및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나라가 현 위기를 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K-EDU의 진로를 모색한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이라는 융합적인 방식으로 한국 교육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국내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현지 공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해외 교육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교육분야 해외 동향 파악

코로나19는 전세계에서 유행하며 각국의 정부와 교육기관에 공통적인 문제들을 촉발했으므로, 주요국에서의 교육분야 대응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한국교육원, 재외공관, 한국학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등교수업 현황, 고등교육기관 운영 현황, 대학입학시험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면, 등교수업과 관련하여 유럽은 4~5월, 싱가포르·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5~6월부터 등교를 재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등교 재개 시기가 세계적인 추세와 유사함을 확인하였고, 등교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도 유럽은 초등 저학년부터, 아시아는 졸업학년부터 등교할 방침임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등교 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대학입학시험 동향 조사결과 예시(12.2) ]

국가/시험명	구분	주요내용
중국 가오카오 (高考)	당해연도 시험여부	- 매년 6월 7일 ~ 8일 실시하나 '20년 대입은 한달 연기하여 7월 7일 ~ 8일 실시
	응시대상별 조치	- (확진자) 병원 시설에서 응시 등 지역별 조치 - (자가격리자·유증상자) 격리 시험장에서 응시
	방역조치	- △ 좌석 간 거리두기 △ 교사장별 3개 이상의 격리교실 운영 △ 격리시험장 감독관은 작업복·의료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착용 △ 마스크·소독제 구비 △ 입실시 전원 발열체크 △ 전체 장소·책상·의자 등 소독
독일 아비투어 (Abitur)	당해연도 시험여부	- 주(州)별 상이한 일정(보통 3~6월)으로 실시 -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거나 일정을 연기하여 실시하는 등 주정부별 결정
	응시대상별 조치	- 본시험 당일 확진자·자가격리자는 응시 불가, 의사 진단서 첨부 시 추가시험에 응시 가능
	방역조치	- △ 좌석간 거리두기 △ 손소독제·손세정제 시험장 비치 등



몽골유학박람회



대만유학박람회



국가/시험명	구 분	주요내용
미국 (SAT)	당해연도 시행여부	- 지역 센터(시험장)별 실시 여부 다름
	응시대상별 조치	- 확진자·자가격리자·유증상자 응시 불가
	방역조치	- △ 마스크 착용 의무 △ 손소독제 비치 △ 거리두기 준수

또한, 다양한 해외 동향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연구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교육정책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였다. 5월에는 주요국의 학교 보건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8월에는 학교수업을 위한 저작권 지침을 검토하였다. 12월에는 코로나19 시대 교육평가 동향을 조사하였다.

양자간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평가

코로나19 상황 초기, 한국의 온라인 개학에 대한 다른 나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자간 국제협력에서는 원격교육(수업)에 대한 정보 공유 사례가 두드러졌다. 이는 한국의 온라인 교육 성과를 확산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그 성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원격회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고, 향후 양국 간 교육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0년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아랍에미리트(UAE)와 아르헨티나 교육부 장관과의 원격 회담을 통해 양국의 원격교육 및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고위급 양자 간 온라인 교류의 모델을 만들었다.

둘째, 주한외국공관 대사들과의 면담은 양국 교육부 간 협력을 위한 주요 사항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의 장을 제공했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상호 간 신뢰 구축에도 기여했다. 대외적인 협력의 창구로서 주한외국공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상호 협력한 것은 국내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며, 이는 교육을 통한 양국 간 우호적인 외교협력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된다.

셋째, 양국 간 원격회담을 통해 온라인 활용 교육 사례를 파악하는 동시에 공동 현안을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멘토링’이 이루어진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UAE의 경우 이번 원격회담에서 쌍방향 플랫폼(Interactive platform)을 활용한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 원격교육의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이에 부총리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 지원 방안과 함께 1:1 방문교육 등 학교와 학생의 실정에 맞는 한국의 다양한 교육 방법 및 지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동 이슈에 관한 ‘멘토링 국제협력’의 효과를 거두었다.

넷째, 양자간 원격회담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상호 간에 후속 협력 제안이 있었으며, 그 뒤 후속 조치가 이어져 양국 간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UAE와는 원격수업에 대한 양국 교사 교류가 제안되어, 7월 29일 ‘한-UAE 교사 화상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상호 원격수업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원격회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 등 온라인 학습 관련 정책의 공유 및 협력을 제안한 바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 교류와 협력은 지속성이 중요하므로 후속 조치 이행 시, 상호 간 교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에 따른 후속 지원 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 양자간 협력 목록(2020) ]

일 자	주요성과	비 고
공 통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장관 아래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 설치	20.3.1 시행
2.28	한국 교육부-중국 교육부 원격회담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	
4.21	부총리·아랍에미리트(UAE) 교육부 장관 원격회담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 참석)  (후속조치) 한-UAE 교사화상회의 실시(7.29)	원격회담 UAE 교육부 장관 요청
4.27	교육부(국제협력관)-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면담	전화면담
5.11	교육부장관-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면담 (관련보도) 연합뉴스,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등 9건	대면회의
11.17	교육부장관-아르헨티나 교육부장관 원격회담 개최 (주아르헨티나대사 참석)  (관련보도) 연합뉴스, KBS 뉴스 등 10건	원격회담

다자간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평가

교육부는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화상회의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대응 사례와 정책을 소개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전 세계 교육 분야의 대응 현황과 도전과제 점검에도 기여했다. 다자협력에서의 주요 성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정부가 ‘2020 세계교육회의 선언문’(2020 GEM Declaration)과 ‘G20 공동선언문’ 채택 과정 등에서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교육 회복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선언문 작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2020 세계교육회의 선언문’ 1차 수정안 논의 시에는, 2015년 우리 정부가 주최한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한 「인천선언」의 주요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재정 확보 관련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등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최한 세계교육포럼의 성과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인천선언」의 이행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교육부는 G20 교육장관회의에서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G20의 공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언을 하고, G20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세계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포용적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 및 협력 방안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국제협력 및 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 2020 세계교육회의 선언문 1차 수정안 ]

초안(9월 18일자)	수정안(10월 15일자) <sup>17)</sup>	비고
유네스코와 영국 정부가 공동주최한	유네스코와 가나·노르웨이·영국 정부가 공동주최한	본 회의 공동주최국 추가 (가나, 노르웨이)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을 증가하거나 유지하고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을 높이거나 유지하고, 최소 GDP의 4~6% 그리고/또는 공공지출의 15~20% 수준을 국제적 벤치마크로 삼는다.	「인천선언」 중 목표 반영 <sup>18)</sup>
공적개발원조(ODA) 중 교육 분야 비중을 2000년대 초반 수준인 15%로 증가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으로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공여국 GNP의 0.7%로 벤치마크 삼아 달성한다. 전체 ODA 중 교육 분야 퍼센티지(%) 비중을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증가한다.	「인천선언」 중 목표 반영 <sup>19)</sup> ODA 중 교육 분야 비중 관련 “15%” 삭제
향후 12개월에 걸쳐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헌신한다.	향후 15개월에 걸쳐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헌신한다.	이행 시기를 15개월로 확대

17 “2020 세계교육회의 특별회의의 전문가회의” 회의록(유네스코한국위원회)

18 “14. (...)우리는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GDP 대비 최소 4~6% 또는/그리고 공공지출 대비 최소 15~20%를 교육에 할당하는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선언」, 2015)

19 “15. (...)우리는 GNP의 0.7%를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에 할당하겠다는 많은 선진국들의 공약을 포함하여, ODA에 대한 모든 공약의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를 아직 이행하지 못한 선진국들에 GNP의 0.7%를 개도국 ODA에 할당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인천선언」, 2015)

둘째,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의 우수 사례는 향후 ‘교육 국제화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OECD 코로나 대응 화상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선 유네스코는 온라인 교육에서의 정보 격차 문제를 글로벌 도전과제로 보고, 상호 자원을 공유하는 국제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것은 OECD ‘교육정책개혁대화’ 등 다양한 사례 공유에서 보듯, 한국의 원격교육체제와 온라인 교사 공동체 구축 사례를 시범화하여 글로벌 도전과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교육국제협력 지원 분야의 전략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와 유네스코 정책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를 비롯하여 코로나19 대응 의제에 관련된 유관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들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즉, 유관기관을 통해 정부의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정보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채널을 통해 다각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관련 교육 분야의 대응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연대를 위해 교육부는 다자협력 기구인 유네스코, OECD 및 G20 등을 활용해 한국 교육의 사례를 공유하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G20 교육장관회의’, ‘유네스코 교육장관회의’, ‘2020 세계교육회의 특별회의 고위급회의’ 등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 전 세계 교육 수장과 국제기구가 함께한 최고의 다자협력 채널이다. 향후 이러한 고위급 정책회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담론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공동의 교육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려는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다자간 협력 목록(2020) ]

일 자	주요성과 및 조치사항	비 고
3.10	유네스코 교육장관 화상회의 참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참석
4.24	UNESCO 웹세미나(6차) 참석/발표	
5.6	OECD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 참석/발표	
6.4	SDG-교육 2030 운영위원회 화상회의 참석/토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주유네스코대표부 참석
6.10~6.11	OECD 교육정책실행 프로젝트 원격회의 참석/토론	
6.27	G20 특별 교육장관회의 참석/발표	
7.7~7.8	G20 제2차 실무회의 참석/발표	
7.10	코로나19 대응 아태지역 국제 온라인 컨퍼런스 참석	

일 자	주요성과 및 조치사항	비 고
9.5	G20 교육장관회의 참석/발표 공동 선언문(G20 Education Ministers' Statement on COVID-19) 채택	
10.12	유네스코 모바일러닝 주간 참석	KERIS 국제협력부장
10.20	2020 세계교육회의 특별회의 전문가회의 참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유네스코대표부 참석
10.22	2020 세계교육회의 특별회의 고위급 회의 참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유네스코대표부 참석
10.26	OECD 교육정책개혁대화 참석/발표	
10.26~ 10.30	2020 글로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주간 회의 공동 개최 (한-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관
12.2	유네스코 코로나19 대응 교육재정 웨비나 참석/발표	

## 9 각종 시험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응시자들에게 접수 취소를 권고하거나 시험 취소, 연기 등의 조치를 취했고, 시험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시험방역관리 지침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보다 체계적인 시험 시행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방역강화 조치에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고 시험 전·후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하였다.

### 대응 시기별 주요 조치사항

#### 1.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기간(1.20~8.22)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불안감이 고조되던 시기인 2월 8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이어지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당초의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응시자 수 최소화를 통해 시험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 신청자들에게 가급적 응시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2월 7일 23시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료를 100% 환불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하였고, 수험생들에게는 문자로 직접 안내하였다. 아울러 응시자 및 감독인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응시자 발열 측정, 손소독제 비치 및 예

비용 마스크 구비, 시험 전후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고사장 내부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시험장 방역관리를 위한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시험 당일에는 전국 295개 모든 시험장에 교육부 및 국립대학 직원을 방역감독관으로 파견하여 방역 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였다.

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수도권 지역 감염확산 등을 고려하여 당초의 5월 23일에서 6월 27일로 연기하였고, 재조정된 시험일 대략 한 달 전(5월 19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하여 응시자들에 협조내용을 안내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험성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제를 요청하였고, 구체적인 기준들을 안내하였다.

예컨대, 응시자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시험 당일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시험일을 기준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지 2주가 경과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응시를 제한하였다. 아울러 방역 지침에 따라 시험장의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 ◆ 독학학위제 시험

2월 23일로 계획된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은 당초의 일정대로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험료를 환불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시험장 방역 준비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였다. 특히 시험장에 파견될 교육부 방역담당관을 대상으로 시험 전 시험실 점검,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 발생 응시자 대응, 시험 종료 후 방역 실시 확인 등 방역관련 업무지침을 교육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응시자의 안전 확보, 지역사회 감염 차단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시험 일정 연기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를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하면서 독학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파하였다. 또한 응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및 이메일 발송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고, 60세 이상의 응시자에게는 추가로 직접 유선통화로 안내하였으며, 시험 당일 시험장별로 감독관 2인이 출근하여 연락을 받지 못한 응시자에게 직접 연기 사실을 안내하였다. 한편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은 6월 14일로 시행일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일정은 3월 6일에 공지되었다. 응시자들이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용품 지참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등)는 응시를 철회하거나 특별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하였다.

5월 24일, 8월 9일로 각각 계획된 2020년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과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도 교양과정(1과정) 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응시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험 응시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시험 전에 응시자들에게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2과정, 3과정 시험은 계획대로 시행되었으며, 시험장은 시험 전후에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다.

## ◆ 검정고시

2020년 제1회 검정고시는 당초 4월 11일에 치러질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개학연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 수험생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시험 주관기관인 17개 시도교육청 및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 협의회를 통해 두 차례(1차: 5월 9일 → 2차: 5월 23일)에 걸쳐 시행 일정이 연기되었다. 시험 주관기관인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응시생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확진자·자가격리자는 응시가 제한되며 건강 취약계층(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미응시 또는 2회차 응시 권장으로 당일 응시생 수를 최소화하고 응시 당일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관리 등이 포함된 응시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한편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관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험장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검토의견을 회신 받아 검정고시 시행 관련 출제·인쇄본부 및 시험장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출제·인쇄본부는 입소 전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입소자와 합숙장소에 대한 감염 예방 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시험 당일 장학사, 행정직, 보건담당공무원 등을 감염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시험장에 파견하고, 감염관리 담당 지정·배치, 외부인 출입통제, 응시자 간격 1.5m 이상 유지 등을 통해 시험장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시험 당일 유증상자의 경우 응시 철회 권고(2회차 응시 유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안정적인 검정고시 시행을 위해 시험 전날인 5월 22일과 시험 당일인 5월 23일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시험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험 당일 시도교육청 총괄본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시험장 운영 및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등 안정적인 검정고시 시행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당초 4월 11일, 12일 양일 간 실시 예정이었던 제69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격상에 따라 제70회 시험일(5월 23일 ~ 24일)로 연기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확진자 지속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국내 시행은 전면 취소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만 3개 지역에서만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정대로 시행하였다.

제69회 시험의 연기 및 취소에 따라 누적된 응시수요 해소를 위해 제70회 시험은 계획대로 시행하였는데

(7월 11일 ~ 12일), 안전한 시험 실시를 위해 시험 전-당일-후 단계별 방역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방역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시험관리인력에 대하여 방역 업무 및 책임을 부여하고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방역 관련 역량을 강화하였고, 응시자에게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의무 사용,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응시 불가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홈페이지, 문자를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였다. 각 지자체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에 시험 시행에 대해 사전 안내하여 시험 당일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시험당일 각 시험장에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 직원을 감염관리감독자로 파견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시험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였다.

###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표집학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시행되는 시험으로 당초 6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집단감염 예방, 표집학교의 학사일정, 수능 관련 고교 원격수업 전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차례 연기(9월 10일 → 11월 25일~26일)하여 시험을 시행하였다.

### 📌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

교육부는 3월 31일 4차 개학연기와 온라인 개학 추진을 발표하면서, 대학 입시 일정 조정안과 수능 시행일 12월 3일로 2주 연기도 함께 발표하였다. 대입 일정 변경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4월 13일에 확정 발표되었다.

6월부터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감염병 전문가 등과의 수능 방역 TF 운영을 통해 안전한 수능시험 실시를 위한 관리방향 마련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관리체계 구축'과 '방역 관리범위 내에서 확진자도 포함하여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최대한 지원'이라는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능 및 대학별 전형 집합평가에서 감염 차단 방안, 수험생 응시기회 지원, 수능 시험실 배치 인원 하향조정,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운영, 대학별전형 운영 관련 자제 대면 요소 진단 및 방역관리대책 수립 권고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하여 8월 4일에 발표하였다.

### 수능 시행을 위한 협업



21학년도 대입관리방향 브리핑(8.4)

- 교육부-질병관리본부-평가원-시도교육청-민간 감염병 전문가 수능 방역 TF 운영(6월)
-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수립: 수능 관리원칙 마련(확진자도 응시, 8월)
-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 수립: 관계기관 공동 추진체계, 수능 시행을 위한 관리 로드맵 확정(9월)
- 교육부-질병관리청 합동 수능 시험장 방역지침 수립(10월)
- 정부 합동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마련(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11월)
  -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교통소통 원활화,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대비, 문답지 등 보안관리
-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방안 수립(11월):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 시도교육청-지자체 즉시 대응체계 구축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기간(8.23~11.18)

### 📌 2021학년도 대입관리

####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 발표

9월 28일에는 종대본, 질병관리청,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만든 '수능관리계획'과 '대학별 평가 지원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시험 준비부터 시행까지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관련 기관들과 방역당국이 긴밀한 공동대응 및 지원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훨씬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한 수능 방역조치 계획을 포함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학사 일정 조정으로 발생 가능한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는 의지도 담았다.

대학별 평가는 대학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방역 지침을 제공하고, 각 대학은 이를 토대로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면 평가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하였다. 특히 자가격리된 수험생이



시험 응시를 위해 지원하는 대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학내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고 전형 관리 인력을 파견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발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모든 수험생의 안전 확보와 응시기회 보호 차원에서 방역관련 안전관리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발표하였다. 해당 방안을 통해 확진·격리 수험생 응시 지원 계획(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 운영, 공동상황반과 현장관리반 운영으로 확진·격리 상황 발생에 대응, 확진·격리 수험생 행동요령)과, 수험생의 감염 및 격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11월 19일 ~ 12월 3일)을 운영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수능 특별 방역기간 동안 학원 및 수험생이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 교습소 같은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학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원 명칭 및 감염경로 등도 공개한다는 지침도 명시하였다. 아울러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실 있는 학사운동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학교내외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도 마련하였다. 등교 및 원격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1,900여개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생안전특별기간(12월 3일 ~ 31일)'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8월 23일 시행 예정이었던 제71회 시험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취소되었으나, 이후 이어진 제72회(10월 17일 ~ 18일), 제73회(11월 14일 ~ 15일) 시험은 자체 방역지침 수립 및 철저한 방역조치 실시를 바탕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하였다. 제70회 시험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지침을 보완하였고, 전 시행기관 담당자 온라인 방역 사전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방역기준을 안내하여 관련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공동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시험장에 방역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방역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대응하며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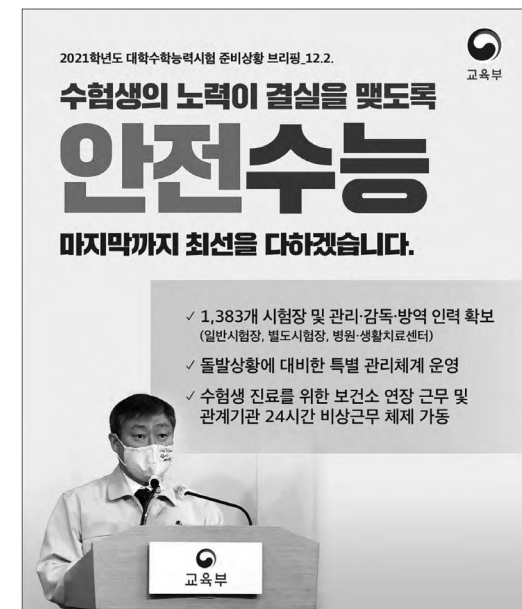
##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후 기간(11.19~12.15)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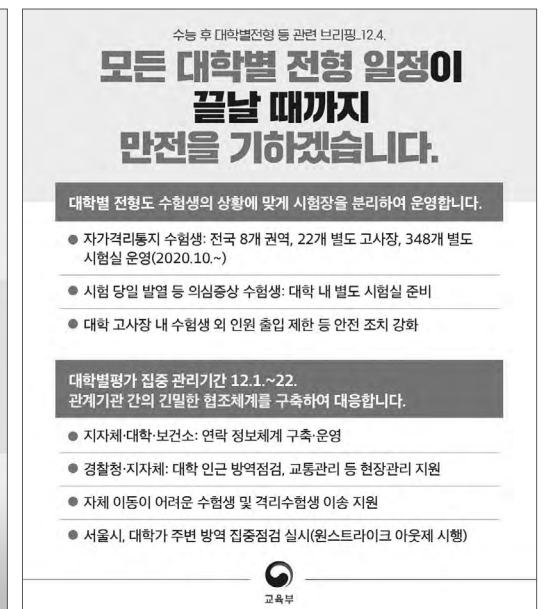
####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방역관리

11월 중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과 2021학년도 수능점검 영상회의를 통해 수능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과 비상 상황 대책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수능시험장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수능시험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수능 시행 일주일 전에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통해 원활한 수능 실시와 수험생들의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국민들이 가정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안전한 수능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첫째, '일반수험생', '격리수험생', '확진수험생'으로 수험생 유형을 구분하고, 수험생 유형별로 시험장을 별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수험 환경을 조성하였다. 둘째, 수험생 유형에 따른 일반 시험장(일반수험생)과 별도 시험장(격리수험생),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확진수험생) 등 총 1,383개의 시험장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198개의 시험장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시험실 또한 1만 여 개를 추가 확보하여 총 3만 1,291개를 설치하였다. 셋째, 시험장 운영 및 방역 관리 등을 위해 관리·감독 인력 역시 전년대비 2만 1천 여 명이 증가된 총 12만 708명을 투입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 브리핑(12.2)



수능 종합평가 및 대학별고사 방역조치 브리핑(12.4)

[ 2021학년도 수능 시험장 및 관리감독 인력 현황(2020.12.2 기준) ]

구분 (학년도)	일반				격리		확진		관리·감독 인력
	시험장	일반 시험실	유증상 시험실	계	시험장	시험실	병원	병상	
2021	1,241	23,373	7,130	30,503	113	583	29	205	120,708
2020	1,185	21,000	-	21,000	-	-	-	-	98,925
증감	56	2,373	7,130	9,503	113	583	29	205	21,783

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상황반을 구성하여 11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수험생 중 확진자 및 격리자 수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험생 시험장 배정 및 이송지원 등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도 마련하였다.

12월 3일 수능 시험 당일 총 421,034명이 응시하였으며, 시험에 응시한 확진자 41명, 자가격리자 456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수능이 종료된 이후 시험장으로 활용된 모든 학교는 12월 6일까지 소독 등 방역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질병청과 협조하여 12월 17일까지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험장을 통한 코로나19 추가 감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수능과 관련한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 대학별 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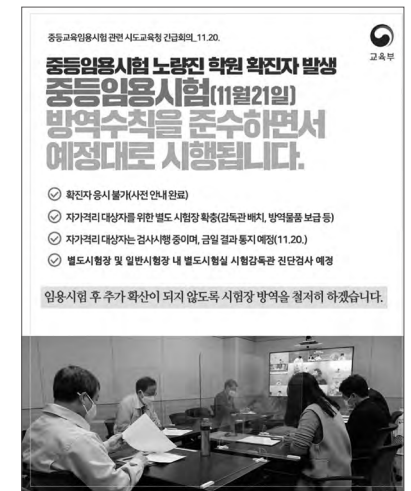
대학별 대면전형에 대비하여 '대학별 평가 집중 관리 기간(12월 1일 ~ 22일)'을 운영하였는데, 대학 차원의 방역조치 강화, 격리수험생을 위한 권역별 격리고사장 운영, 대학 주변의 감염취약요소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별히 수능방역원칙처럼 '수험생의 상황에 맞는 시험장 분리 운영'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대학별 대면전형 관리 방향을 마련하고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시험장 분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22개의 별도 고사장 및 348개의 별도 시험실을 운영하여 자가격리통지 수험생들도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시험 당일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을 대학 내에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중 관리기간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보건소 간에 비상 연락 정보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였으며, 시험 당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험생 입실부터 퇴실까지 전 과정을 고려하여 대학 인근 방역점검, 교통관리 등 현장관리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 중등교사 임용시험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당초 예정대로 11월 21일에 진행하였는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 응시 불가'와 '밀접접촉자(검사대상자)는 자가격리로 분류된 후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라는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시험 감독관을 173명 배치하였고, 별도시험장 내 시험실을 122개 확보하여 약 9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서울 노랑진의 한 대형 임용시험 준비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9명 발생하면서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통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시험 당일에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노랑진 임용고시 학원 방문여부를 조사한 후 방문이 확인된 응시자들은 일반 응시생과의 접촉을 최소화시키면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당일 시험 감독관과 응시생(기간제 교사 등) 중 학교 근무자는 시험 후 전원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여, 시험 이후 학교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 주요 성과

### 각종 시험별 상황에 맞는 신속한 조치 실시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방역에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맞게 각종 시험에 대한 대응 조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시간이 갈수록 대응 역량도 증가했다. 취소된 시험을 제외한, 2020년에 국내에서 시행된 각종 시험으로는 국가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제46회 2월 8일, 제47회 6월 2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독학학위제 시험(1과정 6월 14일, 2과정 5월 24일, 3과정 8월 9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제70회 7월 11일~12일, 제72회 10월 17일~18일, 제73회 11월 14일~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11월 25~26일),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초·중·고·졸 검정고시(5월 23일),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초등)·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11월 2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입학전형자료 제공을 위해 연말에 1회 시행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서 분담하여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취소된 3월 시험을 제외하면 3회(4월 24일, 7월 22일, 10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2회(6월 18일, 9월 16일),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대학별 고사 등 대입 전형과 관련된 시험이 1년 내내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치러졌다.

각종 시험 실시를 위한 대응 체계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상황 초기단계에는 응시자들에게 접수 취소를 권고하거나 시험 취소, 연기 등의 조치를 주로 취했다. 시험을 연기한 경우는 응시 인원 최소화, 분산 등 조치를 취하면서, 코로나19 안정 단계에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 시 일정을 추가 연기하기도 하였다.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4월 23일), 이후에는 시험 시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유관 기관 협조체계 구성, 감염예방 교육·홍보 등 시험 단계별(사전 준비, 당일 및 종료 후, 면접)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 등의 시험방역관리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험 시행이 이루어졌다.

모든 시험에서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거리 유지와 혼잡도 최소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하였지만,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응시 가능 여부나 시험장 당 응시 인원 수, 칸막이 설치 등은 시험별 특수성, 감염병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였다. 시험에 따라서는 관계 기관에서 시험장 방역 조치와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나가거나, 수험생들에게 사전 방역에 관한 안내를 하고 시험 당일까지 감염 여부나 자가격리 조치 상황 등을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한 시험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 ❖ 철저한 사전 준비로 수능시험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대학 입학 전형은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한 시험은 고등학교 수학 기간 중에 이루어져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 내신 평가,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로 논술이나 실기 등을 치르는 대학별고사 등이 있다. 이 중 수능은 2020년 기준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을 합쳐 421,034명이 응시한 최대 규모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3월 31일 대학 입시 일정 조정을 발표하면서 수능을 12월 3일 시행으로 2주 연기하였다. 이후에도 등교 수업이 연기되고 수업 결손에 의한 재학생 시험 준비 미비,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이유로 꾸준히 수능 추가 연기 요구가 있었으나, 추가로 연기할 경우 대입 전형 일정 전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12월 3일 수능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 대학 입시 일정(안) ]

구 분		기 존	변 경
수능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 마감일	8.31(월) / 8.31(월)	8.31(월) / 9.16(수)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 마감일	11.30(월) / 11.30(월)	12.14(월) / 12.14(월)
수능	시행일	11.19(목)	12.3(목)
	성적 통지일	12.9(수)	12.23(수)
수시	원서접수기간	9.7(월)~9.11(금)	9.23(수)~9.29(화)
	합격자 발표	12.15(화)	12.28(월)
정시	원서접수기간	12.26(토)~12.30(수)	1.7(목)~1.11(월)
	합격자 발표	2.1(월)	2.6(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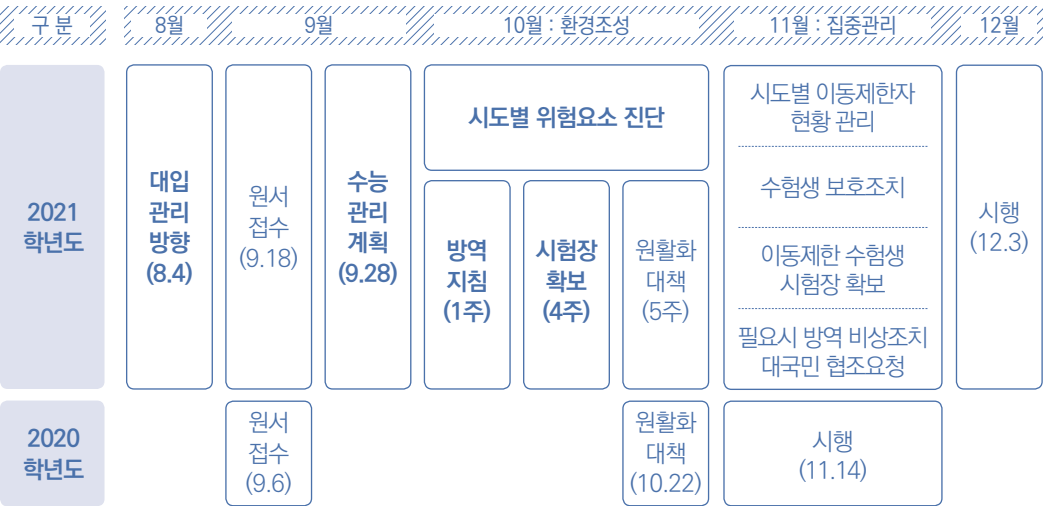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3.31)

수능 시험과 관련된 업무 중 출제나 인쇄, 포장 및 배송, 채점 등의 업무는 6월과 9월 수능모의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었으나, 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대처는 미리 예상하기도 힘든 내용이었어서 교육부, 질병관리청, 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민간 감염병 전문가 등 수능 관계자, 방역 관계자가 함께 다각적 검토를 거쳐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8월 4일에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를 하면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토대로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공표하였다.

9월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12월 3일 수능 시행을 위해 안전한 응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년 대비 일반시험실 4,318개 확충, 유증상자 시험실 7,855개 및 격리자 시험실 759개 신설, 감독·방역 등 관리 인원을 30,410명 증원하고, 선제적인 수험생 보호조치로 고교(고1·고2·고3) 및 시험장 학교는 수능 시행일 1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정부 합동 상황관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요인을 지속 진단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해 시험실 당 배치 인원을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조정하고, 수험생 앞면을 가리는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수능 관리 로드맵 ]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9.28)

시험실 당 배치 인원을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시험장 확보가 필요했는데, 수능 3교시 영어 영역 시험에서는 듣기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추가 시험장 확보를 위해 방송 시설 점검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수험생 앞면만을 가리는 칸막이의 실효성과 시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부정행위 가능성 등, 칸막이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능 시험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추가 시험장을 확보하면서 시험장 방역 조치도 빈틈없이 준비하였다. 칸막이의 경우 시험 진행 과정에서 감독 업무에 방해되지 않고,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시험지를 보거나 넘길 때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제작 및 설치하였다.

10월 16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 수능 관리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시험장 유형을 일반시험장·별도시험장·병원시험장으로 구분하였고, 사전 준비사항, 당일 조치사항,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 등 방역 조치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수험생 및 감독관 마스크 착용 기준 등 관계자 준수사항과 시험장 관리 체크리스트 등을 토대로 수능 시험장 방역 준비에 착수하였다.



시험장 칸막이를 살펴보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또 수험생 유형(무증상/유증상, 자가격리자, 확진자)를 나누어 일반시험장·별도시험장·병원시험장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구분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험생 유형별 시험장 구분 ]

수험생 유형		시험장(시험실)	
무증상	일반 수험생	일반 시험장	일반 시험실
유증상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인 수험생		별도 시험실
자가격리자	격리통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	별도 시험장	
확진자	코로나19로 진단받고(확진자)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	병원/생활치료센터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0.16)

예비소집일(12월 2일)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확진자는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장(일반시험장, 별도시험장, 병원/생활치료센터)별 방역 관리 세부사항도 마련하였다.

[ 시험 단계별 조치사항(일반시험장 기준) ]

단 계	주요사항
사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험 관리체계 구성 및 단계별 대응방안(업무분장) 수립</li><li>•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li><li>• 시험장 소독 및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 이행</li></ul>
당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출입관리 및 유증상자 발생 시 별도시험실 배치</li><li>• 시험장 상황을 고려하여 휴식 시간마다 환기 실시</li><li>• 본인 좌석에서 점심 식사, 식사 후 반드시 환기 실시</li><li>• 별도시험실은 감독관 보호 및 답안지 회수 등 추가 조치</li></ul>
종료 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반시험실과 별도시험실 수험생 간 퇴실 동선 등 관리</li><li>• 시험장 활용 물품 폐기 처리</li><li>• 시험 시행일부터 14일간 코로나19 임상증상 모니터링</li></ul>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0.16)





휴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경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기간을 최초 5주에서 7~8주로 확대하기도 하였다.

### 📌 코로나19 예방대책사업(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집행

코로나19 확산 초기, 학교 현장이 방역마스크, 발열감시용 체온계, 소독제 등 기본적인 학교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지원 수요를 1월 29일, 3월 4일에 각각 파악하였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차(2월 6일) 코로나19 예방 지원 사업 249억여 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5차례에 걸쳐 학교 내 코로나19 예방(등교 수업 이후 방역 포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지원사업으로 총 996억여 원이 집행되었다.

### 📌 대학 지원

####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 추경예산 편성

3월 17일에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대면강의를 실시하기 어려워진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지원하였다. 사업에는 방송통신대학교 일반대학 콘텐츠 지원 1,176백만 원, 원격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53백만 원, K-MOOC 원격수업 지원 인프라 증설 150백만 원 등 총 1,779백만 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되었다.

#### 학자금 지원 대책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1학기 0.2%p, 2학기 0.15%p 추가), 실직·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II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최고 7.8%에서 2.9%로의 전환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 이자 대폭 감면으로 저금리 혜택 지원 등 내용이 대책에 포함되었다.

지원 대책을 통해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에 따른 174억 원(2020년, 2021년 이후 연간 218억 원)의 이자 부담 감소, 실직·폐업자가 받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혜택 약 73억 원,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 연간 약 25억 원, 장기연체자 연체 이자 감면 약 111억 원 등, 2019년 대비 2020년 총 383억 원의 대출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계획 발표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 및 실습 기자재 구매 분야의 투자 지원 등 대학 비대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기본계획(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IV 유형)을 7월 30일 발표하였다. 사업예산은 일반대학에 760억 원, 전문대학에 240억 원, 총 1,000억 원이 책정되었다.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실질적 자구노력으로 학생에게 특별장학금, 통신 및 주거지원비 등을 지급한 대학을 지원하되, 대학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누적적립금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기간(8.23~11.18)

### 📌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 지급

9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중학생 이하 아동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미취학 아동(2014년 1월 ~ 2020년 9월 출생자)과 초등학교 재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휴업 및 원격교육에 시행으로 인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학교 재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은 270만 명, 중학생은 132만 명으로 추산된다.

### 📌 대학 지원

7월 31일에 발표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4년제 일반대학 138개교, 전문대학 99개교, 총 237개교로 확정되었다. 사업 신청 가능한 대학 총 290개교(4년제 일반대학 167개교, 전문대학 123개교) 중 약 82%에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대학은 비대면 수업 지원,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방역 등 각 대학의 상황에 맞게 비대면 교육 환경조성에 지원금을 활용하였다.

대상별 지원

방과후학교강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추진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학교 운영이 중단되어 소득이 감소한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생계안정비용으로 지급하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은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일수·지원대상 가구소득 또는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소득·매출 감소율 또는 무급휴직일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교육 분야 특고·프리랜서의 예시로 제시되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심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당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2019년 12월 ~ 2020년 1월 간 월 5일(2개월 합산 10일) 이상의 노무제공이나, 월 25만원(2개월 합산 5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했는데,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3월부터 수업이 진행되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협업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기준 시점을 2019년 3월 ~ 4월로 조정하여 심사하도록 하였다. 2020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차에 걸쳐 지급되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이 지급되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9월 23일에 발표되었으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별도 추가 신청 없이 50만원 지급,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는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150만원을 일괄 지급하였다.

학원 「새희망자금」 지급 추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유형에 학원이 포함되었다. 특히,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등을 받은 학원·교습소 중 소상공인 관련 세부요건을 충족한 학원·교습소는 피해정도에 따라 100만원 ~ 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주요 성과

신속한 방역물품 구입 지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매년 특별교부금 총액의 10%로 산정되어 태풍, 지진 등 각종 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2020년 특별교부금 예산 규모는 1조 4,997억 원(추경포함)이며, 그 중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1,500억 원이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예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교육부에서는 학교방역 강화를 위해 1월 29일과 3월 4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지원 수요를 적시에 파악하여 총 5차에 걸쳐 총 1,803억 원을 방역마스크, 발열감시용 체온계, 소독제, 의료용 장갑 등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였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특별교부금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시도교육청 자체 사업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에 투자하였다.

[ 2020년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

(단위 : 백만 원)

특별교부금(재난안전관리)		금 액	사용용도
제1차 재난관리	코로나예방 1차(2.6)	24,937	방역물품 구입(마스크, 소독, 의료용 장갑 등)
제2차 재난관리	코로나예방 2차(3.10)	45,871	방역물품 구입(방역용 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제4차 재난관리	코로나 예방 3차(3.26)	118	대구, 경북지역 학교 방역물품 구입(방역용 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및 소독비 지원
제5차 재난관리	코로나 예방 4차(6.30)	21,163	등교 수업 이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방역활동, 생활지도, 분반 운영 실시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사업 인력 지원
제6차 재난관리	코로나 예방 5차(7.6)	7,500	하절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교직원 대상 방역물품(비말차단마스크) 지원
제8차 재난관리	코로나 예방 6차(12.7)	8,719	학교 방역물품(보건용마스크, 체온계, 소독제 등) 구입
계		108,308	

자료: 교육부(2021). 교육부 내부 자료.

📌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주로 방역물품 등 구입을 위해 지원되었다면, 정부 추경을 통해서는 초·중·고 및 고등교육부문 원격교육 지원,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초·중·고 원격교육인프라 구축 및 고등교육 온라인 강의를 위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지원되었다.

[ 2020년 코로나19 교육부 소관 추경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국 고	사 업 명	금 액	사용용도
제1회 추경예산 (3.17)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신규)	31,993	• 휴업 기간 연장에 따른 학부모 부담 완화
제3회 추경예산 (7.3)	초·중·고 온라인 교육인프라 구축(신규)	236,717	• (무선AP 설치) 1,481억 원 • (노후 PC·노트북 교체) 886억 원
	공공 LMS 기능개선(정보화) (신규)	1,500	• 초·중·고 공공 LMS 개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신규)	12,800	• 시범학교 운영(400개교)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신규)	19,785	• (무선AP 설치) 5억 원 • (노후 PC·노트북 교체) 30억 원 • (온라인콘텐츠 활용 교과서시범사업) 44억원 • (친환경 단열재 보강) 119억원
	K-에듀테크 통합 플랫폼 구축(정보화)(신규)	1,000	• K-에듀테크 통합 플랫폼구축 ISP
	초·중·고등학교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신규)	15,680	• (에듀테크 멘토) 2천명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신규)	8,476	• 초·중·고 마스크 추가지원
계		327,951	

자료: 교육부(2021). 교육부 내부 자료.

초·중·고 교육부문에서 교원 노후PC의 최신기종 노트북 등 교체, 모든 일반교실에 기가급 무선망(wifi) 조기 구축 등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지원하였다<sup>20)</sup>.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개학이 진행되고, 개학 이후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이 병행되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초·중·고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은

20 제3회 추경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에 128억 원, ② 초·중·고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2,367억 원, ③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 사업 157억 원을 지원하였다.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교육청 재정 여건상 자체 예산을 통한 투자에는 한계가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급히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정부추경 지원을 통하여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sup>21)</sup>.

고등교육부문의 경우 제1회 추경에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방송통신대학교 일반대학콘텐츠 지원 12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 운영지원센터(KERIS) 지정·운영 4.5억 원, K-MOOC 인프라 증설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다. 제3회 추경에서는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33억 원,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 사업 35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540억 원과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 경감 및 유치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1회 추경을 통하여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320억 원(총사업비는 국고 32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으로 총 640억 원)을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였다. 3, 4월 학부모 부담금을 100% 반환하였고, 소속 교직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3, 4월분 유치원 수업료 결손분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1:1로 50%부담하고 해당 유치원에서 50%부담하도록 하였다.

📌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을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학기 0.2%p, 2학기 0.15%p 추가)하였으며, 실직·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II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 장기 연체자의 연체 이자 대폭 감면 등을 지원하여 2019년 대비 2020년에 총 383억 원 대출 부담을 경감하였다.

교육부는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1,000억 원)하여 새로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IV유형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7월 31일)하고, 지원 대상 237개교(4년제 138개교, 전문대 99개교)를 확정(10월 22일)하였다.

21 학교 무선환경 구축비는 초·중·고 일반교실 19.6만실에 무선 AP 구축비(4) 지원하는 내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07억 원이며, 이 중 1,481억 원은 국고 부담이며, 2,226억 원은 지방비(시도교육청) 부담이다. 학급 노후 기자재 교체는 초·중·고의 5년 초과된 PC(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20여만대 교체 비용으로, 총사업비는 2,215억 원이며, 이 중 886억 원은 국고 부담, 1,329억 원은 지방비(시도교육청) 부담이다.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으로, 누적적립금이 1천억원 미만인 대학
- (지원분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의 투자 지원
- (사업예산)** 1,000억 원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
- (사업기간)** 2020년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20.7.30),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 계획(9월 22일 국회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미취학 아동(2014년 1월 ~ 2020년 9월 출생자)과 초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 시행으로 인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통해 중학교 재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은 270만 명, 중학생은 132만 명으로 추산된다.

### 스마트 기기 및 통신비 지원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원격수업을 기자재를 갖추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다자녀·조손가정·한부모·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기 위한 ‘스마트 기기 대여 제도’를 삼성, LG, 국민은행과 같은 민간기업과 통계청, 한국남부발전 등의 공기업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시행하여 신청자 28.3만 명 전원에 대해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였다.(6월 12일)

이 뿐만 아니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의 협력을 통해 원격수업을 위한 통신비 및 데이터 지원도 이루어졌으며, 저소득층 약 17.4만 명 대상으로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다.

### 예산 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예산 적기 집행 및 효율적 운용 지원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원격수업 지원, 방역, 돌봄,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새로운 사업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불용이 예상(예비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코로나 극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2020년 1학기 온라인 개학이 4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학교현장이 원격수업 체제를 신속히 갖추어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여 원격교육 기자재(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촬영장비, 공유기, 소프트웨어 등)를 구입 또는 임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회계에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단위학교별로 재정집행 중간점검(예비결산)을 실시하여 시급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신속한 물품 조달 등을 위해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심의·의결하였다. 수의계약 요건 확대를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하였고,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로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계약지침을 통해 2020년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하여 입찰 공고 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였다.

# 11

## 미래교육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얻은 여러 가지 성과들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하여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에도 본격 착수하였다. 특별히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긴급한 사안들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을 발표하면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방향 모색,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대응 시기별 주요 조치사항

#### 1.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기간(1.20~8.22)

##### ❖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축적한 원격수업 운영 경험을 미래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 및 발전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에듀테크(Edu-tech) 산업계(8), 주요 유관기관(7), 학계·해외전문가(11), 교사(5), 학생(2) 학부모(1)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이 4월에 발족되었다. 4월 23



제1차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회의(4.23)

일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추진 전략 논의를 위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4회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회의가 개최되었다.

#####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회의」 추진 현황

차수	일 자	참석자	주 제	주요 내용
1	'20.4.23	교육부(부총리, 차관, 기획조정실장, 교육과정 정책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자문위원	한국형 원격교육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개학 이후 2주간의 원격교육 진단 및 원격교육 기반(인프라) 및 콘텐츠 관련 시사점 도출</li> <li>한국형 원격교육 발전 방향에 관한 각종 현황 진단 및 정책제언</li> </ul>
2	'20.5.1	교육부(부총리,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 관련 국·과장), 자문위원	온라인 개학 3주 진단 및 한국형 원격교육 구축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현장 교사의 온라인 개학 이후 3주간의 원격교육 진단 및 제언</li> <li>국내외 현장 전문가 논의: 한국형 원격교육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li> </ul>
3	'20.5.8	교육부(부총리,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 관련 국·과장), 자문위원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원격교육과 한국형 원격교육 구축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개학 후 한 달간의 원격교육 추진경과 발표</li> <li>교육현장에서 본 원격교육 경험 공유를 통한 원격교육 체제 구축 방안 및 개선 방향 모색</li> <li>한국형 원격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 차원에서 '한국형 온라인학습 체제 설계 방안' 발제 및 토론</li> </ul>
4	'20.6.19	교육부(부총리,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 관련 국·과장), 자문위원	한국형 원격교육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격교육 발전 방향 논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 체제 구축,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상시적 운영 위한 과제 논의</li> <li>해외 전문가 지정 발언: 해외 원격교육 사례 소개 및 정책제언, 한국형 뉴딜 교육분야 제언</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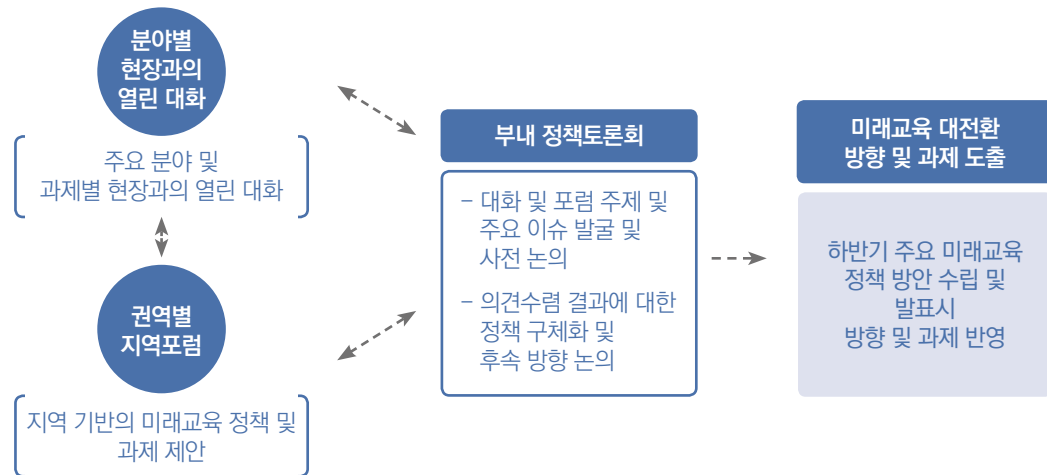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유은혜 부총리, 미래 원격교육체제 마련 위해 전문가 목소리 듣는다’(20.4.23), ‘유은혜 부총리, 한국형 원격교육 구축을 위한 현장 전문가 의견 청취’(20.5.1), ‘유은혜 부총리, 현장 전문가들과 미래 원격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20.5.8), ‘유은혜 부총리,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 논의’(20.6.19).

##### ❖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추진

코로나19 위기는 한편으로 교육현장의 혁신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 변화, 사회 불평등 문제,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미래교육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가 추진되

었다. '분야별 현장과의 열린 대화', '권역별 지역포럼', '교육부 내부 토론회' 등 다각적인 소통을 추진하면서 미래교육의 방향과 이를 위한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추진 체계도」



자료: 교육부

### 분야별 현장과의 열린 대화

'분야별 현장과의 열린 대화'는 6월~8월에 걸쳐 총 9회 실시되었는데, 이는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총론 대화', '현장대표 대화'와 '분야별 대화'로 구성되었다. 교육부를 비롯하여 현장교원, 학생, 학부모 등 정책 수요자, 감염병 및 방역 전문가, 교육행정가 등 다양한 교육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총론 대화'에서는 미래교육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현장대표 대화'에서는 초중등, 고등교육 분야별 논의를, '분야별 대화'에서는 세부 분야별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미래교육 대전환 방향, 정책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제2차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6.24)



제3차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7.2)

「『분야별 현장과의 열린 대화』 추진 현황」

구분	차수	일자	참석자	주요 내용
총론 대화	1	'20.6.17	부총리, 2기 미래교육위원,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방향</li> <li>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위한 5가지 미래교육 원칙과 방향 제시: ①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 확보, ②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보편적 교육 보장, ③ 현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교원의 전문성·자율성 존중, ④ 미래 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한 선제적 대응, ⑤ 학생 건강과 안전의 최우선 보장</li> </ul>
	2	'20.6.24	교육부(부총리, 차관, 차관보, 실·국장 등), 8개(교육정책 네트워크 참여) 교육관계 기관장, 한국교육학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대응 관련 관계 기관에서 추진한 연구 결과 및 사업성과 공유</li> <li>각 교육기관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방향과 과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교육 지원: 미래교육체제(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교육환경) 지원을 위한 에듀테크(콘텐츠, 플랫폼 등) 생태계 조성</li> <li>- 교육격차 완화: 원격교육 접근성 및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li> <li>- 돌봄·지역 상생: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 활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li> </ul> </li> </ul>
현장 대화	3	'20.7.2	부총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및 전문대학 총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정책 방향</li> <li>고등교육 변화 혁신 지원 위한 정책과제 제시(대학 의견): ① 원격 수업의 '뉴노멀화' 통한 대학교육 혁신 추진, ② 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대학 운영기준 혁신, ③ 대학 간 공간의 장벽을 넘어 공유화 협력 확산, ④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할 강화, ⑤ K-에듀의 국제화 추진</li> </ul>
	4	'20.7.9	부총리, 시도교육감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2학기 준비사항 논의</li> <li>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동력 발전·승화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5개 키워드 제시: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 적극성, 안전</li> </ul>
분야별 대화	5	'20.7.23	부총리, 학부모, 관련 전문가(교육, 디지털, 공간, 교육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미래학교 공간 대혁신</li> <li>미래학교 실행 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논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그린 스마트 뉴딜사업' 설명, 관련 전문가(학부모, 교육, 건축, 디지털, 교육행정) 발제 및 질문 통한 미래 배움터에 대한 의제 발굴</li> </ul>
	6	'20.7.31	교육부, 전문가, 현장교원, 교육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방안</li> <li>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복지 정책 방향 및 과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학교-지역 연계 복지 안전망 구축 방안 모색</li> </ul>
	7	'20.8.3	교육부, 출입기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발표): 비대면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li> <li>주제토론: 현장 취재 과정에서 고민해 본 '미래교육의 방향'</li> <li>자유토론: 주제발표 주제로 토론 및 질의응답</li> </ul>
	8	'20.8.6	부총리, 의료계 전문가, 학교(보건교사,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학교 방역 등 학생 건강·안전 보장'</li> <li>코로나19에 대한 교육기관의 대응실태 진단,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재발에 대비한 교육기관 방역체계 개선과제 도출</li> </ul>
	9	'20.8.7	부총리, 학생, 예비교원,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협업과 소통으로 실천한 원격교육 - 미래교육을 열다</li> <li>협업과 소통으로 실천한 다양한 원격수업 현장 경험 공유</li> <li>학생 주도, 교사 자율, 학부모 연대로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방안 및 미래교육 정책 방향 논의</li> </ul>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 1차 대화'(6.17), '유은혜 부총리,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2차 대화 참석'(6.23),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7.2),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7.9),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5차 대화'(7.23),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 6차 대화'(7.31), '포스트 코로나 교육대전환을 위한 7차 대화 추진 계획'(8.3), '포스트 코로나 교육대전환을 위한 8차 대화 참석'(8.6), '제9차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개최'(8.6).



9회에 걸친 현장 대화를 통해 다섯 가지 미래교육의 원칙과 방향(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미래교육의 원칙은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 '적극성', '안전' 등 총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가장 첫 번째 원칙인 지속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움과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용성은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보편적 교육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하며, 자율성은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교육체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성이란 미래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이다. 마지막 '안전' 원칙에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제5차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7.23)

### 권역별 지역 포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지역 단위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포럼을 개최하였다. 교육부를 비롯하여 현장의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대화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포럼의 형태도 정책토론회, 토크콘서트, 현장간담회 등 다양하게 운영되었다. 각 참가자는 자유롭게 미래교육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1차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 권역별 포럼(7.15)



제2차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 권역별 포럼(7.21)

### [ '권역별 지역 포럼' 추진 현황 ]

차수	권역	일자	참석자	목적	주요 내용
1	영남권	'20. 7.15	교육부(부총리, 교육과정정책관), 부산국제외고(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해운대구청장, 부교육감, 외부전문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 등 학교 현장 변화 탐색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고등학교 교육방향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코로나19 이후 미래 고등학교 교육 방향</li> <li>부산국제외고(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 중) 수업참관</li> <li>고교학점제 관련 현장 간담회 진행</li> </ul>
2	호남권	'20. 7.21	교육부(부총리, 학교혁신정책관), 교육청(전남교육감), 지자체(순천시청), 교사, 학부모, 마을교육 활동가	지역사회 미래형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사례 공유, 미래교육 정책방향 및 과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 방안</li> <li>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협력사례 발표</li> <li>'정담회(민·관·학 정례 협의회)' 형식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방안 논의</li> </ul>
3	수도권	'20. 07.29	부총리, 시도교육청 전문직 및 현장 교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교육 방향 과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야기하다.</li> <li>3개 주제(학습자 중심교육, 교육과정 분권화, K-에듀테크 변화) 중심으로 발제 및 논의</li> </ul>
4	충청권	'20. 08.11	부총리, 시도교육감협의회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대 안전망(방역, 학습, 돌봄) 발표(그림 2 참조)</li> </ul>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1차 권역별 포럼 및 시도교육감 영남권 간담회 개최'(20.7.14),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2차 권역별 포럼 및 시도교육감 호남권 간담회 개최'(20.7.20),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3차 권역별 포럼 및 시도교육감 수도권 간담회 개최'(20.7.28),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마련'(20.8.11).

##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기간(8.23~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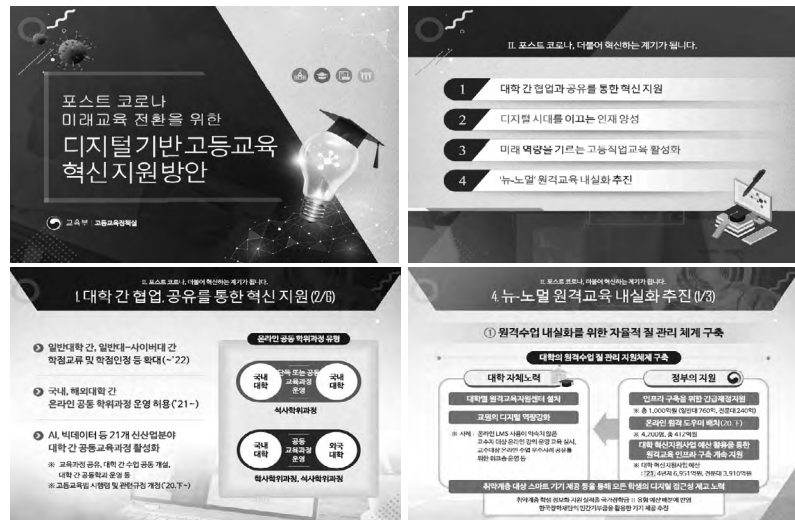
### 분야별 혁신 지원방안 마련

####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발표

교육부는 7월 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대학 총장 등과 대화를 진행했던 내용과 대학생 및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9월 9일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확대 등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대학-대학, 대학-지역 상호 협력과 공동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진단 하에 크게 네 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대학 학사운영의 '뉴노멀'을 정립하여, 원격수업 운영 규제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발표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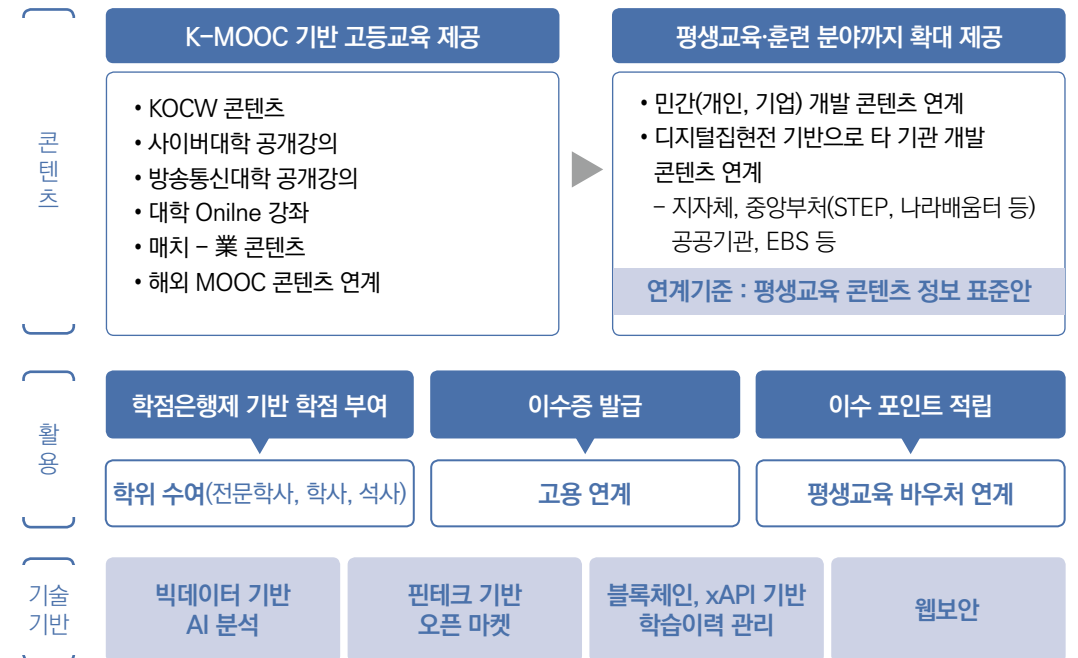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학의 원격수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재직자의 후학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 발표

고등교육에 이어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9월 23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방안」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훈련의 디지털화 요구가 증대되고, 신기술 발전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가속화되는 여건에서 국민 누구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생 2모작,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가칭)평생배움터」를 구축하여 여러 플랫폼과 누리집에 흩어져 있는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때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축적되는 각 학습자의 학습훈련 이력은 인공지능(AI) 분석을 거쳐 학습자가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받고 새로운 학습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또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콘텐츠를 확충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콘텐츠 측면에서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주제별 강의를 추가로 개발하고, 대학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 제작한 양질의 강의를 탑재한다. 플랫폼 측면에서는 온라인 토론이나 동료 평가 등의 기능을 추가해 쌍방향성을 강화하면서, 마이리지 제도 등 학습자의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원격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원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여 질 높은 평생교육을 다양한 경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이 과제로 포함되었다.

[ (가칭)평생배움터 개념도 ]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20.9.23)

### ◆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 마련

#### 세부 발표 내용

교육부는 10월 5일 미래교육위원회,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등 '19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 소통과 대화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8.11),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9.9),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9.23) 등 현장의 요구에 맞춰 분야별로 선제 발표했던 정책들을 포함하여,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체계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신념 하에,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기반 구축'으로 분야를 나누어 각각의 추진 목표를 수립하였다. 분야별 목표는 유·초·중등교육 분야 '국가의 책무성과 현장의 자율성 강화', 고등·평생교육 분야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기반 구축 분야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요약된다.

[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안)」 세부 내용 ]

과제	영역	추진방향	주요 내용
1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교원·학생 중심 제도 개선	• (2022 개정 교육과정) 분권, 자율, 다양성, 공공성 강화 • (고교학점제) 학사제도 개선, 공간조성 등 준비 철저 • (중등 직업교육) 실습환경 개선, 사회진출 기회 확대 등 • (교과서) 온라인 교과서 등 '만들어 가는 교과서' 체제
2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교원제도 혁신	•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 추진 •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 교원수급 추진 • 학교 변화를 교원이 주도할 수 있도록 교원정책 혁신
3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미래형 학교 구현	• 민주적 학교 모델 구현 • 미래형 혁신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4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안전망 강화	• 교육적 배려 필요 학생 지원(교육복지)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 학습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책임 보장
5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대학과 지역의 공유 성장 촉진	• 규제혁신 및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 • 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 국립대학을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
6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디지털 시대 인재 양성	•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인재 양성 • 학문 발전을 견인하는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분야 혁신인재 양성
7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미래 역량을 기르는 고등 직업교육	• 대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확대 • 재직자의 후학습 지원 강화 • 대학의 산업맞춤형 인력 양성 내실화
8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보편적 평생교육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평생교육-직업훈련', '일-학습-삶'의 연계 강화 •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노년층 교육 제도화 추진
9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디지털 환경 조성	• (유초중등)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 (고등, 평생) K-MOOC 고도화, (가칭) 평생배움터 구축 • (콘텐츠) 개방형 유통·안전한 활용·질 관리 강화
		교육목적의 효과적 활용	• (학습 지원) 디지털 역량+학교의 디지털 혁신 ⇒ 빅데이터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 (행정 과학화) 빅데이터 및 지능형 통계 기반 교육행정
		국가교육위원회 협력 + 교육자치 내실화	•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합의 기반 중장기 정책 수립 • (교육자치) 법령 정비를 통해 교육자치 착근 • (교육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미래형 조직 전환
10	미래형 교육협력 거버넌스 개편	학교-지원청-지자체 간 협력 강화	• (단기) 교육자치협력지구 등 협업 강화 • (장기) 교육지원청 현장성 및 독립성 강화
		범부처 협업	• 사회부총리 총괄 및 조정 기능 강화

자료: 교육부(2020).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교육부가 발표한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은 완결된 내용이라기보다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해당 과제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자 했다. 이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를 연말까지 계속하면서 교원, 학생, 학부모, 시도교육청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구하고, '20년 6월에 구성된 제2기 미래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 등 교육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들을 활용해 미래 정책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한다는 내용과, 교육부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조직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향후 추진계획에 포함되었다.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발표

인공지능(AI)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20일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방안에는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감성적 창조 인재 육성',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학습 환경 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 구현' 등 3개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상은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독창적 질문을 던지는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정해진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역할은 인공지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간은 창의성과 감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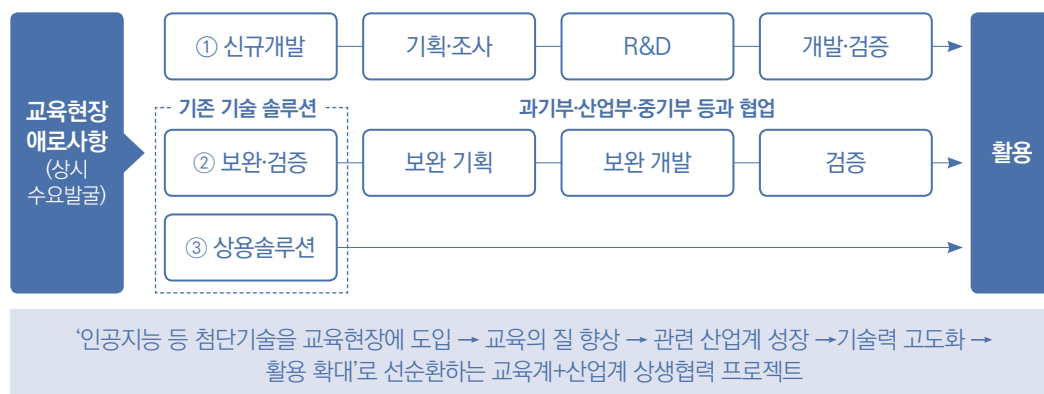
[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의 3대 방향 ]

	AI의 영향	시사점	정책방향 도출
인재상	인간-AI의 협업시대: AI는 효율성, 인간은 창의성, 감성 등에 집중	인간 고유의 창의성, 인간 감성 이해, 윤리적 사고 등 중요	감성적 창조 인재 인간중심 사고에 바탕, 새 구조를 만드는 창의력
학습 환경	AI는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학습방법과 자료 제공	학습자의 특성, 수준, 상황 맞춤형 개별화 교육 기대	초개인화 학습환경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
정책 과정	AI, 빅데이터 등 기반 행정 혁신 시대 도래	교육 분야 빅데이터 관리 및 유통체계 필요, 데이터 활용 포용정책 기대	따뜻한 지능화 정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혁신기술의 포용적 사용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20.11.19)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기술과 결합하는 교육’을 제안하였다. 첫째로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이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교육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으로 자기주도성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둘째로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관련 과제는 학교와 대학 등에서 인공지능 소양 교육을 실시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결합하는 교육 관련 과제는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AI 기술을 공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성되었다.

[ ‘지능형 교육 3대 프로젝트’ 추진 흐름도(구상안) ]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20.11.19)

###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후 기간(11.19~12.15)

#### 미래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교육부는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를 발표하며 밝힌 바와 같이 연말까지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을 계속 해서 추진해나갔다. 11월 18일에는 부총리와 학부모가 직접 만나 학부모가 바라는 미래학교와 미래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12월 15일, 16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학생 및 교원들과 각각 대화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학부모와의 대화는 ‘교육부 학부모 정책모니터단’(학부모 2,000여명 및 교사 450여명으로 구성)에 참여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에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중에서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이를 토대로 논의 과제 및 참석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부

총리와 학생, 교원 간의 대화’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되었다.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을 공개 모집하여 총 160명의 학생이 1단계 온라인 토론회와 부총리와의 대화에 참여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다. 교원과의 대화는 정책 모니터단 및 ‘1만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 중인 교원 60여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다.

[ 학부모, 학생, 교원과의 대화 현황 ]

구분	일시	주 제	참석자	세부 내용
학부모	’20.11.18	학부모가 바라는 미래학교, 미래교육	교육부, 학부모(오프라인으로 주요 관심 과제별 3명씩 총 18명, 온라인 참여 10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 안내</li> <li>· 과제별 토의 결과 제안 및 질의응답</li> <li>※ 6개 관심 과제: 미래형 교육과정, 새로운 교원 제도, 미래형 학교 조성,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디지털 전환 교육 기반 마련</li> </ul>
학생	’20.12.15	미래교육 정책과제 의견 수렴 및 신규과제 발굴	중고교생 및 대학(원)생 160여명 ※ 사전 모둠 토론 실시 (219명, 11.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모둠 토론 영상 상영 및 토론 정리</li> <li>· 미래교육 관련 의견 제안 및 논의</li> </ul>
교원	’20.12.16		유초중고 교원 60여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 안내</li> <li>· 미래교육 관련 의견 제안 및 논의</li> </ul>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시안)」 관련 학부모-부총리 대화 개최’(20.11.18), ‘미래교육 정책 개발을 위해 학생, 교원들과 직접 소통한다’(20.12.15)

## 주요 성과

#### 미래교육 과제 도출을 위한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

디지털 전환, 산업 혁신, 인구구조 재편 등 우리 사회를 둘러싼 변화의 속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갑작스럽게 가속화됨에 따라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분기점도 더욱 앞당겨지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우선적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폭넓게 소통하고자 하였으며, 에듀테크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도 협력하며 미래교육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를 운영하며 정책 수요자는 물론 전문가 등 교육분야 관계자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진행하였다. 미래교육위원회 및 교육정책네트워크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었던 미래교

육 방향에 대한 총론적인 토론을 시작으로, 주제별·대상별·지역별로 대화의 폭을 넓혀가며 다양한 논의를 추진하였다.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등 교육기관 관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미래학교 공간 혁신,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학교 방역 등 교육의 각 영역에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발표한 과제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기 위해 각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속하였다. 온·오프라인에서 300명 이상의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였으며, 함께 미래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며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래교육의 비전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교육주체들이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직접 만들고 실현해나간다는 철학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 현장의 수요에 대응한 분야별 정책 방안 마련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소득 양극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의 일상화 등 다양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교육부에서는 현장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발표하여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8월 11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안전망은 '방역 안전망', '학습 안전망', '돌봄 안전망'으로 구성된다. 1학기 기간 중의 경험과 현황 진단에 근거하여, 2학기에는 3대 교육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고자 하였다. 모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는 한편,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최초의 온라인 개학을 통해 중단 없는 학습을 이루어내었으나 그 과정에서 교육취약계층 학생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격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실시하고, 등교·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등하굣길 및 시설 개선 등으로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다음으로 9월 9일에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학 총장과의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학생,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도출한 것이다. 원격수업 운영 관련 규제개선 및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공유성장형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을 신설하여 대학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상호 공유·확산하는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 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학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면 도입한 원격수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의 원격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긴급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속 지원하였다.

9월 23일에는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고령화로 인한 생애주기 변화에 대응한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체제를 제시하였다.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습자가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학습·훈련 이력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평생배움터'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한국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K-MOOC) 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보편적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원격대학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평생교육·훈련 공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평생교육·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학습휴가 활성화 등 학습자 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이 원활히 실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정비를 통해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훈련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미래교육 체제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을 발표하였다(20.10.5).

[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

분야	추진 목표	10대 정책과제(안)
유·초·중등교육	국가의 책무성, 현장의 자율성 강화	①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②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③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④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고등·평생교육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⑤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⑥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⑦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⑧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기반 구축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⑨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⑩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 발표(20.10.5).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혁신적 변화를 기반으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미래교육위원회,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분야별 민·관 합동 TF,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주체별 대화 등 광범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분야까지 교육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중·장기 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은 교육 현장 및 전문가 의견, 기존에 발표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중기 추진 필요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과제는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정책과제들 간의 정합성과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 당사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 교육부 조직 개편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영역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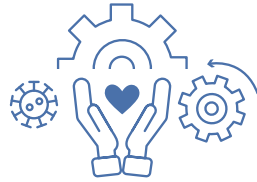
COVID-19

PART 4 ▶▶▶

1. 대응 체계
2. 학사운영(기준 수립 및 시행)
3. 학교 방역 시스템
4. 범정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5. 돌봄 지원
6.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실행
7.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8. 국제협력
9. 각종 시험
10. 예산 지원 및 보상
11. 미래교육

# 1

## 대응 체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교육 분야에서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체계적인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협약하며 현안 과제들을 해결해왔다. 감염병 상황과 학사 운영 시기 등에 맞춰 지체없이 교육부 내 위기 대응 체계를 구성·운영하고, 부총리·차관 등 최고 의사결정자를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소통·협약의 체계를 갖추으로써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정책 형성과 수립, 시행 과정에서 어렵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현장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만 커뮤니티’ 운영 사례와 같이 현장 중심의 위기 극복 노력도 지속해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도 및 현장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조직을 구성하고 현안 대응 역량을 기르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조직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 조직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한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부 내부분만 아니라 정부 조직 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대학 간, 정책과 현장 간의 종합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함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 대응체계 조직도를 준비하고 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며, 대외적인 소통 및 협약 체계도 구축해두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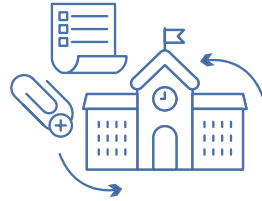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은 예측과 대응의 수시 변동성과 불명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정책 형성→정책 수립→정책 발표→정책 시행 과정에서 오히려 시기를 놓치거나 정책 시행 후 바로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언론 보도, 협의체 등을 통해 정보의 공개 및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선제적 정보 공개와 공유 체제 마련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를

감안해 보면, 모든 정책의 브리핑 및 정보 공유와 교류 등의 주된 전략으로 온라인,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홍보 관련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의사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전문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더불어 감염병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에서 실제 상황을 전제로 가상 훈련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 상황별 세부 매뉴얼과 체득된 훈련 경험을 통해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고도 바로 위기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상황에 따라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이다.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조직을 갖추고, 교육 주체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역할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해나가는 일일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내·외적인 위기대응 조직 구성·운영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를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수시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보다는, 매뉴얼과 시스템 및 준비된 경험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위기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 학사운영 (기준 수립 및 시행)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함에 따라 교육부는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계속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늘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공존하며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고, 동일한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또한 그 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초기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각각의 상황 및 여건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는 데에도 몇 번의 시행착오와 경험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현장도 차츰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식에 적응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학사 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며, 앞으로의 코로나19 상황이나 또 다른 위기 상황 등에 대비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학사 일정 및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단 결정된 지침은 보다 신속하게 현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언제나 존재하며 각각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보다 투명하고 상세하게 제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학사 일정 관련 정보가 언론을 통하여 일반 시민에게 전달되는 속도는 빠른 편이지만 교육부에서 현장으로 내려 보내는 지침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다.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사 일정을 책임지는 학교관리자는 언론보도가 아닌 공식적인 전달 체계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학사 일정과 관련된 정보들이 공문 등 공식적인 지침 전파 경로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업일수 단축 및 원격수업 운영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교육의 변화가 1년 간 지속되었으므로, 이러한 학사 운영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KERIS)에 따르면, 1학기 원격교육 경험에 대해 교사 51,02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격교육은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수업혁신에 기여(약 56%)하고 동료교사 간 협업이 증가(약 67%)한다는 응답이 있었던 반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는 응답도 약 79%에 달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도 전체 교사의 48.7%(3,860명 중 1,879명)가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이 병행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 발생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이러한 설문조사는 현장의 일반적인 인식을 분석한 것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학습격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갈등을 조성하기보다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사 운영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학력 저하나 학습격차가 발생했다면 그 차이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종단 연구를 실시하는 등 한층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학교의 일상을 빼앗기면서 우리는 학교가 학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돌봄 및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생활하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장소였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학교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습과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식으로 학사 운영을 추진했으나,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한계와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지난 해의 대응 경험을 좋은 자양분으로 삼아 향후 더욱 효과적인 학사 운영을 준비하고 실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을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학사 운영 방안들을 단기적인 대응 경험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책 및 제도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학사 운영에 대한 도전과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3

## 학교 방역 시스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학교는 대표적인 단체 시설임에도 철저한 방역 노력을 통해 학교를 매개로 한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해 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부터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물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였으며, 학교 방역 지침을 마련한 후에는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각 학교 구성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등교 전 자가검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의심증상자가 등교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등교 후 의심증상자 발생 시에는 적절한 소독 및 환기와 더불어 일시적 관찰실 운영, 능동감시체계 가동, 탄력적인 학사운영 등으로 추가 접촉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방역당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원 방역에도 관심을 기울여 학교 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추가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학교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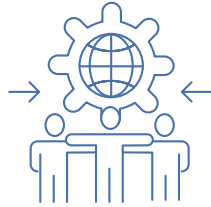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미 구축한 학교 방역 시스템을 계속해서 보강하고 점검하는 한편, 방역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선별검사 결과나 역학조사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하는데, 개인정보 관련 문제로 교육청이나 학교는 이러한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이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학원 방역을 위한 지자체 연계 및 협업도 계속해나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협업체계를 제도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공유 관련 규정이나 학원 휴원 등 방역 관련 행정조치 시 적절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이번 코로나19 시기 학교·대학 방역 시스템 운영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둘 필요가 있다. 감염병 유행 상황 및 규모, 학교급 및 규모에 따라 방역물품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점검하여 기준을 마련해 둔다면,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방역 물품 필요량을 산출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학교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등 감염병 유행 상

황에서 취약성이 드러나는 영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후의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체온계나 열화상 카메라 도입 과정에서 일부 안정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 바 있는데, 방역 관련 시설과 물품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받아 사용 방법 등을 표준화해둔다면 차후의 활용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화재·지진 대피훈련과 같이 감염병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평상시 학교의 감염병 위기 대응 모형을 보강하여 구축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염병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교육을 제공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교직원들은 본래의 교육 업무와 방역 업무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기에, 이에 따른 피로감이 오랜 시간 축적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분장이나 인력 배치를 예비적으로 구축해 두고, 필요시 추가·보충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법정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해외 입국자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지역사회 방역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이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이 집중적으로 재학하는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시기적절하게 차단·예방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개별 대학과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전면적인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부, 보건당국, 관계부처, 대학 및 지자체 등과 방역을 위한 협력을 기울였다. 유학생 입국 절차별로 부처별 역할이 정립되었고, 점차 법정부 차원의 대응이 고도화되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해 동안 7차에 걸친 현장지원을 시행하는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감염전파를 예방할 수 있었다.

2020년이 코로나19 대응 체제 마련을 위한 바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이후를 대비하여 지혜를 모아 미래를 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시 새롭게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강화를 통한 방역 사각지대 방지 등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내 캠퍼스 세계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년 만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하여 2019년 160,165명에서 2020년 4월 153,695명으로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더욱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측면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대학 지원이 필요하다. 2020년 초부터 급박하게 전개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느라 개별 대학은 입국 유학생 격리를 위한 이동수단 비용, 숙소 비용 등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대학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유학생 보호·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제작 및 인프라 구축 비용, 방역 관리 비용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긴급히 협의하여 예비비 42억을 편성하여 대학의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인력 경비, 방역 물품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관리하기 위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2020년 10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에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반영되어 원격수업 규제 완화 등과 연계해 외국인 유치 전략을 다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학사과정은 오프라인, 석사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등의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K-MOOC 등 우수한 우리나라 원격 교육 콘텐츠의 다국어 자막을 지원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비대면 학사운영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학사운영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 관련 규정 등 제도적인 부분 이외에도 어학연수 과정 및 기타 국제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개편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외국 대학과 글로벌 교육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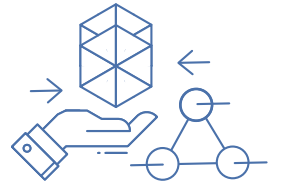
위와 같은 대학 지원방안은 교육부만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에서 갖는 불편 사항을 조사하여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공유할 수 있고, 외교부는 국가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국제교류 활동과 국가 간 협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해서 교육부,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은 계속해서 상시적인 협력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 지자체는 관계부처 및 대학과 일관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리와 관련된 현장의 문제점 등이 원활하게 전달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간 축적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사례를 타 지자체에 공유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해외의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활용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학생의 국제 여행을 제한하고 기관 차원에서는 예정된 각종 국제 여행 프로그램을 연기·취소했다. 영국은 2020년 2월 말,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코로나19 발병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철저한 격리 및 방역 조치 준수 및 감시를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방

역 조치 이외에도 학사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추진되었는데, 미국은 2020년 4월 원격 수업 및 혁신 규정(안) (Proposed Distance Education and Innovation Regulation)을 발표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원격수업에 대한 대학, 강사, 학생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과정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외국인 유학생 감소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고자 주/준정부와 연방 이민부를 통해 학업-이민-일로 이어지는 이민정책을 강화하고 졸업 후 취업 허가가 만료되어도 체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省令)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 원격 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유학' 활동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간 시행되었던 외국인 유학생 보호 및 관리 과정과 세부 조치들은 범부처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적 사항에 대해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사후적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고립감과 보건 사각지대를 방지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지난 1년여 간 추진되어 온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은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외국인 유학생 개개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새롭게 도입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나 출입국·이민 정책에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5 돌봄 지원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구 감소,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맞벌이가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맞벌이가구의 증가는 저연령 아동을 위한 돌봄의 요구를 가져왔으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휴업명령과 신학기 개학연기 그리고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돌봄 공백은 사회적 위험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범부처가 협력하여 긴급돌봄 제공을 추진함으로써 다시 한번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정부부처·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긴급돌봄은 기존의 방과후돌봄 제공에 더하여 학생의 안전과 보건위생관리는 물론 원격학습지원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큰 도전이 되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중심으로 향후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더불어 수요자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원을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중심으로 한 시간 연장, 초등학교 3~4학년은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중심으로 운영하여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등 학년별로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학에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학기 중보다 더 돌봄수요가 늘어난다. 학교에서 돌봄이 어렵다면 지자체 등의 지역사회 기관들이 위시해서 마을돌봄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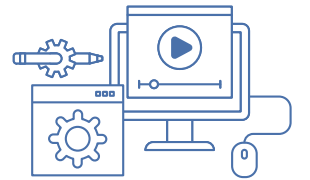
둘째, 돌봄인력 운용체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안정화를 위해서 돌봄 인력풀제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돌

봄인력을 공급해야한다. 학교에서 돌봄전담사가 휴직이나 휴가 등을 이용할 경우 이를 대체하는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인력풀제도를 운영하여 대체돌봄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돌봄인력의 역량을 신장시켜,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라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돌봄인력 운용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돌봄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부처간에 돌봄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 수준에서는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지자체)가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돌봄전담사 등의 인력 운용, 돌봄교실 안전관리, 민원대응 순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초등돌봄교실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직영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체계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분석과 환류를 위한 평가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돌봄교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일반학급 돌봄겸용교실은 최소화하고 돌봄전용교실을 확대하여 교실당 학생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용교실은 돌봄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하며 아동 1인당 돌봄공간 면적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및 한부모가구 등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과 함께 위기상황에서 돌봄에 더 취약해지는 집단의 아동에 대한 맞춤형 긴급돌봄이 가능하도록 생활밀착형 초등돌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향후 유사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체계 정비 및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기 구축되어 있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기초돌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긴급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다변화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긴급돌봄은 기존의 일상적인 방과후돌봄에 더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건위생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차원의 감염 예방 및 방역 조치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교육청, 학교 등이 협심하여 긴급돌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는 공무원들과 함께 돌봄 최전선에 있는 돌봄전담사들의 노력, 학부모들의 협조 등이 결합된 결과이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넓게 보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이 돌봄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바탕으로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한다.

## 6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실행



2020년 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가 격상됨에 따라 정규 학사일정에 맞춘 등교개학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개학이 3월부터 4월 초까지 네 차례 연기되었다. 정부는 휴교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해 온라인 학급방 개설, 온라인 학습자료 확충 등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규 원격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자 전례 없는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개학 초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대응과 보완을 거듭해 나가며 자리 잡아 나갔다. 2학기에는 1학기 온라인 개학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등교개학을 선택 적용하였다.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개학은 한국의 의료시스템 못지않게 K-방역의 성공적인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단기간 종식되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상당 기간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의 모습은 교실에서 대면을 전제로 이루어지던 것에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변화하였고, 온라인 개학은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일상적인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화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2020년 이루어진 온라인 개학의 성과 및 한계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과제 도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논의한 온라인 개학에 따른 대응 현황,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 측면에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학생 수용이 가능한 단일한 공적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2020년 온라인 개학 초기에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e학습터와 온라인클래스를 증설하여 활용함으로써 단기간 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였다. 플랫폼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운영 초기에 대규모 동시접속에 따른 서버 과부하, 접속 지연, 자료 업로드 저하 등의 불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기능에 제한이 있었다. 해당 플랫폼은 학교 단위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



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원의 동시접속이 가능하고 실시간 쌍방향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 운영과 출석 인정, 평가, 진도율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춘 공적 통합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1년 새학기부터 e학습터와 온라인클래스에서 화상수업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고도화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둘째, 온라인 개학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 학생 등의 특성에 맞게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격수업 유형이 안내되었고, 이에 따라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의 원격수업은 다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과, 학생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격수업 모델과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과정에 기반한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온라인 개학 초기에는 갑작스런 국가 감염병 상황으로 이에 대비한 콘텐츠 개발이 신규로 이루어지기에는 제약이 있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원격수업이 확대 활용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는 국가 교육과정 기반의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면서 강의, 학습활동, 평가가 하나의 모듈로 구성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상, 주제, 수준 등을 고려한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도 개발 및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 우려의 문제를 일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교사들에게는 관련 주제의 원격수업 설계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내용 이해 및 학습의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제별, 수준별 다양한 교사 원격수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개학 경험으로 교사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친숙함과 운영 역량이 이전에 비해 향상된 점은 분명하나, 온라인 개학에 따른 수업 방법의 변화는 원격수업 준비와 운영에 있어서 교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온라인 개학 초기에는 원격수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가 주로 학교 또는 교사 차원에서 이루어져,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학교별, 교사별 편차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교사의 원격수업 준비도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원격수업의 경험과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고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특별히 원격수업을 위한 주제별, 수준별 체계적인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개학은 학교교육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기반한 온라인 개학의 성과를 기반 조성, 콘텐츠 확보, 인프라 조성 및 지원, 교사 역량 강화의 네 가지로 논의하였다.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과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을 시행하고 우수하게 평가되는 만큼, K-방역 못지 않는 교육 분야 선도를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있어서 온라인 개학 운영 경험과 그에 따른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분석은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진행 중에 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향후 국가 재난 등 학생들의 등교개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은 계속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개학은 코로나19 장기화뿐만 아니라 유사 시 등교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며, 나아가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 탐색 및 대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 7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한 조치들이 진행될 때마다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국민들과 공유하였다. 학사 일정과 관련한 사항 및 유학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 등교 연기와 시기, 등교수업 지침과 지원 관련 사항, 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수능 관련 조치 등에 대한 브리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정부적인 방역 조치에 따른 교육 영역의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브리핑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식 브리핑뿐만 아니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및 참고자료'를 탑재하여 일일 등교수업 현황 등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였다. 전국 1만여개의 초·중·고 학교에서 최초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을 시도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사 간 자율적인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만 커뮤니티'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부 대책반 점검회의, 교육기관 현장 방문 및 점검,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19 관련 조치사항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현장 상황점검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유치원, 초·중·고 학교, 대학 등 교육 기관은 물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능시험 등 각종 시험이 치러지는 장소 등에서 방역 준비에 이상이 없는지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현장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뿐 아니라 민간 교육기관과도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던 3월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현장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학원휴원 적극 동참, 학원 휴원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장 방문, 간담회, 온라인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 수렴 기회를 자주 가진 점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 조치들을 개선하고 주요한 조치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관심을 두는 정보에 대해 소통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1.1부터 2021.3.26까지 5개 방송사 뉴스를 '교육부/코로나'를 검색기로 추출한 총 875건 중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488건을 분석한 결과, 빈번하게 다루어진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키워드

별로는 원격수업, 등교수업, 등록금반환, 등교중단 등 관련이었으며, 대상별로는 수험생, 유치원, 교직원, 고등학교, 대학들 순으로 주를 이루었다. 교육부는 방송에서 다루어졌던 원격수업, 등교수업, 등록금 반환 등에 대한 조치들을 주요하게 다루어 대응을 해왔으며, 브리핑과 언론 출연 등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방송기사 현황(2020.1.1~2021.3.26)】

구분	키워드별				대상별				
	원격수업	등교수업	등록금 반환	등교 중단	수험생	유치원	교직원	고등학교	대학
빈도	116	87	26	6	77	58	52	37	13

주: 검색URL: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코로나19 유행은 한국 역시 처음 경험하는 팬데믹 상황이며 1년이 넘어가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2020년의 교육부는 그때그때 제기되는 이슈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이행해왔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중앙 부처 간 협업, 현장 교육기관 및 학부모, 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지속하는 등 소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을 넘어서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장기적인 소통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의 교육분야의 대응 상황 및 소통 전략을 반추해 보고, 장기 전략으로 가져갈 것들을 선별하여 정리하는 작업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소통 계획을 구성할 때 사전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전략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전 대비 및 대응이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국민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이르기가 어렵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른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단계에 따라 교육 영역의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응 조치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국민에게 적합한 전달 방식(예, TV, 신문 등 언론 매체 뿐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디지털 매체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지자체 보건소 등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의 훈련 등을 다수 수행해왔고, 향후에도 지자체 보건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 영역 역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해 보이며, 이 교육 및 훈련에는 현장 교육기관 및 교사, 학부모, 학생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번 교육부의 대응에서는 언론 브리핑, 언론 출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디지털 매체 활용, 포스터 및 브로셔 제작 및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에도 이러한 다각화된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자에 초점을 두어 교사, 학부모, 학생이 각각 익숙한 매체들과 용어를 활용하여 소통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8 국제협력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면역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면회의 및 직접교류가 가능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빈도도 잦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교류를 주된 방식으로 삼았던 국제협력 분야에서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과거에 교육의 힘으로 일어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교육 지원과 교육 우수 사례의 공유를 통해 국제협력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고와 생활방식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고,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전환점에 다다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기존 협력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국제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과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한국 정부는 신종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 방지에 관한 핵심적 국제법인 「국제보건규칙(IHR 2005)」<sup>22</sup>에 따라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 체계를 만들고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였다. 하지만, 감염병은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발병국의 대응만으로는 종식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관리와 상호 협조는 필수가 되었다. 그 간 교육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2020년에는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상호 국경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직접교류 및 대면 소통이 제한되면서 기존 방식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이 어려워졌다. 반면, 가능한 협력 방식을 적극 모색하면서 제한적인 협력 방식이긴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국제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 대면 형식의 교류와 협력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온라인 소통 방식로의 변경, 온오프라인 혼합형(하이브리드) 방식 활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원격수업 등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한 사례들은 교육 분야 국제협력의 성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의 과

제는 일련의 온라인 방식 전환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 그에 따른 후속 조치와 국제협력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 국제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대내외 공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면서 국제무대에서도 정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협력이 부각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 분야 국제협력 대응 일지를 살펴보면, 정부 주도의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제기구 관련 국내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및 공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국제협력의 시너지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국제협력은 정부 중심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중심 대응 시스템을 넘어 유관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등 대내외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 분야 다자협력 플랫폼에 참여하는 국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 자치를 이끌어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활용하기 위해 개편된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Edu Data System)<sup>23</sup>에 정부와 지역에서의 교육 분야 국제협력 대응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정보 공유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 담당자가 국제협력 분야에서 수집·보유한 통계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글로벌 교육의제 선도를 통한 주체적 역할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국형 원격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의 교육권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주요 이슈를 찾고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교육협력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엔데믹'에 대비한 국제협력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 미래교육이 글로벌 미래교육이 될 수 있으며, 글로벌 교육의 도전과제가 우리 교육의 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 시대에 전 세계와의 소통에서 배웠다.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교육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이라는 우수한 사례를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와 공유하여 주요 이슈를 선점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측되고 있는 만큼, 새롭게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육'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 상황 이후 우리 미래교육의 과제로서 재조명

<sup>22</sup> WHO,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May 23, 2005, 2509 U.N.T.S. 79

<sup>23</sup>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은 2011년에 구축되어 이듬해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운영되어 왔으며, 2020년 5월부터 전면 개편 후 10월 30일 본격 개통

되고 있는, ‘디지털 교육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문제를 글로벌 교육의 우선적인 도전과제로 삼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 제공과 더불어 교육 예산의 확충이 향후 우선적인 도전과제로 꼽힌다. 왜냐하면 대부분 국제기구의 지원이 공중보건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레베카 윈스롭(Rebecca Winthrop) 유니버설교육센터 공동소장은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며 개도국의 교육 지원에 좀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sup>24)</sup>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기술 지원 분야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글로벌 교육협력 체제 지원과 정책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아젠다이며, 교육 ODA를 통한 다자기구의 자발적 기여 형태로도 실행할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상호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현 시대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 특정한 국가만의 이슈가 아니며, 또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점은 지난 1년간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더욱 명확해졌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복합적인 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자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재확인하게 되었고, 이제 교육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일이 과제로 남겨졌다.

## 9 각종 시험



2020년 한해, 각 분야에서는 평소 생각하지도 못했던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하면서 헤쳐 나가야 했고, 각종 시험의 실시는 그 영향이 컸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시험을 실시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오랜 시간을 보내는 취약 상황이 되므로 방역을 위해서는 시험 실시를 피하는 것이 좋으나, 진학이나 취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시험들을 모두 취소 또는 연기하면 응시자에게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계획대로 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

특히 대학 입학 전형과 관련된 각종 시험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경우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시험 중 응시자 수가 가장 많은 대규모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인 파장도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채점하고 성적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비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각 시험별 특성에 맞는 방역 등 조치가 필요하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1. 시험 관련 보안 유지와 방역 지침 준수
2. 출제, 문제지 인쇄, 답안지 채점 등 참여자(주최측, 출제자 등) 안전
3. 시험장 확보 및 방역 조치
4. 시험 전 응시자 안전 대책 및 안내 계획
5. 시험일 시험장 방역 대책(마스크, 칸막이, 환기 등)
6. 기타 각종 방역 위협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
7. 시험 미 실시에 대비한 대안(Plan B) 마련

24 '사이언스 타임즈'(20. 4. 23) 과학, 경제, 교육... 국제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각 시험들이 시행된 시기와 그때 당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다르고, 시험의 규모나 시행 방식, 주된 응시자의 특성 등도 모두 달라 각종 시험별로 실제 조치한 사항에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위와 같은 사항들을 모두 고려한 방역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시험을 시행하였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방안이 마련된 이후 유관기관 협조체계, 응시생 유의사항 안내, 시험장 확보·관리 및 단계별 조치 등 시험 실시 전반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421,034명이 응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면서 단 한명의 시험장 내 감염도 없이 무사히 마무리된 것이 2020년 각종 시험 실시 대응 체계의 성과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20년에 각종 시험을 시행하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도 제기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평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다른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래의 개선과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험별 대응 체계 일관성 관련 사항이다. 수능의 경우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까지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를 제한한 시험도 있었다. 시험을 주관하는 주체나 시험 실시 전까지의 준비 기간, 시험의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의 권리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필요한 모든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그 밖에도 시험별 세부지침 등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각 시험별로 시행착오 등을 거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대면시험이 불가피한 시험의 시행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체능 실기 평가 등은 비대면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어렵고, 대면으로 시험을 실시해도 방역 지침(마스크 착용 등)을 충분히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 장소나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시험 체제 구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응시생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스템 장애 등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공정한 조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시험 체제를 구축하면, 재난상황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시험에서도 응시기회 확대,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의 절약 등 다양한 측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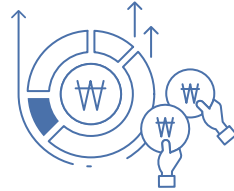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감염병 확산이나 지진 등의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중요한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의 경우 2017년 포항지진으로 1주, 2020년 코로나19로 2주를 연기한 바 있는데, 1~2주 연기로는 시험 시행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 구축이 어려운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대응 시나리오도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각종 시험을 시행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를 어떻게 헤쳐 나갔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시험에 따라 국민의 관심도나 비중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험에 응시하기 위

해 수험생들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무겁게 생각하면, 시험을 주관하는 주체는 가급적 계획대로 시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종 시험을 실시한 경험은 향후 다른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험을 무사히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0

## 예산 지원 및 보상



코로나19와 같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주고, 추가 재정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과 정부추경, 교육청에서는 재해재난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정부 추경을 통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고등교육 학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육관계자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교육청에서는 정부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육청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방역체제 구축,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적기에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듯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교육분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 과제들의 개선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긴급 편성할 수 있는 예산규모의 문제이다. 코로나19와 같이 예상하기 못한 재난 발생시 정부 추경을 제외하면 교육분야에서 신속집행 가능 예산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과 교육청의 예비비이다. 2020년 기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규모는 1,500억 원이며, 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총합은 3,090억 원으로 교육분야 세출 본예산 73조 9,014억 원의 0.42%에 불과하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각 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에도 현재는 최저 수준의 예비비만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법령이 허용하는 수준의 재해재난 예비비 편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교육청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구조조정 추진이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속 자체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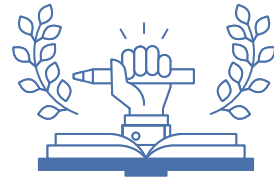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대응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긴급 상황이다 보니 종합적인 관점의 구조조정에는 미치지 못하고 일부 행사성 사업 및 연수 등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총 규모는 감소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 교육청의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시적인 사업 조정 수준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구조조정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 문제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신속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단위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였지만, 단위학교가 예산을 경직적으로 운용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학교회계에서 사업을 구조조정하여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의 일시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향후 학교의 자율적인 재정운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가 아닌 학교기본운영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거나 사전 대비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예산이다.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11

## 미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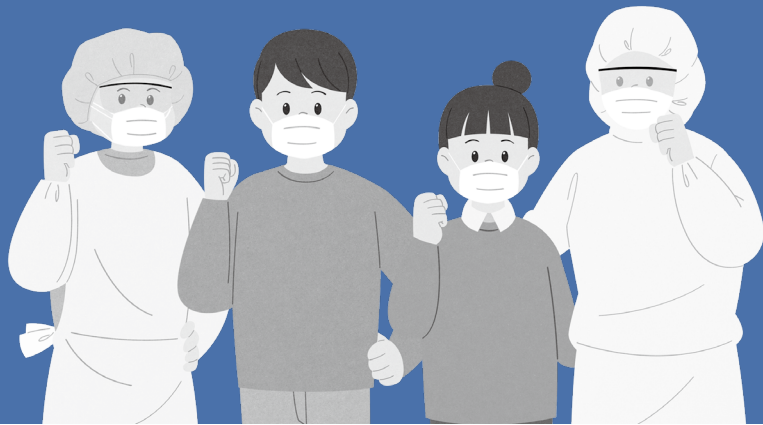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 전반의 변동과 교육 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하고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소통하였다. 미래교육위원회 및 원격 교육 정책자문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며 학생, 학부모부터 대학총장 및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대책들을 각 분야별로 속도감 있게 발표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수립하며 착실히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초로 전면 원격수업을 추진하였던 당시에 비해 점차 원격수업 경험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교육방식에 비교적 적응되어가는 모습이지만, 앞으로는 교육부가 도출한 미래교육의 방향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포용성’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더욱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 현장의 교원들이 우려하는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교육으로 전환되는 흐름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향후 주된 과제일 것이다. 이때 인공지능(AI), 에듀테크 등 기술의 발전을 학습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의 개인 학습이력 분석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기술 연계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까지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 계속해서 시도될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어지며 교육과정, 교수학습, 시설·공간 등 교육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발할 것이다. 교육 전반의 변화에 대응한 미래교육 정책은 부분적인 제도개선의 형태로 추진되기보다는 체계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추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교육의 미래는 한층 더 학습자 개인에 맞춘 형태로 변화해갈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교육을 일선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제도를 유연하게 전환하면서 학교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교수·학습 시설, 교원 양성·연수, 기반 시스템 등 교육의 모든 영역에 대해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맞음말

COVID-19

PART 5 ▶▶



## 맺음말



2020년의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 전 영역에 걸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사건이며, 2021년에도 종식되지 않은 채 여전히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 교육은 사스(2003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등 각종 바이러스의 유행으로부터 학생과 교육 가족을 보호하고 학습과 배움이 있는 일상을 지속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는 이제까지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넓고 깊은 파급력을 가졌으면서, 해를 넘기면서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 자세이다.

코로나19 상황은 그간의 감염병 대응 경험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커다란 혼란으로 다가왔다. 입국 유학생 관리에서 시작해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과 코로나19 속 수능시험에 이르기까지, 2020년은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도전과 극복을 반복하는 시간이었다. 2020학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는 동안 우리의 학교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한층 성숙해졌지만, 그만큼 반복되어 온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현장의 피로감도 누적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교육이 코로나19에 치열하게 대응했던 기록을 남겨두는 의미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학교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까지 다시 한번 서로를 독려하고 힘을 모으려는데 있다. 본 백서에는 지난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던 내용,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과 가정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지원했던 내용, 각종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고 논의했던 내용 등 숨 가쁘게 지나온 일 년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의 일상에 수많은 '사상 초유'의 것들을 남긴 코로나19의 특성상 정해진 절차나 참고할만한 다른 사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에, 본문에 수록된 자료의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 단계와 학사 일정 여건 등을 고려해 우리가 직접 고민하며 고안해낸 것들이다. 이를 단순히 기념하기보다는, 지금도 계

속해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만한 참고자료를 남기 고자 했다. 이번 중간 백서를 통해 일선 학교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과와 방역 조치들을 쉽게 이해하고, 각 교육행정조직은 이제까지 추진한 내용 중 부족한 대책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온라인 개학과 함께 전국 1만여 개 초·중·고 학교는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을 시행해야 했으며, 각자 막연히 그려 오던 새로운 교육의 모습을 한순간에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격수업을 지속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은 결코 일시적이지도 순탄하지도 않았다. 온라인 개학 이후 현장의 원격수업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원격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인식이 개선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수업을 이루는 모든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소통이 있었던 덕분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았던 원격수업을 실제로 직접 운영해야 했던 교사들은 묵묵히 수업을 연구하고 동료 교사와 협동하면서 학교의 일상을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현재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우리 교육을 지켜내고 있다. 현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필요한 행정사항을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좀 더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학교 방역을 위한 과제일 것이다.

2020년의 대응 과정이 남긴 교훈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의 시각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신속하면서도 알기 쉽게 정책을 설명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당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개학, 등교, 급식, 돌봄, 시험 등 학교교육 운영의 기존 틀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했다. 매일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는 일상은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기에 등교 일정이나 학사운영과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정부 정책의 신뢰를 얻고 앞으로의 방역 조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위기 소통 메시지를 정교하게 가다듬고, 전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부-민간영역과 부처별 업무의 칸막이를 허물고 긴밀하게 협력해 온 대응 체계를 지속하면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는 교육분야의 커다란 도전이자, 교육의 근본적인 역할을 되새기며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교육분야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미래교육의 가능성과 핵심 원칙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한층 고도화된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이러한 핵심 원칙에 근거해 미래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하는 단계가 남았다. 우리 교육이 찾은 미래교육의 핵심 원칙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더욱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점은

교육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육주체에게 잔잔한 일깨움을 준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 교육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이 확보되고, 소외되는 학생이나 안전·건강을 위협 받는 학생이 없도록 보편교육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나아가, 미래의 환경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육체제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현장의 자율성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2020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이 우리가 지나온 과정과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작은 지표가 되기를 소망한다.



## 참고 문헌

강성국, 김상철, 김수진, 김은애, 김은영, 도재우, 이윤희, 이은주, 장혜승, 정재원, 조문주(2020).  
코로나19 대응 국가 수준 원격교육체제 진단 및 과제.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경상남도교육청(2020). 경남교육 코로나19 백서. 함께, 이음 그리고 성장. 창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  
정보원.

계보경, 김혜숙, 이용상, 김상운, 손정은, 백송이(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 기초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부처 합동(2020.06.12).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사례.

교육부(2016).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대학교용).

교육부(2020). 코로나19 대응 : 한국의 온라인개학 - 미래교육을 위한 도전.

교육부 보도자료(2020.02.05). 교육부,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회의」 개최.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2.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2.13). 교육부,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를 위한 지자체 협조 요청.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2.23). 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 마련.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2.23).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2.16) 보완 조치.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2.28). 한·중 교육부, 각 국의 유학생 보호를 위한 상호간 입국 자제 및 학생 불이  
익 최소화에 합의.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3.02).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차질없이 진행.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3.0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 발표.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3.13).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유학생 보호·관리 대상 확대.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3.26).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수업 기반 준비 시작 -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  
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 간 온라인 업무협약 -.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3.27).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3.31).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3.31).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  
의 현장 안착 대책.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4.01). 모든 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환경 구축에 총력.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4.06). 첫 온라인 개학, 교사의 힘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전, '1만 커뮤니티'로 전국  
학교의 집단지성 발휘.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4.07).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4.09).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10가지 실천 수칙을 지켜요.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4.13). 원격수업 저작권 이해하기: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 주세  
요!.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5.04).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5.17).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 대비 학생 분산방안 점검.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5.24).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앞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6.01).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6.02). 한 달 더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하세요!.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6.17)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마련.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7.29).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2학기에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7.31).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 발표.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8.04).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8.06).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발표.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8.21).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원 원격 연수 실시.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09.28).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 발표.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10.05).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2020. 10.16).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 첫 회의 개최. 세종: 교육부.

교육부, 17개시도교육청(2020). 도전이 만든 미래 2020 원격수업 운영사례집.

국가교육회의(2020).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2020.05.14).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학년별로 큰 차이.

권점례, 김명화, 이상하, 유금복, 최정숙, 강현숙, 신승기(2020). COVID-19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원격 수업 실태 및 개선 방향 탐색.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획재정부(2019).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김성기(2020a).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결과보고서. 교육부 사업보고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성기(2020b). 초등돌봄 운영 인식 및 현황 분석 연구. 교육부 정책과제이슈페이퍼.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은진 외(2020).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개정증보판).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환(2020). 2020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현황 분석.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도재우(2020). 면대면 수업의 온라인 수업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장애물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6(2), 153-173.

박광숙, 김명화, 염한솔, 황인섭, 권재우, 김미영, 박영준, 박진, 박옥(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6개월 발생보고서(2020.07.19 기준). 주간 건강과 질병, 13(30), pp. 2186-2198.

배재현, 김은진(20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656호.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2016). 2015 메르스 백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6). 2015 메르스 백서-부록.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2020). 원격교육시대, 「미래학습」을 준비하는 2020 동작관악 원격수업 운영 사례.

울산광역시교육청(2020). 2020 울산교육 코로나19 백서. With-코로나 시대, 교육을 생각하다.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이정현,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8.

이희현, 장명림, 황준성, 유경훈, 김성기, 김위정, 이덕난, 김보미(201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 과제: 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수탁연구 CR 2019-10. 한국교육개발원.

이희현(2020).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운영 사례와 과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교육개발 가을호. 한국교육개발원.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인천광역시교육청 코로나19 대응 팬데믹 극복 교육정상화 프로젝트.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명림, 강지원, 김영란, 이희현, 조진일, 최형주, 임봉조, 장지혜, 김선미, 조선주, 배호종(2018). 학생-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초등돌봄서비스 내실화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제영, 송호신, 이희현, 김복태, 선미숙, 김성기(2020).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성과분석 연구.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03.1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년 1월호.

#### 신문(인터넷 발간)

김나현, 홍순빈, 정한결(2021). “사립초등학교로 몰려드는 학생들...코로나가 키운 교육 양극화”,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812380452983>(2021.3.20 인출)

김명희(2020). “데이터 교육’ 분수령 돼야... 새해 ‘K-에듀 통합플랫폼’ 청사진 마련”,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01229000190>(2021.03.30 인출)

김창영(2020). “학부모 10명 중 9명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 있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MJBCENL>(2021.03.27 인출)

남윤서(2020). “온라인 개학 39만명 접속에 ‘먹통’... 교육부 “장애요인 제거””, 중앙일보. <https://news.join.com/article/23751118>(2021.3.14 인출)

이상규, 김희원, 이희진(2020). “학생들 ‘VDT 증후군’ 호소... 엄마는 ‘학습 도우미’ 스트레스 [뉴스 인사이트-온라인 개학 후유증]”,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514526146>(2021.03.27 인출)

이유진(2020). “온라인 개학 첫날, 불안한 서버에도 ‘수업혁신’ 가능성”,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36350.html#csidxb16da86cfe357696bdee2da5d3709d>(2021.3.14 인출)

이하은(2020). “[코로나19 중간결산] 개강 연기부터 1학기 원격수업까지...모든 것이 사상초유,”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992> (2021.3.21 인출)

이효석(2020a). “집단행사 취소할 필요 없다는데...대학 졸업·입학식 열릴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41400004>(2021.3.21 인출)



- 이효석(2020b). “사상초유 '4월 개학' 가능성 커져…교육부 "3차 연기 검토 중"”,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40558000004>(2021.3.24 인출)
- 이효석(2020c). “원격수업 '접속 대란' 없었다…개학연기 49일만 온라인개학 완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01208000004>(2021.3.22 인출)
- 정동훈(2020). “[바로간다] 거리두기도 사립은 예외?…사실상 전교생 등교”,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96572\\_32524.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96572_32524.html)(2021.3.20 인출)
- 최원형(2020). “공립초보다 2배 많은 사립초 등교일수…코로나 교육 격차 사실로”,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4781.html>(2021.3.21 인출)
- 최락선(2020). “범부처 유학생특별관리TF 구성… 中 유학생 출입국 현황 대학에 제공,”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30/2020013004074.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30/2020013004074.html)(2021.3.21 인출)
- 최종권(2020). “내가 감염병 환자나” 中유학생 기숙사 격리 반발…속타는 대학,” 중앙일보. <https://news.join.com/article/23708071> (2021.3.21 인출)

## 인터넷 자료

- 교육부(2019.11.18).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309&s=moe&fileSeq=25ec728a4d3d39f7fd1e6229de83d645> (2021.03.21 인출)
- 교육부(2020.12.07).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309&s=moe&fileSeq=93e4d747546769d1adf89dd62e1f5c3b> (2021.03.21 인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2020). 대한민국 방역체계 . <http://ncov.mohw.go.kr/baroView2.do?brdId=4&brdGubun=42> (2021.03.21 인출)
- 시도교육청(2020). 2020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일정.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105&searchBean.searchKey=&appYn=&searchBean.searchVal=&searchBean.startDt=&startDt=&searchBean.endDt=&endDt=&ctgCd=&sex=&school=&grade=&year=&month=&schoolDiv=&establDiv=&hopearea=&searchBean.deptCd=&searchBean.currentPage=141>(2021.03.27 인출)

- 시도교육청(2020.02.25) 2020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일정 변경 안내.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5785>(2021.3.27 인출)
- 청와대(2020.11.29) 2021학년도 수능 방역 관련 현장 점검.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582>(2021.03.27 인출)

## 사진 출처

청와대, 교육부 디지털소통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방부, 디지털광진

## 법령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만든 사람들

## ▣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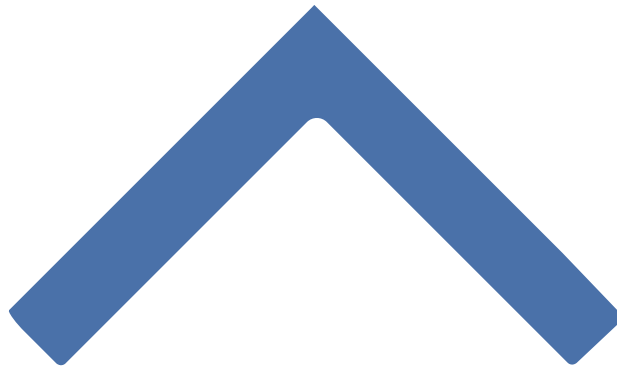
## ▣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연구팀

- 이정우(한국교육개발원)
-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 구자욱(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학사운영(기준 수립 및 시행)
- 김동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각종 시험
- 김성기(협성대학교) | 돌봄 지원
- 김수진(한국교육개발원) |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실행
- 김용남(한국교육개발원) | 예산 지원 및 보상
- 김진숙(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대응체계
- 서영인(한국교육개발원) | 범정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 서현숙(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국제협력
- 선미숙(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 미래교육
- 유석주(동국대학교 의과대학) | 학교 방역 시스템
- 이희현(한국교육개발원) | 돌봄 지원
-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 김진희(한국교육개발원)

##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발 행 일 : 2021년 5월  
발 행 인 : 유은혜  
발 행 처 : 교육부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14동 교육부  
전 화 : 국번없이 110  
홈 페이지 : <https://www.moe.go.kr/>

인 쇄 : 다원기획 (044)865-8115



2 0 2 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